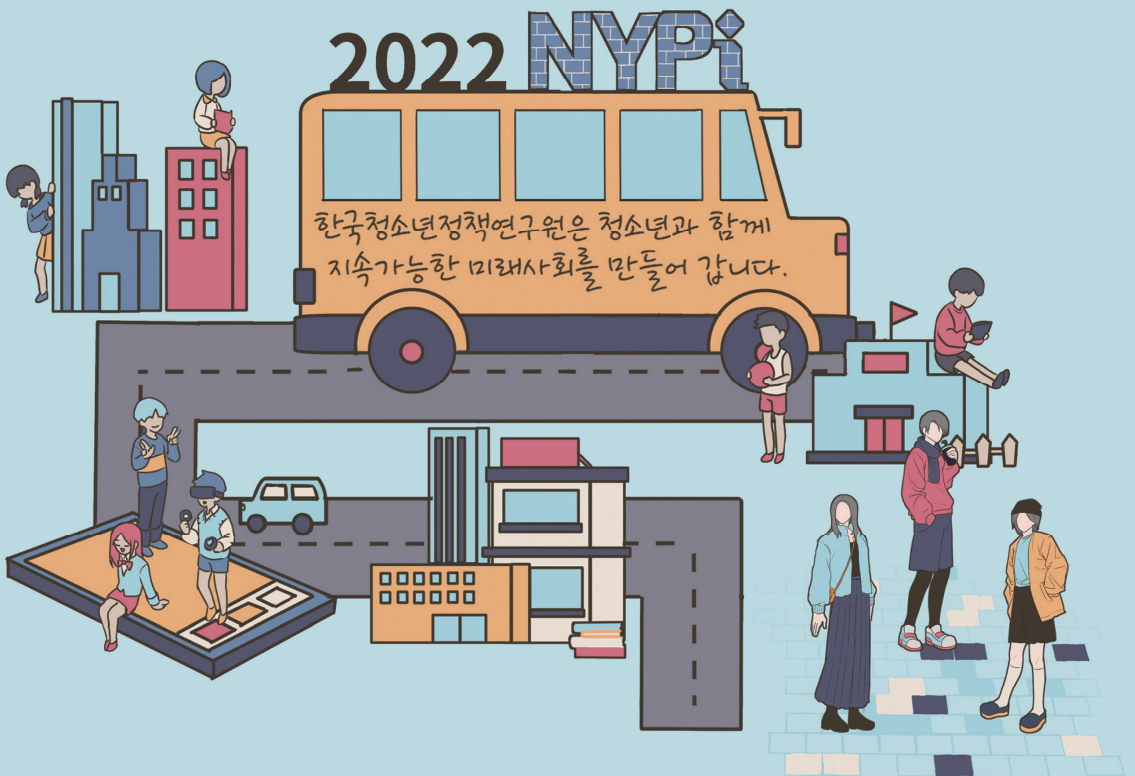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황여정 · 임희진 · 오승근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저 자 황여정, 임희진, 오승근

연구진 연구책임자_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임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오승근(명지전문대학 교수)
연구보조원_문지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준비해야 하는 정책전환기이자,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 제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중요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한 시기에, 향후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 의견수렴 자료 수집, 정책방향 설정 등을 통해 2023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적용될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데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5년 그 이상을 바라보며 청소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장기적인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음.

■ 연구내용

-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및 청소년이 처한 실태 분석
- 국내외 청소년정책 분석
- 전문가(학계, 현장종사자 및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 및 청소년 대상 의견조사
- 중장기 청소년정책 방향 및 전략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청소년정책 환경 관련 메가트렌드 도출 및 분석
 - 국내 정책 분석(청소년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청년정책기본계획 등)
 - 해외 청소년정책(UN 및 EU 등 국제기구, 독일, 프랑스, 미국, 호주, 일본 등 청소년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주요국의 정책계획 사례) 분석

● 2차 자료 분석

- 청소년이 처한 실태를 다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2차 자료 검토
- (검토 자료) 「사회조사(2010-2021)」,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1-2021)」,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16-2020)」,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17-2021)」,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2021)」, 「성매매 실태조사(2019)」, 「인구동향조사」 및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자료 등

● 설문조사

- 정책대상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존 청소년정책에 대한 효과성 및 필요성, 향후 청소년정책에 대한 기대와 수요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 전국 초·중·고등학생 3,024명(초 5-6, 중 1-3, 고 1-3 학년)

● 전문가 델파이조사

-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장기 청소년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을 위해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 실시
- (조사대상) 총 27명(유관 분야 교수 및 연구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 16명, 현장 전문가 11명)

● 초점집단인터뷰(FGI)

- 정책당사자인 청소년과 현장에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FGI 실시
- (면접대상) 청소년 16명(4개 집단으로 구분)/ 전문가 9명(현장전문가 4인, 지자체 공무원 5인) 등 총 25명

● 기타 연구방법

- 연구의 각 단계별로 전문가 자문 실시 및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주관부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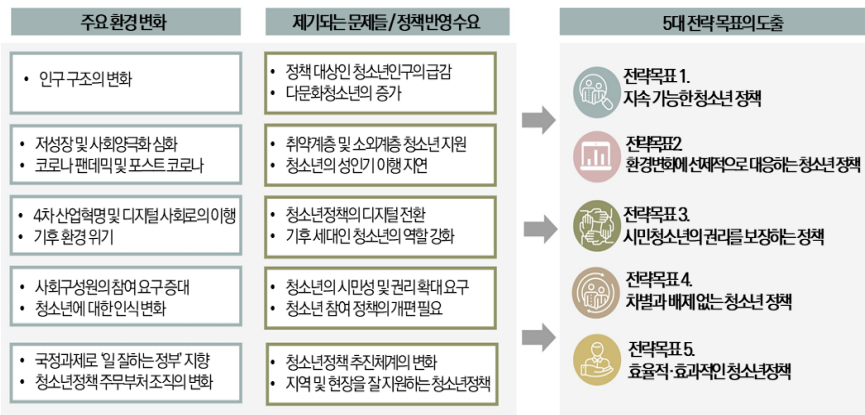
주요 연구결과

-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및 청소년이 처한 실태 분석 결과
 - 환경 및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항으로 다음의 5가지를 도출함.
 -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저성장사회양극화로 인한 청소년 복지 정책 확대 필요, 디지털 환경의 부각과 그에 대한 대비, 청소년참여에 대한 요구 증대 및 참여정책 개선의 필요성, 청소년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 추진 필요
- 국내외 청소년정책 분석 결과
 -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청소년정책전략계획 검토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함.
 -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 강조, 청소년 자립 기반 마련,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 생애주기적 접근, 생활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지원, 중장기 정책계획의 유연성 필요, 체계적인 성과 관리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전문가 델파이조사 및 FGI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전반적 쇄신, 수요자 중심 정책수립 및 추진, 청소년활동 정책의 혁신 및 활동 활성화,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 청소년 의견조사 결과
 - 설문조사와 FGI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된, 청소년 대상 의견수렴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진로 지원 강화 등 수요자 요구를 충족하는 정책 추진, 체감도 높은 정책에 대한 요구, 청소년권리 보장 및 청소년참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생애주기와 발달단계를 고려한 청소년정책 추진, 청소년정책에서의 상대적 격차 해소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청소년정책 환경 분석, 청소년이 처한 실태 분석, 국내외 청소년정책 분석 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및 청소년 의견수렴 결과와 그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국가청소년정책이 지향할 비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5대 전략목표, 그리고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21개의 세부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중장기 청소년정책이 추구할 비전
 -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청소년, 미래를 이끄는 청소년**”
- 정책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목표
 - ①지속 가능한 청소년정책, ②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청소년정책, ③ 시민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청소년정책, ④차별과 배제 없는 청소년정책, ⑤효율적·효과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정책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목표의 도출]

핵심 정책제언

- 정책비전과 5대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21개의 세부 추진전략을 도출함.



[국가청소년정책 비전,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구조도(안)]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연구보고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주요 연구 내용	4
3. 연구방법	7
4. 연구 추진 절차	10
II. 논의의 배경	11
1. 청소년정책 환경 분석	13
2. 청소년이 처한 실태: 변화와 추이	27
3. 소결 및 시사점	47
III. 국내·외 청소년정책 분석	51
1. 청소년정책 분석의 개요	53
2. 국내 청소년정책 분석	54
3. 해외 청소년정책 동향 분석	77
4. 소결 및 시사점	128

IV.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결과 분석	137
1.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의 개요	139
2.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145
3. 전문가 대상 FGI 결과	186
4. 소결 및 시사점	205
V. 청소년 대상 의견조사 결과 분석	213
1. 청소년 대상 의견조사 개요	215
2.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221
3. 청소년 대상 FGI 결과	248
4. 소결 및 시사점	268
VI. 국가청소년정책 추진전략 및 과제	275
1. 정책 추진전략 도출의 개요	277
2. 전략목표별 추진전략	286
참고문헌	329
부 록	345
1. 청소년 대상 설문지	347
2.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지(1차)	359
3.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지(2차)	365
국문초록	383
Abstract	385

표 목차

표 II-1.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미래사회 주요 메가트렌드 비교	14
표 II-2.	최근 1년 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목적	25
표 II-3.	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해 검토한 지표	27
표 II-4.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	31
표 II-5.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13세-24세)	32
표 II-6.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및 빈도	34
표 II-7.	일반 청소년 대상 최근 3년 간 인터넷을 통한 성적 유인 피해 경험	42
표 II-8.	청소년이 생각하는 사회 불안 요인(2018년 및 2020년)	46
표 III-1.	국내외 청소년정책 분석 개요	53
표 III-2.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정책영역 비교: 1~3차	57
표 III-3.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정책영역 비교: 4~6차	59
표 III-4.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주요 정책과제	62
표 III-5.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64
표 III-6.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주요 정책과제	69
표 III-7.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71
표 III-8.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주요 정책과제	74
표 III-9.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성과목표	76
표 III-10.	유엔 기구/조직의 청소년 연령 정의	78
표 III-11.	유스2030의 우선영역 및 중점분야	79
표 III-12.	유엔의 역할과 주요 실행 전략	80
표 III-13.	2019~2027 EU 청소년전략의 핵심 영역별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86
표 III-14.	독일 청소년정책의 대상 및 연령	89
표 III-15.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아동·청소년 보고서	90
표 III-16.	독일 청소년전략의 정책분야별 주요 조치	92
표 III-17.	프랑스 청소년정책계획의 영역 및 중점과제	100
표 III-18.	청소년프로그램 기관 간 실무그룹(IWGY) 참여 조직	107
표 III-19.	IWGY의 청소년을 위한 비전	108

표 III-20. IWGY의 목적 및 목표	111
표 III-21. youth.gov의 주제	112
표 III-22. 청소년정책 프레임워크의 목표와 주요 내용	115
표 III-23. 2010 청소년전략 vs. 2021 청소년정책 프레임워크의 우선과제 영역 비교	117
표 III-24. 우선과제 영역별 주요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	118
표 III-25. 일본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 연혁	120
표 III-26. 기본방침 1(모든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의 구체적 내용	122
표 III-27. 기본방침 2(위기 아동·청소년 및 가족 지원)의 구체적 내용	124
표 III-28. 기본방침 3(창조적인 미래를 개척해 나갈 아동·청소년 응원) 의 구체적 내용	125
표 III-29. 기본방침 4(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 정비)의 구체적 내용	126
표 III-30. 기본방침 5(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할 전문인력 양성· 지원)의 구체적 내용	127
표 III-31. 아동·청소년 인덱스 설정의 관점	128
표 III-32. 국내정책 기본계획 비교	129
표 III-33. 해외 청소년정책 비교	130
표 IV-1. 델파이조사 참여 패널 현황	140
표 IV-2. 전문가 델파이조사 내용	141
표 IV-3. 델파이조사 방법	142
표 IV-4.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기준	143
표 IV-5. 전문가 대상 FGI 참가자	145
표 IV-6. 기존 청소년정책(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 평가 주요 내용	145
표 IV-7. 기존 정책(제6차 기본계획) 영역별 주요 추진성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147
표 IV-8. 제6차 기본계획 정책비전 달성 수준에 대한 평가	150
표 IV-9. 제6차 기본계획 정책비전의 달성 수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	150
표 IV-10. 정책목표 1(‘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의 달성 수준 평가	151
표 IV-11. 정책목표 1(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달성 수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	152
표 IV-12. 정책목표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달성 수준 평가	153
표 IV-13. 정책목표 2(‘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의 달성 수준을 평가한 판단 근거	154

표 IV-14. 정책목표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의 달성 수준 평가	156
표 IV-15. 정책목표 3(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달성 수준에 대한 판단 근거	156
표 IV-16. 정책목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달성 수준 평가	158
표 IV-17. 정책목표 4(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달성 수준에 대한 판단 근거	158
표 IV-18. 기존 국가청소년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	160
표 IV-19. '청소년참여 및 권리 증진' 관련 중점과제의 향후 추진 여부	162
표 IV-20.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관련 중점과제의 향후 추진 여부	163
표 IV-21.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관련 중점과제의 향후 추진 여부	164
표 IV-22.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관련 중점과제의 향후 추진 여부	165
표 IV-23. 국가청소년정책 수립 시 우선 고려할 사회환경변화	166
표 IV-24. 향후 국가청소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정책비전	169
표 IV-25. 향후 국가청소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정책목표	171
표 IV-26. 향후 국가청소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중점과제	174
표 IV-27.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회환경변화의 중요도	178
표 IV-28.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정책비전	180
표 IV-29. 전문가 델파이 2차조사 결과: 정책목표의 중요도	181
표 IV-30. 전문가 델파이 2차조사 결과: 정책목표의 시급성	182
표 IV-31. 전문가 델파이 2차조사 결과: 중점과제의 중요도	183
표 IV-32. 전문가 델파이 2차조사 결과: 중점과제의 시급성	185
표 V-1. 지역구분×학교급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할당	216
표 V-2.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내용의 구성	216
표 V-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19
표 V-4. 청소년 대상 FGI 참여자	220
표 V-5. 삶에 대한 만족도	221
표 V-6. 청소년정책의 효용성	222
표 V-7. 현재 가장 고민하는 문제	223
표 V-8. 「청소년 참여 확대」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224
표 V-9. 「청소년 참여 확대」 정책 수요	225
표 V-10.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226
표 V-11.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정책 수요	227
표 V-12.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228

표 V-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정책 수요	229
표 V-14.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영역 중점과제별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230
표 V-15. 「청소년활동 성장지원 체계 혁신」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	231
표 V-16.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정책 수요	232
표 V-17.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233
표 V-18.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정책 수요	234
표 V-19.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	235
표 V-20.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정책 수요	236
표 V-21.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영역 중점과제별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237
표 V-22.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238
표 V-23.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 수요	239
표 V-24. 「대상별 맞춤형 지원」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240
표 V-25. 「대상별 맞춤형 지원」 정책 수요	241
표 V-26.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	242
표 V-27.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정책 수요	243
표 V-28.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영역 중점과제별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244
표 V-29. 교급별 희망 정책·서비스	246
표 V-30. 영역별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종합	268
표 V-31. 중점과제별 정책의 필요성 순위	269
표 VI-1.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도출의 근거	278
표 VI-2. 성장단계별 청소년활동 주제별 중점 브랜드(예시)	287
표 VI-3. 경남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 개요	291
표 VI-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293
표 VI-5.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기본 원칙	301
표 VI-6.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303
표 VI-7.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개요	305
표 VI-8.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 내역	314
표 VI-9. 과태료 및 범칙금을 관련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	315
표 VI-10. 지자체 교육경비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317
표 VI-11. 청소년 관계법령 정비 방안(안) 요약	320
표 VI-12.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총괄표 ..	325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 추진 절차	10
그림 II-1.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메가트렌드(안) 도출 과정	15
그림 II-2. 청소년정책 환경 주요 메가트렌드(안)	16
그림 II-3.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률 추이	16
그림 II-4. 청소년(9~24세) 인구 및 구성비	17
그림 II-5. 다문화 학생 수 및 비중	18
그림 II-6. 가족의 형태별 분포	18
그림 II-7. 1인 가구 비중	19
그림 II-8. 청년층(15~29세) 고용률 및 실업률	20
그림 II-9. 소득 5분위배율 추이(2011~2020)	20
그림 II-10. 코로나19 전후의 소득 5분위배율 추이 (2019~2021 분기별)	21
그림 II-11. 연도별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 변화	23
그림 II-12. 우리나라와 주요 OECD 국가의 배출량 추이 탄소중립 달성 경로	23
그림 II-13. 선호하는 국가 통치 형태	26
그림 II-14.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27
그림 II-15. OECD 국가 청소년들의 행복도 비교	28
그림 II-16. OECD 국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표준점수 변화 추이	29
그림 II-17. 청소년·청년의 주관적 만족감	30
그림 II-18. 청소년 사망자 수 및 사망 원인	32
그림 II-19.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및 빈도	33
그림 II-20.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식 변화	34
그림 II-21.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35
그림 II-22. 사회문제 관련 참여 활동 경험	36
그림 II-23.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및 참여 여부	37
그림 II-24. 거주 지역의 안전 수준	38
그림 II-25. 연도별 청소년 흡연율 및 음주율	38
그림 II-26. 연도별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39
그림 II-27. 학교급별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추세	40

그림 II-28.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	40
그림 II-29. 연도별 청소년폭력 및 성폭력 피해율	41
그림 II-30.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경험률 ..	41
그림 II-31. 청소년의 직업선택 요인	43
그림 II-32. 아르바이트 경험 및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43
그림 II-33. 위기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44
그림 II-34. 위기청소년의 자해자살 시도 경험 및 자살 생각시도 이유 ..	45
그림 II-35.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삶의 변화(2020년)	46
그림 II-36. 청소년정책 환경 및 청소년이 처한 실태 분석의 주요 시사점 ..	50
그림 III-1.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56
그림 III-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체계도	61
그림 III-3.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전략 체계	65
그림 III-4.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체계도	68
그림 III-5.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체계도	73
그림 III-6. 유스2030 UNCT 스코어카드 평가 결과(예시)	83
그림 III-7. 연방 협력을 위한 전략적 계획에 대한 프레임워크	109
그림 III-8. 연방 협력을 청소년 성과와 연관시키는 논리 모형	110
그림 IV-1. 전문가 델파이조사 추진 개요	144
그림 IV-2. 기존 정책(6차 기본계획) 추진성과 영역별 언급 빈도 ..	146
그림 IV-3. 국가청소년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회환경변화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206
그림 IV-4. 정책목표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요약 ..	207
그림 IV-5. 중점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요약 ..	208
그림 IV-6.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주요 시사점 요약	212
그림 V-1. 청소년 의견수렴 시사점 요약	273
그림 VI-1. 정책비전,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도출 과정	277
그림 VI-2. 정책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목표의 도출	282
그림 VI-3. 청소년정책 비전,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구조도(안)	285
그림 VI-4. 청소년정책 영역별 전달체계 관계도	289
그림 VI-5. 아동·청소년·청년 교통비 지원(화성시) 사례	290
그림 VI-6. 인구감소 지역 지정 현황	292
그림 VI-7.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청소년안전망) 구축	297
그림 VI-8.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298
그림 VI-9.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프로젝트 기반 참여활동 ..	306
그림 VI-10. 청소년 참여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안)	307
그림 VI-11. 생애주기 및 발달단계를 고려한 정책접근 전략(예시) ..	312
그림 VI-12.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개념도	323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주요 연구 내용
- 3. 연구방법
- 4. 연구 추진 절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2년은 청소년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다. 우선,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며, 동시에 새롭게 시작할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제8회 지방선거를 거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도 새로 선출되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0년부터 청소년정책을 관장했던 여성가족부에서 타 부처로 주무부처 이관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 그로 인해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적지 않은 변화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정책적 변화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점차 심화되고 있는 계층간 격차, 빠르게 전개되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의 영향과 기후 변화는 청소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지난 3년간 전개된 코로나19 사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생활공간을 빠르게 이동·확장시켰고, 한편으로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배태시키기도 하였다. 요컨대 청소년정책은 정책적 여건과 거시적 환경에서 모두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는 데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국가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수년간 청소년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학계, 현장, 그리고 정책대상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추진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추진될 제7차 기본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5년 그 이상을 바라보며 청소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장기적인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 하기는 어렵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영역과 전략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내외 환경 분석, 청소년 관련 실태 점검, 정책대상자인 청소년 및 다양한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 사회변화를 고려한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거시적 관점과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청소년정책 동향 파악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국내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과 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해외 청소년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전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여 국내 청소년정책과의 접점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연합(UN)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하여, 청소년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주요 국가의 청소년정책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정책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장에서 정책 추진과 전달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 공무원 그리고 학계의 의견도 광범하게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부터 청소년,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생애 주기를 고려한 유기적인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애 전(前)반기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청소년정책이 지향할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전략들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2. 주요 연구 내용

1)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분석

청소년정책이 나아갈 중장기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한다. 환경 분석은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및 사회 양극화 심화,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사회구성원의 참여 요구 증대 등이 검토되었다. 환경 분석 결과는 중장기 국가청소년정책이 적용될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이러한 환경에 대응 혹은 선도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2) 청소년 실태 분석

다음으로, 다양한 가용자료들을 활용하여 청소년이 처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실태분석을 통해 지난 5년간 적용된 청소년정책의 공과(功過)도 일정 부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핵심 성과지표를 실태 점검의 기본 틀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제6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최상위 지표인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등을 포함하고, ①활동참여 및 권리 증진 관련 실태, ②보호복지 및 자립관련 실태, ③기타(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관련 실태를 점검하였다.

정확한 현실 진단이 선행되어야 처방과 개입이 가능하다.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현실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가늠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우선순위와 접근 전략 설정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국내외 청소년정책 분석

향후 추진될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전략 제시를 위해, 기존 정책의 변천과 흐름,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였다. 먼저, 국내 청소년정책의 변천과 성과를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생애주기 상 청소년기와 인접하고, 법령상 연령이 중복되어 있는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외 청소년정책은 유엔(UN)과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의 청소년전략과 개별 국가의 중장기정책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제기구의 청소년전략 검토를 통해 해외 청소년정책의 큰 흐름, 기조와 동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동향이 각국의 청소년정책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 최근 청소년포털을 새롭게 정비한 미국, 우리와 같은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호주와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 전문가 대상 의견 분석

중장기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수립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대상 조사는 델파이조사와 FGI의 2가지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델파이조사에서는 기존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국가청소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비전, 목표, 추진전략, 주요과제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델파이조사로 확인하기 힘든 세밀한 의견수렴을 위해, FGI도 병행하였다. FGI 내용 역시 기존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국가청소년정책에 대한 기대와 수요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5) 청소년 대상 의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국가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목표, 전략, 주요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책대상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청소년 대상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대상 의견조사는 설문조사와 FGI 조사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에서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내용을 기본 틀로 삼아,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필요성을 조사하여,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한편, 설문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청소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따른 문제점이나 정책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집단별(수도권/ 비수도권/ 학교 밖/ 후기 청소년)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주요 조사내용은 그간 추진된 청소년정책에서 아쉬웠던 점 및 향후 청소년정책에 바라는 점으로 구성하였다.

6) 중장기 청소년정책 방향 및 전략 제시

환경분석, 실태진단, 정책분석 및 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정책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새로운 시대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추진할 주요 추진전략들을 도출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제2장에서 실시한 청소년정책 환경 및 실태 분석, 그리고 제3장에서 실시한 국내·외 청소년정책 동향 분석을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2) 2차 자료 분석

청소년이 처한 실태를 보다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2차 자료를 검토하였다. 2차 자료를 활용하되, 중장기 청소년정책 방향 및 전략 설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주요 실태를 분석하였다.

조사 자료명	주요 검토 지표
사회조사 (2010~2021)	• 주관적 만족감 •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 청소년의 직업선택 요인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11~2021)	•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 청소년 흡연율 및 음주율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16, 2018, 2020)	• 학교급별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 • 청소년폭력 및 성폭력 피해율 •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경험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2021)	• 위기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 위기청소년의 자해·자살 시도 경험 및 관련 이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2017~2021)	•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및 빈도 •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식 변화 •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 사회문제 관련 참여 활동 경험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및 참여 여부 • 거주 지역의 안전 수준 • 아르바이트 경험 및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 청소년이 생각하는 사회 불안 요인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20)	•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삶의 변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2021)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성매매 실태조사(2019)	• 일반 청소년 대상 최근 3년간 인터넷을 통한 성적 유인 피해 경험
인구동향조사/사망원인 통계	• 청소년 사망자 수 및 사망 원인

3) 설문조사

정책대상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청소년정책에 대한 효과성 및 필요성, 향후 청소년정책에 대한 기대와 수요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분	내용	비고
모집단	• 전국 초·중·고 청소년	NYPI 통합 조사 참여
표집틀	• 초(5~6학년) 중(1~3학년), 고(1~3학년)	
표본수	• 목표 표본: 총 3,000명(초등 1,000명, 중학생 1,000명, 고등학생 1,000명) • 최종 응답자 수: 총 3,024명(초등 762명, 중학생 1,156명, 고등학생 1,106명)	
표집방법	• 변형비례, 층화다단계집표집	
조사시기	• 2022.5.30.~7.26.	

4) 전문가 델파이조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장기 청소년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구분	내용
조사 대상	• 유관 분야 교수 및 연구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총 19인) • 현장 전문가(총 11인)
선정 방법	• 목적적 표집
조사 내용	• 기존 정책의 성과 및 한계, 기존 정책 중 향후 지속되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 • 청소년정책 비전, 중장기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등에 관한 의견
조사 방법	• 델파이 기법
추진 절차	•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협의를 거쳐 구조화 된 조사지 개발→델파이조사→조사 결과 분석→결과의 정리 및 연구진 검토·협의
조사 시기	• (1차 조사) 2022.5.18.~5.27. • (2차 조사) 2022.7.1.~7.14.

5) 면접조사: 초점집단인터뷰(FGI)

현장에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현장전문가, 그리고 정책당사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분	내용
면접집단의 설정	- 현장전문가: 청소년시설 및 기관 종사자 - 공무원: 지자체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 - 청소년: 집단 특성(수도권/비수도권/학교 밖/후기청소년 등)을 고려하여 면접대상자 선정
참여자 대상 및 인원	- 청소년(총 16인) - 비수도권 거주 청소년 4인, 수도권 거주 청소년 4인, 학교 밖 청소년 4인, 후기청소년 4인 - 전문가(총 9인) - 현장전문가 4인, 지자체 공무원 5인
FGI 방식	반구조화 된 집단면담방식
주요 내용	- 지난 청소년정책의 성과 및 한계, 기존 정책 중 지속되기를 바라는 정책 관련 의견 - 앞으로 추진될 국가청소년정책에 대한 수요, 방향 및 과제
진행 방법	1회 120분 내외, 집단별로 각 1회씩 실시 - 연구참여자 동의를 얻어 현장기록 및 녹취, 전사
면담자	연구진 및 면접조사원

6) 전문가 자문

본 연구과제의 특성 상, 연구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가급적 다양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의 수립, 정책환경 분석을 위한 메가트렌드의 선정과 분석 결과 검토, 해외 청소년정책 분석 대상 국가의 선정, 청소년정책 영역별 향후 추진방향 및 과제 도출 등 연구 전반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다.

7) 기타: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본 연구에서는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연구내용을 검토하고 협의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FGI 등 자문의견 결과 공유 및 반영 방향 협의, 주요 전략목표 수립의 원칙과 방향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4. 연구 추진 절차

상술한 연구내용 및 방법을 반영한 본 연구의 전체적인 추진 절차는 [그림 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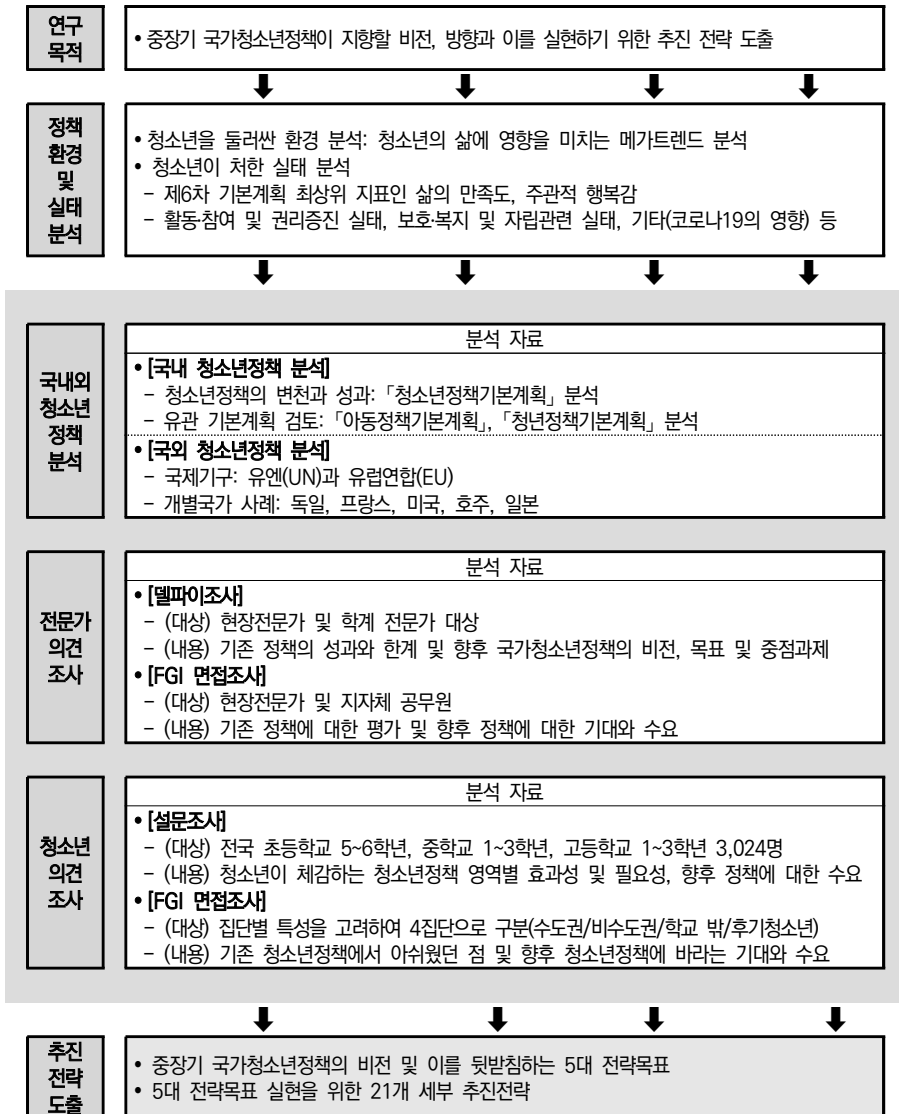


그림 I-1. 연구 추진 절차

○ — 제2장 논의의 배경

- 1. 청소년정책 환경 분석
- 2. 청소년이 처한 실태:
변화와 추이
- 3. 소결 및 시사점

1. 청소년정책 환경 분석

이 장에서는 청소년정책이 나아갈 중장기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청소년 및 청소년정책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한다. 환경 분석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내용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표 II-1>에는 이재영 외(2019: 42-44)에서 정리한 미래사회의 주요 메가트렌드가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미래사회 주요 메가트렌드를 인구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제시했는데, 인구사회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개인화 및 1인 가구 증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디지털 문화의 확산 및 다원화 등이 제시되었다. 기술 분야에서는 ICT 및 데이터 기술의 혁신적 진보, 제4차 산업혁명 등 정보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부작용이 메가트렌드로 도출되었고, 경제 분야에서는 저성장 추세의 심화, 글로벌화, 산업구조의 변화, 그린 이코노미로의 이행 등이 거론되었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증가, 환경오염 증가, 탄소저감 요구 증대 등이 주요 트렌드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에서는 분권화 및 참여 활성화, 지방과 민간의 자율성 확대,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주요 환경변화로 도출되었다.

표 II-1.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미래사회 주요 메가트렌드 비교

구분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¹⁾	한국환경정책연구소 (2015) ¹⁾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¹⁾	국토연구원 (2018) ¹⁾	이재명 외(2019) ²⁾
인구 사회	- 인구구조의 변화 - 양극화 - 네트워크 사회	- 초고령사회 진입 - 개인화	- 스마트시티 부상 - 고령의 불안정 - 사회적 불평등 확대 - 초고령 사회 도래 - 디지털 문화의 확산 및 다원화	- 저출산 고령화 - 인구감소 - 인 기구 증가, 개인화 등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구구조 변화) - 개인화 1인 기구 증가 -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화 - 스마트 시티 부상 - 디지털 문화의 확산 및 다원화
기술	- 가상지능공간 - 기술의 융복합화 - 로봇 -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 ICT 및 데이터 기술의 혁신적 진보 - 생명의료, 나노, 로봇 등 각종 기술의 발전	- 기술융합(CT융합기술, 유전자기술 융합시스템 도래) - 자동화 및 인공지능 기반 시대의 도래 (자율주행차량, 로봇이용, 인공지능)	- 제4차 산업혁명 - 정보의료기술의 발달 - 초고속 교통기술 수단, 무인기술 등	- ICT 및 데이터 기술의 혁신적 진보, 제4차 산업혁명 - 생명의료, 나노, 로봇 등 각종 기술의 발전 - 기술 융복합화를 통한 창조 -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경제	- 헬빙/감성/복지경제 - 지식기반경제 - 글로벌 인재의 부상	- 경제성장의 둔화 - 국토공간의 재편(개발정체, 도시노후화, 광역화, 지하개발 등)	- 그린 이코노미로의 이행 - 네트워크 경제의 심화 (블록체인, 공유경제, 네트워크 규제 및 보안이슈)	- 저성장 추세 심화 - 글로벌화 - 산업구조의 변화 등 - 산업구조 변화 등	- 저성장 추세 심화 - 글로벌화 - 산업구조의 변화 등 - 그린 이코노미로의 이행
환경	- 기후변화 및 환경 오염 -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불확실성 증대	- 기후변화의 도전 -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증가 - 에너지자원 고갈 - 탄소저감 요구 증대 - 황사세먼지 등 환경오염 증가	-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증가 - 황사·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증가 - 에너지자원 고갈 - 탄소저감 요구 증대
정치	- 글로벌화 - 안전 위협성 증대 - 남북통합	글로벌 사회화	- 개인 여량의 확대 및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 신용 안보 이슈 부상 - 진물적 거버넌스 체계의 약화	- 분권화 및 참여 활성화 - 지방과 민간의 자율성 확대 - 남북관계의 변화 - 동북아 정치경제 변화 등	- 분권화 및 참여 활성화 - 지방과 민간의 자율성 확대 - 남북관계의 변화, 동북아 정치경제 - 역학관계 변화 등 글로벌 사회화

* 출처: 1) 이재명 외(2019), 42-43쪽 [표 2-16]에서 재인용
2) 이재명 외(2019), 44쪽 [표 2-17] 내용 중 '미래트렌드' 인용.

한편, 김택환, 정수영(2022: 13)은 「메가트렌드 전환에 따른 인재양성·청년일자리 정책」 연구에서 세상을 바꾸는 메가트렌드로 기후환경변화(온난화), 세계화네트워크화, 인구변화(저출산고령화), 디지털 전환(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 등을 제시하였고, 이처럼 거대한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2030 산업동향 분석 및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산업 혁신 전략 수립」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거론하였고(조영삼 외, 2019: 39), 조상식 외(2021)는 「2030 서울혁신미래교육개념 및 비전 연구」에서 미래 담론으로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 발전, 트랜스휴머니즘 및 포스트휴머니즘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2021)가 실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방향과 핵심의제 발굴」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사회의 3대 메가트렌드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과 순환형 경제, 그리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 등을 지목하였다.

메가트렌드는 어떠한 목적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도출될 수 있다(조영삼 외, 2019).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다양한 선행연구의 미래전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¹⁾를 함께 고려하여, 연구진 협의를 거쳐 청소년 및 청소년정책과 직·간접적 영향이 있는 메가트렌드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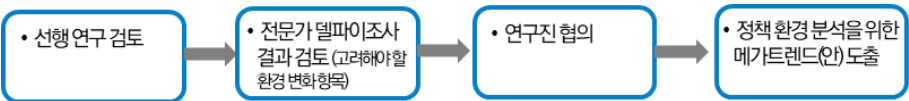


그림 II-1.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메가트렌드(안) 도출 과정

먼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한 주요 아젠다로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 저성장 추세 심화, 4차 산업혁명과 ICT 기술의 발달, 기후변화 등이 도출되었다. 여기에 선행연구의 정치 분야에서 언급된 ‘개인 역량의 확대 및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전통적 거버넌스의 약화’, ‘분권화 및 참여 활성화’ 등의 이슈와, 본 연구에서 실시한 델파이조사 결과에서 향후 고려해야 할 주요 사회환경변화로 도출된 ‘청소년 주도성과 미래역량’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 활성화’ 이슈를 도출하였다.

1) 전문가 델파이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본 보고서 제4장 제2절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6가지 항목(①인구가족 구조의 변화(저출생고령화) ②저성장 및 사회 양극화, ③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 ④기후환경변화(온난화), ⑤포스트 코로나, ⑥참여 활성화)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환경의 주요 메가트렌드를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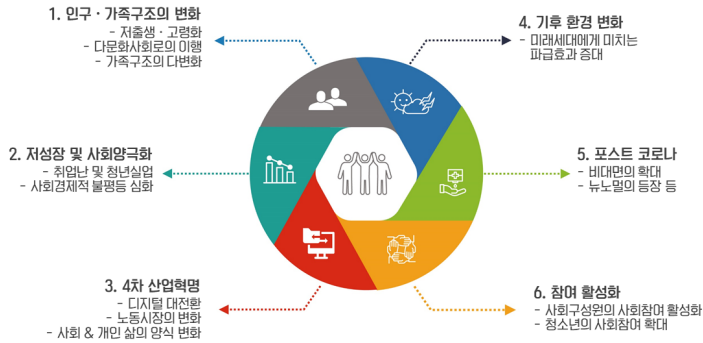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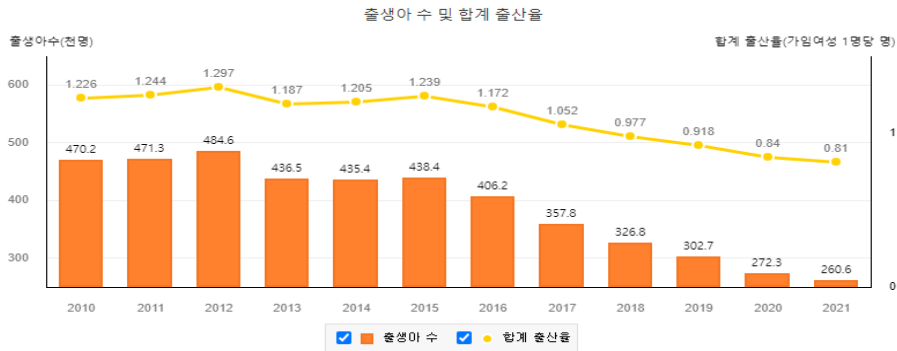


그림 II-2. 청소년정책 환경 주요 메가트렌드(안)

1)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 저출생고령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그리고 가족구조의 다변화

청소년 및 청소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메가트렌드 중 하나는 바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가족구조의 변화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였고(2021년 합계출산률 0.81명), 그로 인해 청소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방의 인구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e-나라지표: 출생아 및 합계출산율, 2022.9.3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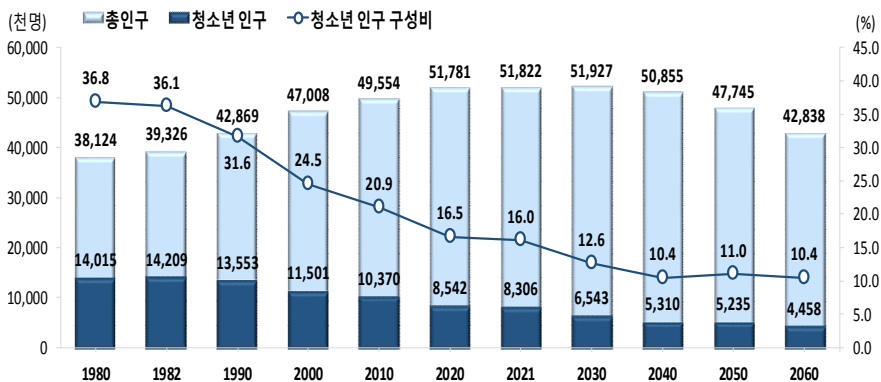


* 출처: e-나라지표.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에서 2022월 9월 30일 인출.

* 데이터: 통계청, 「2021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그림 II-3.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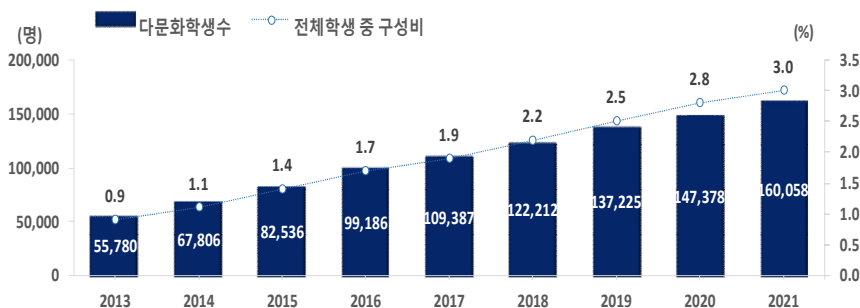
청소년 인구감소 추이를 좀 더 밀착해서 살펴보면, 9~24세 청소년 인구는 절대 규모 및 상대 비중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 청소년 인구는 1,400만 명을 초과하였으나, 2020년 854만 2천명으로 줄어들었고, 인구추계에 따르면 2040년에는 531만명, 2060년에는 446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21.5.25.).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청소년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면서, 전체 인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1980년 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36.8%를 차지했으나, 2000년에는 24.5%, 2020년에는 16.5%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40년에는 10.4%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21.5.25.).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21.5.25.). 2021년 청소년통계, 6쪽.

그림 II-4. 청소년(9~24세) 인구 및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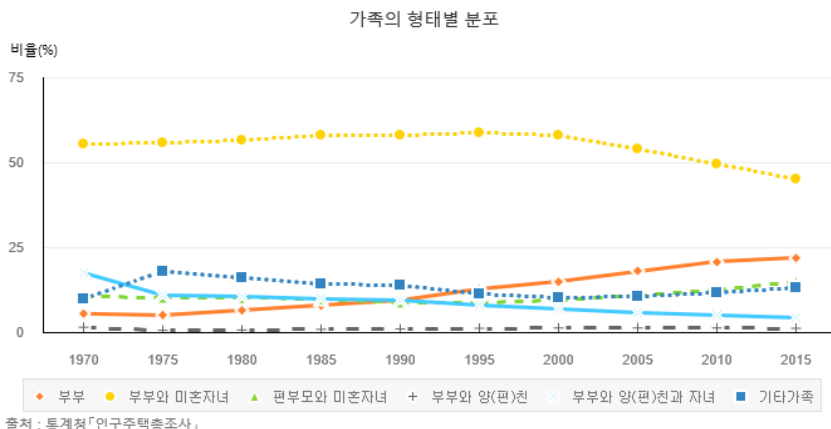
청소년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데 비해, 다문화 청소년의 규모와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만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3.0%를 차지하는데, 이는 2013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준이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5.25.). 2021년 기준 다문화 학생 160,058명의 학교급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69.6%(111,371명)가 초·중학생이고, 중학생 21.2%(33,950명), 고등학생 8.9%(14,308명) 순으로 파악된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5.25.). 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중학생 및 고등학생 단계에서의 다문화 학생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5.25.). 2022년 청소년통계, 8쪽

그림 II-5. 다문화 학생 수 및 비중

가족구조의 다양화 및 1인 가구의 증가도 주목해야 할 인구사회학적 변화이다. 대표적인 가족 유형으로 간주되었던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비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비율은 2000년 57.9%에서 2020년 45.9%로 12%p 감소한 반면, 편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비율은 2000년 9.4%에서 2020년 10.2%로 0.8%p 증가하였고, 기타 유형의 가족도 2000년 10.1%에서 2020년 15%로 약 5%p 증가하였다(e-나라지표: 가족의 형태별 분포, 2022.5.28.).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가족의 형태도 이전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출처: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 출처: e-나라지표, 가족의 형태별 분포,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6에서 2022년 5월 28일 인출.

그림 II-6. 가족의 형태별 분포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1인 가구의 상당수를 20대 청년들이 차지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 2015년 27.2%에서 2019년 30.2%로 증가하였다(통계청 보도자료, 2020.12.8.). 1인 가구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20대 청년들이 전체 1인 가구 중 1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대가 16.8%로 그 뒤를 잇고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2020.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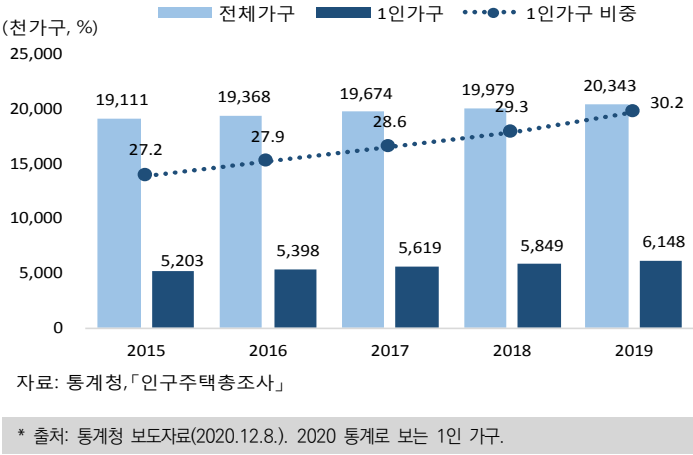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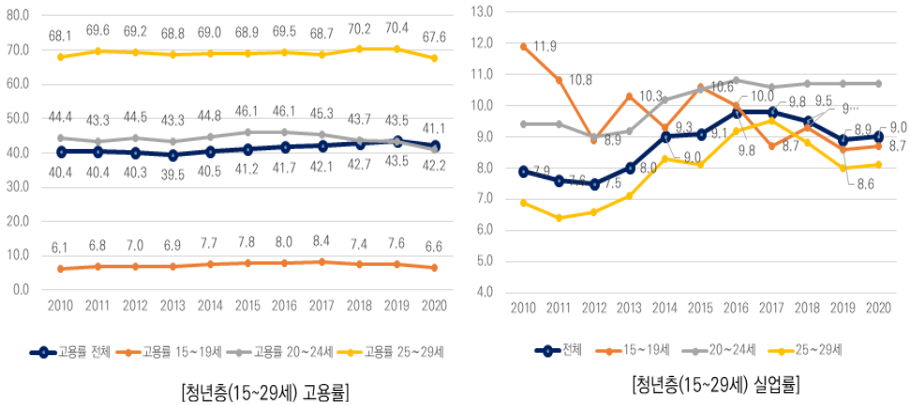


그림 II-7. 1인 가구 비중 (단위: 천가구, %)

2) 저성장 및 사회 양극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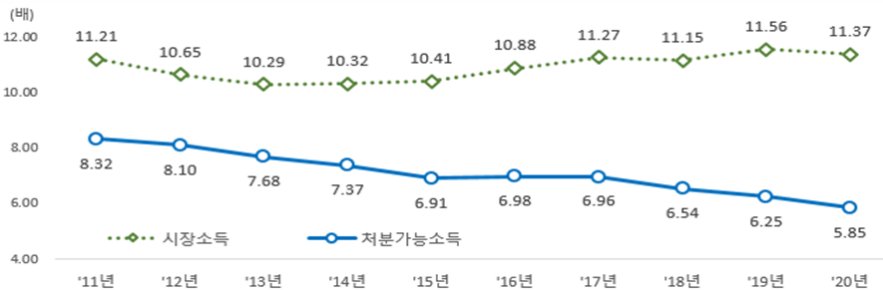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와 사회 양극화 심화도 거시적으로 고려해야 할 환경요인이다. 특히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취업난과 청년실업 문제가 쉽게 풀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는 성인기 이행 지연, 청년빈곤, 청소년·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 결혼 및 출산 포기 등으로 이어지는 핵심 원인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층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2%로, 전년 대비 1.3%p 감소했고, 특히 2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2018년 70.2%, 2019년 70.4%에서 2020년 67.6%로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21.5.25.). 이러한 수치는 최근 10년 간 가장 낮은 수치로써,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21.5.25.). 2021년 청소년통계, 21쪽 <표>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11-8. 청년층(15~29세)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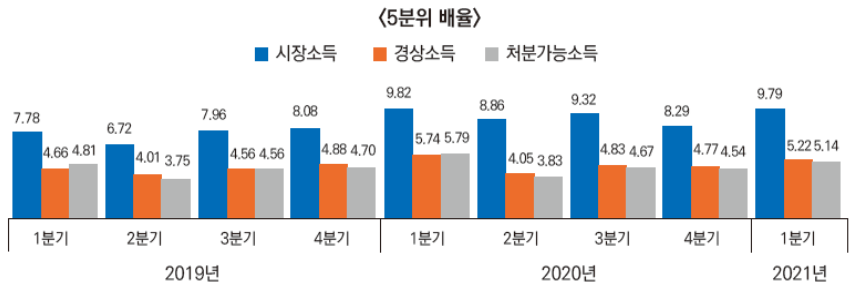
양극화 심화 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도 다양한 연구에서 미래사회의 주요 메가 트렌드로 지목한 요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은 2011년 11.21에서 2014년 10.32로 다소 낮아졌으나, 이후 증가세를 보여 2020년 11.37로 상승하였다(통계청 보도자료, 2021.12.16.).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배율이 낮아지는데 이는 공적 지원을 통한 소득분배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2021.12.16.). 요컨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 주: 소득 5분위배율: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
*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1.12.16.).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38쪽, <그림 6-3>.

그림 11-9. 소득 5분위배율 추이(2011~2020)

양극화 현상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전후의 5분위 배율을 비교한 결과, 2019년 1분기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7.78인 데 비해, 2020년 9.82, 2021년 9.79로 확대되었고, 시장소득에 공적 이전이 고려된 경상소득과 조세부담까지 반영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5분위 배율은 2019년 4분기 4.70에서 2020년 4분기 4.67로 다소 낮아진다(김성아, 2021.9.27.).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공적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상위 소득과 하위 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며, 그 타격이 하위 계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 출처: 김성아(2021.9.27.). 불평등, 지표로 보는 10년.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09호, 11쪽, [그림 6].

그림 II-10. 코로나19 전후의 소득 5분위배율 추이(2019-2021 분기별)

3)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²⁾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변화는 공통적으로 지목되는 대표적인 메가트렌드 중 하나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에 의해 빠르게 확산되었다(조상식, 2017; 조상식 외, 2021: 60에서 재인용).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영향력을 경제 및 기업, 국가 및 세계관계, 사회, 개인 등의 차원에서 제시한 바 있는데, 조상식 외(2021)의 연구에서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간략히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은 고성장이 아닌 저성장의 시대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불평등, 고용 및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병폐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의 혁신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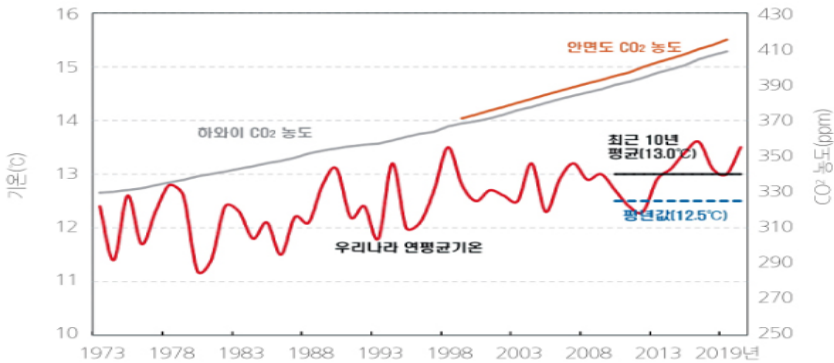
2) 이 내용은 조상식 외(2021). 「2030 서울혁신미래교육 개념 및 비전 연구」, 59-65쪽 내용을 요약하였다.

로 인해 노동시장에 명암이 야기될 수 있다. 기술발달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새로운 직업을 찾고 기술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변영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는 반면, 기술로 인해 실업이 대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Schwab, 2016; 조상식 외, 2021: 61에서 재인용). 노동시장의 양극화(저직능저급여 vs. 고직능고급여)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거의 자명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조상식 외, 2021: 61). 셋째,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노사관계도 혁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넷째, 전자정부의 확대에 따라 권력이 국가세력에서 비(非)국가세력으로, 저명한 기관에서 느슨한 네트워크로 이동한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 관계와 국제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섯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숙련도가 낮은 노동력을 보유한 사람들 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 적응 역량이 높은 사람들이 이윤을 독식할 가능성이 크므로, 불평등은 점차 심해질 우려가 크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4차 산업혁명은 개인의 행동양식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조상식 외, 2021: 62-63).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의 상용화와 일상화는 사회 전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김기현 외, 2016).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종류를 바꾸고 근로 형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먼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4) 기후환경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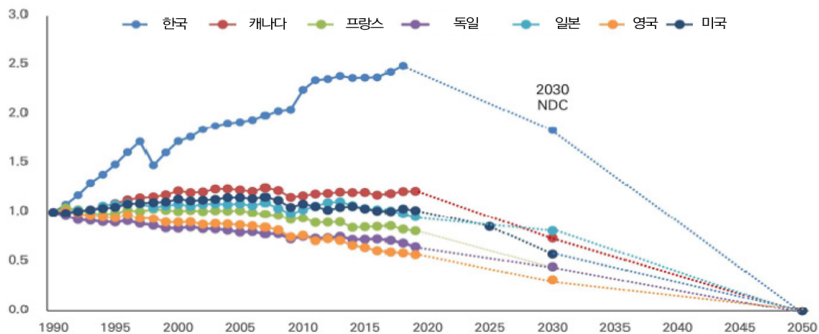
기후위기로 대변되는 환경 문제도 청소년 정책을 둘러싼 주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후 26년 간 약 2.37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86.1%에서 2016년 91.9%로 증가하였다(통계의 창, 2020 겨울호).



출처: 통계의 창, 2020 겨울호. 통계광장: 기후변화, 지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http://sti.kostat.go.kr/window/2020b/main/2020_win_06.html 에서 2022년 7월 2일 인출.

그림 II-11. 연도별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 변화

특히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향후 훨씬 더 급격한 에너지시스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임성근 외, 2022: 35). 여타 주요국들에 비해 늦은 시기에 본격적인 산업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왔는데, 그로 인해 여타 OECD 국가들은 지난 수십년 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지 않거나 감소한 반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동기간 동안 150% 가량 증가하였고, 2018년에야 7.27억 톤으로 정점에 도달하였다(임성근 외, 2022: 35). 그에 비해 탄소중립 도달 목표 시점은 2050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훨씬 급격한 에너지 시스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임성근 외, 2022: 35).



출처: 임성근 외(2022).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 35쪽, <그림 2-3>.

그림 II-12. 우리나라와 주요 OECD 국가의 배출량 추이 탄소중립 달성 경로

이 같은 기후변화는 사회구성원 전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지만, 특히 청소년세대가 느끼는 민감도가 더 높은 편이다. 청소년세대는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 그로 인한 기후위기에 기성세대보다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다. 기성세대가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풍요와 이익을 누린 세대'라면, 청소년은 '기후위기 피해를 부담할 세대'이며, 따라서 세대 간 기후불평등 피해의 당사자라는 주장이 제기된다(오연재, 2021.8.26.).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2020년 7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식을 개최했고, 같은 해 9월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10월 '2050년 탄소 중립선언'을 했고, 2021년 1월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학교 및 사회 전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영석, 2021.7.15.). 이처럼 기후변화는 사회구성원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트렌드이며, 특히 미래세대에게 주용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5) 포스트 코로나³⁾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virus)는 2019년 말경 발생하여 2020년에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일컫는다. 코로나19는 그야말로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했다. 강력한 전파력으로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원격 근무,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새로운 사회문화와 함께, 전통적 의료제도와 사회복지, 가족개념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냈고, 그로 인해 향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조상식 외, 2021: 65).

조상식 외(2021: 68-70)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탈세계화(deglobalization)이다. 감염병 차단을 위해 개별 국가는 자국내 생산체제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비대면의 확대이다. 온라인판매와 배달앱의 확대, 화상회의와 넷플릭스와 같은 재택 엔터테인먼트의 증가는 생산과 소비 사이의 균열(decoupling)을 가속화 할 것이다. 셋째, 지역 경제(local economy)로의 축소 현상이다. 여행과 소비의 국지적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으며, 공유경제의 성장이 정체되고 경제적인 의미에서 전반적인 이동성이 약화될

3) 이 소절의 내용은 주로 조상식 외(2021). 「2030 서울혁신미래교육 개념 및 비전 연구」, 65-76쪽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 확대에 관한 내용은 연구진이 추가하였음.

가능성이 있다. 넷째, 뉴노멀의 등장이다. 지금까지 누려온 일상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정치권력의 사적 영역에 대한 관여가 심화될 수 있다(조상식 외, 2021: 68-70).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분야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학교 및 교육부문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 분야 전반에서 에듀테크(EduTech)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원격교육이 교육방식의 하나로 대두되었고, 나아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Hologram)을 활용한 교육매체의 개발과 운영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조상식 외, 2021: 71).

실제로 코로나19는 사교육뿐만 아니라 제도권 교육에서 온라인학습이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사교육·평생교육 등 여타 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온라인교육이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나, 초·중고 및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제도권 교육에서는 대면학습이 일반적인 교육방식이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교육도 온라인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는 교육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행된 인터넷 이용 목적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조사 대비 2020년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이전에 비해 교육·학습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27.5%p 증가해, 인터넷 이용 목적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5.25.). 이 같은 결과는 온라인학습이 일반적인 학습 형태로 대두되는 현실을 방증한다.

표 II-2. 최근 1년 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목적

		여가 활동	커뮤니 케이션	자료 및 정보 획득	교육·학습	홈페이지 등 운영	직업·직장
2016	10대	97.5	95.1	88.4	72.4	51.5	7.9
	20대	98.5	99.9	99.8	60.4	74.7	42.2
2017	10대	98.9	97.1	92.6	73.6	53.8	7.8
	20대	99.4	100.0	100.0	64.3	78.2	51.3
2018	10대	99.5	98.2	95.6	83.8	70.1	7.7
	20대	99.7	100.0	100.0	65.5	90.9	59.8
2019	10대	99.5	98.6	96.0	83.5	69.9	8.9
	20대	99.7	100.0	100.0	70.2	91.8	60.8
2020	10대	99.1	98.5	95.2	99.9	64.8	9.4
	20대	99.8	99.9	100.0	82.6	87.4	51.5
2021	10대	100.0	99.8	99.9	99.9	47.4	9.4
	20대	100.0	100.0	100.0	77.9	99.8	55.2

*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5.25.). 2022년 청소년통계, 26쪽.

여기에 고등교육부문에서는 이미 MOOC 강의가 제공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유다시티(Udacity) 등이 인기를 끌면서 교육부문 전반에 걸쳐 온라인학습은 더욱 확산·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에 따라 교육 패러다임도 바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의 삶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6) 참여 활성화

마지막으로, 시민참여 활성화도 사회 분야 미래트렌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재영 외(2019)는 정치 분야 미래트렌드로 정치권력의 분권화와 함께 시민의 참여 활성화, 지방과 민간의 자율성 확대 등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역(마을) 및 시민 중심의 교육기회 확대, 지역 특성과 민간의 자율성을 반영한 정책과 소통 제도 마련, 지역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지원 정책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다. 상술한 경향성은 청소년정책 분야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 참여 활성화의 중요성이 점차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도 ‘국가청소년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회환경변화’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청소년 주도성’, ‘청소년 참여’가 주요 아젠다로 도출된 바 있다. 이에 ‘참여 활성화’를 향후 고려해야 청소년정책 주요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사회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는 흐름은 여러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호하는 통치 형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모든 세대에서 대의민주주의, 강한 리더 중심의 통치에 비해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한다는 응답 결과가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는 최근의 조사결과(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그림 II-13) 참조). 위임된 대표에게 사회 운영을 맡겨두기보다는, 구성원들이 주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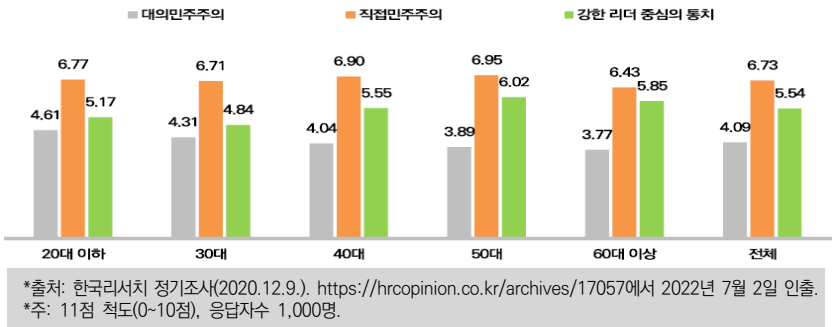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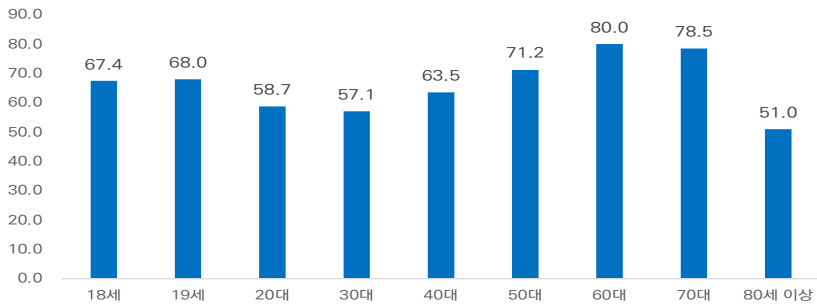


그림 II-13. 선호하는 국가 통치 형태 (단위: 점)

정치참여 관련하여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관심이 증대된 것도 중요한 정책환경 변화로 볼 수 있다.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이후 처음 실시된 전국 단위 투표인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10대의 투표율은 18세 67.4%, 19세 68.0% 등으로 나타나, 20대(58.7%), 30대(57.1%) 및 40대(63.5%)에 비해 높게 파악되었다(이창호, 2022: 30).



* 출처: 이창호(2022). 18세 청소년, 첫 투표권을 행사하다, 30쪽, [그림 1-5]에서 재인용.

그림 II-14.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단위: %)

2. 청소년이 처한 실태: 변화와 추이

이 절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청소년이 처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실태 파악에 사용된 지표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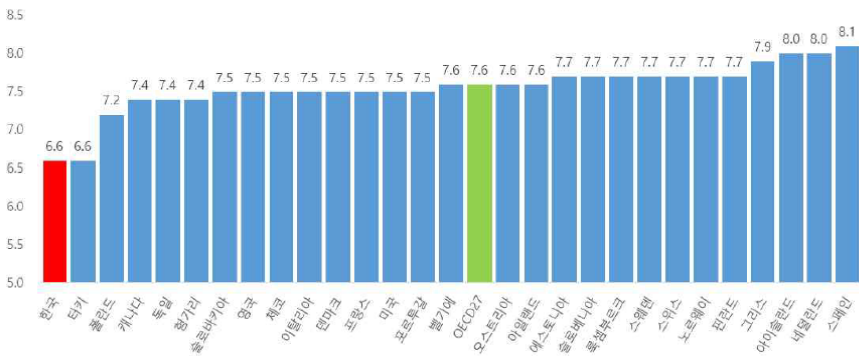
표 II-3. 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해 검토한 지표

구분	세부 지표	검토 자료
종합	• 청소년·청년의 주관적 만족감	사회조사
	•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사회조사
	• 청소년 사망자 수 및 사망 원인	인구동향조사/사망원인통계
활동참여 및 권리 증진 관련 실태	• 청소년 시설 이용 경험 및 빈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식 변화	
	•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 사회문제 관련 참여 활동 경험	
	•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및 참여 여부	
보호·복지 및 자립지원	• 안전·행동 • 거주 지역의 안전 수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구분	세부 지표		검토 자료
관련 실태	• 보호·복지	• 청소년 흡연율 및 음주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추세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	
		• 청소년폭력 및 성폭력 피해율	
		• 온라인(인터넷)공간에서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경험률	성매매 실태조사
		• 인터넷을 통한 성적 유인 피해 경험	
	• 자립	• 청소년의 직업선택 요인	사회조사
		• 아르바이트 경험 및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위기 청소년	• 위기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위기청소년의 자해·자살 시도 경험 및 자살 생각·시도 이유	
기타: 코로나19의 영향	•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삶의 변화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청소년이 생각하는 사회 불안 요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1) 종합지표: 주관적 행복감과 고민

먼저,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개괄하기 위해, 주관적 행복감을 살펴보았다. 주관적 행복감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최상위 지표이기도 하다. 검토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여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다. OECD 국가 및 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 대상 국가 27개의 전체 평균은 7.6인 데 비해, 한국 청소년의 평균은 6.6으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 출처: 류정희 외(2019),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524쪽, [그림 13-1] (원자료는 OECD(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그림 II-15. OECD 국가 청소년들의 행복도 비교 (단위: 점)

시계열 비교에서도 이 같은 경향성은 동일하게 관찰된다. 염유식, 성기호(2021)가 2009~2021년까지 OECD 국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를 비교한 바에 따르면, OECD 평균을 100으로 표준화하여 비교한 결과,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일관되게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특히 2018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가장 최근 조사인 2021년 조사에서는 OECD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 OECD 평균을 100, 표준편차를 10으로 표준화시킨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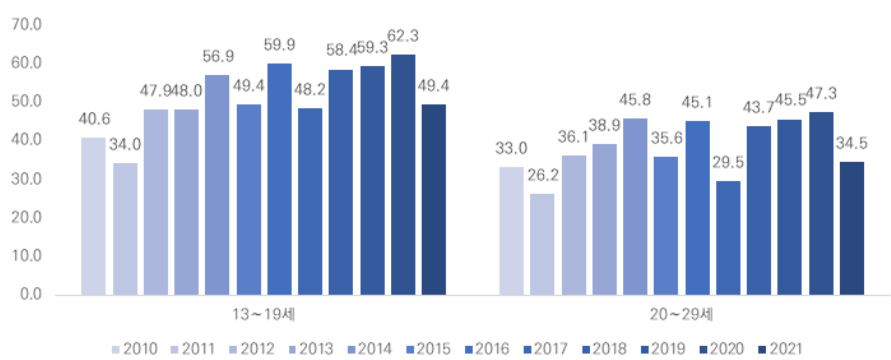
* 출처: 염유식, 성기호(2021). 한국 어림아·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13쪽, [그림 1-2].

그림 II-16. OECD 국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표준점수 변화 추이

앞서 국제 비교 자료를 통해 상대적 수준을 살펴보았다면, 아래에서는 국내 데이터를 통해 좀 더 세밀한 실태를 검토해보았다. 먼저, [그림 II-17]에는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해 산출한 청소년·청년의 주관적 만족감 긍정 응답 비율(약간 만족+매우 만족 응답 비율의 합산값)이 제시되어 있다. 연령별로는 13~19세에 해당하는 10대 청소년은 대체로 주관적 만족감 긍정 응답 비율이 40~60%, 20대 청년은 30~47% 사이에 머물고 있다(국가통계포털: 청소년·청년의 주관적 만족감, 2022.5.30.). 이러한 결과는 10대 청소년은 10명 중 4명, 20대 청년은 10명 중 5명 이상이 주관적 만족감이 불만족 수준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또한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긍정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난 점도 특징적이다. 시계열별로

는 일관된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일정 범위 안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다만, 2018~2020년에는 대체로 긍정 응답 비율이 상승하다가 2021년에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이 청소년·청년의 주관적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방증한다.



* 출처: 국가통계포털. 청소년·청년의 주관적 만족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20R&conn_path=13 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 데이터: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제시된 결과값은 매우 만족+약간 만족의 합산값).

그림 II-17. 청소년·청년의 주관적 만족감 (단위: %)

〈표 II-4〉에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토대로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이 제시되어 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응답자 비율을 의미하는데, 대체로 40% 안팎에서 형성되어 있고, 2018~2020년 사이에 다소 감소했으나, 2021년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5.25.). 우울감 경험률은 25~30% 사이의 응답률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 이상의 비율로 우울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주관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I-4.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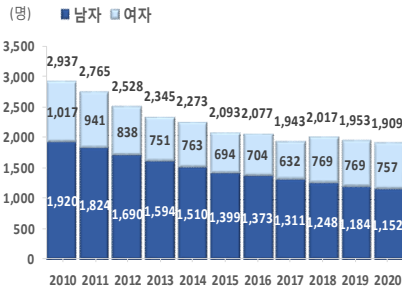
	스트레스 인지율 ¹⁾					우울감 경험률 ²⁾				
		남자	여자	중학생	고등 학생		남자	여자	중학생	고등 학생
2011	42.0	35.8	49.0	39.0	45.0	32.8	28.0	38.2	30.0	35.5
2012	41.9	34.8	49.6	38.9	44.7	30.5	25.5	36.0	28.2	32.6
2013	41.4	34.3	49.3	39.1	43.7	30.9	25.2	37.1	29.0	32.6
2014	37.0	30.8	43.7	33.4	40.3	26.7	22.2	31.6	24.4	28.8
2015	35.4	29.6	41.7	31.6	38.7	23.6	19.7	27.8	21.2	25.6
2016	37.4	30.5	44.9	33.6	40.5	25.5	20.9	30.5	22.7	27.7
2017	37.2	30.4	44.6	34.1	39.8	25.1	20.3	30.3	23.5	26.4
2018	40.4	32.0	49.5	37.0	43.4	27.1	21.1	33.6	25.2	28.7
2019	39.9	31.7	48.8	37.2	42.4	28.2	22.2	34.6	26.9	29.4
2020	34.2	28.1	40.7	30.4	37.9	25.2	20.1	30.7	22.9	27.4
2021	38.8	32.3	45.6	36.4	41.2	26.8	22.4	31.4	25.9	27.7

*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5.25.), 2022년 청소년통계, 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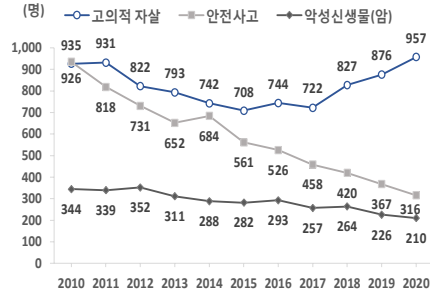
* 주: 1)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2) 최근 1년 동안 2주 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우리 청소년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 문제는 청소년 사망원인을 통해서도 점검해볼 수 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줄곧 '고의적 자해(자살)'로 파악된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21.5.25.). 2011년 이전에는 안전사고가 가장 주된 청소년 사망원인이었으나, 최근 10여년 간 '고의적 자해(자살)'이 주된 사망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사망자 수 자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청소년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9~24세) 사망자 수]



[청소년(9~24세) 사망원인]

*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5.25.), 2022년 청소년통계, 12쪽.

* 데이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및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그림 II-18. 청소년 사망자 수 및 사망 원인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주로 고민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통계청 「사회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13~18세 청소년의 가장 주요한 고민거리는 ‘공부(성적, 적성)’(46.5%)이며, ‘외모’(12.5%), ‘직업’(12.2%) 순으로 파악되었다. 다른 선택지들에 비해 ‘공부(성적, 적성)’라는 응답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 학업 스트레스가 10대 청소년기의 주된 고민거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24세 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된 고민거리가 ‘직업’이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았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21.5.25.). 이러한 결과는 10대에는 학업 경쟁, 20대에는 취업 경쟁으로 이어지는 경쟁 구도 및 이러한 경쟁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청소년기 고민의 핵심 원인임을 시사한다.

표 II-5.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13세~24세)

(단위: %)

	계	공부 (성적, 적성)	직업	외모	신체적 정신적 건강	용돈 부족	가계 경제 어려움	가정 환경	친구 (우정)	기타 1)	연애 상대와의 관계 ²⁾	고민 없음
2018	100.0	29.6	30.2	10.9	5.4	4.9	4.8	1.7	2.5	1.8	1.8	6.4
2020	100.0	29.7	28.1	10.2	8.2	4.5	4.4	1.9	1.9	1.9	0.7	8.5
남자	100.0	29.8	26.7	8.6	8.7	5.1	4.0	1.8	1.1	2.6	0.7	10.7
여자	100.0	29.6	29.5	11.7	7.7	3.8	4.8	1.9	2.7	1.3	0.7	6.3
13-18세	100.0	46.5	12.2	12.5	6.6	4.6	2.0	1.6	3.2	2.5	0.1	8.4
19-24세	100.0	16.9	40.3	8.4	9.4	4.4	6.3	2.1	1.0	1.5	1.2	8.5

* 주: 1) ‘학교·학원 폭력’, ‘흡연, 음주’, ‘인터넷 중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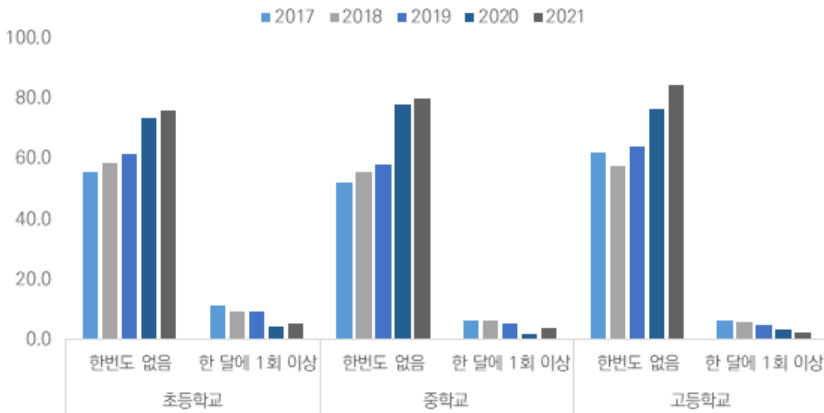
2) 2020년부터 ‘이성교제’ → ‘연애 상대와의 관계’로 명칭 변경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21.5.25.), 2021년 청소년통계, 13쪽.

* 데이터: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2) 청소년의 활동참여 및 권리 증진 관련 실태

다음으로, 청소년의 활동참여 및 권리 증진 관련 실태를 점검해보았다. 먼저 <표 II-6> 과 [그림 II-19]에는 청소년활동의 중요한 장(場)으로 기능해 온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용 실태가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을 지난 1년 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국가통계포털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 2022.5.30.인출). 2020~2021년은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2019년까지의 추이를 보더라도,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다’는 응답 비율이 초등학교는 2017년 55.5%→2018년 58.7%→2019년 61.5%, 중학생은 2017년 52.0%→2018년 55.5%→2019년 58.0%로 증가하는 데 비해, ‘한 달에 1회 이상’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 2022.5.30.인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시설이 청소년 다수와 괴리되어 있는 현실을 방증한다.



* 출처: 국가통계포털.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42_1&conn_path=I3 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및 재구성.

* 데이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II-19.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및 빈도(단위: %)

표 II-6.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및 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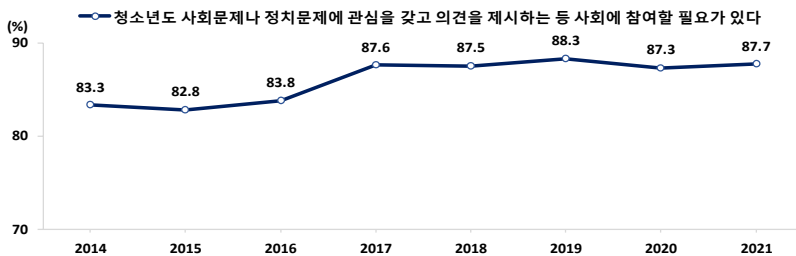
학교급	이용 빈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초등학교	한 번도 없음	55.5	58.7	61.5	73.6	76.1
	한 달에 1~2회 정도	5.2	4.7	4.4	2.3	2.5
	1주일에 1~2회 이상	6.0	4.6	4.8	2.0	2.9
	한 달에 1회 이상	11.2	9.3	9.2	4.3	5.4
중학교	한 번도 없음	52.0	55.5	58.0	78.0	80.3
	한 달에 1~2회 정도	3.7	3.7	3.0	1.2	2.6
	1주일에 1~2회 이상	2.5	2.8	2.5	0.8	1.3
	한 달에 1회 이상	6.2	6.5	5.5	2.0	3.9
고등학교	한 번도 없음	62.4	57.5	64.3	76.5	84.4
	한 달에 1~2회 정도	4.6	3.9	3.2	2.1	1.6
	1주일에 1~2회 이상	1.6	1.9	1.8	1.4	0.7
	한 달에 1회 이상	6.2	5.8	5.0	3.5	2.3

* 출처: 국가통계포털,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42_1&conn_path=13 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및 재구성

* 데이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II-20]~[그림 II-21]에는 청소년참여 관련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청소년참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2014년에는 83.3%를 나타냈으나, 2020년에는 87.3%로 4%p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5.25.). 선거권 연령 조정 등으로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환경과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향후에도 청소년 사회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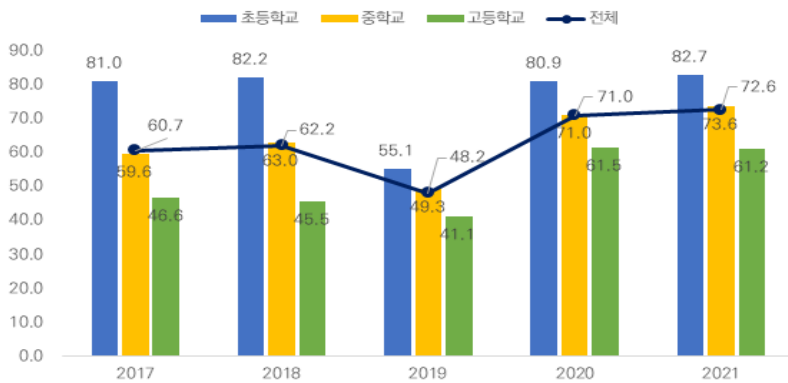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5.25.). 2022년 청소년통계, 28쪽.

* 데이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II-20.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식 변화 (단위: %)

우리 사회가 청소년과 관련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 비율이 2017년 60.7%→2018년 62.2%→2019년 48.2%→2020년 71.0%→2021년 72.6%로 파악되었다(국가통계포털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2022.5.30.인출). 2019년에 이례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대체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긍정 응답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조사 기준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 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보장 수준도 제고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서, 초등학교는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 응답 비율이 8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도 체감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참여권이 보다 강화되고,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국가통계포털,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14&conn_path=13 에서 2022.5.30. 인출
 * 데이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II-21.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단위: %)

[그림 II-22]에는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직접적인 참여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카페 가입’,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등 2가지

유형의 참여활동 모두 지난 5년 간 추세적으로 참여율이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다만, ‘거리집회나 문화행사’에 비해 ‘모임이나 인터넷카페 가입’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는 ‘거리집회나 문화행사’에 참여했다는 응답 비율(17.2%)이 ‘모임이나 인터넷카페 가입’ 비율(15.6%)보다 높았는데, 2018년부터 이러한 추세는 역전되었고, 2020~2021년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더 확대되었다(국가통계포털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 2022.5.30.인출).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청소년참여는 거리집회, 문화행사 등 오프라인 모임보다는 온라인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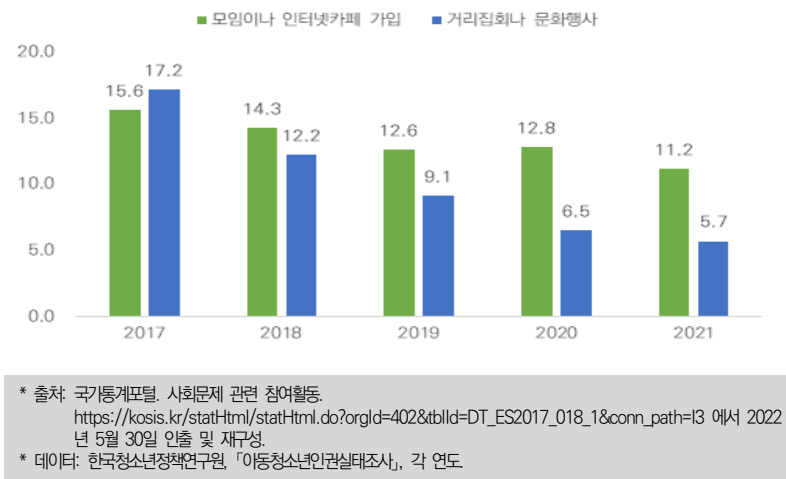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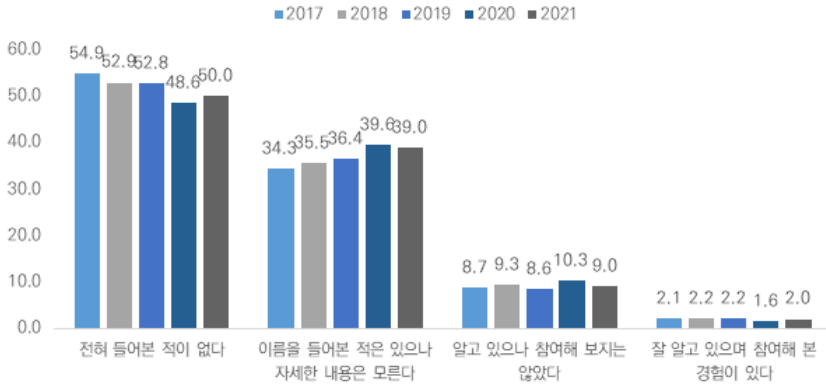


그림 II-22. 사회문제 관련 참여 활동 경험 (단위: %)

[그림 II-23]에는 그간 청소년참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인지 및 참여 여부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과반을 차지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일부 감소하고,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조금 증가하기는 했으나, 인지율이 일부 개선되었을 뿐 실질적인 참여 증진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참여기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17~2021년까지 5년 간 2% 수준에 머물고 있다(국가통계포털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2022.5.30.인출). 이러한 결과는 참여기구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청소년참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출처: 국가통계포털,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8&tblId=DT_ES2017_012&conn_path=3 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 데이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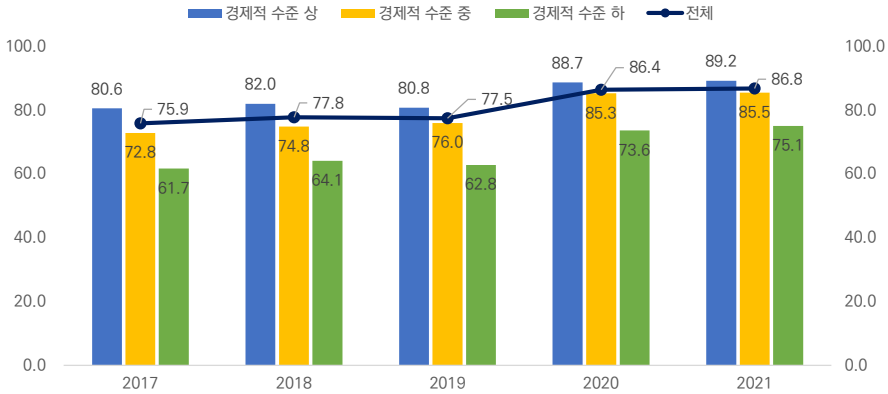
그림 II-23.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및 참여 여부 (단위: %)

3) 청소년 보호·복지 및 자립지원 관련 실태

이어서 청소년 보호·복지 및 자립지원 관련 실태를 간략히 검토해보았다. 검토 내용은 안전·행동, 보호·복지, 자립지원, 위기청소년 관련 실태 순으로 제시하였다.

(1) 안전·행동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거주 지역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긍정 응답 비율이 2017년 75.9%→2021년 86.8%로 나타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거주 지역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국가통계포털 거주지역의 안전 수준, 2022.5.30.인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긍정 응답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나름의 성과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의 안전을 신뢰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13.2%에 달한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거주 지역의 안전에 대한 평가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거주 지역이 안전하다는 응답 비율도 낮게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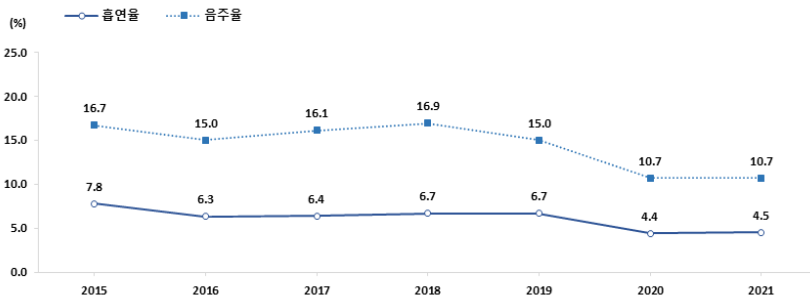
* 출처: 국가통계포털, 거주지역의 안전 수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7_1&conn_path=13 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 데이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II-24. 거주 지역의 안전 수준 (단위: %)

‘행동’ 측면에서는 흡연·음주 등 유해약물 이용과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를 검토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을 살펴보면, 흡연율은 2015년 7.8%에서 2021년 4.5%로 감소하였고, 음주율 역시 2015년 16.7%에서 2021년 10.7%로 감소했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5.25.). 이러한 결과는 유해약물에 대한 청소년보호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5.25.), 2022년 청소년통계, 4쪽.

* 데이터: 교육부·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그림 II-25. 연도별 청소년 흡연율 및 음주율 (단위: %)

유해약물 이용은 줄어들었지만, 스마트폰 과의존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10대(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잠재적 위험군+고위험군) 비율은 2016년 30.6%에서 2021년 37.0%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5.25.).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온라인 의존이 심화된 탓도 있겠으나, 조사대상 청소년 3명 중 1명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해당하며, 특히 고위험군 비율도 2016년 3.5%에서 2020년 5.0%, 2021년 5.7%로 증가(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5.25.)했다는 사실은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에 보다 많은 관심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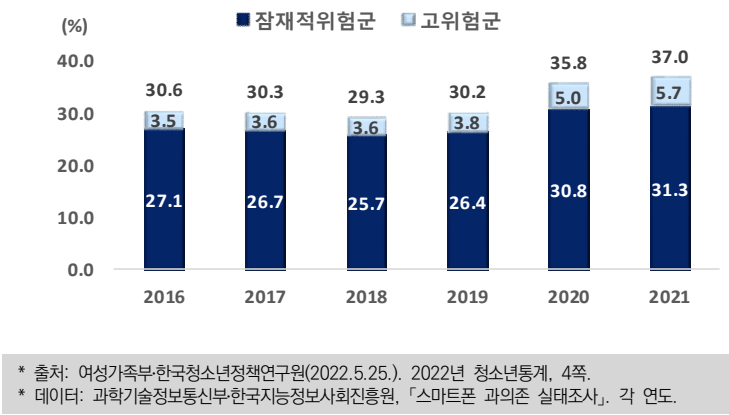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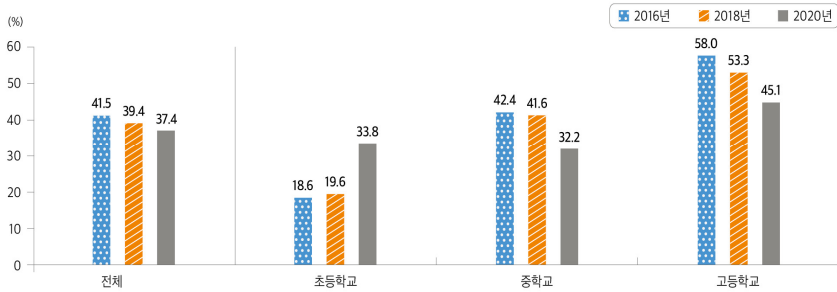


그림 II-26. 연도별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단위: %)

(2) 보호·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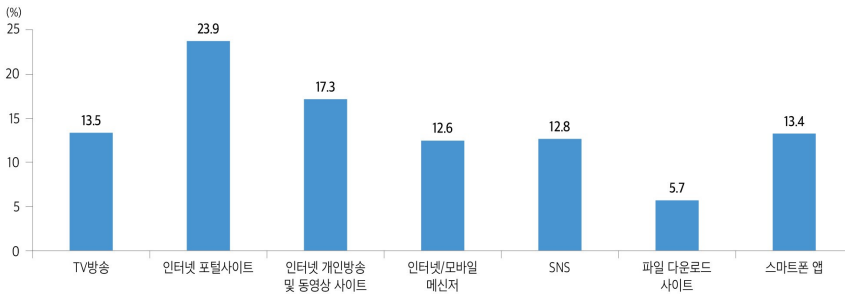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성인용 영상물 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 간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을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초등학생의 이용률은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1년 간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로, 2016년 41.5%→2018년 39.4%→2021년 37.4%로 감소세를 나타낸 반면, 초등학생의 이용률은 2016년 18.6%→2018년 19.6%→2021년 33.8%로 크게 증가했는데(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3.22.), 이러한 결과는 성인용 영상물 이용이 저연령화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3.22.). 여가부,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 강화한다, 5쪽.

그림 II-27. 학교급별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추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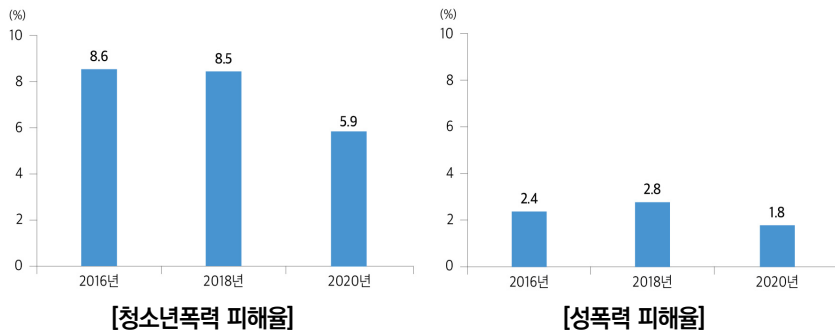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는 매우 다양한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23.9%),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7.3%), 스마트폰 앱(13.4%), SNS(12.8%), 인터넷/모바일 메신저(12.6%)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3.22.).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은 거의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인터넷 개인방송, 스마트폰 앱, SNS 등 모바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3.22.). 여가부,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 강화한다, 5쪽.

그림 II-28.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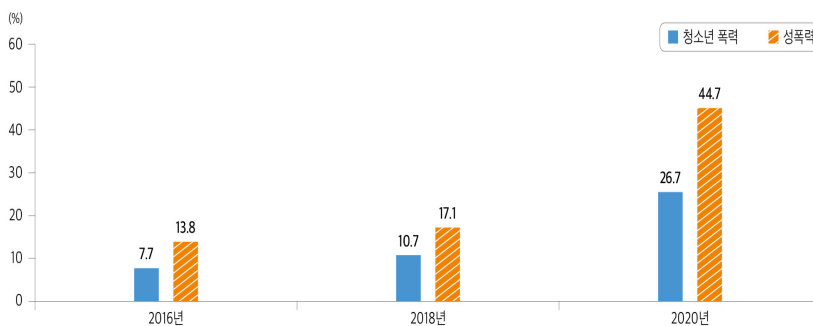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II-29]에는 폭력·성폭력 피해율이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폭력 피해율은 2016년 8.6%에서 2018년 8.5%, 2020년 5.9%로 다소 감소하였고, 성폭력 피해율은 2016년(2.4%) 대비 2018년(2.8%)에 0.4%p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1.8%로 감소하였다(김지연 외, 2020). 폭력·성폭력 피해율이 감소한 것은 청소년보호 정책 추진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 출처: 김지연 외(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36쪽, [그림 II-12] 및 [그림 II-13].

그림 II-29. 연도별 청소년폭력 및 성폭력 피해율 (단위: %)

청소년폭력·성폭력 실태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온라인에서의 피해 경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II-30]에는 폭력·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피해 장소를 조사한 결과 중, ‘온라인(인터넷) 공간’이라고 답한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 나타난 것처럼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폭력·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0년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의 경우, 응답자의 44.7%가 온라인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김지연 외, 2020).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보호에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출처: 김지연 외(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37쪽, [그림 II-14].

그림 II-30.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경험률 (단위: %)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역시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성보호 취약성을 보여준다.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는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적 유인과 성매매 실태를 심층 파악하기 위해, 기존 위기청소년 대상 조사와 더불어 전국 중·고교생 6,423명을 추가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난 3년 간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1.1%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에서 만남 유인까지 경험한 비율도 2.7%를 차지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별첨자료, 2020.6.16.).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한 주요 경로는 인스턴트 메신저가 28.1%로 가장 많았고, SNS(27.8%), 인터넷 게임(14.3%)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인자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관계(76.9%)로 파악되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별첨자료, 2020.6.16.).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이 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주된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7. 일반 청소년 대상 최근 3년 간 인터넷을 통한 성적 유인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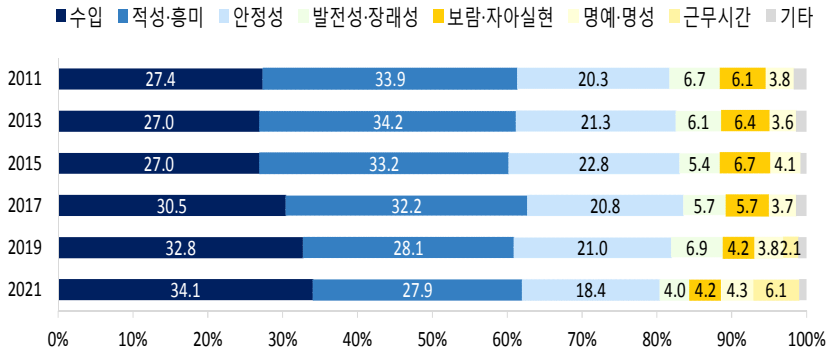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터넷을 통한 성적 유인 피해경험 있음					
		성에 관한 대화 유인 (A)	성적 정보에 관한 대화 유인 (B)	나체/신체의 일부를 찍은 사진/동영상 송부 유인(C)	화상채팅 시 야한 자세/ 자위행위 유인(D)	A~D 중 한 가지 이상 성적 유인 경험	
성 별	전체	6,423	9.3	3.3	2.4	1.6	11.1
	만남 유인	6,423	2.2	1.2	0.9	0.4	2.7
	남자	3,383	9.8	2.4	1.6	1.7	11.1
	만남 유인	3,383	2	1.1	0.7	0.5	2.5
	여자	3,040	8.8	4.3	3.4	1.5	11.0
	만남 유인	3,040	2.4	1.4	1.2	0.4	2.9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별첨자료(2020.6.16.). 2019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요약, 2쪽.

(3) 자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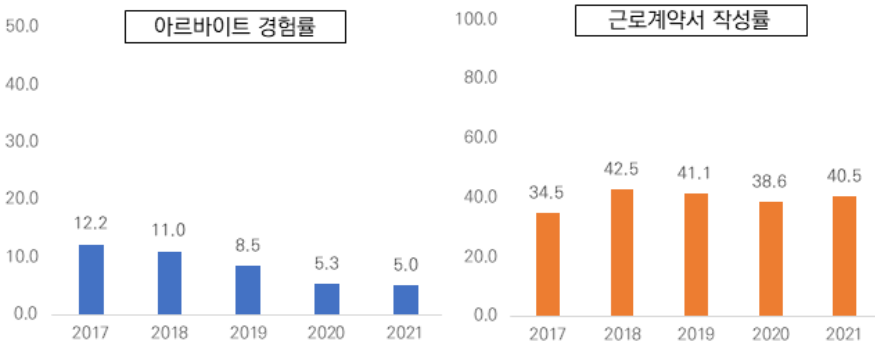
[그림 II-31]에는 청소년의 직업선택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적성·흥미’가 중요하다는 응답 결과가 33.9%로 가장 많았고, ‘수입’이 27.4%로 2위, ‘안정성’이 20.3%로 3위로 나타난 데 비해, 2021년 조사에서는 ‘수입’이 34.1%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고, ‘적성·흥미’가 27.9%로 2위, ‘안정성’이 18.4%로 3위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5.25.). 최근 수년간 ‘수입’에 대한 응답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직업 선택에서 경제적 보상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5.25.), 2022년 청소년통계, 22쪽.
* 데이터: 통계청 「사회조사」 13~24세 대상, 각 연도.

그림 II-31. 청소년의 직업선택 요인 (단위: %)

아르바이트 관련 실태의 경우, 2017~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아르바이트 경험률을 살펴보면, 2017년 12.2%에서 2021년 5.0%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는 응답 비율은 2017년 34.5%에서 2021년 40.5%로 6%p 증가하기는 했으나(국가통계포털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및 부당처우 경험, 2022.5.30.인출), 여전히 대단히 부족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가 여전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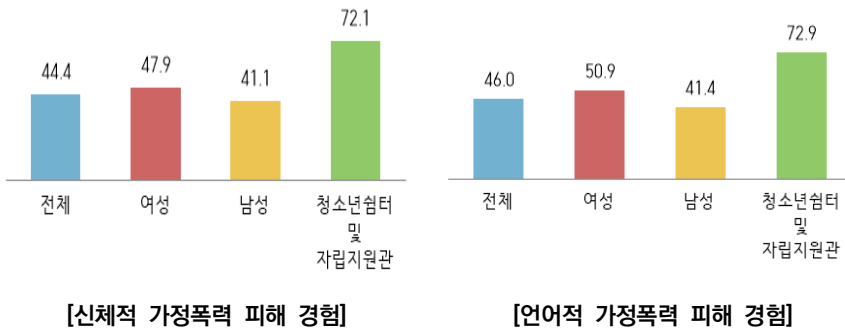


* 출처: 국가통계포털,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및 부당처우 경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48&conn_path=12 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및 재구성.
* 데이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II-32. 아르바이트 경험 및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단위: %)

(4) 위기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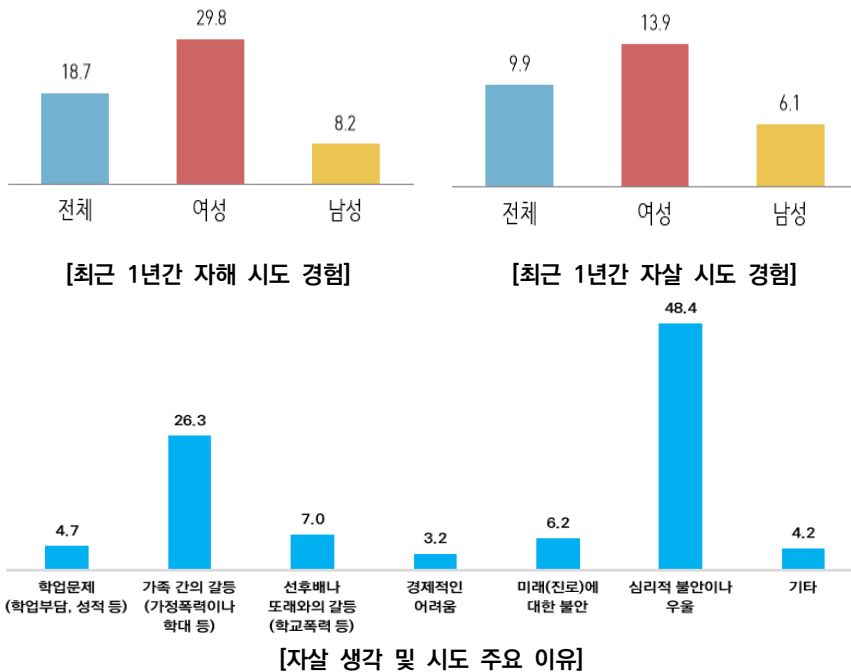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청소년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인 위기청소년 관련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중에서 지금까지 신체적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44.4%, 언어적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46.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4.27.). 이러한 결과는 위기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환경이 청소년을 위기상황으로 내모는 주요 원인임을 방증한다.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4.27.).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학대 경험”, 3쪽.

그림 II-33. 위기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단위: %)

위기청소년 중에서 자해·자살 시도 등을 경험한 고위기 청소년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위기청소년의 18.7%가 최근 1년 간 자해 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여자청소년은 29.8%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4.27.). 자살 시도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9.9%가 최근 1년 간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여자청소년은 그 비율이 13.9%를 차지했으며,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 48.4%, ‘가족 간의 갈등(가정폭력이나 학대 등)’ 26.3% 순으로 파악되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4.27.). 가족 간의 갈등이 청소년의 자해·자살 시도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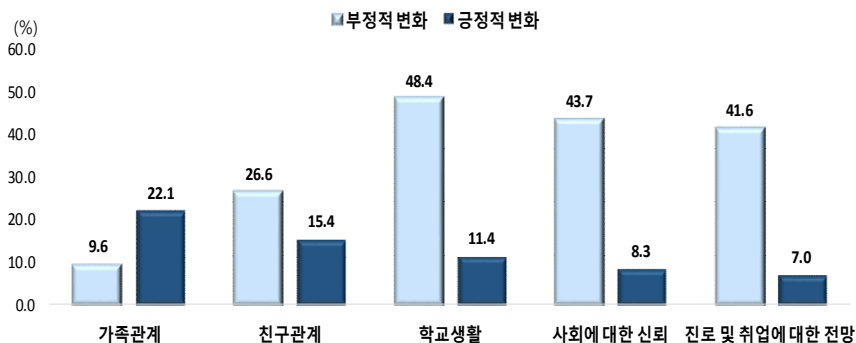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4.27.), 위기청소년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학대 경험”, 7쪽.

그림 II-34. 위기청소년의 자해·자살 시도 경험 및 자살 생각·시도 이유 (단위: %)

4) 기타: 코로나19의 영향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한 지표를 간략히 검토하였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가 삶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친구관계, 학교생활, 사회에 대한 신뢰,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보다 부정적 변화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교생활에 부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반면,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 변화(9.6%)보다 긍정적 변화(22.1%)가 있었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게 조사되어 대조를 이루었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21.5.25.).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제한과 비대면수업의 확산, 가정 내에서 머무는 시간의 증대가 가족관계를 밀착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반대로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21.5.25.). 2021년 청소년통계, 41쪽.

그림 II-35.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삶의 변화(2020년) (단위: %)

한편, 청소년이 생각하는 사회 불안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식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사회 불안 요인 조사 결과, 2018년에는 범죄 발생(30.1%), 국가 안보(17.0%), 도덕성 부족(11.6%), 환경오염(10.4%), 경제적 위험(10.2%) 순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신종질병’이라는 응답이 32.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21.5.25.).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불안수준과 민감도가 대단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신종질병’을 택한 응답자 비율이 13~18세 34.1%, 19~24세 30.8%로 나타나(통계청, 여성가족부, 2021.5.25.), 후기청소년에 비해 전기청소년에서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8. 청소년이 생각하는 사회 불안 요인(2018년 및 2020년)

(단위: %)												
구분	계	국가 안보	자연 재해	환경 오염	인재	경제적 위험	도덕성 부족	신종 질병	범죄 발생	계종 갈등	기타	
2018년	100.0	17.0	5.4	10.4	7.6	10.2	11.6	2.3	30.1	5.2	0.3	
2020년	100.0	8.9	3.0	5.6	4.8	10.1	8.7	32.2	22.6	4.0	0.1	
성별	남자	100.0	12.7	3.5	5.7	5.5	12.8	10.8	31.4	12.9	4.7	0.0
	여자	100.0	5.1	2.5	5.6	4.1	7.4	6.6	32.9	32.3	3.4	0.1
연령	13~18세	100.0	8.2	3.7	7.0	4.2	6.1	9.0	34.1	24.1	3.4	0.1
	19~24세	100.0	9.5	2.4	4.6	5.2	13.1	8.4	30.8	21.5	4.5	0.0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21.5.25.). 2021년 청소년통계, 28쪽.

* 데이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2018년 및 2020년 데이터.

3.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여건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및 청소년 정책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고,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청소년이 처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를 시사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인구 구조 변화가 청소년정책에 미칠 영향을 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데, 청소년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청소년정책의 경우, 정책대상자인 청소년의 규모가 대단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청소년 수가 급감하는 것은 정책대상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인구 감소 문제는 청소년시설 이용자 수 감소, 그로 인한 청소년지도자 인력의 양성·선발·배치 문제를 비롯해 청소년정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구 감소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정책대상자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문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이러한 구성의 변화로 인해 향후 다문화 청소년이 청소년정책에서 갖는 위상과 중요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가족구조도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변화이다. 또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연령대가 20대라는 점도 향후 청소년정책, 특히 후기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화로 보인다.

2) 저성장사회 양극화로 인한 청소년 복지정책 확대 필요

장기화 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와 사회 양극화 심화도 거시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환경요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층 간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사회 양극화 심화는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취업난과 청년실업 문제가 쉽게 풀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는 성인기 이행 지연, 청년빈곤, 청소년·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 결혼 및 출산 포기 등으로 이어지는 핵심 원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정책은 위기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과 청년 실업, 성인기 이행 지연 등에서 비롯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디지털 환경의 부각과 그에 대한 대비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비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과학기술의 발달을 고려해 요구되는 미래 역량이 정립될 필요가 있고, 교육정책은 물론 청소년정책도 이러한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진로체험과 같은 진로활동도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해,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책 인프라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환경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되돌리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하고 필요한지부터 면밀히 살펴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도 요구된다. 이는 특히 청소년 보호정책과 관련이 깊은데, 실태분석 결과 청소년폭력·성폭력과 관련하여 온라인에서의 피해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해 각별한 대응이 요구된다.

4) 청소년 참여에 대한 요구 증대 및 참여정책 개선의 필요성

다음으로, 청소년 참여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수요를 담아내기 위해 기존 참여정책의 틀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이 증대되고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이슈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2019년 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었고, 2021년에는 피선거권 연령과 정당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되어,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수요나 인식과는 달리 실제 경험하는 참여활동의 양과 질에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동안 추진된 청소년참여 정책의 핵심에 해당하는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고, 실제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 내외에 머물렀다. 이러한 현실은 증가하는 참여 수요를 참여기구 중심의 기존 정책의 틀로는 수용해내기가 어려울 것임을 방증한다. 따라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참여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5) 청소년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 추진 필요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난 5년간 추진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최상위 지표는 청소년의 주관적 만족감과 행복도였다. 지표 검토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는 일관되게 평균을 하회하였고, 우울감 및 스트레스 인지율에 대한 조사 결과는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의 비율로 우울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술한 결과는 한 마디로 청소년이 행복하지 못한 현실의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원인이 청소년정책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그로 인해 야기되는 치열한 경쟁, 사회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며 빠르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업성취 중심으로 평가되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괴리, 패자부활전이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는 편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청소년정책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반추해볼 필요는 있다.

따라서 이후의 청소년정책은 수요자인 청소년의 니즈를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는 정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슈가 ‘진로’ 문제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진로’, ‘직업’, 나아가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통한 ‘자립’에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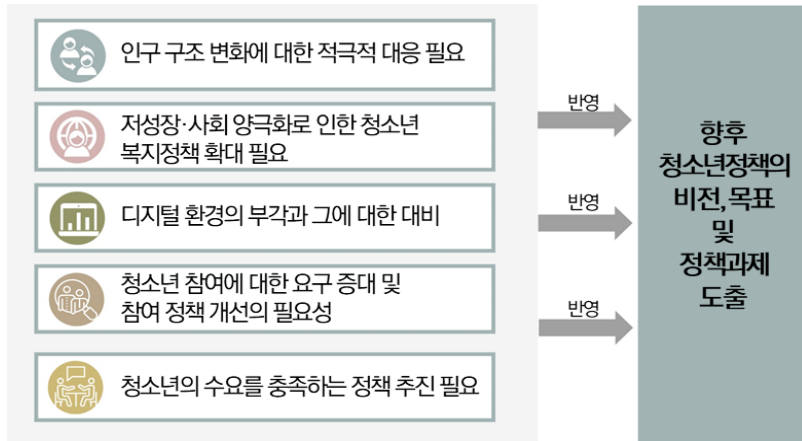


그림 II-36. 청소년정책 환경 및 청소년이 처한 실태 분석의 주요 시사점

○ — 제3장 국내·외 청소년정책 분석

- 1. 청소년정책 분석의 개요
- 2. 국내 청소년정책 분석
- 3. 해외 청소년정책 동향 분석
- 4. 소결 및 시사점

1. 청소년정책 분석의 개요

이 장에서는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전략 제시를 위해 국내·외 정책을 검토하였다. 우선 국내 청소년정책의 변천과 성과를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생애주기 상 청소년기와 인접하고, 법령상 연령이 중복되어 있는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외 청소년정책은 유엔(UN)과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의 청소년전략과 개별 국가의 중장기정책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제기구의 청소년전략 검토를 통해 해외 청소년정책의 큰 흐름, 기초와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동향이 각국의 청소년정책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 최근 청소년 포털을 새롭게 정비한 미국, 우리와 같은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호주와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장에서 검토한 국내외 해외사례 개요가 <표 III-1>에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

표 III-1. 국내·외 청소년정책 분석 개요

구분		검토 자료
국내	청소년정책 분석	•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3-1997)」부터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 각 기본계획별 비전, 정책방향, 목표, 정책영역 검토 •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2020)」
	유관분야 정책 분석	• 「아동정책기본계획」 • 「청년기본계획」
국외	유엔(UN)	• 「유스 2030」(Youth 2030)
	유럽연합	• 「EU 청소년전략 2019~2027」(EU Youth Strategy 2019~2027)

구분		검토 자료
	(EU)	
	독일	• 2019년 발표된 「독일 청소년전략」(Die Jugend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 2019년 전략의 핵심주제: '공동의 책임 안에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에 의한 정치(In gemeinsamer Verantwortung: Politik für, mit und von Jugend)
	프랑스	• 2022년 발표된 「청소년정책계획」(Politique en faveur de la Jeunesse)
	미국	• 「청소년프로그램 기관 간 실무그룹」(The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 IWGYP)의 비전, 목적, 목표와 IWGYP가 운영 중인 청소년프로그램 포털사이트인 youth.gov의 주제 영역
	호주	• 2021년 8월 발표된 「호주 청소년정책 프레임워크」(Australia's Youth Policy Framework)
	일본	• 2021년 4월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본부'에서 발표한 「신(新)아동·청소년육성대강」

2. 국내 청소년정책 분석

1)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변천과 성과⁴⁾

이 절에서는 그간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을 압축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정책의 흐름은 청소년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변화 과정을 통해 파악해볼 수 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시초는 1992년 시행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전까지 청소년정책은 문제대응에 중점을 두어왔는데,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는 일반청소년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수련활동 중심의 청소년육성제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청소년 수련거리,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등 수련활동 인프라 기반을 조성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여성가족부, 2021a).

'한국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모태로,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3~1997)'과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8~2002)'이 시행되었다. 이들 정책은 청소년에게 동반 자적 지위를 부여하고, 청소년 참여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청소년보호정책을 강화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에서 참여 주체로 인정한 점이 이 시기 청소년정책의 주요 성과로 볼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a).

2003~2007년까지 추진된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서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4) 이 내용은 여성가족부(2021a). 「2021 청소년백서」, IV쪽 그림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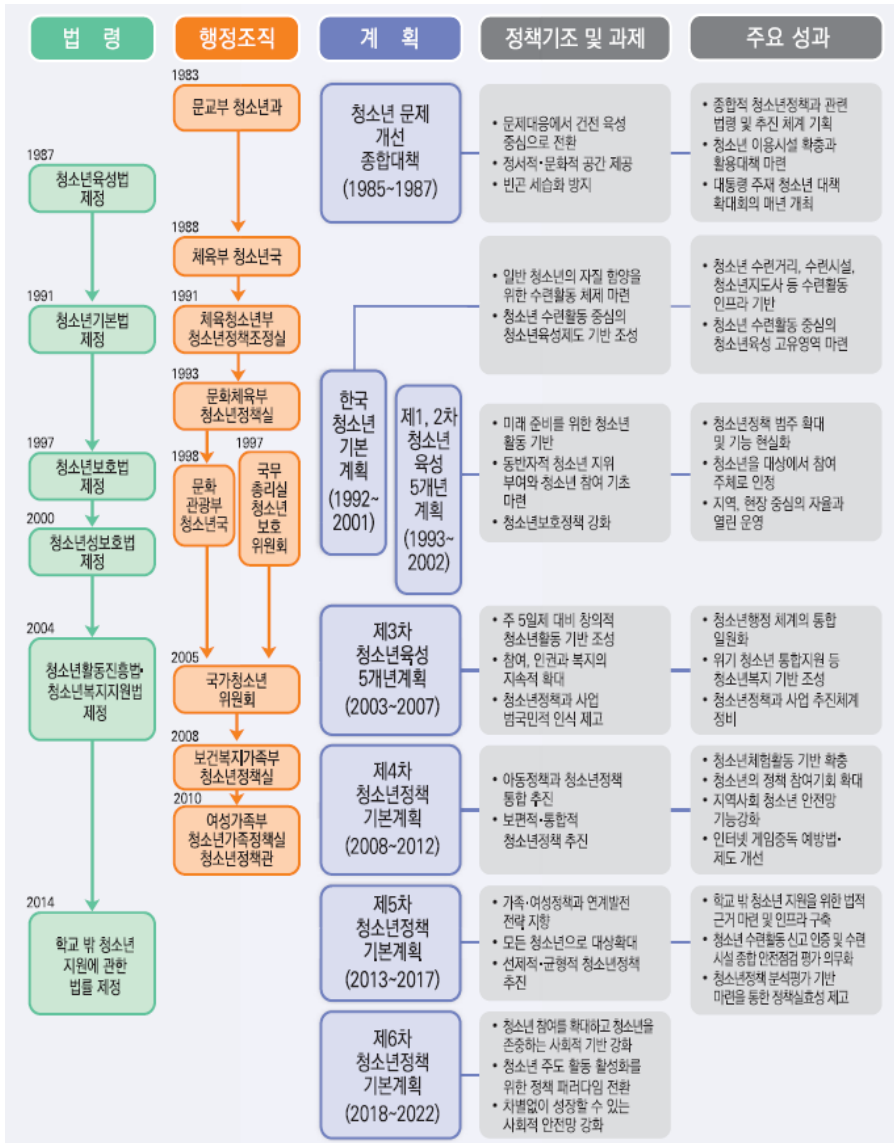
이어받아, 참여, 인권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 5일제에 대비해 창의적 청소년활동의 기반을 조성하며, 청소년 정책과 사업의 범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3차 계획의 주요 성과로는 청소년 행정체계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등 청소년복지의 기반을 조성했으며,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한 것이 주요 정책성으로 평가된다(여성가족부, 2021a).

제3차 정책계획까지 ‘육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청소년정책은 제4차 정책부터 지금과 같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제4차 계획은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을 추진하고, 보편적·통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체험활동 기반을 확충하고, 청소년의 정책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기능 강화에 힘쓴 것이 주요 정책성으로 거론된다(여성가족부, 2021a).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 주무부서를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여성정책과의 연계발전 전략을 지향하였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대상을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선제적·균형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5차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또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 인증 및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평가가 의무화되었고,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 것을 제5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로 볼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a).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은 제5차 기본계획의 정책기조와 성과를 계승·발전시켰다.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며,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든 청소년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21a).

〈표 III-2〉와 〈표 III-2〉에는 1991년 발표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부터 현재 적용 중인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정책방향, 정책목표, 정책영역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2021a). 2021 청소년백서, IV쪽.

그림 III-1.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표 III -2.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정책영역 비교: 1~3차

구분	한국청소년기본계획 (1991.6)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3.9)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8.7)	제3차 청소년육성 기본계획(2003.11)
비전	〈청소년상〉 덕·체·지의 조화로운 완성	- 우수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건강한 청소년문화를 창달 - 덕·체·지·예를 고루 갖춘 전인적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 - 신한국의 주인으로서 개혁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 청소년이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주체적인 삶을 영위 - 내일의 주역으로서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질을 함양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기루어 건전하고 책임의식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함.	도전하는 청소년, 꿈이 있는 사회
정책방향	1,360여만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보람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식과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스스로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수련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장기적·예방적·종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 청소년이 각자의 취미와 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심신을 단련하며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청소년단체와 지도자를 육성 - 청소년의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 청소년에 대한 가정·학교·사회·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	- 미래사회의 전망 - 청소년 관련 환경변화 전망 - 청소년의 역할과 청소년 사회 구현 - 청소년정책의 방향 전환 ※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자율 참여 ※ 청소년정책의 전환: 수요자 중심의 질적 발전	- 국가·청소년육성정책 총괄 기능 강화 - 문화·예술·관광, 체육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효과 극대화 -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정책 추진 - 과학적 정책입안 및 관리 시스템 도입
목표	청소년의 자발·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진 정직한 청소년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청소년과 함께 꿈과 희망의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

구분	한국청소년기본계획 (1991.6)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3.9)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8.7)	제3차 청소년육성 기본계획(2003.11)
정책영역	실현 • 보다 나은 기회가 부여되는 청소년 성장 요람 조성 • 선진민주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함양	• 산업사회 역군으로서 근검절약하는 청소년 • 신한국 건설을 계승할 진취적인 청소년 • 통일조국의 미래를 끌고 갈 유능한 청소년	•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배양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교류 법제 보강 재정 확충, 운영	• 가정과 학교의 역할 증대 • 청소년 보호 및 선도 • 간접한 청소년 활동의 지원 • 청소년 교류 확대 지원 • 국민 참여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 기회 확대 •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 • 체육 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 • 국제화·정보화 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 •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	• 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 강화 • 청소년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 추진체제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 확산

* 출처: 김기현 외(2016).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64쪽 <표 Ⅲ-1> 및 68쪽 <표 Ⅲ-2> 재구성.

표 III -3.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정책영역 비교: 4~6차

구분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¹⁾ (2007.12)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 ¹⁾ (2008.12)	제4차 청소년정책 (수정보완)기본계획 ¹⁾ (2010.12)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¹⁾ (2012.12)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²⁾ (2017.12)
비전	강건하고 행복한 청소년 희망세상 실현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사회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 사회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미래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정책 방향	- 꿈과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청소년 세상' 실현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위해요인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음으로써 기백과 능력이 충만한 '강건한 청소년 세상' 실현 -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대한민국 청소년이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식과 역량을 겸비하게 됨으로써 세계와 인류를 향해 '앞서가는 청소년 세상' 실현	- 아동·청소년 누구나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사회 -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다양한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 아동·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선진사회	- 통합적 청소년정책 - 포괄적 청소년정책 - 보편적 청소년정책 - 수요자 중심 청소년정책	- 신제적 청소년정책 - 포괄적 청소년정책 - 균형적 청소년정책 - 실질적 청소년정책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지원 추진
목표	- 모든 청소년들은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개인의 잠재역량을 충분히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풍부한 역량을 갖추게 됨. - 경제적 빈곤, 신체·정신적 장애 등 성장에 불리한	- 아동·청소년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체제 구축 -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사회여건 조성 -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공평한 기회 보장	- 청소년은 자기주도적 역량을 바탕으로 꿈을 키우고 실현 - 꿈이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건강한 가족구성원으로 자리잡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 핵심 인재로 양성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 증진 -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 청소년의 안전하고	-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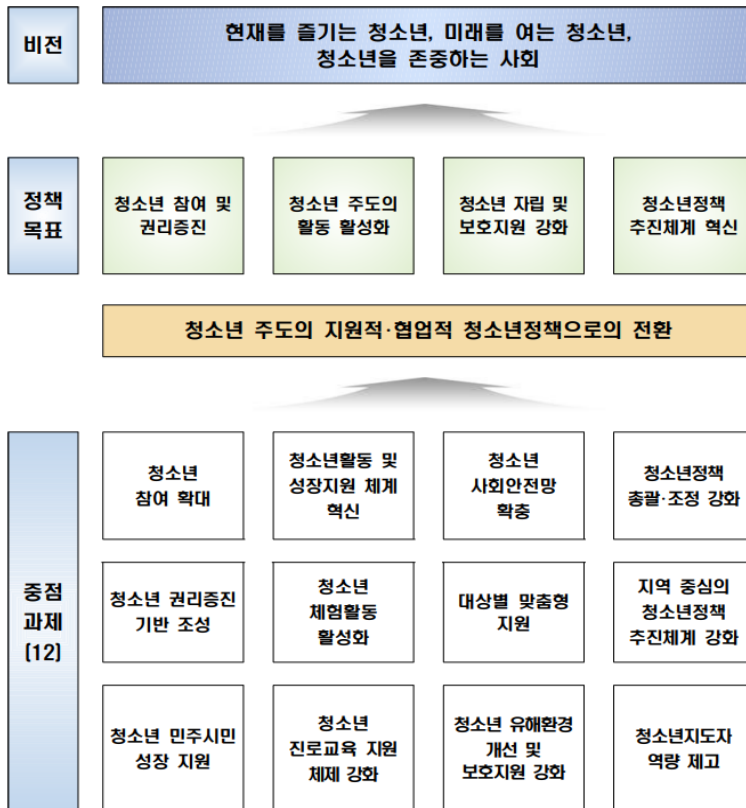
구분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07.12) ¹⁾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08.12) ¹⁾	제4차 청소년정책 (수정보완)기본계획 (2010.12) ¹⁾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2.12) ¹⁾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7.12) ²⁾
정책영역	여건을 가진 청소년은 국가와 사회의 도움으로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받음. • 역량강화와 기회균등을 통해 청소년이 국가성장 동력의 핵심이 되도록 함.		형성 • 함께 키워낸 청소년과 행복한 가족을 통해 지속 발전하는 미래 사회 구현	건강한 생활 환경	
	• 청소년 사회적 역량 강화 • 청소년 인권과 복지 증진 •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토대 구축 •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확보 •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체계 강화 • 아동·청소년정책추진 체계의 재정비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 • 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제제 강화 •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대상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 출처: 1) 김기현 외(2016).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64쪽 (표 Ⅲ-1) 및 68쪽 (표 Ⅲ-2) 재구성.

2) 6차 기본계획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2018. 3).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12-14쪽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 및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2020)

향후 국가 청소년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제6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2018년 3월에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저출산·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학계,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정책 전략 TF를 운영하고 청소년활동 정책 재편과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3.6.).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3).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그림 III-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체계도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로 설정하였고,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등 4대 정책영역에서 12개 중점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할 핵심과제로는 △청소년 인프라 개편, △다양한 활동과 학습, 참여 기회 제공, △통합 전산화된 청소년 활동·복지 서비스 제공,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상담·보호 및 자립까지 지속적·종합적 지원을 제시하였다. 4대 정책목표별 중점과제와 추진과제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주요 정책과제

정책목표	중점과제	추진과제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 청소년 참여 확대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 -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 청소년 인권 및 권익 의식 제고 -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 양성평등 의식 제고 -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 과학기술·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 -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 -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청년 취업 지원 기반 강화 - 청년 창업 활성화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 촘촘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운영 -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정책목표	중점과제	추진과제
4.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혁신		•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대상별 맞춤형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가출 청소년 지원 강화 •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 강화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 청소년정책 위상 강화
	•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청소년사업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을 이어주는 플랫폼 마련
	•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강화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3.).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16~81쪽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정책영역별 주요과제를 살펴보면(관계부처 합동, 2018.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3.6.), 첫째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영역에서는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고, 폭넓은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을 활성화하는 한편 청소년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할 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참여 활성화를 지향한다. 청소년 권리 의식 제고를 위한 법률 제정을 논의하는 등 청소년 권리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권, 여가권, 건강권 등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활성화한다.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활동의 허브로 개편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국제교류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역량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셋째,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영역에서는 아웃리치와 거리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 발굴 및 상담·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다양한 위기유형별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유해환경과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 시범 운영, 청소년활동과 상담복지서비스를 통합한 청소년 인프라의 자율적 개편, 지역과 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와 더불어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가 언급되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2개의 최상위 지표(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와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의 영역별로 2~5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5년 후인 2022년에 달성할 목표도 설정하였다.

표 III -5.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구분	성과지표
최상위 지표	• 삶의 만족도 • 주관적 행복감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 청소년 참여 보장 수준 • 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 • 청소년 인권교육 경험률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단체활동 참여율 •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건수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인원 • 니트(NEET) 비율 • 아동·청소년 빈곤율 • 스마트폰 과의존율 •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3.).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15쪽 재구성.

2018년 3월에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2020년 5월에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이 발표되었다.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은 기본계획은 아니지만,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청소년정책 방향이므로 추가로 검토하였다.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은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청소년 눈높이에서, 청소년이 주도하여, 청소년정책을 새롭게 혁신’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정책 기반 재정립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12개 핵심추진과제 및 30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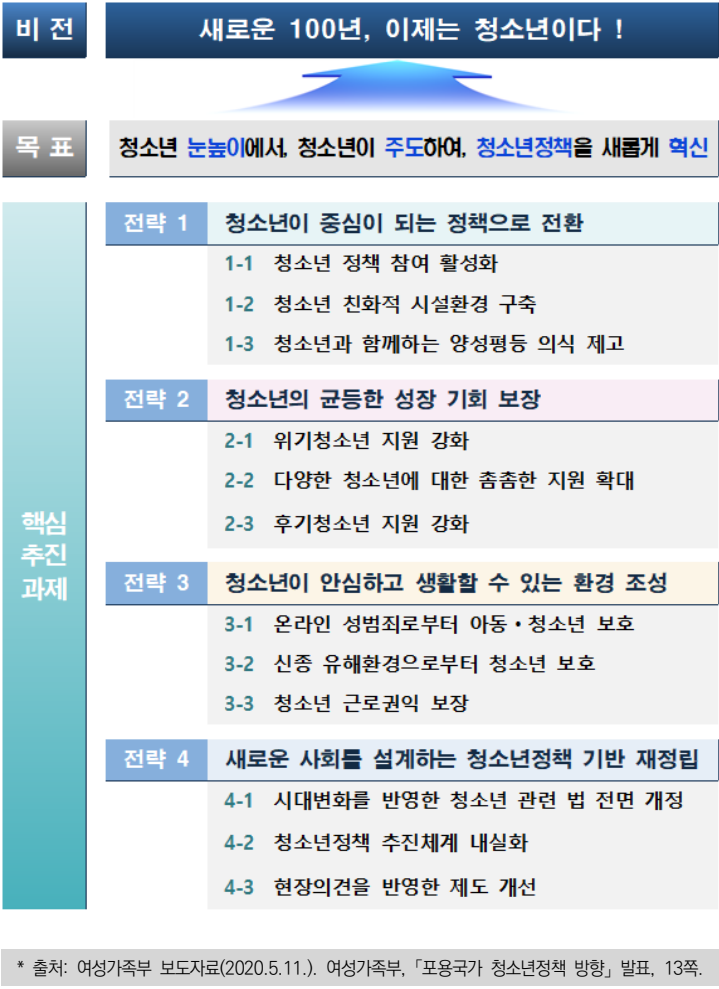


그림 Ⅲ-3.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전략 체계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제6차 기본계획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청소년 주도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3. 청소년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의식 제고’, ‘2-3. 후기청소년 지원 강화’, ‘3-1.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등은 제6차 기본계획에서 중점과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에서 새롭게 부각된 과제로 볼 수 있다. 후기청소년을 청소년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최근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을 읽을 수 있다.

3) 아동정책기본계획

우리나라 아동정책은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에 따라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정책의 대상인 9~24세와 연령의 중복으로 인해 같은 대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5년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⁵⁾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2015년에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2020년에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발표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2019년 5월에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비전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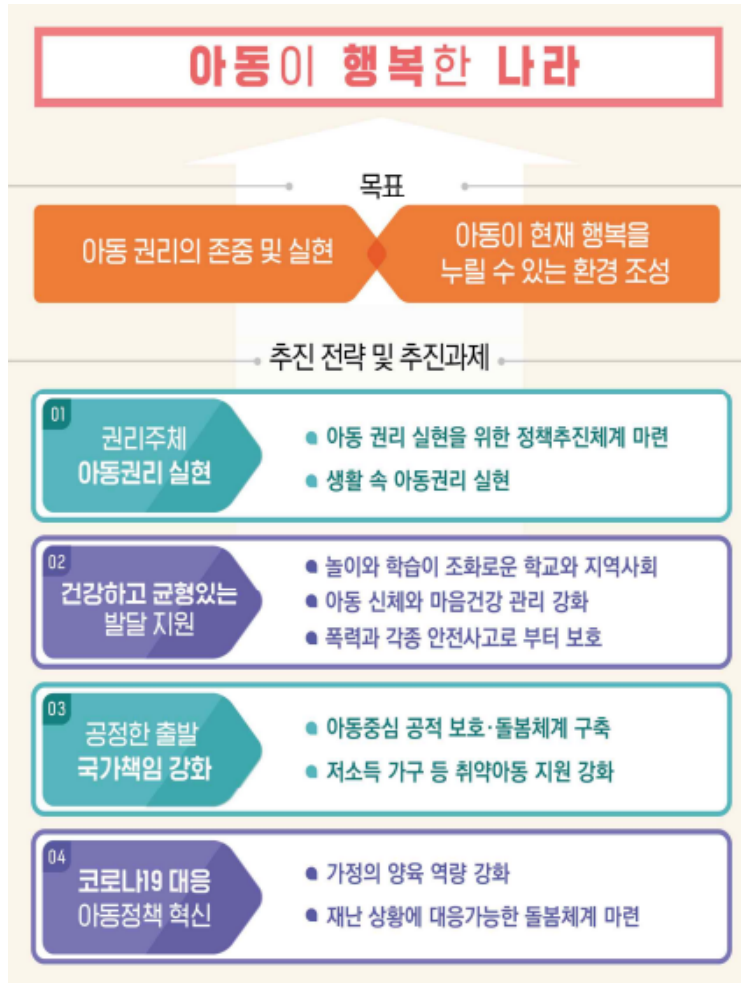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 ‘아동 최우선 원칙’을 목표로 생애주기에서 아동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되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 △실행기반 조성 등 5대 영역별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은 아동정책 전반을 포괄한 최초의 중기계획으로써 기간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되었던 아동정책을 범부처 국가정책 차원에서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수당, 아동의료비 경감,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적 아동정책 발전과 사회적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다(관계부처 합동, 2020.8.: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행복수준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동의 행복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아동을 현재의 권리 주체로 인식할 필요성과 아동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5월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수립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5)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심의하는 아동정책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된다(아동복지법 제10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비전을 견지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서 ‘아동 중심’과 ‘권리 주체’라는 기조가 정책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8.: 1). 그 방안으로 참여, 놀이·여가 등 아동정책 고유 영역 중심의 핵심과제 제시, 아동 대상이 아닌 아동 중심의 정책기조 강화, 기본법 체계 마련, 아동·가족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가 개선 필요사항으로 도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0.8.: 4-5).

2024년까지 추진 중인 제2차 계획에서는 비전인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과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①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 실현, ②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③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④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각 추진전략에 따른 9개 중점 추진과제 및 73개 세부과제를 [그림 III-4]와 <표 III-6>에 제시하였다.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8.).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20~'24). 14쪽.

그림 III-4.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체계도

표 III-6.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주요 정책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1.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 • 주요 아동계획 대상 아동정책 영향평가 실시 • 지역 아동정책으로 영향평가 확대 • 아동복지사업 지역적 불균형 개선 • 시도단위 아동정책 조정 지원체계 마련
	• 생활 속 아동권리 실현	• 정책 결정시 아동참여 제도화 • 사법절차상 아동 의견 표명권 강화 • 모든 아동에 대한 공적 등록제도 도입 • 우범소년 제도 개선 추진 •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개선 • 일하는 아동의 권리보호 • 가정 생활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
2.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	• 아동 문화시설 등 이용 우대·할인 확대 • 아동친화도시 제도화·확산 • 지역사회 놀이 지원체계 구축 • 영유아-초등학교 놀이 시간과 공간 확충 • 아동 특성을 고려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 놀이·여가 활동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연계 • 초·중·고교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진로·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강화
	• 아동 신체와 마음건강 관리 강화	•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생활위생 관리 강화 • 효과적 건강관리를 위한 3대 시범사업 실시 • 건강 취약아동 치료·관리 및 부모 돌봄 지원 강화 • 공공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확충 • 민간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질·접근성 제고 • 학생-교사 대상 마음건강 교육 강화 • 스마트폰·인터넷 등 바른 사용 역량 강화 •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 방안 마련 •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사용 억제
	• 폭력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 아동 대상 신종 성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추진 • ‘유아 성행동 문제’ 발생시 아동관점 대응체계 강화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 ‘학부모안심유치원’ 확대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 어린이 주요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강화 • 어린이 먹거리 안전·위생 관리 강화 • 아동 사용 제품 안전관리 체계 확립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강화 • 정보공유·연계협력 강화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 • 친권제한·보완 •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
3.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 아동중심 공적 보호·돌봄체계 구축	• 공공 인력확충 및 기관별 업무 전문화 • 전담인력 전문성 등 역량 강화 • 입양 전 과정에서 공적책임 강화 • 가정형 위탁 중심 아동보호 활성화 • 아동양육시설 지원방식 개선 • 입양사후서비스 개선 및 친가족 찾기 지원 확대 •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 지원 확대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아동 성장주기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연계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가정·지역사회 돌봄지원 강화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 서비스 질 제고 • 개정 유치원 3법 이행관리 강화 •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개인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등 형태로 전환
	• 저소득 가구 등 취약아동 지원 강화	• 아동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강화 • 지역사회 단위의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 보호종료아동 대상 맞춤형 자립지원 사업 확충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 (이주배경아동) 서비스 다양화 및 의료 등 필수 서비스 지원 • (장애아동) 장애아 가족양육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확대 추진 • 교육급여 지원사업 개편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습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강화
4.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 아동가구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발전방안 모색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모성보호 사각지대 보완 • (학)부모교육의 체계적 실시 • (학)부모교육 이수 제도화 및 인센티브 검토
	• 재난 상황에 대응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 감염병 예방 교육 및 대응 매뉴얼 체계화 • 시설 면적기준, 인원비율 등 개선 • 재난 상황 대비 공공 돌봄 가이드라인 마련 • 지역 협력 기반 긴급 돌봄체계 운영 • (가칭) 아동 AI 서포터즈 도입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8.).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20~’24). 16~74쪽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특징을 추진전략별 추진과제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고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정책에서 아동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정책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청원 운영, 공공후견인제도 도입, 뉴미디어 참여 아동의 권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아동참여, 의견표명권 보장 등 생활 속에서의 아동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 둘째,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가족 우대제도를 확충하고,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놀이-학습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즐거움 속에서 미래 역량을 개발하도록 고려하였고,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아동 치과주의,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등 3대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아동건강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유아 성행동 문제 발생시 아동관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 마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위기가동 사전발굴시스템 고도화 및 아동학대 사망사례분석팀 운영을 통해 폭력과 사고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셋째,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적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구축을 완료,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국제입양법 제정을 통해 국적 보호체계를 완비하고 돌봄을 확충하여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고, △빈곤 아동가구에 주거를 지원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지원하며, 한부모, 이주민, 장애아동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빈곤 등 취약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 사회적 돌봄 제약상황에서 △가정의 아동양육 역량 제고를 위해 부모교육을 체계화하고, △아동 AI 서포터즈를 시범 보급하는 등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를 시행하여 아동정책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추진과제별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5년 후 달라질 모습을 목표로 1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다(〈표 III-7〉). 성과지표 중 ①삶의 만족도, ②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③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 비율, ④공적 아동보호체계 완비(아동학대 전담인력 배치 목표대비 완료율) 등 4개 지표는 핵심 지표로 설정하였다.

표 III-7.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구분	성과지표
총괄	• 삶의 만족도 • '19년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구분	성과지표
권리	•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발달	•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 비율 •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13~19세) • 주관적 건강수준 • 영유아 건강검진율 •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아동·청소년 전반적인 폭력 피해율 • 재학대판정률
보호	• 공적 아동보호체계 완비(아동학대 전담인력 배치 목표대비 완료율) • 가정위탁 보호율 • 공공보육 이용률 • 아동결핍지수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8.).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20~’24). 15쪽 재구성.

4) 청년정책기본계획

청년정책은 2020년 2월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청년기본법 제3조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령 범위에는 청소년정책의 대상인 후기 청소년(19~24세)이 포함되기 때문에 청년정책기본계획의 검토는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된다. 청년기본법 제8조는 국무총리가 청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이 청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이라는 비전 아래,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을 3대 원칙으로 삼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개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하였다(〈표 III-8〉).



그림 III-5.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체계도

표 III-8.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주요 정책과제

분야	추진과제	세부과제
일자리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청년 재직자 지원 강화 • 취업역량 제고 지원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청년 기술창업 진주기 지원 •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 청년 노동권익 보장
	•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주거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총 24.3만호 공급 • 대학기숙사 확충(3만명) 및 기숙사비 경감
	•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 고시원·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청년 집중 지원	•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 청년 공유주택 활성화 •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일자리+주거+교육) 조성
교육	• 고른 교육기회 보장	•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 대학 미진학 청년의 교육비 지원 •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 혁신공유대학 통한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 •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고졸청년 취업 및 사회 정착 지원 •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 온라인 지식공유체계 강화 • 온택트 평생배움터 개설 추진 •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
복지·문화	•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 개편 • 청년 부채부담 경감

분야	추진과제	세부과제
	• 청년 건강 증진	•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 빈곤청년 근로 인센티브 확대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 문화콘텐츠 분야, 역량있는 청년들의 도전 혁신을 응원 • 청년 문화활동 기반 강화 •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참여·권리	•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 • 청년이 열어가는 공론장과 거버넌스
	•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청년 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법령 정비 • 지역 청년정책 균형 발전 • 청년지표(Youth Life Index) 개발
	•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청년하나로’(온라인), ‘청년마당’(오프라인) 구축·확대 • 청년과 함께 커가는 공동체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 노동·금융·주거 청년권익 보호 •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9~51쪽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에는 정부가 기존에 일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청년정책을 포용적 사회정책으로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주거·교육·복지 등 개별 부처 위주의 한시적 지원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코로나19 대처에 관한 고용정책으로 수렴되어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관계부처 합동, 2020.12.: 5). 청년은 현실문제에 대처하여야 할 뿐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이행기에 있고, 연령대별로 19~24세는 교육(학자금), 25~29세는 취업(일자리), 20~24세는 결혼·독립(주거·자산) 등 정책 수요에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음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관계부처 합동, 2020.12.: 5).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청년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기 위해서 △코로나19의 조기극복과 △미래역량 강화의 투트랙으로 중장기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환경을 제도화하고,

모든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였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0.12.23.: 4). 이번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단기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서 청년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 정부 중심의 수립에서 벗어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성과목표를 <표 III-9>에 제시하였다. 5대 분야에서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부담을 줄이고,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가고 생활이 나아지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성과를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9.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성과목표

분야	성과목표
일자리	• 코로나19 극복 '21년 55.5만명, '25년까지 128만명+α 청년구직자 지원 •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 4,057천명('20.10) → 5,294천명('25) • 청년창업 기술중심 전환 및 소 주기 지원체계 강화
주거	• 청년주택 27만3천호 공급(대학생 기숙사 3만호 포함) • 청년 43.5만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 감축(3만호)
교육	•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 미래사회 선도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 포스트코로나19 대응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복지·문화	• 희망저축계좌Ⅰ,Ⅱ(가칭) 신설로 '25년까지 청년 10만명 자산형성 지원 • 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까지 5,000억원 지원 • 매월 1회 문화가 함께하도록 기반 확대: 10.3회('20) → 12회('25)
참여·관리	• 청년참여 20-30 -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30%: 135개, 13.9%('20) → 300개, 30%('25) - 청년참여위원회 청년위원 위촉비율 20%: '25년까지 20% 달성 •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 청년하나로: 중앙+지자체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연계 - 청년마당: 104개('20) → 226개(소 기초지자체, '25)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9-51쪽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3. 해외 청소년정책 동향 분석

이 절에서는 우선 유엔과 유럽연합의 청소년전략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국제적인 기초를 파악하고, 각 개별 국가에서 이러한 기초와 동향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독일, 프랑스, 미국, 호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1) 유엔(UN)

(1) 유엔(UN) 청소년전략 개요

유엔의 현행 청소년전략인 「유스2030(Youth 2030)」은 2018년 9월 24일 뉴욕 유엔에서 열린 고위급 행사에서 발표되었다. 이 전략은 유엔 시스템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공통의 프레임워크로 기능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전 세계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청소년 정책 및 사업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 전략의 실행에는 33개의 유엔 기관과 130개 이상의 유엔 국가팀(United Nations Country Team, 이하 UNCT)이 참여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21: 6). 이 전략은 전 세계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영향력 및 국가·지역·세계적 수준에서 행동(조치)을 촉진하고,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실행 및 검토,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여러 관련 글로벌 의제 및 프레임워크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18b).

(2) 주요 내용⁶⁾

① 유스2030의 비전 및 대상 연령

유스2030은 '모든 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되는 세상, 모든 청소년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세상, 변화의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선택의지, 회복력, 긍정적인 기여가 인정받는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18a: 5). 유스2030은 청소년이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조성하고, 긍정적인 기여를 통해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전 세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

6) 이 부분은 "United Nations(2018b). Youth 2030: UN Youth Strategy"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기 위한 유엔의 전략이다.

대상은 15~24세를 포함하는 청소년이다. 유엔은 통계적 목적으로 ‘청소년’을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 범위는 1981년 ‘국제 청소년의 해’를 위하여 총회에 제출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이후 발표된 후속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정의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유엔은 통계적 정의와 별도로 ‘청소년’의 정의가 전 세계의 여러 사회마다 다르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산하기구 및 기타 조직들에서도 ‘청소년’에 대해 서로 다른 연령구분을 적용하기도 한다(United Nations, 2013: 1-2). 따라서 유스2030의 대상 연령은 15~24세를 기준으로 하되, 각 국가 및 사회 환경에 맞게 더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10. 유엔 기구/조직의 청소년 연령 정의

기관	연령	참고
유엔 사무국 /UNESCO/ILO	• Youth: 15~24	UN Instruments, Statistics
UN Habitat (Youth Fund)	• Youth: 15~32	Agenda 217
UNICEF /WHO /UNFPA	• Adolescent: 10~19 • Young People: 10~24 • Youth: 15~24	UNFPA
UNICEF /유엔 아동권리협약 (The Convention on Rights of the Child)	• Child: 0~18	UNICEF
The African Youth Charter	• Youth: 15~35	African Union, 2006

* 출처: United Nations, DEFINITION OF YOUTH, <https://www.un.org/esa/socdev/documents/youth/fact-sheets/youth-definition.pdf> 에서 2022년 5월 5일 인출.

② 우선영역 및 중점분야

유스2030은 우선영역으로 △연계, 참여, 옹호, △교육 및 보건 기반 강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경제 능력 강화, △청소년과 인권, △평화와 회복력 증진을 설정하였다. 유스2030의 우선영역별 중점분야는 다음과 같다(United Nations, 2018b: 8-14). 우선영역을 보면 「유스2030」의 핵심은 청소년에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III -11. 유스2030의 우선영역 및 중점분야

우선영역		중점분야
연계, 참여, 옹호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하여 청소년의 목소리를 확대한다.	• 유엔 기구 및 유엔의 청소년 관련 활동에서 청소년 주류화 •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촉진하고, 청소년의 참여 방식에 대한 표준 수립 •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 사무총장 기후정상회의(Secretary General's Climate Summit) 등 유엔의 여러 정상회의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청소년 운동의 영향력과 도달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계·지역·국가 차원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과 협력
교육 및 보건 기반 강화	양질의 교육과 보건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을 확대한다.	• 양질의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지원하고, 학교교육 외에 비형식적 교육 (non-formal education) 촉진 • 청소년에게 적절하고 접근하기 쉬운 보건 서비스와 환경 보장 • 청소년 친화적인 정신건강 서비스와 성·생식 보건 지원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경제 능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와 생산적 고용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 확대를 지원한다.	• 청소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글로벌 서약의 갱신·강화 • 청년 고용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법을 통해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소년의 비율 축소 • 회원국 및 파트너 기관들의 청년 취업 지원 및 자영업 에코시스템 수립 등을 지원하는 가이드와 지원 제공 • 저탄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 촉진
청소년과 인권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참여를 지원한다.	•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직면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청소년 옹호 활동,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우선시 • 청소년이 직면한 특수한 어려움과 과제를 고려하여 청소년 인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청소년 인권을 주류화 •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하고, 인권 교육과 역량 강화 추진
평화와 회복력 증진	청소년의 평화 및 안보와 인도적 행동을 지원한다.	• 평화와 안보, 폭력예방, 재해위험 축소, 인도주의 및 기후행동 등에 대한 청소년의 중요하고 긍정적인 기여를 인정하고, 청소년이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공식적인 평화 및 평화 구축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청소년의 의미 있는 참여 장려 및 모토 • 분쟁, 임시 정착촌, 빈민가, 난민 캠프 등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 제공 • 청소년의 평화, 안보, 인도주의, 기후행동을 위한 협력과 파트너십,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출처: United Nations(2018b), Youth 2030: UN Youth Strategy. 9-14쪽 재구성.

③ 유엔의 역할과 주요 활동

유엔은 청소년의 권한강화(empowerment), 발달(development), 참여(participation)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목표가 된다는 인식 하에 청소년을 서비스의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유엔은 청소년전략을 통해 △리더십의 표본(Leadership Example), △지식과 혁신의 선구자(Knowledge and Innovation Pioneer), △투자 및 솔루션 촉진자(Investment and Solution Catalyst), △책무성(성과책임) 리더(Accountability Leader)가 되는 것을 유엔의 주요 역할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역할에 대한 유엔의 주요 실행 전략은 다음과 같다(United Nations, 2018b: 6-9).

표 III-12. 유엔의 역할과 주요 실행 전략

유엔의 역할	실행 전략
리더십의 표본	• 주류화 구조: 모든 UNCT와 미션에 청소년 관련 활동에 대한 총괄 기능을 두고 국가적 범위에서 청소년에 대한 활동이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 참여 플랫폼: 청소년 자문위원회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유엔의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과 피드백을 수렴하는 채널 제공 • 대화 기회: 유엔 고위 관계자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계 시스템 수립 • 역량 개발: 유엔의 지역 코디네이터, 유엔 기구 대표, 기타 고위 관리자들에게 청소년 이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브리핑을 제공함으로써 역량을 강화 • 전문가 확대: 기존의 청소년 이슈 전문가들을 통합하고 더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확대 • 인턴십 프로그램 강화: 의사결정 기구와 협력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품질표준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인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인턴 풀(pool)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 • 인재 관리: 청소년 전문가 프로그램(Young Professional Programme)과 같은 성공적인 유엔 기구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인재를 모집하고 청소년 스태프의 커리어 개발을 지원
지식과 혁신의 선구자	• 데이터 도구: 지속가능발전목표, 세계 청소년 행동계획 및 기타 지표들을 통해 전 세계, 지역, 국가적 범위에서 청소년의 발달을 모니터링 하는 종합적인 데이터 툴(tool) 제시 • 온라인 지식 플랫폼: 모범사례, 사례연구, 연구자료 등 청소년과 관련된 유엔의 모든 지식과 프로그램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차원의 저장소 개발 • 유엔 유스 아카데미(UN Youth Academy): 청소년의 현실, 추세, 전망 등에 대해 토론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유엔 청소년 아카데미 조직 및 지속 운영 • 분석: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현황을 청소년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공유

유엔의 역할	실행 전략
	• 공동 연구 의제: 공통의 관심사인 의제를 식별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공동 연구와 미래지향적 연구를 추진 • 유스 혁신랩(Youth Innovation Labs): 기존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여러 실무자그룹을 운영 • 청소년 주도의 혁신: 청소년 주도형의 기관 및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원 제공 및 결과 배포 • 여론조사(Polling): 전 세계/지역/국가/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견해 수렴
투자 및 솔루션 촉진자	• 글로벌 청소년 투자 및 파트너십 플랫폼: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총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창설하여 청소년 및 주요 유엔 청소년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기존의 유엔 기금을 강화 • 공동 자원동원 전략: 기존의 자금 조달 방법 전반에 걸쳐 청소년 주류화에 중점을 둔 공통적인 자원동원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청소년 주도의 이니셔티브와 운동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 • 결과 기반 커뮤니케이션: 투자 효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결과 기반 커뮤니케이션 방식 채택 • 솔루션 기반 파트너십: 유엔과 청소년이 함께 수행하는 공동평가 등 유엔과 청소년 사이에서 공유된 책임과 조치들에 대한 여러 모델들을 탐색해보는 시범 사업 개발 • 청소년 참여 자금조달: 유엔 기구 전반에 걸쳐 청소년 참여를 위한 전용 기금 확보 방안 확인 • 합동 프로그램: 청소년에 대한 유엔 합동 프로그램을 강화 및 확대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함.
책무성 (성과책임) 리더	• 지침 마련: 모든 유엔 기구에서 청소년 개발 및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도록 일반 지침 마련 • 마커(Marker): 청소년 마커 시스템을 통해 진척 상황을 추적 • 서약: 매년 유엔의 고위 관리가 청소년과 관련한 서약과 목표를 발표하도록 장려 • 평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유엔의 청소년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접근법 개발 • 검토: 청소년전략 시행에 대한 연례 검토 수행 • 투명성: 청소년전략 시행에 대한 정보 공개

* 출처: United Nations(2018b). Youth 2030: UN Youth Strategy. 6-9쪽.

④ 추진체계

유스2030은 유엔 사무총장 청소년특사(UN Secretary-General's Envoy on Youth)가 공식적으로 대표하고 있으며, 그 외 고위급 운영위원회(High-Level Steering Committee), 유엔 청소년개발을 위한 기구 간 네트워크(UN Inter-Agency Network on Youth Development, 이하 IANYD)가 전략 실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청소년특사는 전략을 대표하는 동시에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는 국제적 활동과 고위급 운영위원회를 이끈다. 고위급 운영위원회는 유엔의 다른 활동이나 프로세스와 청소년전략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유엔 사무총장 청소년특사, △ IANYD 공동의장, △전략에 명시된 우선과제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엔 기구들(2년 단위로 순환), △글로벌 청소년 주도 플랫폼/단체 대표자(2년 단위로 순환)로 구성된다. 의장은 유엔 사무총장 청소년특사가 맡고 있다.

IANYD는 전략의 시행과 관련하여 청소년특사실의 연례 경과보고서 준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IANYD는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전략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구들이 상호 협력하고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 발달과 관련한 유엔의 활동의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 청소년특사와 함께 진행상황 검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 및 교훈 공유, 연례보고서에 의견 반영 등을 수행하며 전략의 시행을 지원한다. 이러한 연례보고서는 전략의 이행 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발행된다.

또한 유엔 청소년전략의 거버넌스는 전 세계, 지역, 국가 차원의 메커니즘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유엔 기구들과 UNCT들이 전략 시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고위급 운영위원회가 이들을 지원한다(United Nations, 2018b: 5-9; IISD, 2018.9.27.).

⑤ 성과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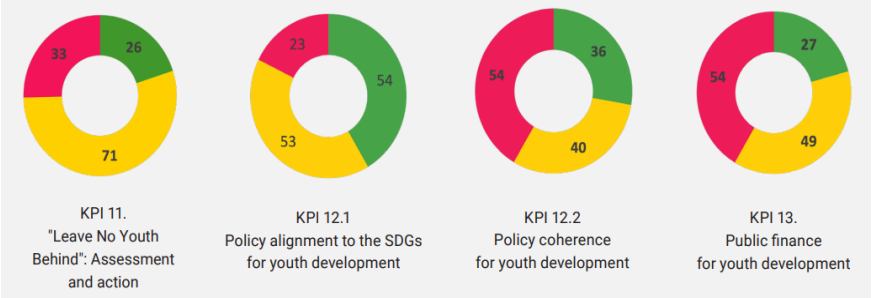
유엔 청소년전략은 ‘청소년을 위한(for youth)’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with youth)’를 내세우며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청소년의 참여를 강조한다. 전략에는 33개 유엔 기구 및 130개 이상의 UNCT가 참여하고 있다.

유엔 청소년전략의 이행 기간은 2018년 이후 2030년까지 12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초기의 시행 계획은 4년간 유효하고, 이후에는 매 4년마다 검토, 조정 및 개정된다. 2021년 연례보고서(United Nations, 2021.4.12.)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UNCT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청소년 지원에, 유엔 기구들은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관련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관련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유엔 청소년전략의 특징 중 하나는 성과관리를 위한 도구의 하나로 ‘유스2030 UNCT 스코어카드(Youth 2030 UNCT Scorecard)’를 도입하고 있는 점이다. 유엔은 UNCT를 위한 스코어카드와 유엔 기구들을 위한 스코어카드를 각각 개발하고 있다. 스코어카드는

유엔의 공동 행동을 위한 전략적 계획, 성과 측정 및 책무성 도구로써, 유스2030에 설명된 우선영역 모두에 대한 유엔 기구와 UNCT 성과를 간략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들 지표는 전략 활동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목표를 드러내는 핵심성과지표(KPIs)로써 ①‘청소년을 위한’ 활동과 ②‘청소년과의’ 활동 모두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UNCT를 위한 스코어카드는 몇몇 국가에서 성공적인 시범 테스트를 거쳐 완료 단계에 있다. 이들 지표는 크게 △유엔 지속가능발전 협력 프레임워크에서 청소년에 대한 포커스, △청소년을 위한 UNCT의 리더십, 문화, 구조, 역량, △청소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UNCT의 지원, △UNCT, 청소년 주도형 솔루션, 지식 교환,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 수준, △UNCT, 청소년,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수준의 5개 부문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하위 평가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3점 척도(빨간색-준비단계, 노란색-진행 단계, 초록색-도달 단계)로 제시된다.



* 출처: United Nations(2021). 28쪽.

그림 III-6. 유스2030 UNCT 스코어카드 평가 결과(예시)

이러한 스코어카드가 유엔 청소년전략의 모든 요소들을 포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전략의 실행 현황에 대해 대략적인 이해를 확보하고 공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데이터는 UNCT의 자발적 보고를 통해 수집된다(United Nations, 2020.9.; United Nations, 2020.11.: 3-12; United Nations, 2021: 28). 이와 같은 성과진단 도구는 장기적인 전략 추진 과정에서 전략 이행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의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근거가 된다.

2) 유럽연합(EU)

(1) 유럽연합(EU) 청소년전략 개요

유럽연합은 청소년정책에 대하여 개별 회원국의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존중하면서 범유럽 차원에서 청소년 부문의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자 EU 장관들의 동의를 통해 포괄적인 청소년전략을 채택하였다. 현행 「2019~2027년 EU 청소년전략」(EU Youth Strategy 2019~2027)은 민주적인 삶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11월 26일 채택되었다. 현행 전략은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European Union, 2018: 1-3).

(2) 주요 내용⁷⁾

① EU 청소년전략의 목표 및 대상 연령

「2019~2027년 EU 청소년전략」은 민주적인 삶에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며, 특히 ‘참여(Engage)’, ‘연결(Connect)’, ‘권한강화(Empower)’라는 세 가지 핵심 행동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EU는 청소년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11가지 주요 목표들을 개발하였다. EU는 EU 차원의 정책 도구와 회원국 국가, 지역, 지역사회 차원의 여러 조치들을 통해 이러한 청소년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⁸⁾

- 목표 1: EU와 청소년 연결
- 목표 2: 모든 성별의 평등
- 목표 3: 포용적 사회
- 목표 4: 정보 및 건설적인 대화
- 목표 5: 정신 건강 및 웰빙
- 목표 6: 농촌 청소년 지원

7) 이 부분은 “European Union(2018). The European Union Youth Strategy 2019-2027”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8) Europa. European Youth Goals. https://youth.europa.eu/strategy/european-youth-goals_en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 목표 7: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고용
- 목표 8: 양질의 학습
- 목표 9: 모두를 위한 공간과 참여
- 목표 10: 지속가능한 녹색 유럽
- 목표 11: 청소년 단체 및 유럽 프로그램

유럽연합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15~29세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연령 범위는 이보다 확대될 수 있다. EU의 청소년전략에서 다루는 대상 연령은 15~24세의 청소년이나 때로는 29세까지 청소년정책의 주요 대상 연령으로 설정하고 있다.⁹⁾

② 우선영역 및 과제

EU 청소년전략은 앞서 제시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EU 청소년 코디네이터(EU Youth Coordinator) 등을 통해 정책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개선하여, EU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 반영
- EU의 청소년 관련 지출 추적
- 소외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더욱 포용적이고 새로운 EU 청소년 대화(EU Youth Dialogue) 개시
-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과 연대 움직임 촉진 및 장애물 제거
- 비공식 학습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소년 사업 의제 구현
- EU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 사이의 연계 강화

현행 전략은 청소년정책 협력의 핵심 행동 영역을 ‘참여’, ‘연결’, ‘권한강화’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 19-22). 첫째, 참여(engage)는 민주적 삶에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민주적 생활에서도 청소년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능과 사회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결정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에게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될 청소년의 참여는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9) Europa. Eurostat Youth-Overview. <https://ec.europa.eu/eurostat/web/youth>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EU는 전략에서 청소년들의 의미 있는 시민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참여를 목표로 설정하였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 21-22).

둘째, 연결(connect)은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동성, 연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연결, 관계, 그리고 경험 교환은 유럽 지역의 연대와 유럽 연합의 미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EU는 특히 이동성을 통해 이러한 연계가 가장 잘 발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청소년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 여러 조치와 프로그램들을 통해 모든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한 국경 이동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 21-22).

셋째, 권한강화(empower)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유럽 청소년들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청소년 사업을 통해 청소년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EU는 청소년 사업의 품질, 혁신, 인증 등을 위한 유러피안 유스 워크 아젠다(European Youth Work Agenda)를 개발 및 시행하고, 양질의 청소년 사업을 개발하는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 21-22).

③ 핵심 영역별 EU의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연결, 권한강화의 세 가지 핵심 영역별로 EU 차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은 <표 III-13>과 같다(European Union, 2018: 4-7).

표 III-13. 2019~2027 EU 청소년전략의 핵심 영역별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핵심 영역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 새로운 'EU Youth Dialogue' 개시 • 'European Youth Portal' 통합으로 단일한 접근채널 제공
연결	• 유럽 청소년 단체간 협력을 촉진하여 보다 강력한 파트너십 수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European Youth Together' • 서로 다른 지역의 청소년 간 네트워크 수립을 지원하는 'Erasmus+ Virtual Exchanges' 및 'Erasmus+' 프로그램 하에서 추진되는 여러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등 • 국제 자원봉사 프로그램 'European Solidarity Corps' 시행 지원
권한강화	• 청소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European Youth Work Agenda' 시행 협력 등

* 출처: European Union(2018). 4-7쪽.

○ EU 청소년 대화(EU Youth Dialogue)¹⁰⁾

EU 청소년전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청소년과 의사결정자 사이의 대화 메커니즘이다. EU에서 청소년정책을 책정할 때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의 의견, 견해, 요구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청소년과 정책입안자의 대화 및 기타 활동은 18개월 주기로 반복되는데, 현재 2022년부터 2023년 중반까지는 “지속가능한 녹색 유럽(A Sustainable and Green Europe)”을 주제로 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현행 청소년전략에 반영된 목표 중 ‘포용적 사회(목표 3)’ 및 ‘지속가능한 녹색 유럽(목표 10)’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제이다.

청소년과의 대화는 개별 회원국과 EU 차원에서 진행되며, 이러한 활동이 끝나면 결과 취합 및 분석 과정을 거쳐 매년 2회씩 개최되는 EU 청소년회의를 통해 청소년과 정책입안자들이 마련한 공동 메시지의 형태로 결과가 발표된다. 앞서 현행 EU 청소년전략에 반영된 11개 목표들은 2018년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반영된 것이다.

○ 유러피안 유스 포털(European Youth Portal)¹¹⁾

유럽 전역의 청소년들이 자원 봉사, 일, 학습, 문화 및 창의성 등과 같은 다양한 관심 분야에서 EU가 제공하는 많은 정보와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사이트이다. EU에서 운영되는 각종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유러피안 유스 투게더(European Youth Together)¹²⁾

유럽 전역(EU 회원국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3국)의 청소년들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적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청소년의 국가 간 이동, 교류, 비공식 훈련 및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분야의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10) Europa. What is the EU Youth Dialogue?. https://youth.europa.eu/get-involved/eu-youth-dialogue/what-eu-youth-dialogue_en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11) Europa. About the European Youth Portal. https://youth.europa.eu/about-us_en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12) Erasmus+. European Youth Together. <https://erasmus-plus.ec.europa.eu/programme-guide/part-b/key-action-3/youth-together>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 에라스무스 플러스 버추얼 익스체인지(Erasmus+ Virtual Exchange)¹³⁾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유럽과 남부 지중해 지역 18~30세 청소년들에게 공식 또는 비공식 교육의 일환으로 온라인에서 의미 있는 문화간 학습(intercultural learning) 경험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프로젝트이다. 청소년들에게 토론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공하면서 문화간 인식을 증진하고, 21세기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유럽 연대 봉사단(European Solidarity Corps)¹⁴⁾

유럽 전역의 18~30세 청소년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사업이다. 2016년까지는 'European Voluntary Service'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참가자들은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및 해외 국가들의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청소년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며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업무 경험을 얻을 기회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유러피안 유스 워크 아젠다(European Youth Work Agenda)¹⁵⁾

EU에서 청소년 사업의 관행과 정책의 추가 개발 및 강화를 위해 수립된 전략적 프레임워크이다. 독일의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가 이 프레임워크의 수립을 담당한다. 최근 코로나19의 발생과 전 세계적인 확산은 유럽의 청소년 사업에 전례 없는 도전이 되었다. 이에 현재는 팬데믹이 청소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진행되고 있다.

13) Europa. About Erasmus+ Virtual Exchange. https://youth.europa.eu/node/54451_en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14) Europa. European Solidarity Corps. https://youth.europa.eu/solidarity/mission_en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15) Eurodesk. The European Youth Work Agenda: on the path to recognition. <https://eurodesk.eu/2021/01/04/european-youth-work-agenda/>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④ 효과 개선을 위한 접근법

EU는 이전 청소년전략보다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EU의 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청소년의 관점을 더 폭넓게 반영하고, △EU 회원국들로 하여금 EU 차원의 우선과제들을 각국의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적 액션플랜에 수록한다는 두 가지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EU의 청소년정책 수립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러 기관 및 회원국 간 조정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EU 청소년 코디네이터’라는 역할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청소년 코디네이터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시키고, 권한을 부여하고,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EU 회원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의 의사소통을 조정하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으며 EU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EU는 젊은 유럽인들의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최초의 청소년 코디네이터는 2021년 6월 1일에 임명되었다(The Mayor, 2021.6.1.).

3) 독일¹⁶⁾

(1) 독일 청소년정책 개요¹⁷⁾

독일에서 청소년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이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아동·청소년국에서 12~27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 교육, 활동, 참여, 보육, 보호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아동·청소년 정책의 대상 및 연령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III-14. 독일 청소년정책의 대상 및 연령

대상	연령
아동(Kind)	14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r)	14세 이상 18세 미만
후기 청소년(Junger Volljähriger)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Junger Mensch)	27세 미만

* 출처: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c). Kinder- und Jugendhilfe. 6-13쪽, 75-76쪽 내용을 참고하여 표로 재구성.

16) 독일 사례는 권민정(보훈대학교 박사과정)이 집필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17) 이 내용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c). Kinder- und Jugendhilfe” 내용을 요약·발췌하였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매 정부 임기마다 연방의회(연방하원)(Bundestag)와 연방상원(Bundesrat)에 청소년의 상황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는 다른 성격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아닌 당시 사회적으로 청소년정책에 필요한 방향성을 정하고 그 방향성에 따른 학술적 연구서의 역할을 한다. 1965년에 처음 발간된 아동·청소년 보고서는 현재 제16차까지 발간되었으며, 제11차부터는 정확한 주제를 명시하여 집필하고 있다. 제11차부터 제16차까지 아동·청소년 보고서의 주제는 <표 III-15>와 같다. 다만 세 차례에 한 차례씩은 청소년정책의 방향성 외에 아동·청소년 상황 전반을 포함하는 전체보고서(Gesamtbericht)의 형식으로 발간된다. 현재까지 발간된 보고서 중 제1차, 제5차, 제8차, 제11차, 제14차 보고서가 전체보고서에 해당한다.

표 III-15.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아동·청소년 보고서

구분	연도 (년)	주 제	내 용
제11차 ¹⁾	2002	공적 책임에서의 성장	- 전체보고서 형식으로 발간 -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평등한 기회와 지속가능하고 유익한 여건이 정책적 설계를 통해 생성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
제12차 ²⁾	2005	방과 전후의 교육, 돌봄, 양육	유년기와 학령기의 교육, 돌봄, 양육 과정과 아동·청소년정책을 통한 연방정부 지원 논의
제13차 ³⁾	2009	건강 관련 예방과 건강증진	- 청소년의 건강 관련 영역과 타 영역과의 접점에 중점 - 건강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의 중요한 특징을 설명하고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
제14차 ⁴⁾	2013	새로운 책임에서의 아동·청소년 지원	- 전체보고서 형식으로 발간 - 독일 아동·청소년의 생활상황 및 EU 국가들과의 비교·분석 - 아동·청소년정책이 청소년의 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고 아동·청소년 자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언
제15차 ⁵⁾	2017	자기계발의 가능성, 가족, 전일제 학교와 가상 세계 사이: 청소년기의 인격발달과 교육권	- 아동기에 비해 그간 상대적으로 작게 다루어지던 초등학생 시기 이후 청소년기에 초점 - 청소년을 위한 전일제 학교와 아동·청소년의 활동(Jugendarbeit)을 지원하는 내용

구분	연도 (년)	주 제	내 용
제16차 (6/7/8)	2020	아동·청소년기의 민주주의 교육 지원	• 아동·청소년기의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주제와 어떻게 청소년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보고서

*출처: 1) Deutsches Jugendinstitut. 11. Kinder- und Jugendbericht. <https://www.dji.de/ueber-uns/projekte/projekte/11-kinder-und-jugendbericht/38429.html>에서 2022년 4월 20일 인출
2) Deutsches Jugendinstitut. 12. Kinder- und Jugendbericht. <https://www.dji.de/ueber-uns/projekte/projekte/12-kinder-und-jugendbericht/39215.html>에서 2022년 4월 20일 인출
3) Deutsches Jugendinstitut. 13. Kinder- und Jugendbericht. <https://www.dji.de/ueber-uns/projekte/projekte/13-kinder-und-jugendbericht.html>에서 2022년 4월 21일 인출
4) Deutsches Jugendinstitut. 14. Kinder- und Jugendbericht. <https://www.dji.de/ueber-uns/projekte/projekte/14-kinder-und-jugendbericht.html>에서 2022년 4월 21일 인출
5) Deutsches Jugendinstitut. 15. Kinder- und Jugendbericht. <https://www.dji.de/ueber-uns/projekte/projekte/15-kinder-und-jugendbericht.html>에서 2022년 4월 23일 인출
6) BMFSFJ(2020a). 16. Kinder- und Jugendbericht. pp.45-84.
7) BMFSFJ(2020b). Förderung demokratischer Bildung im Kindes- und Jugendalter. pp.11-13.
8) BMFSFJ(2020d). Mitreden! pp.6-15, p.75.

이와 더불어 2011년부터는 약 4년 단위로 청소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독일의 청소년 전략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유사한 전략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12~27세 1,400만 명의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9년에 발표된 최신의 청소년전략은 2018년 3월 19대 국회의 연립정부 협약서에서 "연방정부 공통의 청소년전략"을 수립할 것을 확정하면서부터 수립이 시작되었다. 교통, 저렴한 임대료, 온난화 대책 등 모든 정책들이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방정부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를 비롯하여 모든 다른 부처들과 함께 청소년전략을 수립하였다. 2018년 10월에 정부 부처 간 작업그룹(IMA: Die Interministerielle Arbeitsgruppe) 첫 모임을 가졌고, 청소년정책 관련 학계, 행정, 실천 영역에서 선발된 19명으로 자문단(Der Beirat des BMFSFJ)을 구성하였다. 이 자문단은 지속적으로 청소년전략 수립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청소년전략에서는 전략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의견) 청취(Jugend- Audits), 청소년정책의 날(JugendPolitikTage) 등을 통해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2) 주요 내용¹⁸⁾

① 청소년전략의 모토와 정책분야

가장 최근의 청소년전략(Die Jugendstrategie der Bundesregierung)은 2019년 12월 3일에 채택되었다. ‘공동의 책임 안에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에 의한 정치(In gemeinsamer Verantwortung: Politik für, mit und von Jugend)’를 모토로, 9개 분야 163개의 조치들로 이루어져 있다. <표 III-16>에 9개 정책분야별 주요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표 III-16. 독일 청소년전략의 정책분야별 주요 조치

분 야	조 치	담당 부처 및 기관
1. 미래, 세대간 소통, 청소년의 상(像)	- 청소년맞춤 사이트(Jugendgerecht.de): 청소년 자립정책을 위한 공간 - 청소년 체크(Jugend-Check)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청소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지누스연구소¹⁹⁾, 2020) 연구 지원	연방 내무부
	전통 식문화를 통한 세대 간 학습과 문화 교육	연방 식품영양·농업부
	전국 16개의 소비자센터 프로젝트 지원	연방 법무부
2. 참여와 민주주의	- 제16차 아동·청소년 보고서 “아동·청소년기의 민주주의 교육 지원” 출간 - 연방 프로그램 “살아있는 민주주의!” - 효과적인 아동·청소년 참여를 위한 기준과 권고사항의 설정 및 업데이트 - 아동·청소년의회 역할 강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 아동·청소년 교육을 위한 빅데이터: 개념, 방법, 자료, 실행 아이디어와 교육형태 - 민주주의와 관용을 위한 연합: 청소년 학술대회와 축제 - 피어네트워크협회 “Now²⁰⁾-젊고, 참여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된”	연방 내무부
	“청년, 진지하게 임하다” 프로젝트: 포스트바우어-헵(Postbauer-Heng)이라는 도시에서 진행 중인 농촌이주 청년 대상 지역사회 참여 프로젝트	연방 식품영양·농업부

18) 이 부분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공동의 책임 안에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에 의한 정치(BMFSFJ(2019.12.2.). In gemeinsamer Verantwortung: Politik für, mit und von Jugend)”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분 야	조 치	담당 부처 및 기관
	• 이슬람의 극단주의에 대한 청소년의 문화적 답변 프로젝트 지원	연방 문화·미디어청
	• 청소년 참여 연구 • 다양하고 혁신적인 청소년 참여 확장: 환경부 일상업무 모의훈련, 청소년 대회 등	연방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소비자보호부
	• 세계를 향한 만남: 2030 아젠다 맥락에서의 만남 프로젝트	연방 경제협력·개발부
3. 도시와 국가, 생활과 문화	• 농촌 지역의 발전(BLUE) 프로그램	연방 식품영양·농업부
	• 지역사회 내 스포츠시설, 청소년시설, 문화시설 개선	연방 내무부
	• 청년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	연방 노동·사회부
4. 다양성과 참여	• 이민 배경을 가진 청소년과 청소년 협회	사회통합 에이전트 ²¹⁾
	• 문화는 강하게 한다. 교육을 위한 연합 프로그램	연방 교육·연구부
	• 성소수자의 삶의 방식과 성적 다양성에 대한 학술 네트워크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5. 교육, 직업과 자기계발	•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성공적인 이행 지원	연방 교육·연구부 (연방 노동·사회부)
	• 청소년 직업 에이전시(Jugendberufsagentur) 협력모델의 지속적 발전	연방 노동·사회부
6. 교통과 디지털	• 웨데이: 청소년이 미래의 디지털 세상을 만든다	연방 법무부
	•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행정협약 "디지털 팩 학교 2019-2024(DigitalPakt Schule 2019-2024)"	연방 교육·연구부
	•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지식-지원-보호"	아동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관청 ²²⁾
7. 환경	• 청소년정책으로서 온난화 대책 혁신기금 • 청소년의 온난화 대책 프로그램 2030 참여 지원	연방 환경부
8. 건강	• 약물사용(알코올, 대마초 포함) 및 인터넷 관련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및 모니터링 확대	연방 보건부
	• 정신질환자 자녀 연구팀 운영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 청소년 간병인 지원(Pausentaste) 프로젝트	
9. 유럽과 세계	• 국내외의 독일과 외국 청소년 그룹의 만남	외무청
	• 역사·정치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은 기억한다 (Jugend erinnert)"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출처: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9.12.2.). "In gemeinsamer Verantwortung: Politik für, mit und von Jugend" 내용을 발췌·요약해서 표로 재구성.

② 정책분야별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 정책분야 1: 청소년 체크(Jugend-Check)

청소년체크전문센터(KomJC: das Kompetenzzentrum Jugend-Check)²³⁾ 프로젝트에서는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12~27세 청소년의 생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연방정부의 법 초안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이른바 '청소년 체크'를 시행 중이다. 청소년 체크를 통해서 법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의 의도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부작용들을 명확하게 하여 청소년의 생활상황과 관심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고취시킨다. 청소년 체크의 결과는 어디에서 어떻게 다양한 영역의 법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준다.

○ 정책분야 1: 전국 16개의 소비자센터 프로젝트 지원

연방 법무부에서는 소비자센터(Verbraucherzentralen)에서 기존에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비용을 지원한다. 어린 소비자들(약 14~24세)은 그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돈, 권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소비자센터 프로젝트의 대상이 된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청소년의 재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은행투어를 들 수 있다. 소비자센터의 지원은 2004년부터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실시해 왔으며 청소년과 청년은 그 대상이 되는 집단 중 하나이다.

○ 정책분야 2: 아동·청소년의회 역할 강화

본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독일에서 등장한 약 500개의 아동·청소년

19) 지누스연구소는 "어떻게 청소년을 이해할 것인가"(2008, 2012, 2016)라는 청소년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세계를 연구해오고 있다.

20) Now는 독일 전역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16~27세 사이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목적으로 한 청소년협회이다.

21) 지방자치단체 내의 이민자와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기관이다.

22) 연방 단위의 관청으로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실무 및 학술 전문가, 시민사회 참여자 등 해당 주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관청이다. 해당 기관은 2010년에 사회적으로 대두된 독일 로마가톨릭교회의 성추행 사건 이후에 연방정부 차원의 관청이다. 해당 기관은 2010년에 사회적으로 대두된 독일 로마가톨릭교회의 성추행 사건 이후에 연방정부가 출범시켰다. 정부나 정당 등 특정 기관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으며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 조직적으로만 기반을 두고 있다. 주요 과업은 '아동·청소년 성폭력'이라는 주제에 대한 정보 제공, 감수성 교육, 지속적인 보호의 개선과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 성폭력 분야의 법적 조치와 연구의 촉구, (이미 성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경험자를 중요하게 돌아봄' 등이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23) 청소년 체크의 발전과 실행을 위해서 2017년부터 베를린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행정상으로는 독일 공공행정 연구기관에 속해 있다.

년의회와 약 300개의 청소년포럼에 지역사회 정치 수준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환경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청소년 정치참여의 강화는 웹사이트/포털, 네트워킹, 소셜미디어 혹은 영상과 같은 가시적인 대중적 관심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미 설립된 위원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아동·청소년의회를 설립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해준다. 현재 아동·청소년의회 출신의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정치 결정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문위원회(Jugendbeirat)”에 소속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정책분야 3: 청년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

직업교육 준비생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교육의 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를 이동하기도 한다. 사회법 제3권 제44조에 따라 직업교육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면접을 위한 교통비나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기간 동안 부모의 집에서 나오게 되거나 그 밖의 경우, 즉 부모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거나 직업교육 수당이 부족한 경우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 보조금(Berufsausbildungsbeihilfe)”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직업교육 보조금 지원에는 사회법 제3권 제61조 제3항에 따라 직업교육생의 기숙사 거주 비용도 포함된다.

○ 정책분야 4: “문화는 강하게 한다. 교육을 위한 연합” 프로그램

연방 교육·연구부는 “문화는 강하게 한다. 교육을 위한 연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3~18세까지의 교육에서 소외된 아동·청소년의 문화교육과 관련한 학교 밖 활동들을 지원한다. 학교 밖 문화교육은 개인의 인격 형성에 상당히 기여하며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문화교육 활동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의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연방 교육·연구부는 2번의 프로그램 지원기간(2013-2017년/2018-2022년)동안 총 4억 8천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 프로그램 진행은 전국 29개의 관련 기관들(박물관협회, 독일무대협회, 사회복지기관, 이민자협회 등)에서 담당한다.

○ 정책분야 5: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성공적인 이행 지원

교육체계 이니셔티브는 청소년이 되도록이면 어려움 없이 고등학교 졸업에서 직업까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수단들이 맞물려 연결되어 있다. 이니셔티브에서 중요한 과업은 “잠재력 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직업선택 방향설정과 연방 교육·연구부 프로그램 중 하나인 “작업의 날”을 통해 관심 있는 직업을 체험해 보는 것, 그리고 직업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에게 관련 경험을 가진 멘토를 연결시켜줌으로써 지원하는 것이다.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위해서는 별도의 직업 방향설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도록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도 함께 지원한다.

○ 정책분야 6: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지식-지원-보호”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 인터넷상의 익명성은 성범죄자들이 미성년자를 더 쉽게 만나고 미성년자가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전문가를 통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포털 사이트 “지식-지원-보호(www.wissen-hilft-schuetzen.de)”는 미디어 교육과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여 양육자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와 같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예방교육 및 범죄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관련 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정책분야 7: 청소년의 온난화 대책 프로그램 2030 참여 지원

연방 환경부는 몇 년 전부터 여러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에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온난화대책행동협회(Aktionsbündnis Klimaschutz)와 여러 그룹들 사이의 온난화 관련 정책적 입장의 지속적인 토론을 위한 포럼에 청소년협회의 회원들이 참여한다. 폭넓은 전문적, 전세대 간 소통을 시작하고 온난화 대책 프로그램 2030(Maßnahmenprogramm Klimaschutz 2030)에 대한 청소년의 시각을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책분야 8: 청소년 간병인 지원 프로젝트

전국적으로 약 6% 이상의 아동·청소년이 가족 내에서 간병의 책임을 지고 있다. 청소년 간병인 지원(Pausentaste) 프로젝트는 가정 내에서 간병을 담당하는 청소년을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간병으로 지친 청소년이 휴식을 취하고 심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익명 상담을 운영한다. 웹사이트(www.pausentaste.de),

전화상담, 이메일을 통한 상담, 채팅 상담이 가능하다. 이 프로젝트 외에도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17년에 간병 책임을 맡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관련 기관들을 연결시켜주는 이른바 “네트워크”를 설립한 바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담당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매년 한 번씩 전문적인 의견교환을 한다.

○ 정책분야 9: 역사·정치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은 기억한다(Jugend erinnert)”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연방 문화·미디어청이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 “청소년은 기억한다”는 국가 사회주의(나치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정치 교육 활동이다. 주로 독일의 나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장소와 자료센터를 방문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2019년과 2020년에 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500곳 이상의 추모 장소를 방문했고, 관련된 사진 공모전 “현재를 기억하다”를 개최했으며 프로그램은 이를 지원했다. 또한 독일, 이스라엘, 유럽의 청소년들이 추모의 장소에서 만나는 프로젝트에도 비용이 지원된다.

4) 프랑스²⁴⁾

(1) 프랑스 청소년정책 개요²⁵⁾

프랑스 청소년정책은 교육·청소년·체육부(L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가 주도적으로 담당한다. 교육·청소년·체육부에서는 △학업·직업교육, △직업, △주거·교통, △건강·웰빙, △시민성, △여가, △국제적 이동 등 7개 분야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소년·체육부 외 15개 정부 부처는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를 두고 있지만, 사업과 프로그램은 내용에 따라 합동부처·지자체·민간단체 간 협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기구는 교육·청소년·체육부 소속의 「청소년·공공교육·청소년활동부(La direction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 이하 DJEPVA)」이다. 이 부서는 교육·청소년·체육부 장관이 “청소년을 위한 정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정하고

24) 프랑스 사례는 이영란 연구원(순천향대학교 청소년연구센터)이 집필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25) 이 부분은 프랑스 교육·청소년·체육부 홈페이지에 수록된 청소년정책 프레임워크 (<https://www.jeunes.gouv.fr/le-cadre-des-politiques-de-jeunesse-433>) 내용을 요약발췌하여 작성하였다.

있는 2017년 5월 24일 법령 제1080호에 따라 정부의 모든 부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프로그램 간 연계와 협업을 전적으로 담당한다. DJEPVA의 역할은 첫째, 청소년정책 및 활동 관련 부처 간 협력 사업을 조율하며, 둘째, 청소년 공공교육(Education populaire)을 진행하고,²⁶⁾ 마지막으로 「청소년·공공교육 국가 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 jeunesse et de l'éducation populaire)」를 두어 청소년 국가정책의 계획-입안-실행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즉 DJEPVA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초단체 및 청소년·교육 관련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상호 협업을 활성화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공공교육·청소년활동부(DJEPVA)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17년 1월 26일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정책자문협의회를 창설하였다. 청소년정책자문협의회(Le Conseil d'orientation des politiques de jeunesse)는 정부, 지자체, 기초단체, 청소년협회, 청소년 노동조합 등 청소년정책 관련 주체들 간 협의체이며 주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관련 규정 및 입법 프로젝트에 대해 자문하고 조사하며, 이 결과를 활용하여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한다. 둘째, 매년 청소년 관련 정책 및 활동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정부 소속 공교육위원회와 청소년사회편입위원회의 정책방향 및 활동에 자문자료로 활용된다.²⁷⁾

프랑스 교육·청소년·체육부는 「청소년정책계획(Politique en faveur de la Jeunesse)」을 2013년, 2015년, 2020년, 2022년 네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12년 5월 24일 법령 「청소년 활동 관련 정부 정책 전개법」에 근거를 두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2012년 10월 26일 법령 「청소년 미래직업 창출 관련 정부 정책 전개법」에 따라 '부처 간 횡단 정책(la politique transversale)'에 기반을 두고 '청소년 자립'을 위한 학업·직업교육, 사회·직업적 편입, 주거와 보건, 스포츠·문화·여가, 사회적 참여 등을 보장하는 '부처 간 연계 정책'으로 마련되었다. 2022년 1월에 네 번째로 「청소년정책계획(Politique en faveur de la Jeunesse)」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6) 공공교육(éducation populaire)은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시민의식함양을 기본노선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공교육(éducation nationale)과는 구별된다.

27)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Le Conseil d'orientation des politiques de jeunesse. <https://www.jeunes.gouv.fr/COJ> 에서 2022년 9월 19일 인출.

(2) 주요 내용²⁸⁾

① 청소년정책계획의 목표

청소년정책계획의 중점 목표는 청소년·청년 세대가 당면한 사회적 불평등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다.

청소년정책계획은 정부부처, 지자체·기초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는 이른바 ‘범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 16개 부처와 지자체, 기초단체, 민간기관이 각각 청소년정책 예산을 책정하여 실행하는 데에서 오는 비효율성과 다수 관련 정책의 중복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유사 사업과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즉 청소년정책계획은 청소년의 교육, 직업, 생활, 사회참여에 대한 ‘자립지원’을 목표로 정부 차원, 지자체 차원, 민간 차원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해 2012년 근거 법령에 따라 2013년에 첫 번째 계획이 시작되었고, 2022년 1월에 네 번째 계획을 발표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청소년정책계획은 유럽연합(EU) 청소년전략의 11개 목표²⁹⁾와 그에 부응하는 정책영역 및 중점과제를 모두 포함한다(L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2022: 14-15).

② 정책목표별 영역 및 중점과제

2022년 1월에 발표된 청소년정책계획은 정책목표를 △청소년 개인발전 참여와 청소년의 변화·참여 활성화, △청소년 교육과 진로설정, 직업교육에 우선권 부여, △일자리와 직업편입 활성화, △자립과정에서 불평등 해소, △삶의 질 개선의 5개로 발표하였다. 프랑스의 청소년정책계획은 16개 부처에 소속된 43개 부서가 참여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상호보완적으로 진행한다. 프랑스 정부는 5개 정책목표에 관한 사업, 프로그램 및 예산을 구체화하여 청소년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삼고 있다. 각 정책목표별 영역과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28) 청소년정책계획의 주요 내용은 프랑스 교육·청소년·체육부(2022)의 “횡단정책자료. 호의적인 청소년정책을 위한 예산법 프로젝트(Document de Politique Transversale. Projet de Loi de Finance pour Politique en faveur de la Jeunesse)”를 발췌·요약한 것이다.

29) 유럽연합(EU) 청소년전략의 11개 목표는 본 연구보고서의 유럽연합(EU) 청소년정책 주요 내용에 기술되어 있다.

표 III-17. 프랑스 청소년정책계획의 영역 및 중점과제

정책목표	영역	중점과제
1. 청소년 개인발전 참여*와 청소년의 변화·참여 활성화	참여	• 시민서비스 개발 • 국가차원의 서비스 연계 과정 확립 • 사회적 다양성에 기초를 둔 참여문화 조성 • 청소년협회 참여활동 독려 • 청소년 참여 인식 및 시민성 교육 지원 • 도로 교통법 준수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청소년의 시민참여문화 활성화
*국가가 청소년의 개인적 발전에 참여한다는 의미임.	지역·국가 간 이동	• 해외 프랑스령 청소년의 이동 어려움 해결 • 운전면허증 취득 장려 • 25세 이전 유럽연합 국가 최소 6개월 체류 권장(학업, 교환프로그램 등) • 청소년 국제활동 참여 활성화 • 도시개발정책 차원에서 청소년의 유럽 내 이동 지원
2. 청소년 교육과 진로설정, 직업교육에 우선권 부여	교육	•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위한 교육구조 개발 • 해외 프랑스령 청소년·본토 청소년(16~18세)의 학업중단 예방 • 직업교육 및 이수를 위한 신개념 캠퍼스 개발 • 공화주의 가치와 비종교주의 실천 • 바칼로레아 개혁을 통한 유럽 교육체제 합의와 국가 간 이동 장려 • 사회 정의의 활성화 • 사회적 연대를 통한 청소년의 성공 견인
	진로설정 및 정보	• 바칼로레아 이후 청소년 진로설정 개선 • 청소년의 정보 네트워크 활용을 최대화시켜 모든 정보(교육, 실업교육, 장학금 및 보조금, 구직, 외국체류 등)에 진입가능한 구조 활성화 • 청소년 권리와 청소년 서비스 확장 • 진로설정개혁에 대한 청소년 정보 개선
3. 일자리와 직업편입 활성화	청소년 능력 개발	• 1인 청소년 1개 솔루션 사업 추진 • 융이한 구직을 위한 청소년의 능력개발 • 저학력 청소년의 구직활동을 위한 '청소년 보장법' 개발
	청소년 직업편입 개선	• 직업편입 기관(Établissement pour l'insertion dans l'emploi, 이하 Épide)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 직업교육과 청소년의 기초단계 편입을 위한 정책 마련 • 직업교육개혁과 실습교육 시스템 개발을 통한 청소년 직업편입 개선
4. 자립과정에서 불평등 해소	문화 스포츠 활동 및 참여	• 1인 청소년 1인 멘토 사업 확장 •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개선 • 청소년 문화패스 활성화 •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를 위한 교육 강화

정책목표	영역	중점과제
		•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시민성 원리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 확장 • 휴가권 보장
	시민성 교육 활성화	• 스포츠 장치 마련 및 활용 개선 • 장애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접근 보장
5. 삶의 질 개선	청소년 건강증진	• 정보·개발·주거 발전법에 따른 청소년의 용이한 주거 진입 보장 • 청소년 건강보험 절차 간소화 • 청소년 개인별 부가적인 건강보험 보장 • 청소년 국가보건전략(2017년 1866법령)에 따른 청소년 건강 지원 • 알코올, 흡연, 마약, 인터넷 중독 예방 정책 강화 • 국가스포츠전략 5개년 계획(2019~2024)에 따른 청소년 스포츠활동 장려

*출처: L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2022). Document de Politique Transversale. Projet de Loi de Finance pour Politique en faveur de la Jeunesse.

③ 정책목표별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 정책목표 1: 시민참여계좌(Compte d'Engagement Citoyen) 운영

프랑스에서는 청소년 참여 인식 및 시민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민참여계좌(Compte d'Engagement Citoyen, 이하 CEC)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8월 8일 법령 「노동·사회적 대화·직업보호법」 제39항에 따라 사회참여와 시민활동을 하는 모든 청소년·청년에게 ‘활동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활동기록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계좌의 목적은 청소년·청년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보건교육, 행정교육, 재무교육, 화재교육 등 각 활동 분야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정부가 주관하는 시민단체·협회 개인활동계좌(Compte Personnel d'Activité, 이하 CPA)에 적립할 수 있다. 이 개인활동계좌는 동일 직종 직업 분야 구직 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한 봉사활동으로 간주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즉 시민단체나 협회 활동 경력은 이처럼 ‘자원봉사활동계좌’에 적립되어 향후 다양한 기회(구직, 학업지속, 사회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³⁰⁾

30) Ministère du Travail, du Plein emploi et de l'Insertion. Le Compte Engagement Citoyen(CEC). <https://www.moncompteformation.gouv.fr/espace-public/le-compte-engagement-citoyen-cec-00>에서 2022년 4월 20일 인출.

○ 정책목표 2: 우수 기숙사 정책(La politique d'internat ambitieuse)

우수 기숙사 정책은 기회의 평등과 사회의 공정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기숙사에는 학업위기 청소년을 비롯하여 가정을 기반으로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랑스 101개의 도(道, Département)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우수 기숙사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³¹⁾

○ 정책목표 3: 1인 청소년 1개 솔루션 사업과 생활비 지원³²⁾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는 특히 학업·구직 시기에 놓인 청소년·청년 세대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1인 청소년 1개 솔루션' 사업은 보건위기에 따른 청소년·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프로그램이다. 2020년 7월에 발표되어 2년차를 맞고 있는 이 사업에 2년간 정부예산 6억 5천 유로가 투입되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지원, 사회적 지원을 받게 하고 안전한 '직장 진입'을 유도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에 의해 20만 명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직업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30만 개의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과정이 제공되었으며, 2021년 5월 26일 「취약청소년의 직업 진입 보장법령」에 따라 교육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기업 간 협업을 공고히 하고 실습생을 고용하는 기업에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³³⁾

특히 환경, 정보산업, 보건과 위생, 여가산업 분야 등 미래지향적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청소년·청년이 개인적·직업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학업중단 및 교육 제도권 밖 청소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구직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어 이 청소년들의 경제사회적 자립과정을 국가가 지원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하는 데 이 사업의 목표가 있다.

31) L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2021.5.28.). Internats d'excellence: vivre sa scolarité autrement. <https://eduscol.education.fr/document/7208/download>에서 2022년 9월 14일 인출.

32) République Française. 1jeune1solution. <https://www.1jeune1solution.gouv.fr/> 에서 2022년 4월 20일 인출.

33) Ministère du Travail, du Plein emploi et de l'Insertion. Accompagner les jeunes - Plan 1 jeune, 1 solution. <https://travail-emploi.gouv.fr/le-ministere-en-action/reliance-activite/plan-1jeune-1solution/> 에서 2022년 9월 13일 인출.

본 사업에서는 국가와 청소년 간에 ‘청소년 참여계약(Le Contrat d'Engagement Jeune)’을 체결하여 6~12개월 동안 맞춤형 직업과정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이 매주 15~20시간 다양한 직업영역의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진로설정을 하고, 이후 전문적인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교육수료를 목표로 실습과 병행할 수 있다. 모든 과정에 진로상담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가 개인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 청소년의 교육 현황과 개인적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기간은 18개월까지 연장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500유로까지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참여계약 프로그램의 목표는 교육수료 이후 각 분야의 직업교육 수료증(CAP) 및 자격증(BAP)을 취득하는 데 있다. 안전한 직장을 찾고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다양한 생활 돌봄 및 추가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제1차 1인 청소년 1개 솔루션 2020-2021년 프로그램(2020.7.) 종료에 이어, 2022년 3월 2022-2023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제2차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은 크게 △직업생활 진입 촉진, △미래 직업분야를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의 3가지이다.

1인 청소년 1개 솔루션 사업과 함께 활성연대소득(Le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이하 RSA)³⁴⁾과 활동보너스(Prime d'activité)³⁵⁾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활성연대소득은 최저임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자나 18~24세에 부모가 된 경우 대상이 된다. 각 자녀당 매월 150유로를 기준으로 100유로의 추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450유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활동보너스는 그 범위와 산정방식이 매우 광범위한데, 최저임금 수령자(일반 직장인, 학생, 인턴십, 실습생, 육아 휴직자, 무급 휴직자 등)에게 각 상황에 따라 최고 매월 551유로를 생활비로 지원한다. 활성연대소득과 활동보너스는 실업연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청소년·청년의 경제적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는 생활비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책목표 4: 1인 청소년 1인 멘토

멘토사업의 확장은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3월 1일 대통령 담화에서

34) Revenu de solidarité active(RSA).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19775> 에서 2022년 4월 20일 인출.

35) Conditions pour percevoir la prime d'activité. <https://www.mes-allocs.fr/guides/prime-d-activite/prime-d-activite-conditions/> 에서 2022년 4월 20일 인출.

그 중요성이 재차 언급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청소년·청년이 급증하는 시기에 이들의 교육 및 진로, 생활영역에 대한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은 효과가 클 것이다. 현재 연간 3만명인 멘토사업 참여자 수를 2022년에는 20만명으로 확대하여 ‘1인 청소년 1인 멘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2천 7백만 유로 재원을 투입한다(L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2022: 29).

○ 정책목표 4: 모두를 위한 문화 사업

문화와 여가 차원에서 주목할만한 사업으로 ‘문화패스’를 들 수 있다. 이 문화패스의 목적은 바로 청소년·청년의 문화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문화패스는 2019년 2월에 5개의 데파르트망³⁶⁾(라인 저지역, 피니스테르, 헤로, 센-생-드니, 기안)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9세 미만 청소년·청년에게 500유로의 문화카드를 지급하여 지역사회 문화시설(서점, 영화관, 연극, 뮤지컬, 박물관 및 다양한 공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보건위기로 문화생활 자체가 거의 차단되고, 또한 경제적 위기가 고조되어 청소년·청년의 문화 혜택이 점점 더 어려워진 현 시점에서 이 문화패스의 효과는 매우 크다. 2020년 2년차 시범사업을 거쳐 프랑스 정부는 2021년부터 15~29세 모든 청소년·청년에게 1인당 300유로 문화패스를 지급하고 있다.

문화패스 사업과 함께 ‘모두를 위한 문화’ 사업의 하나로 지역사회 도서관과 미디어관, 대학 도서관 개관시간을 기존 18시까지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하고 일요일에도 개관하도록 하였다. 지역사회 도서관과 미디어관은 문화접근권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프랑스 정부는 8백만 유로의 예산을 들여 인력 충원과 관리를 하고, 문화 인프라의 보장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L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2022: 30).

○ 정책목표 4: 장애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접근 보장

프랑스 정부는 청소년 세대의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특히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스포츠클럽 종목을 다양화시키고,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접근」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을

36) 프랑스 데파르트망은 한국의 행정구역 도(道)에 해당된다.

위한 스포츠 서비스와 인프라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핸디가이드(Handiguide)’ 프로그램은 장애 스포츠인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구로써 개개인에게 적합한 시설이용 정보와 관리체계를 안내한다. 이 핸디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자립적으로 스포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모든 스포츠 공간에 이들을 위한 독립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장애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정책을 비롯하여 프랑스 장애 청소년정책의 특징은 장애를 ‘정상적 범주’로 간주하고 장애-비장애 간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기본방침에 있다. 즉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는 기회의 평등, 참여의 평등, 시민성의 평등이다. 장애인의 권익과 참여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에 중점을 두지만, 개인적 상황에 적합한 사회, 스포츠문화, 일상생활, 직장생활의 영역이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본적 취지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L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2022: 30-31).

○ 정책목표 5: 청소년·청년 주거지원

청소년·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가장 기본대책 중의 하나는 바로 주거지원이다. 2018년 11월 28일 법령 「주거·개조·디지털 개발법, 이하 ELAN법」에 따라 프랑스는 청소년·청년의 주거지원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 청소년·청년 대상 주거지는 계약보증금(보통 1~10개월 월세)없이 입주가능
- 공동임대 활성화
- 30세 미만 청소년·청년을 위한 사회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 모든 종류의 임대 주거지(개인 임대, 지자체 임대, 국가 임대 등 포함)에 18~30세 청소년·청년(특히 대학생)이 조건 없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주거보증(금)’ 제공(ELAN법 117항)
- 청소년·청년 자립을 위한 우선 주거지(Logement d'abord) 사업
- 청소년·청년을 위한 주거제공정책 개발

이 주거지원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안정된 주거 정착을 위해 사회임대주택부터 주거보조지원금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맞춤주거지원’은 임차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월세가 인상된 경우나 계약기간의 종료 혹은 미종료 시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고, ‘가족주거지원’은 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있거나 혹은 결혼 5년 미만 부부에게 지급하는 지원이다. ‘사회주거지원금’은 맞춤형주거지원과 가족주거지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의 지원이고, 이외에도 ‘이사 지원’ 및 ‘거주지 리노베이션 지원’ 등 그 내용과 폭이 매우 넓다.³⁷⁾

○ 정책목표 5: 청소년 건강정책

프랑스의 청소년 건강정책 주요내용에는 건강보험 절차 간소화 및 부가 급여 보장, 정신건강 지원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절차 간소화: 2018년 3월 8일 법령 「대학생 학업성공과 진로설정법」에 따라 2019년부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대학생도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 간소화
- 청소년의 부가적인 건강보험 보장: 건강보험공단의 기본 혜택 이외에 부가적인 보건 의료비 지원
- 2017년 12월 29일 법령 「2018~2022 국가보건전략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 지원(특히 정신건강 지원) 강화
- 상기 법령에 따른 알코올, 흡연, 마약,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강화
 - 사회심리적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등 정책 강화
 - 지역관할 경찰서와 협업으로 ‘경찰 1일 교사 프로그램’에 따라 중·고등학교에 알코올, 흡연 및 마약, 인터넷 중독, 폭력에 대한 강의

○ 정책목표 5: 청소년 스포츠활동 장려

「2019~2024 국가스포츠전략 5개년 계획」에 따라 청소년의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고 개발하는 정책 역시 삶의 질 개선 정책목표의 주요 내용이다.

- 학교 등 공교육 기관 중심의 신체활동 및 스포츠활동 강화
- 스포츠활동 프로젝트를 통한 위기청소년의 학교복귀와 사회복귀 장려
- 지역사회 스포츠협회의 학교 협업 공동 프로젝트 개발

37) Informations aides Logement. <http://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logement> 에서 2022년 4월 20일 인출.

5) 미국³⁸⁾

(1) 미국 청소년정책 개요

미국은 한국 및 다수 유럽 국가들과 같이 국가 법률이나 정부 조직에 의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정책을 수립하여 중앙집권적으로 청소년정책과 그에 따른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프로그램을 추진하기보다는, 정책 대상으로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업을 각 정부 조직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고려하여 전개해 왔다. 미국은 각 부처 및 기관에 산재한 청소년사업과 청소년프로그램의 연계와 조정을 통한 연방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2008년에 청소년프로그램 기관 간 실무그룹(The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 IWGYP)을 조직하여 다양한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은 IWGYP의 비전, 목적, 목표와 IWGYP가 운영 중인 청소년프로그램 포털사이트인 youth.gov의 주제 영역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내용³⁹⁾

① 청소년프로그램 기관 간 실무그룹(IWGYP)

2022년 현재 12개의 연방정부 부처와 9개 연방정부 소속의 행정기관이 청소년프로그램 기관 간 실무그룹(IWGYP)에 참여하고 있다. IWGYP는 연방정부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혁신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근거 기반의 청소년프로그램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국가 수준에서 미국 전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구성하고 청소년프로그램을 위한 내실있는 모델을 협의한다는 점에서 IWGYP의 역할과 기능은 미국 청소년정책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I-18. 청소년프로그램 기관 간 실무그룹(IWGYP) 참여 조직

부처/기관	조직명
연방정부 부처	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의장), 국토안보부, 주택도시개발부, 법무부(부의장), 노동부, 국무부, 내무부, 교통부
기타 행정기관	AmeriCorps, 국립예술기금위원회, 국립과학재단, 국가마약단속정책국, 환경보호청, 중소기업청, 사회보장국, 소비자금융보호국, 국제개발처

*출처: Youth.gov. Federal Collaboration. <https://youth.gov/feature-article/federal-collaboration> 에서 2022년 5월 24일 인출.

38) 미국 사례는 주경필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가 집필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39) 이 부분은 미국 청소년프로그램 포털사이트인 <https://youth.gov/> 수록 내용을 요약발췌하여 작성하였다.

② IWGYP의 대상 연령

청소년프로그램 기관 간 실무그룹(IWGYP)에서 주요하게 초점을 맞춘 청소년의 연령은 10~24세이다. 특히 10~24세 연령의 청소년기를 14세 이하의 초기 청소년기(early adolescence), 15세에서 17세의 중기 청소년기(middle adolescence), 18세에서 24세의 후기 청소년기(late adolescence) 혹은 초기 성인기(early adulthood)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젊은 또는 어린 사람(young people)으로 인식되는 청소년(youth)의 연령 범위는 각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권고된다. 따라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연속선에서 다양한 사회 및 제도 시스템이 이들 청소년들의 성장 욕구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WGYP가 추구하는 바이다(IWGYP, 2016).

③ IWGYP의 비전, 목적, 목표

청소년프로그램 기관 간 실무그룹(IWGYP)의 안건은 정부 차원의 공공 영역 청소년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청소년과 그 가족의 욕구, 다양한 민간단체와 조직의 목표 등을 포괄한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 대상 및 이해관계자의 수요, 욕구, 목표를 종합하여 ‘청소년을 위한 비전(A Vision for Youth)’을 구상하여 미국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삶, 학습, 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연계·협력을 추진해 왔다(IWGYP, 2016).

표 III-19. IWGYP의 청소년을 위한 비전

비전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삶, 학습, 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연계·협력 추진	
주제	1	청소년과 그 가족은 살아가고 학습하며 일하기 위한 안전하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장소를 보유해야 한다.
	2	청소년은 질 높고 부담 없는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3	청소년은 교육, 훈련, 생활 기술을 개발할 다양한 기회와 직업, 경력, 자립 및 성인기에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4	청소년은 가족, 친구, 학교, 지지하는 성인, 지역사회와 강력하고 긍정적이며 안정적인 유대 관계를 가져야 한다.
	5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연계 체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잘 훈련되고, 청소년 분야에 전문지식을 보유하며, 경쟁력 있고, 열정적이며, 문화적인 감수성이 풍부해야 한다.
	6	청소년은 각자가 지닌 강점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시민 참여, 사회봉사, 리더십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7	청소년은 초기 및 중기 아동기,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 등 모든 발달단계를 통해서 건전하게 성장해야 한다.

*출처: IWGYP(2016). Pathways for youth: Strategic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 11쪽.

요컨대 ‘청소년을 위한 비전’에 담긴 7개의 주제는 1) 안전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 2) 건강(의료) 보장, 3) 교육 및 진로, 4) 주변 체계와의 연계·통합, 5) 전문인력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 6) 시민참여·사회봉사·리더십, 7) 청소년기 전후를 포함한 생애 연속선상의 성장 지원으로 정리된다. 이들 주제가 연방정부 조직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프로그램에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지역사회 등의 청소년사업에서 기반이 되도록 하는 것이 IWGYF의 핵심적인 접근이었다. IWGYF는 청소년프로그램의 구성 및 수행 과정을 위한 주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림 III-7]과 같은 틀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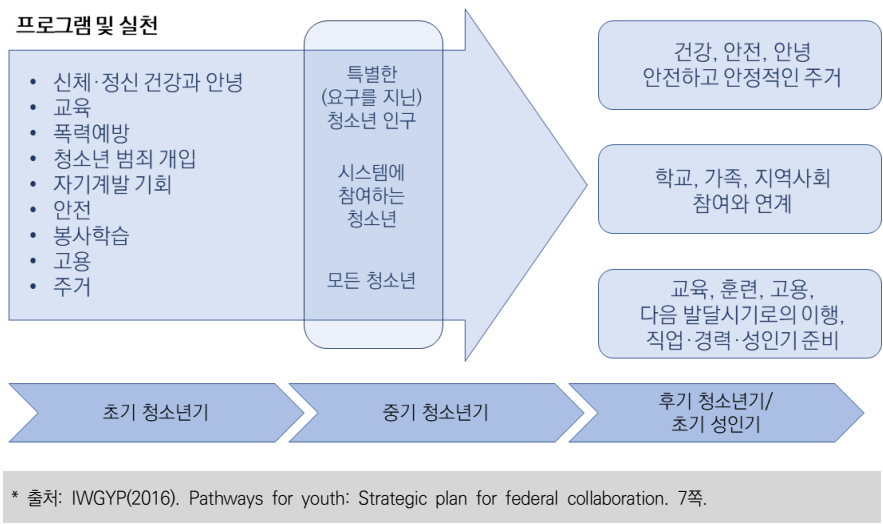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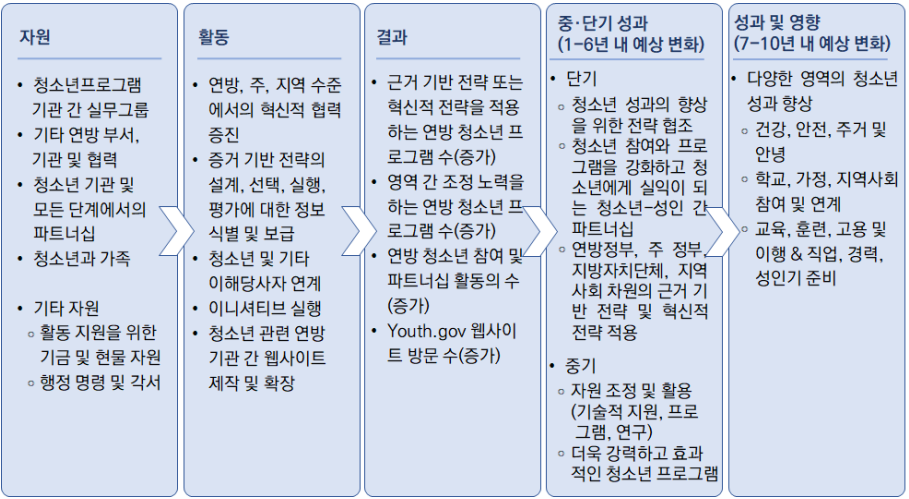


그림 III-7. 연방 협력을 위한 전략적 계획에 대한 프레임워크

이 틀 안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III-8]에는 연방정부의 다양한 참여기관들이 어떤 프로그램과 실천을 해야 하는가가 명시되어 있고, 정책과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을 다양한 청소년 그룹이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인구와 다양한 기관 및 사회 시스템에 참여하는 청소년, 그리고 모든 청소년으로 정책대상 그룹을 세분화하여 연방정부의 통합적인 청소년프로그램 수행이 미국의 모든 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연방정부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개입의 성과로는 1) 건강, 안전, 안녕, 2) 학교·가족·지역사회 참여와 연계, 3) 교육, 훈련, 고용, 발달 이행, 경력과 성인기 준비 등 세 가지 영역에서의 내용을 제시한다.

청소년프로그램 기관 간 실무그룹(IWGYP)은 연방 협력을 청소년 성과와 연관시키는 논리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IWGYP가 수행한 활동이 어떻게 위에서 설명한 청소년 비전을 달성하는 결과, 성과, 영향을 이끌어내는지를 나타낸다.



* 출처: IWGYP(2016). Pathways for youth: Strategic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 12쪽.

그림 III-8. 연방 협력을 청소년 성과와 연관시키는 논리 모형

성과를 크게 중·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울이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통합적 노력의 결실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중·단기 성과는 대략 6년 이내 변화를 기대한 것이다. 단기 성과는 청소년 성과(youth outcomes)⁴⁰⁾의 향상을 위한 전략 협조, 청소년 참여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소년에게 실익이 되는 청소년-성인 간 파트너십,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차원의 근거 기반 전략 및 혁신적 전략 적용이

40) 청소년 성과(youth outcomes): 청소년정책, 청소년사업, 청소년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성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된 효과적인 성과물을 의미하며, 청소년을 위한 성과(outcomes for youth)의 개념과 혼용되기도 한다.

고, 중기 성과는 자원 조정 및 활용(기술적 지원, 프로그램, 연구 등), 청소년을 위한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한편, 장기 성과는 대략 7년에서 10년에 걸쳐 기대되는 변화로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영역에서의 청소년 성과(youth outcomes)의 향상을 의미한다.

청소년프로그램 기관 간 실무그룹(IWGY)은 ‘청소년을 위한 비전’ 하에 1) 협력과 조정, 2) 근거 기반과 혁신 전략, 3) 청소년 참여와 파트너십이라는 총 3개의 목적을 설정하고, 각 목적별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IWGY, 2016).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20. IWGY의 목적 및 목표

목적(Goal)		목표(Objective)
Goal1. 협력과 조정	청소년 성과(youth outcomes) 향상을 위한 조정 전략	목표 1-1: 청소년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연방정부 지침 마련 목표 1-2: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수준에서 청소년프로그램 및 예산지원 조정 목표 1-3: 자원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 협조
Goal2. 근거 기반과 혁신 전략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수준에서 근거 기반의 혁신적 전략 활용 촉진	목표 2-1: 근거 기반 전략 채택 장려 및 전략 수행 지원 목표 2-2: 혁신 지원 및 근거 기반 강화를 통한 지식 격차 해소
Goal3. 청소년 참여와 파트너십	청소년 참여와 파트너십 촉진을 통한 프로그램 강화 및 청소년 혜택	목표 3-1: 지속적인 청소년 참여와 프로그램 강화를 지원하는 청소년-성인 간 파트너십 촉진 목표 3-2: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생활 및 리더십 기술을 포함한 핵심 역량을 개발, 숙달,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려

*출처: IWGY(2016). Pathways for youth: Strategic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 4쪽 재구성.

이상과 같은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IWGY는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침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IWGY, 2016: 4). 첫째, 연방정부 예산지원 신청서, 기타 연방정부 문서, 간행물에 사용하는 청소년 관련 공통의 주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사용할 용어를 개발하는 것이다. 즉, 부처별 산재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프로그램을 일관성 있는 용어 및 개념으로 정의하여 향후 청소년정책 수행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둘째,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하거나 기존 협력 모델을 평가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을 위한 정부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 참여 및 파트너십 전략을 포함한 청소년에 대한 근거 기반 전략 관련 정보를 집약하여 확산하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④ 청소년프로그램 포털사이트 youth.gov

youth.gov는 청소년프로그램 기관 간 실무그룹(IWGYP)이 중심이 되어 법무처 청소년 정책, 청소년사업, 청소년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포털사이트이다. 과거에는 FindYouthInfo.gov였으나, 보다 포괄적인 청소년프로그램 주제를 다루고 많은 부처 및 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youth.gov로 개편되어 운영 중이다.

youth.gov는 2022년 현재 청소년 건강 등 총 29개의 주제에 관한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정보와 참여를 위한 연결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주제는 현재 관계 부처 및 기관에서 수행 중인 청소년프로그램을 의미하므로 현재 미국의 청소년정책과 그에 따른 주요 프로그램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youth.gov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관련어는 다음과 같다.

표 III-21. youth.gov의 주제

주제(Topic)	검색 관련어(Tag)
• 기회 청소년(Opportunity Youth) ⁴¹⁾	-
• 청소년 건강(Adolescent Health)	• Health and Nutrition
• 방과후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s)	• Afterschool
• 원주민 청소년(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AI/AN) Youth)	• Native Youth
• 따돌림 예방(Bullying Prevention) *stopbullying.gov	• Bullying
• 수용자 자녀(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 Parenting
•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	• Civic Engagement • Service Learning
• 데이트 폭력 예방(Dating Violence Prevention)	• Teen Dating Violence
• 장애(Disabilities)	• Disabilities

주제(Topic)	검색 관련어(Tag)
• 운전자 안전(Driver Safety)	• Teen Driver Safety
• 고용(Employment)	• Employment & Training
• 청소년 부모(Expectant and Parenting Young Families)	• Parenting
• 가족 참여(Family Engagement)	• Family & Community Engagement
• 재정 능력과 문해력(Financial Capability & Literacy)	• Financial Literacy
• 조직폭력 가담 예방(Gang Involvement Prevention)	• Gang Prevention
• 노숙과 가출(Homelessness and Runaway)	• Housing • Runaway and Homeless Youth
• 소년법(Juvenile Justice)	• Juvenile Justice
• 정신건강(Mental Health)	• Mental Health
• 멘토링(Mentoring)	• Mentoring
• 긍정적인 청소년 개발(Positive Youth Development)	• Positive Youth Development
• 임신 예방(Pregnancy Prevention)	• Teen Pregnancy • Teen Pregnancy Prevention
• 대비 및 회복(Preparedness & Recovery)	• Community Development • Safety • Youth Preparedness
• 학교 분위기(School Climate)	• Safety • School Climate
•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 LGBTQ
• 물질 사용/오용(Substance Use/Misuse)	• Substance Use/Misuse
• 자살 예방(Suicide Prevention)	• Bullying • Juvenile Justice • LGBTQ
• 인신매매 방지(Trafficking Prevention)	• Juvenile Justice • Safety • Trafficking of Youth
• 후기 청소년(Transition & Aging Out)	• Transition Age Youth
• 폭력 예방(Violence Prevention)	•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 Gang Prevention • Juvenile Justice

*출처: youth.gov. Youth Topics. <https://youth.gov/youth-topics> 에서 2022년 7월 3일 인출.

41) 미국에서 기회 청소년이란 16~24세 청소년 중 학교와 일터 등 사회와 단절된 상태의 청소년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 구직단념 청(소)년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관계부처의 협력으로 기회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WGYP는 청소년프로그램 포털사이트인 youth.gov와 별도로 '변화를 위한 청소년 참여(Youth Engaged 4 Change: YE4C)'라는 웹사이트(engage.youth.gov)를 운영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16~24세 청소년들이 개인, 지역사회, 국가 수준에서 변화를 이루는 데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2022년 현재 YE4C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로는 시민 참여와 자원봉사(civic engagement and volunteering), 코로나 19(COVID-19), 장애(disabilities), 교육(education), 고용(employment), 재정(finances), 가정위탁(foster care),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 건강한 관계(healthy relationships), 노숙과 가출(homelessness and runaway), 소년법(juvenile justice), 리더십과 옹호(leadership and advocacy), 정신건강과 안녕(mental health and wellbeing)이다.

6) 호주

(1) 호주 중장기 청소년정책 개요

호주 정부는 오늘날 호주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과 관련하여 실용적인 조치들을 통해 청소년을 지원한다는 국가적 서약의 일환으로 2021년 8월 「호주 청소년정책 프레임워크」(Australia's Youth Policy Framework, 이하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청소년정책을 다루는 중추 기관인 교육기술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를 주축으로 개발되었으며, 청소년 지원에 대한 호주 정부의 서약, 현행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 미래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과 다짐을 담고 있다.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교육기술고용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등 다양한 정부부처 및 여러 청소년 관련 기구들의 활동과 역할,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과 향후 계획 등을 개괄적으로 제시한다(Minster's media center, 2021.8.12.).

(2) 주요 내용

① 청소년정책 프레임워크의 목표 및 대상 연령⁴²⁾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호주 내 15~24

42) 이 부분은 호주 정부 발행 청소년전략 문서 "Australian Government(2021.8). Australia's Youth Policy Framework"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세 청소년 인구는 32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약 12%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원주민 청소년은 약 5%이며, 가정 내에서 무급으로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6%이다. 해외 출생자의 비율은 23%에 달한다. 동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호주 청소년의 현황을 개괄하면서 동 프레임워크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코로나19가 호주 청소년에 미친 영향을 인정한다.
-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 중요한 청소년 이슈에 대해 청소년으로부터 듣고 응답한다.
-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와의 정기적 컨설팅 등을 통해) 함께 일하는 여정을 지속한다.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은 상기의 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Australian Government, 2021.8.: 3-38).

표 III-22. 청소년정책 프레임워크의 목표와 주요 내용

목표	주요 내용
코로나19의 영향 파악	•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국제기구, 호주 청소년 단체 등의 연구 보고서 및 조사 활동 결과 • 코로나19가 청소년들에게 끼친 부정적인 영향(사회경제적 영향 및 정신건강 이슈 등)과 청소년정책 분야의 주요 목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의견 반영	• 청소년 대상 컨설팅을 통해 확인한 청소년정책의 우선과제/영역 • 청소년옹호단체 지원 사업('Youth Advocacy Support Grants Scheme' 외)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듣기 위한 프로그램 등
중요 청소년 이슈 청취와 대응	• 교육, 훈련, 고용 관련 기회 제공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투자 • 청소년정책의 우선과제/영역별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 정부의 청소년 서비스 간 연계 강화 •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여러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청소년-정부 간 협력 지속	• 실효성 있는 조치들로 호주 청소년 지원 • 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한 청소년 의견수렴 방침 서약 등

*출처: Australian Government(2021.8). Australia's Youth Policy Framework. 3-38쪽 재구성

2010년 「호주 청소년을 위한 국가 전략」은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주로 12~24세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프레임워크는 유엔(UN)의 정의를 따라 15~24세인 자를 청소년('young people' 또는 'youth')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 외에도 최근 호주 정부가 발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문서에서 청소년의 연령 범위는 대체로 15~24세로 규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 범위는 하나의 지침일 뿐이며, 실제로는 정책, 지역, 프로그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청소년 서비스의 대상 연령은 대체로 12~25세 범위이다. 반면 교육 서비스 부문에서는 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직업 훈련 또는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청소년을 구분하기도 한다(Australian Government, 2010.4.: 2; Australian Government, 2021.8.: 4).

② 소외된 청소년 지원

호주 정부는 동 프레임워크에서 '소외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서약하였다. 프레임워크 내에 '소외된 청소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프레임워크 개발 과정에서 가이드 문서가 되었던 호주 유스 태스크포스(Youth Taskforce)의 중간보고서⁴³⁾에 따르면, 오늘날 호주에서 '소외된 청소년'은 △원주민 청소년, △난민 및 이주민을 포함한 문화-언어적 다양성(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ALD) 청소년, △시골 지역 청소년, △교육을 받지 않는 학령기 청소년, △가정 내에서 돌봄 및 부모 역할을 하는 청소년, △아동보호 시스템/가정 밖 돌봄 시스템 내의 청소년, △소년원 수감 청소년, △홈리스 청소년, △장애 청소년, △만성질환 청소년, △정신건강 이슈를 가진 청소년, △알코올 및/또는 기타 약물에 의존성을 가진 청소년, △LGBTQIA+ 청소년,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배경으로 가진 청소년, △니트(NEET) 청소년으로 그룹화된다(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2020.7.: 8-9).

③ 우선과제 영역

호주 정부는 전국적으로 실시된 광범위한 컨설팅의 결과로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교육', '고용', '정신건강', '소셜·커뮤니티 활동'임을 확인

43) 호주 정부는 청소년을 정책 개발 및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기 위하여 보건부 내에 호주 유스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유스 태스크포스의 보고서는 '소외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정책의 우선과제를 △청소년 권한 강화 및 참여, △기회 및 보장, △안전, 포용, 존중 및 수용, △건강과 웰빙, △청소년 지원 시스템 활용, △환경으로 구체화하였다. 지난 2010년 전략에서 제시했던 대부분의 우선과제들을 보다 큰 주제로 묶음하는 한편, 최근 중요 이슈로 대두한 정신건강을 새로 우선과제에 포함시켰다. 호주 정부는 현재 ‘교육, 훈련, 또는 고용에 대한 접근권’, ‘정신건강 지원’이라는 두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를 청소년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알리고 청소년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Australian Government, 2010.4.: 3; Australian Government, 2021.8.: 5-38).

표 III-23. 2010 청소년전략 vs. 2021 청소년정책 프레임워크의 우선과제 영역 비교

2010 호주 청소년을 위한 국가 전략 ¹⁾	2021 청소년정책 프레임워크 ²⁾
• (건강과 웰빙) 청소년의 건강과 웰빙 증진 • (교육 보장) 교육을 통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지원 • (가족 내 청소년) 가족 내 청소년 지원 • (청소년의 커뮤니티 활동) 청소년이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량 강화 • (고용 관련 기술 함양 및 관계 개발) 미래 성공적인 취업에 필요한 기술능력과 인적 관계 개발 지원 • (안전한 온라인 참여) 청소년이 온라인에 자신감 있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위기 청소년 조기 중재) 위기 청소년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제가 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 중재 강화 • (안전 위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설정)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 설정	• (권한 강화 및 참여)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에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청소년 참여를 확대 • (기회 및 보장) 교육, 훈련 등에 대한 기회와 더불어 주거, 교통 등 사회 보장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보장 • (안전, 포용, 존중 및 수용) 물리적·온라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차별과 괴롭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장하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 • (건강과 웰빙)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 (청소년 지원 시스템 활용) 교육, 소득지원, 의료지원 등 청소년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강화 • (환경) 미래 세대를 위한 호주 정부의 환경 및 기후 관련 조치에 대한 신뢰 개선

* 출처: 1) Australian Government(2010.4). 2010 National Strategy for Young Australians. <https://apo.org.au/sites/default/files/resource-files/2010-04/apo-nid30323.pdf> 에서 2022년 5월 10일 인출.
 2) Australian Government(2021.8.). Australia's Youth Policy Framework. <https://www.dese.gov.au/australias-youth-policy-framework/resources/australias-youth-policy-framework> 에서 2022년 5월 10일 인출.

④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

호주 청소년정책 프레임워크의 우선과제 영역별로 호주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향후 시행할 계획인 정책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Australian Government, 2021.8.: 5-38).

표 III-24. 우선과제 영역별 주요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

우선과제 영역	대표적인 정책 또는 프로그램
권한강화 및 참여	• Youth Advocacy Support Grants Scheme - 청소년을 대변하는 청소년옹호단체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 호주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청소년연합(Australian Youth Affairs Coalition)을 비롯한 단체들에 90만 호주달러 이상의 기금을 지원해옴. • Youth Action Projects Grants Scheme - 15~24세 청소년 지원 프로젝트에 대하여 5천~2만 호주달러를 지원하는 사업 -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는 청소년의 웰빙, 코로나19 위기 회복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110만 호주달러를 지원
기회와 보장	• 학교 지원 - 2018~2029년에 걸쳐 호주 학교에 약 3,152억 호주달러의 지원을 서약 • 원주민 여성청소년 교육 지원 - 2023년 12월까지 1만 2,600명의 원주민 여성청소년 교육 지원 • Youth Jobs PaTH 프로그램 - 청소년이 구직 및 근로상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직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청소년에게는 취업 능력 훈련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1만 호주달러를 지원
안전, 포용, 존중과 수용	• 여성 및 아동 보호 - 호주 정부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대응에 11억 호주달러 이상을 투자 - 이를 통해 'Stop It At The Start' 예방 캠페인,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eSafety Commissioner' 등을 실시 • National Online Safety Awareness Campaign - 2021~2022년에 520만 호주달러를 투자하여 호주의 새로운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홍보 • STEM 분야 여성 인력 확대 - STEM 분야에 대한 여성의 참여 또는 재교육 지원을 위해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4,240만 호주 달러를 투자
건강과 웰빙	• National Mental Health and Suicide Prevention Plan - 정신건강 자살 예방 계획에 무려 23억 호주달러를 투자해옴. -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및 확대를 위해 2억 7,860만 호주달러를 투자 • 세계적인 수준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시스템

우선과제 영역	대표적인 정책 또는 프로그램
	- 1억 1,120만 호주달러를 투자하여 기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지원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
청소년 지원 시스템 활용	• 호주의 온라인 정부 서비스 'myGov' 전달성 개선 - 2021~2022년도 예산에서 2억 호주달러를 투자하여 향후 2년에 걸쳐 'myGov'를 개선하여 정부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 •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 완화 및 안전 개선 - 건강 유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National Communications Campaign', 다양한 언어로 코로나19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COVID Safe app' 등을 운영해옴.
환경	• 환경 결과 개선 - 바다, 생물다양성, 자원 재활용 및 폐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하여 새로이 4억 8,630만 호주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 - 해양 쓰레기 제거,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완화, 천연 종 보호, 비용이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 확대 및 탄소배출 저감 추진

*출처: Australian Government(2021.8). Australia's Youth Policy Framework. 5-38쪽 재구성.

7) 일본⁴⁴⁾

(1) 일본 청소년정책 개요

일본 정부는 일본국 「헌법」 및 「UN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종합적인 육성지원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0년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이하, 아동·청소년법)」을 시행하였다. 2010년 아동·청소년법이 제정된 이래 두 차례(2010년, 2015년)에 걸쳐 이 법 제8조(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대강)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대강」을 책정하였으며,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육성지원을 교육, 복지, 보건, 교정, 갱생보호, 고용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각 분야의 경계를 초월한 연계, 협력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21.4.).

한편, 제1차 육성대강이 추진되던 기간(2010-2014년)에 동일본재해(東日本災害)⁴⁵⁾,

44) 일본 사례는 강영배 교수(대구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가 집필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45)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쓰나미(津波, 해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되고, 미야기현(宮城県), 후쿠시마현(福島県) 지역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제2차 육성대강의 실시되던 기간(2015-2020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라고 하는 ‘국난(國難)’이라고 불려도 될 만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정보화, 국제화, 저출생,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다. 아동·청소년법 제1조(목적)에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듯이, 현재 일본 사회에서 상당수 아동 및 청소년의 불안 상태가 고조되고 있고, 고립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있는 등 아동과 청소년들을 둘러싼 상황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을 위한 전문가회의(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のための有識者会議)」(이하, 전문가회의)를 설치하였으며, 이 회의에서는 새로운 육성대강에 포함할 내용 등에 대하여 2019년 4월부터 총 13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 때 아동·청소년 당사자 및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内閣府, 2021.4.). 내각부의 자료⁴⁶⁾에 따르면, 2020년 12월, 전문가회의에서 작성한 ‘아동·청소년육성추진대강(안)’에 대하여 2021년 3월 6일에서 3월 15일의 10일간에 걸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수렴된 의견의 수는 1,184건이다. 이처럼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1년 4월 6일,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본부’에서 ‘신(新)아동·청소년육성대강’을 최종결정하였다.

일본에서 아동(子ども, 어린이)은 보통 18세 미만, 청소년(若者, 젊은이)은 18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2009) 이후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대략 30세 미만까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아동·청소년비전(子ども若者ビジョン)’ 수립 후, 2016년과 2021년에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인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대강이 수립되었다.

표 III-25. 일본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 연혁

연도(년)	법제도명	주요내용
2003	청소년육성 시책대강 ¹⁾	• 내각부 청소년육성추진본부에서 대강 수립 • 보건, 복지, 교육, 노동, 비행대책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시책 마련 • 대략 5년 단위 개정 명시
2008	신(新)청소년 육성추진대강 ²⁾	• 2003년에 수립한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강 마련 • 청소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시책 마련 노력

46) 内閣府(2019). 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のための有識者会議の開催について. <https://www8.cao.go.jp/youth/suisin/yyushikisya/index.html> 에서 2022년 4월 16일 인출.

연도(年)	법제도명	주요내용
		• 청소년정책을 4단계(영유아기, 학동기, 사춘기, 청소년 및 후기청소년기)로 분류하여 제시
2009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³⁾	• 아동(子ども)과 청소년(若者)을 병기(併記) • 아동·청소년육성추진대강, 아동·청소년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체 운영 모형 제시
2010	아동·청소년비전 ⁴⁾	•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로 존중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성장 지원 •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성인의 역할 강조
2016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대강 ⁵⁾	•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에 근거하여 대강 마련 • 모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 위기 청소년 및 가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2021	신(新)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대강 ⁶⁾	•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 제정 이후 세 번째 수립 • 코로나19 상황 하의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여건 반영 •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이 쉴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居場所) 확보하며, 성장,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제시 •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영역별 성과지표 제시 • 3년차 시점에 중간점검 실시

*출처: 1) 青少年育成推進本部(2003.12.). 青少年育成施策大綱. <https://www8.cao.go.jp/youth/suisin/yhonbu/taikou.pdf> 에서 2022년 4월 15일 인출.
2) 青少年育成推進本部(2008.7.). 新しい「青少年育成施策大綱」の枠組み(概要). <https://www.cas.go.jp/jp/seisaku/kids/dai03/sankou2.pdf> 에서 2022년 4월 15일 인출.
3)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について.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s_gaiyo.pdf에서 2022년 4월 15일 인출.
4)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2010.7.). 子ども・若者ビジョン.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vision.pdf> 에서 2022년 4월 15일 인출.
5)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2016.4.). 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概要).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taikou_gaiyou.pdf 에서 2022년 4월 15일 인출.
6)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2021.4.). 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 全ての子供・若者が自らの居場所を得て、成長・活躍できる社会を目指して.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r03-taikou.pdf> 에서 2022년 4월 16일 인출.

(2) 주요 내용⁴⁷⁾

① 기본방침

가장 최근인 2021년에 수립한 신(新)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대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21.4.)은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들이

47) 이 부분은 일본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2021.4.)의“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성장, 활약할 수 있는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회과제로 생명 및 안전의 위기, 고독 및 고립 문제, 낮은 웰빙 상태,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 지속가능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사회환경의 구축, 아동·청소년 인권 및 권리의 보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있어 국가 및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의 필요 등과 같은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방침으로 △모든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 △위기 아동·청소년 및 가족 지원, △창조적인 미래를 개척해 나갈 아동·청소년 응원,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 정비,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할 전문인력 양성·지원의 다섯 가지를 설정하였다.

이전의 대강에서는 대강의 성과를 평가, 점검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표가 되지 않았으나, 이 대강에서는 아동·청소년 개인, 가족 및 친족, 학교, 직장, 지역사회, 인터넷공간 등의 영역별로 세부지표(인덱스)를 설정하고 있으며, 대강이 추진되는 5년 중 3년차에 중간점검을 통해 대강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겠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② 영역 및 시책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현황과 아동·청소년육성추진지원법의 목적(제1조) 및 기본이념(제2조)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5개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아동·청소년육성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기본방침별 취지 및 기본 시책은 다음과 같다.

○ 기본방침 1: 모든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

모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아동·청소년기를 보내고, 나아가 인생 100세 시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를 행복하게 자립하여 살아내는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표 III-26. 기본방침 1(모든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의 구체적 내용

기본방침	시 책	
1-1. 자기형성을 위한 지원	1-1-1. 일상생활능력 습득	• 기본적 생활습관 형성 • 규범의식 육성 • 체험활동 추진 • 독서활동 추진 • 체력 향상 • 생애학습 대응

기본방침	시책	
	1-1-2. 학력 향상	• 개정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 맞춤형 지도 내실화 • 특색·매력 있는 고등학교 교육 실현을 위한 노력 •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 • 소규모 학급 실시 • 다양한 가치관을 접할 기회 확보
	1-1-3. 대학교육 내실화	• 교육내용 내실화
1-2. 아동·청소년 의 건강과 안 전의 확보	1-2-1. 건강교육 실시 및 건강 유지·증진 등	• 건강교육 실시 • 사춘기 특유의 과제(성피해, SNS 매개 범죄 등)에 대응 • 임신·출산·육아 교육 • 10대 부모 지원 • 안전한 임신·출산 및 산후 보장
	1-2-2. 아동·청소년 상담체계 내실화	•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지키는 능력 육성 • 아동·청소년 종합상담센터 내실화 • 학교 상담체계 내실화 • 지역 상담체계 내실화 • 따돌림 방지 대책 • 폭력대책 • 인권옹호
	1-2-3. 피해예방교육	• 안전교육 • 생명존중교육 • 가정폭력 예방 • 정보윤리교육 • 노동자 권리 보호 • 소비자교육
1-3. 청소년의 직업 적 자립, 취업 등 지원	1-3-1. 직업능력·의욕 습득	• 직업교육 실시 • 능력개발 시책 내실화
	1-3-2. 취업지원 내실화	• 대졸자 취직 지원 • 직업적 자립 지원 • 비정규고용대책 추진 • 청소년고용촉진법 시행에 따른 취직 지원 • 청년 고용안정대책 추진
1-4. 사회참여 지원	• 사회에 참여하는 태도를 키우는 교육 추진 • 봉사활동 등에 의한 사회참여 추진	

*출처: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2021.4.). 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全ての子供・若者が自らの居場所を得て、成長・活躍できる社会を目指して.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r03-taikou.pdf> 에서 2022년 4월 16일 인출.

○ 기본방침 2: 위기 아동·청소년 및 가족 지원

위기 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위기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그들이 성장, 활약할 수 있도록 가족을 포함해 사각지대 없이, 비상시에도 중단됨이 없이 지원한다.

표 Ⅲ-27. 기본방침 2(위기 아동·청소년 및 가족 지원)의 구체적 내용

기본방침	시책	
2-1. 아동·청소년이 지닌 과제의 복합성·복잡성을 고려한 중층적 지원	• 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를 통한 촘촘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아웃리치 내실화	
2-2. 위기상황별 대처	2-2-1. 니트, 히키코모리, 등교거부 아동·청소년 지원	• 은둔형 외톨이 지원 • 등교거부 아동·청소년 지원 • 니트 청년 지원 • 학업중단 청소년 및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지원
	2-2-2. 장애 및 건강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 지원	• 장애 아동·청소년 지원 •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지원 • 장애인 취업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 만성병 및 난치병 아동·청소년 지원 • AYA세대(15~39세) 암환자 지원
	2-2-3. 비행·범죄 아동·청소년 지원	• 종합적 대처 • 비행예방, 상담활동 등 • 약물남용예방 • 가해자 교육 및 피해자 보호 • 시설 내 처우를 통한 대처 •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대처
	2-2-4. 아동의 빈곤문제 대응	• 아동빈곤대책 • 교육 지원 • 생활 지원 • 보호자 취업 지원 • 주거 지원 • 경제적 지원 • 조사연구 등 • 관공민 연계 대처
	2-2-5.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 자살대책 • 가족돌봄청소년(영 케어러) 지원 • 부모의 이혼에 따른 문제 대응 • 해외인재 영입·공생 • 외국인 자녀 및 귀국 학생의 교육 내실화

기본방침	시책	
		- 장기체류 외국인 청소년의 취업 지원 - 부당한 편견·차별 예방 및 해소
2-3. 아동·청소년의 피해 예방·보호	2-3-1. 아동학대예방 대책	- 아동학대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 - 사회적 돌봄 추진 및 요보호아동의 보호처 확보
	2-3-2.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대책	-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대책 - 범죄피해 아동·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지원

*출처: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2021.4.). 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全ての子供・若者が自らの居場所を得て、成長・活躍できる社会を目指して.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r03-taikou.pdf> 에서 2022년 4월 16일 인출.

○ 기본방침 3: 창조적인 미래를 개척해 나갈 아동·청소년 응원

아동·청소년이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특기를 개발하며, 아울러 자신의 재능을 꽃피워 세계, 일본, 지역사회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한다.

표 III-28. 기본방침 3(창조적인 미래를 개척해 나갈 아동·청소년 응원)의 구체적 내용

기본방침	시책
3-1. 글로벌 사회에서 활약하는 인재 육성	- 일본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촉진 등 - 외국어교육 실시 - 해외유학과 유학생 유치 - 해외자녀교육 내실화 -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교육 추진 - 오사카·간사이 박람회를 계기로 한 학습기회 제공 - ESD(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 국제교류활동
3-2. 혁신을 담당할 과학기술 인재 육성	- 이과교육·STEAM교육 추진 - 젊은 연구자 지원 - 특정분야에 특이한 재능이 있는 아동·청소년 응원 - 앙트레프레너십(기업가정신) 교육 추진 - 기업 지원
3-3. 지역조성에 활약하는 청년 육성	- 청년의 지방 이주 추진 - 청년에 의한 지역조성 추진
3-4.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차세대 선수, 신진 예술가 육성	- 차세대 선수 육성 - 신진 예술가 육성
3-5.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응원	내각총리대신 표창

*출처: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2021.4.). 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全ての子供・若者が自らの居場所を得て、成長・活躍できる社会を目指して.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r03-taikou.pdf> 에서 2022년 4월 16일 인출.

○ 기본방침 4: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 정비

이 방침의 기본적 내용은 웰빙의 관점에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이 아동·청소년의 성장의 장(場)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장(場)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전체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을 육성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정비하여 활동을 촉진한다.

표 Ⅲ-29. 기본방침 4(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 정비)의 구체적 내용

기본방침	시 책
4-1. 가정, 학교, 지역의 상호관계 재구축	4-1-1. 적극적인 보호자 지원 • 가정교육 지원 • 사회적 돌봄 체계 정비
	4-1-2. 「팀으로서의 학교」와 지역과의 연계·협력 • 학교와 지역이 연계·협력하는 체제 구축
	4-1-3. 지역 전체에서 아동을 육성하는 환경 조성 • 신·방과후 아동종합플랜 추진 • 방과후활동 지원 • 지역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활동 추진 • 체험·교류활동, 바깥놀이 장소 정비
	4-1-4. 아동·청소년이 범죄 등 피해에 노출되기 어려운 마을 만들기 • 아동·청소년이 범죄 등 피해에 노출되기 어려운 마을 만들기
4-2. 육아지원 내실화	• 아동과 육아를 응원하는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
4-3.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에 대응	• 청소년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 의존증 대응 • 성폭속 관련 특수영업 단속 등 • 20세 미만 대상 주류, 담배 판매 금지 • 성인연령 하향 관련 대응
4-4.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 추진	• 일과 생활의 균형 • 원격근무 추진
4-5.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에의 투자	• SDGs 관점의 투자 • 휴면예금 활용에 의한 아동·청소년 지원

*출처: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2021.4.). 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全ての子供・若者が自らの居場所を得て、成長・活躍できる社会を目指して.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r03-taikou.pdf> 에서 2022년 4월 16일 인출.

○ 기본방침 5: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할 전문인력 양성·지원

교육·심리·복지 등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성인, 정책의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력을 양성·확보하고 연계·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Ⅲ-30. 기본방침 5(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할 전문인력 양성·지원)의 구체적 내용

기본방침	시책
5-1. 새로운 인력 확보	• 데이터 공유에 위한 새로운 인력 확보
5-2. 지역의 다양한 인력 양성·지원	• 민간협력자 확보 • 또래 상담·지원
5-3. 전문성 높은 인재 양성·확보·지원	•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지원인력 • 교사 자질능력 향상 • 학교상담체제 정비 •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 아동복지 전문가 • 사춘기 심리 관련 전문가 • 소년보호 및 비행소년 처우 관련 전문가
5-4.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인력 지원	• Child Youth Tech 추진 • 온라인 연수 등

*출처: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2021.4.). 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全ての子供・若者が自らの居場所を得て、成長・活躍できる社会を目指して.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r03-taikou.pdf> 에서 2022년 4월 16일 인출.

③ 정책추진체계 등

○ 정책 점검 및 평가

대강에 기초한 전체 시책의 점검, 평가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다양화, 과제의 복잡화·중층화, 고립·고독 문제, 웰빙의 관점 등을 고려하여 단일 지표나 몇 가지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층다양한 지표를 다음의 4가지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인덱스」로 설정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덱스는 아동·청소년백서에 수록하고, 가시화하여 「아동·청소년 인덱스 보드」를 작성하여 백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정책의 점검·평가는 정량 평가 뿐 아니라 정성 평가(기획·실시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관점의 반영, 담당자 의욕 고취 노력 등)도 실시한다.

표 III-31. 아동·청소년 인덱스 설정의 관점

영역	시책
아동·청소년 의식 관련 데이터	「아동·청소년의식조사(子供・若者意思調査)」⁴⁸⁾ 항목 중 자기긍정감·자기효능감, 도전정신, 장래에 대한 희망,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 등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관련 데이터	- 아동·청소년 자살자 수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수 - 등교거부 학생 수 - 고등학교 중퇴율 - 청년 니트, 프리터 비율 등
아동·청소년법에 명시된 계획·기관 등에 관한 데이터	- 지방공공단체의 아동·청소년계획의 수립 상황 - 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 아동·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관련 상담기관의 정비 상황
기타 법률에 근거한 기본계획·대책 등 아동·청소년육성지원에 관한 데이터	각 분야의 법률에 근거한 기본계획·대책 수립에 따른 아동·청소년육성지원 관련 지표 추출·정리

*출처: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2021.4.). 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全ての子供・若者が自らの居場所を得て、成長・活躍できる社会を目指して.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r03-taikou.pdf> 에서 2022년 4월 16일 인출.

○ 시책의 추진 등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정부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을 도모하며 지역 차원의 정책을 내실화한다. 본 대강은 대략 5년을 단위로 개정을 추진한다. 단, 예측불가능한 형태로 사회변화가 발생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정세, 정책동향 등에 따라 수시로 개정한다. 3년차에 해당하는 2023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정책적으로 관련성이 깊은 다른 대강 등의 개정 시기에 맞추는 방향으로 대강의 내용을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4.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정책과 해외정책 사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변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청소년정책이

48) 이 조사는 내각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 제17조(조사연구의 추진)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사는 전국단위의 조사이며, 조사대상은 13~29세 청소년이다(子供・若者意思調査. <https://www8.cao.go.jp/youth/kenkyu/ishiki/r01/pdf/s1.pdf> 에서 2022년 4월 20일 인출.)

지향해 온 바를 확인하였고, 생애주기 상 인접해 있는 아동정책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검토를 통해 중장기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를 얻었다. 해외정책 검토는 유엔과 유럽연합의 청소년전략의 검토를 통해 국제적인 큰 흐름을 파악하고, 이러한 기초가 개별 국가의 청소년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구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 최근 청소년포털을 새롭게 정비한 미국, 우리의 기본계획과 유사한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호주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 살펴본 국내외 정책 전략 및 계획을 비교 요약하여 <표 III-32>와 <표 III-33>에 제시하였다.

표 III-32. 국내정책 기본계획 비교

구분	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년정책기본계획
현행 계획	제2차(2020~2024)	제6차(2018~2022)	제1차(2021~2025)
수립 주기	5년	5년	5년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7조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청년기본법 제8조
적용 대상	18세 미만	9~24세	19~34세
심의 기구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청소년정책위원회	청년조정위원회
비전	아동이 행복한 나라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목표 또는 분야	• 아동 권리의 존중과 실현 •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 일자리 • 주거 • 교육 • 복지·문화 • 참여·권리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08; 2018.03; 2020.12)를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표 III -33. 해외 청소년정책 비교

구분	UN (2018.9.)	EU (2018.11.)	독일 (2019.12.)	프랑스 (2022.1.)	미국 (2021.8.)	일본 (2021.4.)
현행 전략	유스2030	EU 청소년전략	제3차 청소년전략	제4차 청소년정책계획	youth.gov (청소년프로그램 포털사이트)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대강
이행 기간	2018-2030 (4년마다 개정)	2019-2027	2019-2022	-	-	대략 5년 단위 개정 (3년차 중간점검 및 수정 보완)
적용 대상	15-24세를 포함하는 청소년	15-24세 (때로는 29세까지)	12-27세	15-29세	10-24세	30세 미만
비전 또는 목적	모든 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되는 세상, 모든 청소년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세상, 변화의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선택의지·화목력·긍정적인 기여가 인정받는 세상	민주적인 삶에 청소년 참여 촉진	공동의 책임 안에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에 의한 정치	자립지원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삶·학습·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연계·협력 추진	- 모든 청소년이 안심하고 활약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청소년이 성장, 활약할 수 있는 사회 구현
우선영역 또는 정책목표	- 연계, 참여, 옹호 - 교육 및 보건 기반 강화 -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경제 능력 강화 - 청소년과 인권	- EU와 청소년 연결 - 모든 성별의 평등 - 포용적 사회 - 정보 및 건설적인 대화 - 정신 건강 및 웰빙 - 농촌 청소년 지원	- 미래 세대간 소통, 청소년의 상 - 참여와 민주주의 - 도시와 국가, 생활과 문화 - 다양성과 참여 - 교육, 직업과	청소년 개인발전 참여와 청소년의 변화·참여 활성화	청소년 건강 등 총 29개 주제	- 모든 아동·청소년 간접 육성 - 위기 아동·청소년 및 가족 지원 - 창조적인 미래를 개척해 나갈 아동·청소년 응원

구분	UN (2018.9.)	EU (2018.11.)	독일 (2019.12.)	프랑스 (2022.1.)	미국	호주 (2021.8.)	일본 (2021.4.)
	• 평화와 회복력 증진	•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고용 • 양질의 학습 • 모두를 위한 공간과 참여 • 지속가능한 녹색 유럽 • 청소년 단체 및 유럽 프로그램	자기개발 • 교통과 디지털 • 환경 • 건강 • 유령과 세계	• 청소년 교육과 진로설정, 직업교육에 우선권 부여 • 일지리와 직업편의 향상화 • 자립과정에서 불평등 해소 • 삶의 질 개선		• 환경	•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 정비 •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지원

*출처: 본 장(章)의 제3절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진 작성.

국내·외 정책 분석을 통해 도출된 중장기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 강조

국내의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은 그들의 주도성과 권리, 참여가 강조되는 공통점이 있다. 아동·청소년이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가 아닌 현재의 권리주체로 존중받는 존재임을 명확히 한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청소년이 현재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기여하며, 모든 구성원이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청소년 주도성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에서도 재차 강조되고 있다.

해외사례에서는 참여에 있어서의 권한강화가 특히 강조되는 추세이다. 유엔은 권한강화와 참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수단이자 그 자체가 목표라고 하고 청소년을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의 결정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이므로 청소년의 참여는 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유럽연합은 청소년전략에서 청소년들의 의미 있는 시민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참여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EU 국가인 프랑스는 청소년정책계획에서 청소년이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은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인프라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누구나’ 다양한 관심과 목적을 위해 참여와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참여를 지지하는 데 있다. 호주 청소년정책 프레임워크 우선과제 영역에도 첫 번째 영역으로 권한강화와 참여가 명시되어 있다.

2) 자립 기반 마련

프랑스의 청소년정책계획은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자립을 위한 부처간 연계 정책이다. 자립 여건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립 기반을 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프랑스의 청소년정책계획은 수립 주거나 이행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청소년정책계획은 2013년, 2015년, 2020년, 2022년 네 차례

에 걸쳐 발표되었는데, 2020년과 2022년 계획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는 현행 청소년정책계획의 목표를 자립지원으로 설정하고, 1인 청소년 1개 솔루션 사업 등을 통해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고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기관과 기업 간에 협업을 공고히 하고, 실습생을 고용하는 기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1인 청소년 1개 솔루션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중이었던 2020년 7월에 발표되어 2년간 6억 5천 유로가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하다. 재난 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독일은 청소년의 6%가 가정 내에서 간병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이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간병인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17년에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네트워크를 설립한 바 있다. 호주도 청소년의 약 6%가 가정 내에서 무급으로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책임을 지고 있고, 원주민 청소년이 5%이며 해외 출생자 비율은 23%라고 보고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호주 청소년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소외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서약하였는데, 소외된 청소년의 범주로 원주민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농어촌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가족돌봄청소년, 시설이용 청소년, 소년원 수감 청소년, 노숙청소년, 장애청소년, 만성질환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위기청소년, 약물남용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니트(NEET) 청소년을 들고 있다. 중장기정책 수립 시 이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

국내 청소년정책은 주무부처가 변화해온 특징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던 제4차 계획 때는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하고자 시도하였고, 이후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로 바뀌면서 가족·여성정책과 연계를 지향한 바 있다. 이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무부처의 업무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의 청소년 프로그램 기관 간 실무그룹(IWGYF)이나 일본의 내각부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본부 사례처럼 관계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에서 시행중인 법이 청소년의 생활조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법 초안을 면밀히 조사하는 청소년체크는 수요자 중심 정책 수립에 참고할만하다.

5) 생애주기적 접근

청소년기를 아동기와 청년기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생애주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기구의 청소년전략과 각국의 청소년정책이 대상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이다. 유엔은 청소년에 대한 연령 정의가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각국도 연령 범위는 정책 또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미국 청소년정책은 생애주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청소년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고 정책적 투자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주제별로 대상을 △특별한 요구를 지닌 청소년집단,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청소년 관련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집단, △모든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기라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는 대상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투자 결과를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명하고, 객관적인 근거 기반의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 기획 및 운영에서 참고할 시사점을 제시한다.

6) 생활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지원

각국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위하여 교육, 고용, 안전, 건강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청소년의 생활세계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교육과 구직, 주거, 보건의원과 함께 휴가권까지 ‘권리’로 간주하면서 한 개인의 균형 있는 생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바로 시민사회의 의무이자 기회평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이 된다고 강조한다. 즉 청소년 세대를 위한 사회의 지원은 생활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구직지원, 문화활동지원, 휴가지원 등 한 개인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청소년·청년에게 1인당 300유로를 지급하는 프랑스의 문화패스 사업이나, 독일의 연방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소비자들의 재정능력을 키우기 위한 소비자센터 프로젝트 지원은 참고가 된다.

7) 중장기정책계획의 유연성 필요

국내의 청소년정책, 아동정책, 청년정책은 해당 법령에 근거를 두고 5년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이나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시행되던 2018~2022년에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방향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관계자들이 스스로 대안을 찾아 대응한 측면이 있었다.

한편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고, 프랑스와 호주는 수립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미국은 중앙집권적인 계획을 운영하지 않고 연방정부 각 부처의 설립·운영 목적에 맞게 조직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적 모델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부처의 이해관계, 산재한 프로그램의 비효율화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정책 유관 기관 및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체계화를 이룬 국가의 사례이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네 차례(2013년, 2015년, 2020년, 2022년)에 걸쳐 청소년정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중 두 차례는 코로나19 위기 중이었던 2020년과 2022년이었다. 프랑스는 이 기간에 청소년의 자립을 목표로 직업교육과 고용 안정성에 중점을 둔 정책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호주는 우리와 같은 형태의 정책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수립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2021년 8월에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인정하는 것을 첫 번째 정책목표로 삼았다. 일본의 경우도 중장기계획인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대강에 대략 5년 단위의 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2년 만에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외사례 검토 결과, 법령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여부와 주기를 정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였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위기 상황이나 필요한 상황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일본의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

진대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3년차에 중간점검을 통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간점검을 통해 예측불가능한 형태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사회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8) 체계적인 성과 관리

미국 청소년프로그램 기관 간 실무그룹(IWGYG)은 연방협력을 통해 수행한 활동이 어떻게 청소년 성과와 연결되는지를 나타내는 논리 모형을 개발하고, 성과를 중·단기 성과와 장기 성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유엔은 성과관리 도구로 스코어카드를 도입하여 유엔 기구와 유엔국가팀의 성과를 간략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지표는 5개 부문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고 빨강(준비), 노랑(진행), 초록(도달)의 3점 척도로 제시된다. 일본의 경우도 이전 계획까지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현행 계획에서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개인, 가족 및 친족, 학교, 직장, 지역사회, 인터넷 공간 등의 영역별로 세부지표(인덱스)를 설정하여 매년 발간되는 아동·청소년백서에 수록하고 인덱스보드로 가시화하고 공개한다. 아동·청소년 인덱스에는 아동·청소년 의식 관련 데이터,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관련 데이터, 아동·청소년법에 명시된 계획·기관 등에 관한 데이터, 기타 법률에 근거한 기본계획 및 대책 등 아동·청소년육성지원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된다.

한편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최상위 지표로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이 설정되어 있고, 각 정책 영역별로 2~5개의 주요지표가 설정되어 있다. 성과 관리는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제의 이행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향후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해당 정책 영역의 성과로 평가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과지표는 성과목표로부터 측정가능한 하위 목표들을 식별하고, 이를 평가가능한 형태로 담아내는 도구로써, 명확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원인성(attributable), 신뢰성(reliable), 적시성(timely)의 기준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단일 지표가 사업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는 없으므로, 한 측면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협의의 지표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1-2). 앞으로의 중장기정책계획에서는 이러한 기준에서 기존의 지표들을 재검토하고 신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 제4장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결과 분석

- 1.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의 개요
- 2.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 3. 전문가 대상 FGI 결과
- 4. 소결 및 시사점

1.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의 개요

중장기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수립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대상 조사는 델파이조사와 FGI의 2가지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1) 전문가 델파이조사 개요

(1) 조사목적 및 대상

델파이조사는 국가청소년정책의 비전, 기본방향, 정책목표, 추진전략, 주요과제 등에 대해 유관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했으며, 특히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수준의 중장기 청소년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정책목표 등을 도출하고자 하는 조사목적에 고려해 학계 전문가에 조금 더 가중을 두었다.

델파이조사에 참여할 패널 선정은 연구진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조사대상자 후보 Pool을 1차로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된 후보 Pool을 대상으로 연구진이 상호 반복 검토 및 논의를 거쳐 30명의 최종 패널을 선정하였다. 반복조사에 따른 패널의 중도 이탈을 방지하고자, 해당 전문가에게 연구진이 사전에 전화연락을 통해 연구취지와 목적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조사에서 총 30명을 섭외하였으며, 29명이 조사에 응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참여한 29명 중에서 2명(학계 전문가 1명, 현장 전문가 1명)이 개인사정으로 2차 조사에 응답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2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델파이조사는 당초 총 3회의 조사를 계획하였으나, 2차 조사만으로도

주요 결과가 도출되어 2차 조사에서 종료하였다.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델파이조사 패널 현황

분야	번호	이름	직위	전문분야
학계 전문가	1	방○○	교수	복지
	2	장○○	교수	활동, 참여
	3	유○○	교수	활동
	4	강○○	교수	활동
	5	정○○	교수	복지, 보호
	6	박○○	교수	복지, 참여
	7	주○○	교수	교육, 활동
	8	조○○	교수	사회, 문제행동
	9	허○○	교수	상담
	10	이○○ ¹⁾	교수	진로, 교육
	11	이○○	교수	상담
	12	박○○	교수	복지, 보호
	13	김○○	교수	활동
	14	김○	교수	문화, 참여, 활동
	15	김○○	교수	참여, 활동
	16	이○○	교수	활동, 참여
	17	김○○	교수	복지, 활동, 참여
	18	문○○	교수	활동, 복지
현장 전문가	19	김○○	청소년재단 대표	참여, 인권, 복지
	20	김○○	청소년분야 유관기관(협회) 임원	활동, 보호, 복지
	21	이○○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활동, 참여
	22	백○○	유스센터 센터장	활동, 참여
	23	정○○	청소년활동기관 소장	활동, 참여, 복지
	24	전○○ ¹⁾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본부장	활동
	25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상담, 보호, 복지
	26	이○○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센터장	활동, 시민
	27	황○○	청소년진로센터 센터장	직업, 진로
	28	김○○	청소년 관련 기관 위원	활동
	29	최○○	청소년 관련 센터 센터장	활동, 복지(학교 밖 청소년)

*주: 1) 1차 조사에는 참여했으나 2차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패널임.

(2)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그간 추진된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자료들과 관련 연구 문헌을 연구진이 검토·조사하여 조사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문항에 대해 연구진이 수차례 검토 및 협의의 회를 진행하였고, 최종 조사 내용을 합의하여 확정했다. 1차 조사의 조사 내용은 크게 △기존 정책의 추진 성과 및 평가, △향후 청소년정책 수립 관련 의견으로 대별할 수 있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연구진이 검토·협의하여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델파이조사의 주된 목적이 향후 추진될 국가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는 바, 기존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는 1차 조사까지만 포함하고 2차 조사부터는 향후 정책수립에 관한 내용에 집중하여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델파이 1차 조사 및 2차 조사의 내용 구성은 <표 IV-2>와 같다.

표 IV-2. 전문가 델파이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답변 방식
1차 조사	□ 기존 국가청소년정책(제6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의견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주요 추진 성과	• 주관식 기술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달성 수준과 판단 근거 - 정책 비전, 정책목표, 중점과제	• 객관식(평점 부여) • 주관식 기술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아쉬운 점 및 한계	• 주관식 기술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목표/중점과제 향후 추진 여부	• 객관식(선택)
	□ 중장기 국가청소년정책(제7차 기본계획 등) 수립에 대한 1차 의견	
	• 국가청소년정책 수립 시 사회환경변화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 주관식
	• 국가청소년정책 수립 시 강조해야 할 정책비전	• 주관식
	• 국가청소년정책 수립 시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 주관식
	• 국가청소년정책에 제안하고자 하는 중점과제	• 주관식
2차 조사	□ 중장기 국가청소년정책(제7차 기본계획 등) 수립에 대한 2차 의견	
	• 사회환경변화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중요도)	• 객관식
	• 국가청소년정책 수립 시 강조해야 할 정책비전(적절성)	• 객관식
	• 국가청소년정책 수립 시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중요성, 시급성)	• 객관식
	• 국가청소년정책에 제안하고자 하는 중점과제(중요성, 시급성)	• 객관식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전문가 델파이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조사는 2022년 5월 18일~27일까지 실시되었다.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 29명 전원이 조사 내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는 자기기입식 형태로 이루어졌다. 1차 응답결과는 연구진이 내용분석을 통해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반복 검토하여 재분류하였다. 1차 조사의 응답은 대부분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를 검토하여 유사 내용을 범주화하고, 해당 범주에 대해 빈도와 비율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2차 조사는 2022년 7월 1일~14일까지 진행되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류된 내용을 문항으로 제작하였고, 1차 조사와 동일하게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로 실시되었다. 1차 조사결과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 적절성, 시급성 등을 조사하였다.

표 IV-3. 델파이조사 방법

구분	조사기간 및 방법	주요 조사 내용
1차 델파이조사 (개방형/선택형)	2022.5.18.~5.27. - 전화연락 후 이메일 발송, 문자 안내 및 회신 - 총 29명 참여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 주요 추진 성과 - 비전, 정책목표, 중점과제의 달성 수준 평가 및 판단 근거 - 제6차 기본계획의 한계 및 아쉬운 점 - 제6차 기본계획 내용의 종료/유지/수정보완 관련 의견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관련 의견 - 사회 환경 변화 관련 우선 고려 사항 - 비전, 정책목표, 중점과제 관련 의견
2차 델파이조사 (개방형/선택형)	2022.7.1.~7.14. - 전화연락 후 이메일 발송, 문자 안내 및 회신 - 최종 27명 참여	※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구성 • 정책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회환경변화 • 정책수립 시 강조해야 할 정책비전, 정책목표 • 정책수립에 제안하고자 하는 중점과제

2차 조사는 객관식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응답 결과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등을 산출하였다. 또한 중앙값과 사분위수(1사분위, 3사분위) 값을 산출하여 수렴도, 합의도, CVR(내용타당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 시 활용한 내용타당도, 수렴도 및 합의도, 내용타당도(CVR) 산출 방식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표 IV-4.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기준

구분	공식	점수	유의미점수
합의도	$= 1 - \frac{(Q_3 - Q_1)}{Mdn}$	수렴 = 0	.05 이하
수렴도	$= \frac{Q_3 - Q_1}{2}$	합의 = 1	.75 이상
내용타당도 비율 (CVR)	$= \frac{n_e - \frac{N}{2}}{\frac{N}{2}}$	적절 = +1 부적절 = -1	.29 이상

* 출처: 조은별 외(2015). 45쪽 각주 1)~3)의 내용을 표로 제시함.

합의도와 수렴도의 공식에서 Q_3 , Q_1 변수는 제3사분위와 제1사분위의 계수로 각각 75%와 25%의 값이고, 수렴도의 분모 Mdn 변수는 중앙값을 의미한다. 수렴도 공식은 델파이 위원들의 의견이 한 점에 모두 수렴되었을 경우 0의 값을 가지며, 델파이 위원들의 의견의 편차가 벌어짐에 따라 수치가 커지는 특성을 보이고, 합의도 공식은 Q_1 과 Q_3 이 일치하여 완전히 합의되었을 경우 1의 값을 나타내며, 델파이 위원들의 의견의 편차가 벌어짐에 따라 수치가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는데, 합의도와 수렴도 결과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에 따르면 합의도는 .75 이상 수렴도는 .50 이하일 경우 델파이 위원들의 의견이 합의 및 수렴이 되었음을 규정하고 있다(조은별 외, 2015: 45-46).

내용타당도 공식에서의 η_e 변수는 '타당하다'고 응답한 델파이 위원들의 수를 의미하고 (조은별 외, 2015: 45), 본 연구에서의 η_e 변수는 Likert 5점 척도의 4번과 5번에 응답한 응답자의 인원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N 변수는 연구에 참여한 델파이 위원의 전체 인원수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총 27명이 참여하였다. 내용타당도 값은 +1.0(모든 평정자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부터 -1.0(모든 평정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의 범위로 값이 존재하며 .29 이상일 때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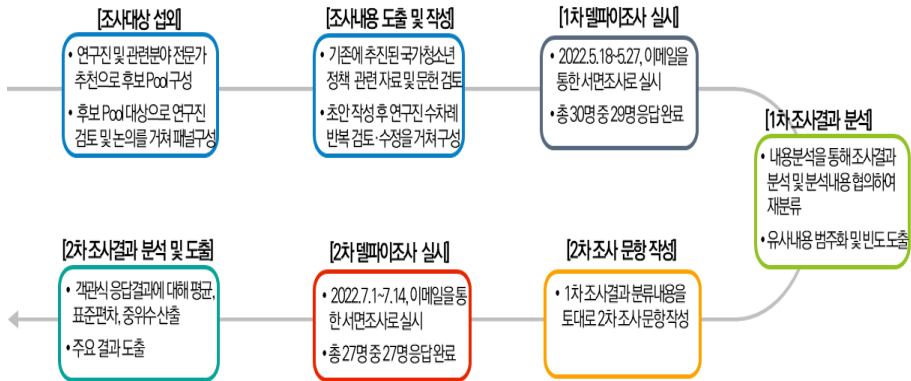


그림 IV-1. 전문가 델파이조사 추진 개요

2) 전문가 집단 면담조사(FGI) 개요

전문가 집단의 중의를 확인하는 델파이조사와는 별도로, 전문가 의견을 좀 더 깊이 있고 광범하게 파악하고자 FGI를 실시하였다. FGI에서는 최일선에서 청소년정책을 수요자들에게 전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주로 수렴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청소년정책에 관심과 열의를 갖고 추진하는 지자체의 의견을 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최근 2년 사이에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 중에서 참가자를 섭외하였다. 전문가 면담은 각 집단별로 1회씩 총 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모든 면담내용은 면담참여자의 동의를 구해 녹음한 뒤, 전사하였다.

면담내용은 △기존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국가청소년정책에 대한 기대와 수요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의 경우, 기존 정책의 성과 및 한계, 기존 정책 중 앞으로도 지속할 필요가 있는 정책, 기타 전반적 평가 의견을 주로 청취하였다. 향후 국가청소년정책에 대한 기대와 수요에서는 앞으로 추진될 중장기 정책의 비전, 정책목표, 정책영역 및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과제에 대한 의견을 주로 청취하였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 면담조사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담은 기본적으로 구조화 된 질문지를 토대로 면담을 진행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표 IV-5. 전문가 대상 FGI 참가자

1차 FGI	참가자	특성	2차 FGI	참가자	특성
현장 전문가	A1	• 청소년센터 관장	지자체 공무원	B1	• 서울 A구 아동청소년과 주무관
	A2	• 청소년진로센터 기획부장		B2	• 경북 B시 아동청소년과 팀장
	A3	• 여성청소년센터 관장		B3	• 경남 C군 교육청소년과 계장
	A4	• 청소년회관 관장		B4	• 경남 C군 청소년센터 센터장
				B5	• 전북 D군 교육아동복지과 주무관

2.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1) 1차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1: 기존 청소년정책의 성과 및 한계 평가

(1) 기존 청소년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1차 델파이조사 내용은 크게 ‘기존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와 ‘향후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먼저 ‘기존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평가 대상을 제시하기 위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① 전반적 평가

델파이조사 참여자들에게 기존 청소년정책(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성과에 대해 기술하도록 요청한 결과, 정책비전과 정책방향 등 전체적인 틀에 대해 6차 기본계획이 기존의 국가청소년정책과 연속성을 가지면서, 시대적 아젠다와 미래세대에 대한 인식에서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표 IV-6. 기존 청소년정책(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 평가 주요 내용

평가 주요 내용
☐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기본이념 제시 • 이전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기본이념 등을 이어왔다는 점 • 시기별 핵심 아젠다를 적절히 제시 • 미래세대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대우하면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인식 • 제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과 공유과정에서 청소년지도자, 정책전문가,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제안을 반영(기본계획 수립 TF 운영, 기본계획 공유포럼 개최 등) • 정책비전과 전략, 중점 추진과제의 연속성 및 지속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추진 체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반면에 기존 정책이 별다른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는 부정적 평가도 일부 제시되었다. 특히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추진 기간 동안 발생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정책추진 성과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내외적 위기상황에서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과 관련하여, 현장 청소년지도자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천력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제6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전문가 응답 결과를 영역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IV-2]의 영역별 성과 언급 빈도를 살펴보면,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가 15회로 비교적 많이 언급되었고,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에 관한 건수는 총 13건 제시되었다.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에 대한 언급은 8건으로 가장 적게 도출되었다. 개괄적으로 볼 때, 전문가들은 기존 제6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중에서 활동 정책, 보호·복지 정책에 비해 추진체계/인프라 개선 영역이 취약했던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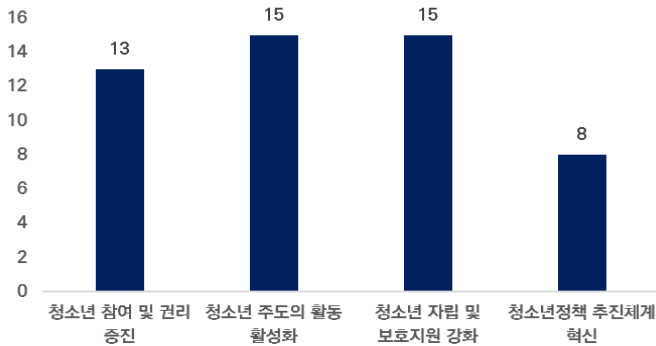


그림 IV-2. 기존 정책(6차 기본계획) 추진성과 영역별 언급 빈도 (단위: 건)

기존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점과제에서 ‘청소년 참여확대’의 성과를 언급한 회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정책목표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에 대한 추진 성과로 총 15건이 제기되었다. 중점과제별로는 ‘청소년 활동 및 성장 지원체계 혁신’이 총 8건으로 가장 많은 추진 성과로 꼽혔다. 성과로 언급된 내용들은 PBL운영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청소년활동 전환 노력, 청소년주도

활동으로 운영 방향 전환,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 운영 등이었다.

정책목표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에 대한 추진 성과는 총 15건이 제기되었다. 중점과제별로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응답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성과로 언급된 내용들은 청소년안전망 확대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청소년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지자체 전담 조직 구축과 통합지원, 사회안전망 보호기능 강화 등이 주를 이루었다.

네 번째로 정책목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에 대한 추진 성과는 총 8건이 제기되었다. 중점과제별로는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라는 언급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성과로 언급된 내용들은 관련 인프라 확충 내실화,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명시, 안정적 플랫폼 제공이었다. 그 다음은 중점과제 ‘지역 중심의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였는데 지자체별 청소년재단 출범, 국립시설 확충 및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확대 등 2건이 추진 성과로 언급되었다.

표 IV-7. 기존 정책(제6차 기본계획) 영역별 주요 추진성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정책목표	중점과제	추진 성과 세부 내용	빈도 (건)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총 13건)	청소년 참여 확대	• 정책 의사결정 및 평가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기회 확대 • 청소년 참여 확대 -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는 부정적 시각 개선 - 청소년참여위원회 포함 참여기구 활성화되어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변화 - 청소년 참여예산제, 청소년의회 등 청소년 사회참여 성과 • 청소년 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 • 청소년들의 자발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 •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 참여(2019년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통해 2020년부터 청소년 위원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정책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 • 공공기관 이사회에 청소년이사 위촉 등 청소년 참여 확대와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조성 성과 • 학교에서 참여 및 권익증진(선거권, 학교레 개정,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제시한 정책안 채택 등)	8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 청소년 인권 및 권리의식 제고(이전 비전보다 하나의 비전이 더 추가되어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을 존중하겠다, 그들의 권리를 신장시켜주겠다는 의지 포함)	1

정책목표	중점과제	추진 성과 세부 내용	빈도 (건)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 성장 지원 정책 수립과 실천활동이 이루어지는 계기 제공 • 만 18세 청소년 선거권, 참정권 확대를 통한 청소년 참여 확대 • 2019.12.27.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되어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에 이어 피선거권까지 권리행사 가능	3
	전체	• 참여, 권리의 가치 제고	1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총 15건)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 PBL운영을 통해 청소년주도 활동 강화 • 디지털 청소년활동 전환을 위한 노력 • 시대 변화에 따라 청소년 성장과 지원을 위한 방향과 중점과제 수립 • 제4차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청소년 정책현장의 실천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인식 • 활동 중심 성장체계 제고 •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 청소년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활동의 형태로 전환 • 청소년 주도의 활동 방향 제시 • 청소년정책 현장에서 “청소년주도”의 중요성 인식 확산 -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청소년활동이 다양하게 운영됨으로써 지역 문제해결하는 기능적 역할 수행 특히 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전문성과 위상을 일리는 데 기여	8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 증진 •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 각 지자체에서 청소년 주도 축제 기획, 환경보고, 정책참여 등 추진하여 청소년주도 활성화에 대한 인식 향상	3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 청소년수련시설 및 활동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진로활동 지원 • 진로교육의 필요성 인식, 청소년 대상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현장 확산 •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강화	3
	전체	• 청소년주도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1
	청소년 사회 안전망 확충	• 청소년안전망 확대를 통해 위기청소년을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 • 청소년안전망 시범운영 등 지자체별 사업을 시행하여 청소년자립 및 보호기능강화의 시스템을 갖추고자 노력함. • 청소년안전망 확대와 대상별 지원(특히,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 강화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이 시·군·구내에 전담 조직을 두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한 주요 기능 수행 •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를 통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 안전망과 보호에 대한 기본전략과 과제	6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15건)	대상별 맞춤형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상담, 교육, 진로 등에 관련된 통합서비스 제공 •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센터의 안정화	5

정책목표	중점과제	추진 성과 세부 내용	빈도 (건)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와 관련 예산 증가 - 학교 밖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참여 청소년들에 대한 현실적인 서비스 지원은 확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지원 강화	- 코로나19, 자살, 폭력 등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예방 및 긴급위기 대응체계 운영의 부분적 성과 - 코로나19 방역물품 및 심리적 지원	2
	전체	-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정책 사업의 수와 예산 증가 -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증가	2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8건)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강화	- 관련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 주요 영역 체계 재확립과 시대적 요구에 맞는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명시 - 안정적 플랫폼 제공	3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 지자체별 청소년재단이 출범하여 고유사업 추진 -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 국립영남청소년디딤센터의 신설,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확충 등	2
	청소년 지도자 역량제고	- 비대면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연수 실시 - 청소년 지도자 역량 제고	2
	전체	정책비전과 전략, 중점 추진과제의 연속성 및 지속성을 바탕으로 정책추진 체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정책 추진역량 제고)	1

(2) 정책비전 달성 수준

제6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비전(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의 달성 수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10점 만점으로 평가 점수를 부여할 때, 평균 5.3점의 점수가 도출되어, ‘중간 정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응답자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현장전문가들은 평균 5.9점으로, 학계 전문가(4.9점)보다 정책비전 달성 수준을 다소 높게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응답이 하위 점수에 분포하고 상위 점수에는 부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책비전 달성 수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8. 제6차 기본계획 정책비전 달성 수준에 대한 평가

구분	점수	1	2	3	4	5	6	7	8	9	10	평균 (표준편차) (점)
	빈도 (명)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전체	29	3.4	3.4	3.4	13.8	34.5	17.2	17.2	6.9	0.0	0.0	5.3 (1.62)
전문가 유형	학계	18	5.6	0.0	5.6	16.7	44.4	16.7	11.1	0.0	0.0	4.9 (1.41)
	현장	11	0.0	9.1	0.0	9.1	18.2	18.2	27.3	18.2	0.0	5.9 (1.89)

제6차 기본계획의 정책비전 달성 수준에 대해 위와 같이 평가한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표 IV-9. 제6차 기본계획 정책비전의 달성 수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

평가	판단 근거
긍정적 평가 의견	• 청소년 자립 및 보호 노력 향상 • 활동과 참여의 기회 확대 • 청소년 현장에서 '미래와 존중'이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노력과 성과 • 청소년주도 활동이나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 • 정책위원회 청소년 위원 참여를 통한 청소년 존중
부정적 평가 의견	• 코로나 위기로 학교 및 일상생활의 변화가 발생하고, 청소년이 진로, 일상생활에 부적응,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함.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 희망 갖기 어려움. • 한국의 입시제도로 인해 청소년들이 현재 즐기기 어렵고, 미래 준비하는 데 시간적 여유 없음. •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으로 미존중 • 청소년 행복, 여가, 사회적 인지도 제고 개선 안됨. •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 증가하였지만 충분하지 않음. • 청소년활동에서 청소년과 부모들의 인식의 한계로 청소년기관 이용, 참여 확산되지 않음. • 청소년 전문가의 역량개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 자립, 청소년 권리보장 측면에서 미흡 • 실제 정책이 현장에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코로나19로 생존하기 어려움과 각종 청소년 비행과 범죄, 기초학력 격차 심화 등으로 청소년 현실이 나아지지 않음.

(3) 정책목표의 달성 수준

6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4대 정책목표의 달성 수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 의견은 아래와 같다.

① 정책목표 1(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달성 수준 평가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첫 번째 정책목표인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의 달성 수준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3.3점의 점수를 부여해,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우수’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가 각각 34.5%, 10.3%로 긍정적 평가는 44.8%였다. 반면에 ‘미흡’과 ‘매우미흡하다’는 평가는 각각 6.9%, 13.8%로 부정적 평가는 20.7%였다. ‘보통’이라는 평가는 34.5%였다.

표 IV-10. 정책목표 1(‘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의 달성 수준 평가

구분		사례수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균 (표준편차) (점)
		빈도(명)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9	6.9	13.8	34.5	34.5	10.3	3.3(1.04)
전문가 유형	학계	18	5.6	11.1	38.9	38.9	5.6	3.3(0.93)
	현장	11	9.1	18.2	27.3	27.3	18.2	3.3(1.34)

정책목표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의 달성 수준 평가에 대한 주요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이 있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지난 수년간 이루어낸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피선거권 확대, 정책위원회와 참여기구에 의사결정권 확대,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시 등의 제도적 변화가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목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실질적’으로 청소년 참여 및 권리가 확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도 있었다. 세부사업별 정책 및 예산 확보 등이 주된 근거였는데, 예컨대, 참여예산제 등에서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과 참여의 질적인 수준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또한 단순히 청소년시설이나 제도적 차원의 참여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로 청소년 참여 및 권리가 확대되어 일상적, 보편적으로 청소년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IV-11. 정책목표 1(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달성 수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

평가	판단 근거
긍정적 평가	• 의사결정과정과 평가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기회 확대 - 선거권 만 18세 연령 하향, 피선거권 확대 - 학교 및 청소년기관에서의 운영위원회 증가,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의회 등의 참여기회 증가 • 청소년 의견이 정책수립에 반영되는 사례 증가 • 유튜브 및 SNS에서의 청소년 참여 및 파워 향상 • 청소년 참여포털 시스템 개편을 통해 청소년정책 참여 활동의 접근성 향상 •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 및 개입 노력 • 청소년 인권 및 권리의식 향상 • 청소년기관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지원 활동 증가 • 참여위원과 예산심의위원회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 위원회 구성 • 청소년 인권과 권리 향상, 근로 권익 확대 노력 • 정책 수용률 증가 • 청소년 참여활동 모델 사업 추진 • 청소년참여와 권리 증진이라는 관점이 안정적인 이슈로 자리잡음.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시설별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대체적으로 촘촘히 운영 • 정책위원회에 청소년 위원 참여하는 계기 마련 • 지자체 중심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청소년 자치 및 참여에 대한 관심 증가 •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소규모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참여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청소년이사제 등 실행 • 참여기구 중심의 참여제도나 공모 등을 통한 참여활동 지원, 참여예산제 정책참여 중심으로 개선 노력 확대
부정적 평가	• 참여예산제 등의 추진 실적 미흡 •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음. 청소년들의 참여도 질적인 면에서 좋아졌다고 볼 수 없음. • 지자체 수준에서 청소년 참여나 의견반영 등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음. • 학생인권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음. • 각 세부사업별 정책들을 보면 이루어진 것이 거의 대부분 없으며 청소년의 의식 정도 변화 거의 없음. 양성평등 의식도 정치권의 영향으로 갈등 심화 • 실질적인 청소년참여와 권리증진 확산을 위한 사업 미비 • 예산부터 관련 정책들이 확장되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오히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평가	판단 근거
	특별회의를 연결시킴으로써 지역에서 참여활동이 더 어려워짐. •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학생부 기록 배제 조치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위축 • 대표자 중심의 참여가 아닌 모든 청소년의 일상적, 보편적 참여를 위한 대안마련을 위한 개선 조치 필요 • 청소년활동 시설 참여가 지역사회 확대로 이어지지 못함.

② 정책목표 2(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달성 수준 평가

6차 기본계획의 두 번째 정책목표인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달성 수준에 대한 평정 결과와 판단 근거가 아래 <표 IV-12>와 <표 IV-13>에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객관적으로 부여한 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평균 2.8점으로 ‘보통’ 수준을 하회하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응답 결과, ‘매우 우수’하다는 응답은 전무하였고, ‘우수’하다는 평가는 27.6%였다. 반면에 ‘미흡’과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는 각각 24.1%, 10.3%로 부정적 평가는 34.4%였다. ‘보통’이라는 평가는 37.9%였다.

표 IV-12. 정책목표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달성 수준 평가

구분		사례수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균 (표준편차) (점)
		빈도(명)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9	10.3	24.1	37.9	27.6	0.0	2.8(0.76)
전문가 유형	학계	18	11.1	22.2	44.4	22.2	0.0	2.8(0.65)
	현장	11	9.1	27.3	27.3	36.4	0.0	2.9(0.96)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이러한 판단의 기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축소·제한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위기상황에 대비한 준비도가 부족했고, 청소년 주도 활동이 이념적 측면에 국한되어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컸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생활권 활동이 비대면 위주로 제한되고, 자연권 및 각종 청소년체험 활동이 진행되지 못했다. 더욱이 정부 타 부처와의 연계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로·동아리봉사 및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 이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어, 청소년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도 해당 정책

목표 추진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주된 이유로 파악된다. 그 밖에 추진해오던 각종 청소년 인증활동이나 자치기구 활동도 청소년 주도성에 기반하기보다는 시설에서 주도하는 이벤트성 사업으로 운영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반면에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청소년 주도 활동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진로와 직업, 동아리 활동, 자기주도 봉사활동, PBL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지자체에서 청소년 주도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한편, 코로나19가 청소년활동을 위축시킨 측면도 있지만, 비대면 활동을 촉진하여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기반 활동(메타버스, 화상회의서비스 활용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주도 활동이 증가하였고, 미디어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파워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표 IV-13. 정책목표 2(‘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의 달성 수준을 평가한 판단 근거

평가	판단 근거
긍정적 평가	• 청소년 주도 활동에 대한 인식 향상 - 청소년기관 운영위원회, 학교 학생회, 교내외 동아리 활동 등 • 미디어를 활용한 청소년 주도 활동이 증가하고 파워 인플루언서 증가 • 4차산업혁명시대 요구하는 역량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지원 • 청소년동아리 활동 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 • 청소년 진로와 직업을 중심으로 대체로 활발한 활동과 지원 • 각 지자체별 청소년주도 활성화 위해 노력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성과 • 생활권 중심으로 청소년 동아리 중심 주도적 활동이 활발히 진행 •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 기반 활동(예 ; 메타버스, 제페토, 줌 교육 등) 도입되며 다양한 활동 방식에 대한 접목 • 청소년 의견반영 항목 등 청소년센터 평가체계에 반영을 통해 주도적 활동 운영시스템 구축 • 청소년 참여활동 공모사업 등을 통한 청소년 중심의 활동프로그램 개발 노력 • 자기주도 봉사활동, PBL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한 확대 • 미래교육의 방향 중 학생주도, 삶과 연결된 교육이라는 주제가 강조되면서 학교와 지역에서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부정적 평가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체계 전환되고 교외 동아리활동, 외부 봉사활동 등 전반적인 청소년활동 분야에서 위축, 한계점 봉착 -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년 취업 지원 기반 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의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움. - 타정부부처와의 협력사업으로 전개하는 정책아젠다들이 많았으나 그러한 성과를 잘 일궈내지 못함.

평가	판단 근거
	- 청소년체험활동(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교류활동, 진로활동 등)은 현장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 청소년활동에서 청소년주도성이 높아졌다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기반 실천 부족 • 중고생들의 청소년 활동 참여 여건이 미확보, 충분한 유인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청소년정책의 문제 • 청소년 활동정책 위축되어 정책적인 지원체계, 발전체계가 미작동 • 청소년주도 활동 활성화의 노력에 비해 제6차 청소년정책의 방향에 맞는 변화가 실제 현장에 나타나지 않음. • PBL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확산에 한계, 청소년주도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미추진 • 청소년정책의 본류에 가까운 활동 분야 이슈 아젠다, 국민적 관심 등을 이끌어내는데 미흡 • 청소년단체 활동 축소와 자연권 시설의 지속적 약화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 확인 어려움. •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종합시설로의 기능과 역할 수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여성가족부 중심의 진로교육지원체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맞춤형 진로활동도 내실화되어 있지않음. 후기청소년 관점에서 청년 취업지원 및 청년 창업활성화 역시 선언적 구호로 그치고 있음. • 학교 중심 청소년단체활동이 학교에서 퇴출되고, 단위의 청소년단체활동 매우 퇴보함.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건수와 관계없이 현장의 체감은 매우 떨어지고 있고(평가 받기 위한 수단으로써 접근) 청소년 주도라기 보다는 대부분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도자나 전문가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짐. 특히 청소년 자치기구의 활동이 청소년시설에서 조직보다는 프로그램과 이벤트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짐. • 여성가족부 외 정부부처와의 연계 협력체계 미작동함. 예컨대, 교육부 내 청소년 활동이 제외되고, 진로교육 지원 체계 부처 간 미연계 •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에 비해 사회적, 정책적 인식, 실제적인 재정지원 등 정책기반 성과 제고 필요

③ 정책목표 3(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달성 수준 평가

다음으로, 정책목표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달성 수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평정 점수는 평균 3.3점으로, ‘보통’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가 각각 41.4%, 6.9%로 긍정적 평가는 48.3%로 나타났고, ‘미흡’과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는 각각 17.2%, 3.4%로 부정적 평가는 20.6%에 머물러,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표 IV-14. 정책목표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의 달성 수준 평가

구분		사례수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균 (표준편차) (점)
		빈도(명)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9	3.4	17.2	31.0	41.4	6.9	3.3(0.95)
전문가 유형	학계	18	5.6	22.2	22.2	50.0	0.0	3.2(0.96)
	현장	11	0.0	9.1	45.5	27.3	18.2	3.5(0.97)

위와 같이 평정한 주요 판단 근거로는 제6차 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청소년보호 및 복지 영역에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이 꼽은 긍정적 성과는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위기청소년 통합서비스 제공’이었다. 또한 청소년쉼터 확대 및 자립지원관 설립, 회복지원시설 확대도 추진 성과로 언급되었다. 아울러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청소년부모 자립 지원강화,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 쉼터 입소 청소년 지원 강화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부재, 각종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할 전문인력 부족, 안전망 시설 및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 지원 부실, 소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 미흡 등도 주요 부정적 평가 내용이었다.

표 IV-15. 정책목표 3(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달성 수준에 대한 판단 근거

평가	판단 근거
긍정적 평가 의견	• 청소년자립지원관 설립 증가 및 운영 •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안전망 사업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추진 •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청소년자립과 보호 지원 노력 확대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보호지원 사업 질적, 양적 성장 • 청소년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확보 노력과 창구 마련 • 상담복지센터, 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등 서비스 확장과 운영시스템 구축 • 법률과 정책 수정, 보완

평가	판단 근거
	•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등 맞춤형사업 실시 • 청소년쉼터 확대, 자립지원관 관련 사업 진행 • 가출청소년의 개념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쉼터 입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각 시설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보호 등 맞춤형 지원 노력 • 아름다운재단에서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문제를 이슈화하고, 자립 지원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이슈를 적절하게 제기 • 청소년부모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등 다양한 처지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부정적 평가 의견	• 타 부처인 복지부 자립 지원에 비해 청소년 자립 지원 부족 • 청소년자립 및 보호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부족 • 청소년 쉼터 및 양육시설 퇴소 후 갈 곳 없는 '절벽 끝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보호망 부족 • 현재의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의 운영 구조 비합리적으로 지속적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일자리 안정성 및 처우 열악 • 소년원 출원생 가운데 보육원 출신 청소년은 소년원 생활 기간이 인정받지 못해 자립지원금을 받지 못함. • 청소년 성착취의 주된 원인인 랜덤 채팅앱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인공지능 등의 사업 미진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쏠림현상으로 다양한 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발굴이나 사업개발 미집행 •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청소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중독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의문 제기 •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호소문제에 대응할 전문인력 부족 • 다양하고 위급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재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에 대한 대폭 수정 필요. N번방 등 청소년 피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소년정책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평가 필요, 계획 및 정책이 매우 경직되어있음. • 유해환경에 대한 예측과 선제적 대응체제 개선 필요 • 후기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업과정 지원 필요

④ 정책목표 4(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달성 수준 평가

정책목표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달성 수준에 대한 평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은 그간 추진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2.4점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는 전혀 없었고, ‘우수’하다는 평가는 6.9%에 불과한 반면, ‘미흡’과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는 각각 48.3%, 10.3%로 부정적 평가가 58.6%에 달했다. ‘보통’이라는 반응은 34.5%였다.

표 IV-16. 정책목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달성 수준 평가

구분		사례수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균 (점)
		빈도(명)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9	10.3	48.3	34.5	6.9	0.0	2.4
전문가 유형	학계	18	11.1	50.0	38.9	0.0	0.0	2.3
	현장	11	9.1	45.5	27.3	18.2	0.0	2.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이유도 다양했다. 제6차 기본계획의 내용이 이전과 차별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내용은 제5차 기본계획보다 더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성과로 할만한 대표적 성과가 부재하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부정적인 평가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중앙부처 차원에서 청소년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체감하기 어려웠고, 유관부처와 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정책 홍보도 미흡했다고 보았다.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에서 중앙과 지자체, 지역중심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도 부정적인 평가 근거로 제기되었다.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차원에서 지도사 자격검정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일부 긍정적인 평가 의견으로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다양한 청소년정책 기구 중심 추진체계 안정화 등이 언급되었으나,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표 IV-17. 정책목표 4(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달성 수준에 대한 판단 근거

평가	판단 근거
긍정적 평가 의견	•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실시 • 지도자 전문 연수 시스템 확대 구축 등 다양한 양질의 교육으로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 다양한 청소년정책 기구를 중심으로 추진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
부정적 평가 의견	• 청소년정책 분야 추진체계 혁신 필요 - 중앙정부의 추진체계 중복 및 경계 모호 -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체계의 효율적 운영 미흡 - 중첩된 추진체계 통합 및 정리 필요 - 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이 지방정부로 강력히 전달되지 못함.

평가	판단 근거
	• 청소년전담부처인 여가부 명칭(‘청소년’명칭 포함) 변경 미시행 • 청소년정책담당부처에서 청소년정책이 잔여적으로 머무는 성향이 있었으며 지자체의 점진적 노력은 있으나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부족 및 지역 간 청소년정책의 편차 발생 • 전문인력(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미흡 •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미흡 - 지도자 역량제고 교육 및 자격제도를 개선 미흡(지도사 자격검정과목 현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과목 유지, 청소년현장실습 없이 자격증 취득 가능) • 지역중심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미흡 - 지역중심 정책 추진 시 각각의 청소년기관의 전문성을 담지 못함. - 지자체 청소년 환경 특성에 맞는 추진체계 수립과 이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배치 확대 및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 내실화 미흡 - 지역에서 청소년정책 유관기관들 간 폭넓은 연계협력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함. - 각 시군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여, 일선 기관과의 혼선 존재 - 지자체의 청소년관할부처에서도 체계적인 업무추진 부족 • 「청소년정책위원회」기능 및 위상 강화, 가족정책 연계를 통한 종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 청소년정책 위상 강화,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등 전반적 미비 • 청소년활동 분야의 경우 지역 활동진흥센터와 지역시설 간 유기적 관계 구축, 국립 자연권시설과 지역 자연권시설 간 지원체계 구축 실패 • 청소년활동진흥원의 경우 청소년활동정책의 중심으로써 지원체계를 구성하기보다는 단순 사업의 수행단위 역할에 그침. •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 실질적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예산이 축소됨. •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 미흡 • 청소년정책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음. • 청소년기본계획 자체가 정부합동 계획임에도 계획 및 실행 평가단계에서 여성가족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 • 안전 이슈와 인증제 등에만 편중된 정책 추진체계 혁신 필요 • 청소년 중심 정책융합 수준의 적극성, 기초지자체 및 생활중심의 지역 청소년 정책역량 개선 필요

(4) 기존 정책의 한계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기존 국가청소년정책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제기된 내용으로는 첫째, 새로운 정책 변화를 제시하거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는 기능이 미흡했고, 둘째, 청소년정책 비전공유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연계·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셋째, 주무부처의 청소년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력이 충분하지 못했고, 넷째,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운영에 미숙한 측면이 있었으며, 다섯째, 코로나19 등의 사회변화에 대응한 정책 유연성도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책목표(영역)별로 제시된 한계점으로는 먼저 ‘참여 및 권리’ 영역에서는 청소년 참여가 단순 참여기구나 프로그램 운영 등과 차별화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고, ‘활동’ 영역에서는 청소년활동 정책의 퇴보와 수동적 대응의 문제점이 언급되었다.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영역에서는 일부 정책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실행 측면에서의 한계, 청소년 비행 및 범죄 대응, 취약소외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서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진체계/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여타 영역에 비해 더 많은 한계점들이 지적되었다.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미비, 주무부처의 총괄기능 미흡, 정책 추진체계 혁신을 위한 노력 부족, 코로나 시기에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미흡, 수련시설 평가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표 IV-18. 기존 국가청소년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

영역	아쉬운 점 또는 한계와 그 이유
총론(전체)	• 새로운 정책 변화 제시 부족, 시대적 흐름 파악 미제시 - 이전 정책에 비해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개혁적인 정책 없음. - 제5차 기본계획의 기본 틀과 다르지 않고,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여 제시하지 못함. • 정책의 비전 공유와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연계·협력 미흡 - 제6차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관련해서 정책현장 실무자들과의 비전공유 부족, 그로 인한 정책현장 실무자들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도 부족, 현장 협조 부족 • 청소년 사업 현장 및 지역사회의 폭넓은 관심, 이해를 끌어내지 못함. • 정책계획 추진 시 현장과 학계의 의견 수렴, 정부부처별 논의 불충분. 특히, 학교현장과의 긴밀한 연계와 협조 필요 • 주무 부처의 청소년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력 부족 - 정치적 이슈에 따른 한계, 여성가족부 정책 사업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 확산 부족,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전반에서 실행 미흡 - 계획은 비교적 잘 세웠지만 코로나와 여성가족부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동력이 약화됨. - 주무 부처의 소극적 관심 및 추진으로 전반적인 정책 이행 부족 • 청소년정책 수립 및 운영 미숙 - 4대 중점목표를 참여, 활동, 보호, 추진체계로 나누어 청소년 정책을 영역별로

영역	아쉬운 점 또는 한계와 그 이유
	접근하면서 다각적인 지원이 어려웠음. - 하위 목표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단계별 목표도 미흡함.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내용이나 자료 부족, 전문가와 실천가의 참여 부족 - 전반적으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 정책이 지향점을 잘 반영함. 다만, 문서 상의 계획을 넘어 정책 변화, 현장의 변화, 구성원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음. - 계획은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나, 실제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예산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음. 예컨대,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일부 지역 외에 시행되지 않음. •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정책 유연성 부족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참여기구 중심이거나 프로그램처럼 운영된 점에서 차별화되지 못함. • 이전보다 청소년 참여와 권리 영역은 퇴보한 것으로 보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청소년정책 활성화 기반에 대한 정책 부재, 현행 유지에 중심을 둠. -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운영비 증가 등의 정책 미흡 • 활동 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 •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청소년활동과 상담복지 정책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음. 전염병의 시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상쳐 있는 청소년의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소년 시설이 문을 닫는 등 매우 수동적으로 움직였음.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 청소년보호 복지는 일부 진전을 보임. • 청소년안전망의 공공성 강화에서 지자체 공무원조직으로 실행되는 것의 한계 • 청소년 비행 및 범죄에 대한 상응 대처 미비 • 취약 및 소외 청소년계층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비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확보 및 처우 개선 미비 • 청소년정책은 부처 간 협치가 필요한데 실행단계에서 총괄 기능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주도하지 못하는 한계 •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에 대한 체감이 낮음. • 청소년 삶의 현장에서 관련 정책이 어떻게 실행하였는지에 대한 데이터와 검증 부족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을 위한 의지와 노력 부족 •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체계 개선 필요 • 코로나19 같은 상황에 대한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미비 •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운영비 증가 등의 정책 미흡

(5) 기존 정책의 향후 추진 여부

다음으로, 기존 청소년정책(제6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과제를 대상으로 향후 종료, 유지, 수정·보완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의견을 조사하였다.

① 정책목표 1(청소년참여 및 권리증진) 관련 중점과제 지속 여부

‘청소년참여 및 권리증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포함된 3개 중점과제에 대해 각각 지속 여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참여확대’에 대해 전체적으로 ‘유지’ 의견이 72.4%로 가장 많았다. ‘수정·보완’에 대한 의견은 27.6%였고, ‘종료’ 의견은 전혀 없었다. 대상별로는 ‘유지’ 의견에서 현장 전문가가 81.8%로 학계 전문가 66.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중점과제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유지’ 의견이 69.0%, ‘수정·보완’ 27.6%, ‘종료’ 3.4%로 조사되었다. 중점과제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유지’ 의견이 58.6%로 도출되었고, ‘수정·보완’ 41.4%, ‘종료’ 의견은 0.0%로 파악되었다.

표 IV-19. ‘청소년참여 및 권리 증진’ 관련 중점과제의 향후 추진 여부

중점과제	구분		사례수	종료	유지	수정·보완
			빈도(명)	비율(%)	비율(%)	비율(%)
청소년 참여확대	전체		29	0.0	72.4	27.6
	전문가 유형	학계	18	0.0	66.7	33.3
		현장	11	0.0	81.8	18.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전체		29	3.4	69.0	27.6
	전문가 유형	학계	18	0.0	61.1	38.9
		현장	11	9.1	81.8	9.1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전체		29	0.0	58.6	41.4
	전문가 유형	학계	18	0.0	55.6	44.4
		현장	11	0.0	63.6	36.4

② 정책목표 2(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관련 중점과제 지속 여부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포함된 3개 중점과제에 대해 각각 지속 여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에 대해 전체적으로 ‘유지’ 의견이 62.1%로 우세하였고, ‘수정·보완’ 37.9%, ‘종료’ 0.0%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 중점과제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의 경우, 전체적으로 ‘유지’ 의견이 65.5%로 우세했고, ‘수정·보완’ 34.5%, ‘종료’ 의견은 0.0%로 파악되었다. 세 번째 중점과제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제 강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정·보완’ 의견이 65.5%로 가장

많았고, ‘유지’ 의견도 31.0%로 높게 나타났으나 ‘종료’ 의견은 3.4%에 불과했다. 기존 정책 중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은 향후에도 지속하면서 일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제 강화’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파악된다.

표 IV-20.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관련 중점과제의 향후 추진 여부

중점과제	구분		사례수	종료	유지	수정·보완
			빈도(명)	비율(%)	비율(%)	비율(%)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전체		29	0.0	62.1	37.9
	전문가 유형	학계	18	0.0	66.7	33.3
		현장	11	0.0	54.5	45.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전체		29	0.0	65.5	34.5
	전문가 유형	학계	18	0.0	72.2	27.8
		현장	11	0.0	54.5	45.5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제 강화	전체		29	3.4	31.0	65.5
	전문가 유형	학계	18	0.0	38.9	61.1
		현장	11	9.1	18.2	72.7

③ 정책목표 3(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관련 중점과제 지속 여부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에 속하는 3개의 중점과제에 대해 각각 향후 지속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중점과제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유지’ 69.0%, ‘수정·보완’ 31.0%로 파악되었다. ‘종료’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두 번째 중점과제 ‘대상별 맞춤형 지원’의 경우에는 ‘유지’ 69.0%, ‘수정·보완’ 31.0%로 파악되었고, 역시 ‘종료’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세 번째 중점과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유지’ 의견이 51.7%로 가장 많았고, ‘수정·보완’은 44.8%로 나타난 반면, ‘종료’ 의견은 3.4%에 불과했다.

종합해보면, 그간 추진된 청소년보호·복지 정책에서 설정한 과제 방향, 즉 사회안전망 확충, 대상별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정책 수립 시, 그간 도출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표 IV-21.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관련 중점과제의 향후 추진 여부

중점과제	구분		사례수	종료	유지	수정·보완
			빈도(명)	비율(%)	비율(%)	비율(%)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전체		29	0.0	69.0	31.0
	전문가 유형	학계	18	0.0	61.1	38.9
		현장	11	0.0	81.8	18.2
대상별 맞춤형 지원	전체		29	0.0	69.0	31.0
	전문가 유형	학계	18	0.0	66.7	33.3
		현장	11	0.0	72.7	27.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전체		29	3.4	51.7	44.8
	전문가 유형	학계	18	0.0	44.4	55.6
		현장	11	9.1	63.6	27.3

④ 정책목표 4(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관련 중점과제 지속 여부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영역에 속하는 3개 중점과제에 대해 각각 향후 지속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중점과제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정·보완' 의견이 82.8%로 나타나, 기존대로 유지(17.2%)하기보다는 대폭 수정·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 중점과제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경우에는 '수정·보완' 의견이 58.6%로 과반을 차지했고, '유지' 37.9%, '종료' 3.4%로 파악되었다. 세 번째 중점과제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는 '수정·보완' 의견이 51.7%로 우세했고, '유지' 48.3%, '종료'는 0.0%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과 관련하여,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는 수정·보완하여 유지하자는 의견이 주종을 이루며,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대폭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V-22.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관련 중점과제의 향후 추진 여부

중점과제	구분		사례수	종료	유지	수정·보완
			빈도(명)	비율(%)	비율(%)	비율(%)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전체		29	0.0	17.2	82.8
	전문가 유형	학계	18	0.0	16.7	83.3
		현장	11	0.0	18.2	81.8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전체		29	3.4	37.9	58.6
	전문가 유형	학계	18	5.6	33.3	61.1
		현장	11	0.0	45.5	54.5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전체		29	0.0	48.3	51.7
	전문가 유형	학계	18	0.0	61.1	38.9
		현장	11	0.0	27.3	72.7

2) 1차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2: 중장기 국가청소년정책 수립에 관한 의견

앞 절에서 1차 델파이조사 내용 중 기존 정책에 대한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의견을 정리했다면, 여기에서는 향후 추진될 국가청소년정책 수립 시 고려 또는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조사내용은 △정책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회환경변화, △정책비전, 목표 등 기본 방향, △반영되어야 할 중점과제 등이다. 응답결과가 아래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1)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회환경변화

향후 적용될 중장기 국가청소년정책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회환경변화는 무엇인지 개방형 응답으로 조사하였다. 전문가들이 답한 내용을 검토하여, 주요 이슈를 22개로 범주화하였다.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슈로는 '코로나 팬데믹'과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변화'에 관한 것으로 각각 12명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인구 구조의 변화', '디지털 시대'가 각 10명, '4차 산업혁명'(8명), '사회변화와 갈등'과 '청소년 시설 개선'(각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주도성과 미래역량',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진로 및 자립'에 대해서도 각 5명이 제안하였다.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교육정책 변화', '기후 위기',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의 위기 상황', '청소년 복지서비스'도 각 4명의 응답이 있었다. 그 밖에 '청소년 권리', '지역화', '청소년 정신건강'이 각 3명이 응답하였고, '소수 집단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속가능발전'도 각각 2명의 응답이 있었다.

표 IV-23. 국가청소년정책 수립 시 우선 고려할 사회환경변화

번호	주요 이슈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수(명)
1	코로나 팬데믹	• 코로나 팬데믹 • 코로나 팬데믹(청소년의 사회적 활동 및 사회성 감소) • 포스트 코로나 • 포스트 코로나 대책 • 포스트 코로나 대비 • 포스트 코로나 청소년 일상생활 변화 • 포스트 코로나 온-오프 통합적 청소년 활동정책 • 코로나 이후 청소년 세대 회복과 사회적 연결 • 포스트 코로나 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 • 사회적 재난	12
2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개편 • 통합적 청소년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 생애주기별 접근 • 생애주기별(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 연계 및 지원 강화 • 아동, 청소년, 청년 생애전기 지원 정책 수립 • 교육, 아동, 청년 정책과의 연계 • 청소년정책의 공공성 확보 • 청소년중심 정책(특성과 요구 파악)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 성과 중심 평가체계 혁신 • 수요자중심 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 • 국가 청소년정책 전담 부처 신설	12
3	인구 구조의 변화	• 인구 변화 • 인구 감소 • 인구 구조의 변화 • 청소년 인구감소 • 청소년 인구급감 • 학령인구 감소 •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인구)	10
4	디지털 시대	• 디지털 시대 대비 인재양성 •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 디지털 청소년활동 • 디지털 청소년 성장지원 • 디지털 청소년 사업활성화(빅데이터 활용) •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 디지털 기반 맞춤형 플랫폼 구축 • 디지털 시민성 •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디지털) • 다양한 문해력 격차 해소	10

번호	주요 이슈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수(명)
5	4차 산업혁명	• 과학기술변화 • 과학 및 정보기술 •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시대 필요역량 •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 • 4차 산업혁명 대비 • 4차 산업혁명(신기술)과 청소년정책	8
6	사회 변화와 갈등	• 사회 갈등 • 소득불균형, 양극화, 일자리 부족 • 성장 여건의 변화(양극화, 지역 편차) • 복잡성,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 다양한 사회변화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 • 급격한 사회변화와 청소년에 대한 인식변화 • 글로벌 시대 대응	7
7	청소년 시설 개선	• 청소년 관련 시설의 발전 • 청소년시설 운영 혁신 • 청소년시설 공공성 • 청소년기관 다양성 • 청소년활동 공간에 대한 접근과 활용 • 청소년시설 평가 체계 개선 • 청소년활동 공간 재구조화	7
8	청소년 참여	• 청소년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 청소년 참여 활성화 • 청소년 정책 참여 권한 명문화 • 민주시민 참여 역량 • 민주시민교육	5
9	청소년 주도성과 미래역량	• 청소년 주도성 • 청소년의 자기주도성 • 청년의 자기주도적 참여기반 조성 • 미래역량(주도성) • 위기대응 역량	5
10	청소년 지도자 전문성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 전문 인력 역량강화 • 청소년인력의 공공성 • 청소년시설 유형별 인력배치와 운영 • 청소년관련학과 증설	5
11	진로 및 자립	• 주도적 삶에 대한 진로설계 • 진로교육 변화 • 후기청소년 대상 창업교육 • 자립 •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지원	5

번호	주요 이슈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수(명)
12	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	• 청소년 보호기능 •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 유해환경보호를 뛰어넘는 회복적 접근 • 포괄적 예방 정책	4
13	교육정책 변화	•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위축 • 2022 교육과정 개정과 역량 • 학교 교육과정 연계활동(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 학교 교육과정 변화와 청소년활동 연계	4
14	기후위기	• 기후환경변화 • 기후변화와 환경 • 환경, 기후, 생태 •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기후위기)	4
15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의 위기 상황	• 위기청소년 다양화 고려 • 위기 전략적 접근과 지원체계 • 청소년 문제 대책 • 사이버 폭력 등 대응시스템	4
16	청소년 복지 서비스	• 보편적 청소년복지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 청소년상담 및 복지 기능 강화 • 지역 청소년안전망과 정보통합	4
17	청소년 권리	• 청소년 권리와 기회 •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청소년 정치 참여 • 청소년 활동권 보장	3
18	지역화	• 청소년정책 지방분권화 • 생활지역중심의 지역화 실효성 • 지역사회중심 해결시스템	3
19	청소년 정신 건강	• 청소년 정신건강 • 안전한 심라-정서 지원 및 보호환경 • 청소년 심라-정서적 안전망 강화 시스템	3
20	소수집단 청소년	• 소수집단 청소년 대상 청소년 활동 제공 • 소외, 중독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2
21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2
22	지속가능 발전	• 지속가능발전 • 지속가능한 사회	2

(2) 강조되어야 할 정책비전

중장기 국가청소년정책에서 강조되어야 할 정책비전에 대해 개방형 응답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유사 내용을 압축하여 총 12개로 범주화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미래를 이끄는 청소년’(11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의 행복 증진’(10명), ‘청소년의 주도성 강화’(9명), ‘공동체의 주인공인 청소년’(8명), ‘존중받는 청소년’(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진로계발을 통한 자립’(6명),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5명), ‘청소년 회복 지원’(4명), ‘청소년의 공정한 성장 보장’(3명) 등도 제시되었다.

표 IV-24. 향후 국가청소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정책비전

번호	주요 정책비전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수(명)
1	미래를 이끄는 청소년	• 미래를 만들어가는 청소년 • 미래를 살아가는 청소년 • 미래사회 문제 해결하는 주역 •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 미래의 가치를 주도하는 청소년 • 현재와 미래를 잇는 존재 • 함께하는 미래 • 청소년이 시작이다 • 준비된 청소년 • 청소년의 시대상 정립 • 변화에 대응	11
2	청소년의 행복 증진	• 청소년의 행복 추구 • 행복한 청소년 • 행복한 성장 • 행복을 누리는 청소년 • 행복한 일상을 꿈꾸는 청소년 •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 • 삶을 즐기는 청소년 •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 • 건강한 청소년을 더 건강하게 • 건강한 청소년	10
3	청소년의 주도성 강화	• 청소년의 자기주도성 강화 • 청소년 자기주도성의 실질적 보장 • 청소년 주도성을 통한 성장 경험 • 일상을 주도하는 청소년 • 주체로서의 청소년 • 변화의 주체로서의 청소년 • 삶의 주체성과 주도성	9

번호	주요 정책비전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수(명)
		• 공존을 위한 변화의 주체 • 청소년중심 세상 추구	
4	공동체의 주인공인 청소년	• 공동체 의식 •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기 •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 • 청년을 아우르는 존재 • 청소년들의 다양한 사회적 직접 경험 • 청소년의 변화된 역할과 사회적 역할 개선 • 사회적인 협력 수준 제고 • 사회와 연결되는 청소년	8
5	존중받는 청소년	• 존중받는 청소년 • 청소년에 대한 존중 • 청소년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 • 인간으로서 청소년 기본권 존중 • 청소년이 현재의 시민으로 존중받는 사회 • 청소년 성에 대한 존중	8
6	진로 계발을 통한 자립	• 진로 • 청소년의 미래와 진로 • 꿈을 이루는 청소년 • 재능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 • 청소년의 잠재력 발현 • 자립	6
7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 참여 •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회 • 활발하게 참여하는 청소년 • 시민 청소년 • 주도적 시민, 동료 시민	5
8	청소년 회복 지원	• 청소년의 회복 • 관계와 경험의 회복 • 위기 극복 •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청소년	4
9	청소년의 공정한 성장 보장	• 공정한 성장이 가능한 사회 • 청소년이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 • 따뜻한 공정	3
10	청소년 역량 강화	• 역량 • 역량을 갖춘 청소년으로서의 성장 지원	2
11	청소년 보호	•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 사회 • 보호받는 청소년	2
12	청소년의 권리 보장	•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 쉼과 여유, 놀 권리 필요	2

(3) 반영되어야 할 정책목표

향후 추진될 국가청소년정책에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개방형으로 조사하고, 이를 검토분석하여 총 14개의 정책목표를 추출하였다. 정책목표로 가장 많이 제안된 내용은 ‘청소년 참여 및 권리 확대’(16명)였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의 혁신’(13명), ‘청소년 자립’(11명), ‘청소년활동의 혁신적 재편’(8명), ‘청소년정책의 공적기능 강화’(7명), ‘청소년보호 지원체계 구축’(7명) 순으로 도출되었다.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는 역량 강화’와 ‘청소년 시설의 확대 및 변화’는 각 6명, ‘청소년활동의 디지털화’, ‘시민의식 함양’, ‘진로 지원’은 각각 5명의 전문가가 주요 정책목표로 제안하였다. 그 밖에 ‘청소년의 실질적 복지 보장’(4명),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3명), ‘공정한 성장’(2명)도 주요 정책목표로 도출되었다.

표 IV-25. 향후 국가청소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정책목표

번호	주요 정책목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수(명)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 확대	• 정치 참여 • 제6차 기본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 참여 및 권리 강화’ • 보조적 참여를 넘어서는 참여 •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예산확대 • 일상적 참여권 확대	16
2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의 혁신	• 추진체계의 혁신 • 제6차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혁신’ 내용 유지 필요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추진체계 혁신 • 청소년정책 전반의 주도성 강화 • 협력과 지역정책 중심으로의 추진체계 혁신 • 지속가능한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13
3	청소년 자립	• 자립과 진로 • 자립에 대한 개념 정의필요 • 맞춤형 자립 • 청소년 자립	11
4	청소년활동의 혁신적 재편	•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청소년활동 활성화 • 활동의 혁신적 재편 • 환경변화를 대비한 활동 • 도전적 활동	8

번호	주요 정책목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수(명)
5	청소년정책의 공적기능 강화	• 청소년정책 공공성 강화 • 정책의 공공성 강화 • 보편적 공공서비스 구축 • 주무부처의 정책 추진력 강화 • 공적 보호 • 정책인프라 지역격차 해소 • 공정사회를 위한 청소년참여 활성화	7
6	청소년보호 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보호지원 안정화 • 선제적 청소년 보호 • 촘촘하고 유기적인 보호지원 시스템 • 맞춤형보호 • 맞춤형 강조 •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 • 대상별 맞춤형 지원	7
7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는 역량 강화	•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역량강화 • 4차 산업과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역량강화 • 청소년주도와 더불어 주도하지 않은 영역도 강화 • 청소년 회복탄력성 강화 • 역량의 표준화된 지표 설정	6
8	청소년 시설의 확대 및 변화	• 청소년시설 확대 및 지원 • 공급기관의 다양화 • 공적 시설확대 및 지원 • 청소년 중심의 시설 조성 • 일상적(생활) 청소년시설 • 청소년시설 확대를 통한 종합지원	6
9	청소년활동의 디지털화	• 디지털 활동 활성화 • 디지털 역량 기반활동 • 디지털 기반 참여 및 활동 • 빅데이터 구축(상담 및 활동지원을 위한) • 빅데이터 수집 및 구축	5
10	시민의식 함양	• 청소년참여와 권리 중심의 민주시민 성장지원 • 시민권리 강화 • 시민의식 함양 • 인성교육 강화 •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지원	5
11	진로 지원	• 생애주기별 진로활동 지원 • 아동-청소년-청년을 연결하는 진로활동(생애) • 후기청소년-청소년정책으로의 독립적 목표설정	5

번호	주요 정책목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수(명)
		• 자립을 위한 진로 • 청소년부모, 청소년노동자 등 대상별 접근	
12	청소년의 실질적 복지 보장	• 청소년 복지 강화 • 공정 복지 강화 • 위기사각지대 제로화 • 사회안전망 고도화	4
13	청소년 건강권 보장	• 정신건강 및 위기대처 • 정신건강 증진 • 청소년 웰빙예산 도입	3
14	공정한 성장	• 공정한 성장기회 보장 • 차별 없는 성장 기회 보장	2

(4) 반영되어야 할 중점과제

〈표 IV-26〉에는 국가청소년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중점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제안하고자 하는 중점과제에 대해 개방형으로 조사하고, 이를 분석·검토하여 총 27개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이 도출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자립’(10명), ‘디지털 청소년활동 활성화’(10명), ‘청소년 진로역량 강화’(10명), ‘지역 중심 청소년정책 추진’(9명), ‘청소년 심리 상담 및 정신건강’(8명), ‘청소년 참여 확대’(8명), ‘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7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청소년 관련 분야와의 연계’, ‘온·오프라인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분야 서비스의 질 향상’ 해당 과제를 각각 6명의 전문가들이 중점과제로 제안했고, ‘도전, 사회적 가치 창출’, ‘청소년 인권’,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해당 과제는 각각 5명이 제안하였다. 그 외에 ‘청소년지도사 역량 강화’, ‘지역 간 격차해소’, ‘청소년 안전망 강화’, ‘청소년지도사의 공공성 강화’, ‘보편적 복지 강화’, ‘청소년 인성계발’ 과제는 각각 4명이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및 권리 확대’(3명), ‘청소년 활동 정책의 혁신’(3명),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 통합’(2명), ‘청소년시설 지원 확대’(2명), ‘불평등한 사회구조 혁신’(2명), ‘중장기적 청소년정책 준비’(1명) 등은 소수의 견으로 제시되었다.

표 IV-26. 향후 국가청소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중점과제

번호	중점과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수(명)
1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	•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사회변화와 이슈 연계 청소년주도 활동 활성화 • 청소년활동 방식의 다변화 •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및 새로운 시대의 과감한 청소년활동 • 단순 활동과 체험중심 청소년활동에서 벗어남. • 청소년 역량 중심 활동 활성화 • 청소년 체험활동의 전문성 강화 • 변화에 대응하는 청소년활동권 보장 •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관장제 • 학교교육과 연계한 청소년활동 지원체제 필요 • 활동 활성화를 표현하는 다른 워딩 필요 • 활동 활성화가 새롭게 포함되고, 강조될 필요 • 환경-인간-기술이 상호작용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식 개발 활동 • 뉴 노멀시대, 새로운 개념의 청소년 시설 설치 확대	14
2	청소년 자립	• 청소년 누구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진로 방향 설정 •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 단순 보호에서 자립과 독립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제 구축 • 청소년 주도의 성장과 자립 지원 강화 • 청소년 자립 및 진로지원 내실화 • 수요 맞춤형 전문적인 자립활동 확대 • 생애주기 기반 지속적 자립지원 기반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시스템 확보 • 다양한 일 경험과 창업을 위한 아카데미 • 작은 자본으로 창업을 시도 해보는 커뮤니티 센터	10
3	디지털 청소년 활동 활성화	• 디지털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등 • 디지털 청소년활동 기반 구축 • 디지털 세상을 주도하는 청소년성장 지원 • 스마트 청소년센터 지원 또는 디지털 청소년 활동센터 • 비대면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및 청소년들의 정보공유를 위한 플랫폼 개발 • 온라인 종합 플랫폼 조성 및 활성화 •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e-멘토링 시스템 구축 및 실행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청소년디지털 역량 강화 필요 • 온라인 비대면 중심의 생활 및 교육 환경 변화와 세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점의 지원 필요	10
4	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 청소년 진로 역량 강화 • 진로교육 지원체제 강화 • 다양한 청소년 진로 개발 활동 지원	10

번호	중점과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수(명)
		•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강점 찾기 •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기반으로 세상에 도전 • 청소년의 미래역량 개발 • 지역 내 진로직업체험기관 사업 재조정 •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 • 학교교육의 진로교육과 차별화되는 진로교육 •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의 범위를 확대	
5	지역 중심 청소년정책 추진	• 중앙과 지역 간 역할 분담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평가 • 지자체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의 위상 및 역할 강화 • 청소년정책의 편중과 부재 극복 • 지역거점 청소년기관 설립 • 지역 청소년활동의 질 관리 및 지원 업무 수행 • 스마트청소년센터 중앙 및 시군구로 연계 설치 •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한 마을 통합	9
6	청소년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보호체계 강화 • 사회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처·대응·적응하기 위한 정신건강 유지 • 기본 건강검진에 정신건강도 포함 • 청소년 상담·심리·정서의 예방적 개입 및 강화 • 청소년상담 지원 체계 활성화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 전반 개선 • 심리적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일상생활 경험 •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심리적 유연성 • 청소년 회복탄력성 강화 및 증진	8
7	청소년 참여 확대	•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일상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청소년 참여와 권리증진의 기반조성 및 확대 •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등 • 정책 대상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 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 새롭게 구축 • 생활밀착형 참여 강화 • 청소년민주시민 성장 강화 및 지원 • 청소년 권한의 실제화와 청소년 참여확대	8
8	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 대상별 맞춤형 지원 • 청소년 지원 사업을 보다 세분화하여 지원 •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제도권 안과 밖 청소년을 좀 더 세분화하여 지원 • 위기청소년의 맞춤형 공간 확보 • 청소년 비행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 다양한 청소년의 삶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체계의 발굴	7
9	청소년 관련	• 활동, 복지, 보호의 유기적 연계강화	6

번호	중점과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수(명)
	분야와의 연계	- 추진체계 통합 필요 -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연계 필요 - 통합적 서비스 추진 및 정책추진의 연계성 강화 - 청소년 상담, 활동, 교육, 보호 등의 영역을 통합적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 지자체-학교-교육청-청소년정책의 협력 강화	
10	온·오프 유해환경 개선	- 온·오프라인에서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 민간 단체 등에서 온·오프라인 유해환경 감시단 확대 - 청소년 유해환경 자율개선 지원 - 청소년 디지털 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개선 -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온라인 사이버폭력 등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6
11	청소년분야 서비스의 질 향상	- 청소년 기관들 간 선의의 경쟁과 서비스의 질적 상승 - 시설의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 실적에서 성과 중심으로 평가체계 혁신 - 공공 청소년기관의 평가체계 혁신 - 청소년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마련 - 청소년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	6
12	도전, 사회적 가치 창출	-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여활동 촉진 - 청소년이 단체 및 법인 설립 - 연대 활동 강화를 통한 진로 개척 역량 향상 - 청소년이 제안하고 발굴한 주도적 참여의 사회변화형 활동 - 지역사회 중심의 후기청소년통합지원센터	5
13	청소년 인권	- 청소년 인권 증진 - 청소년관련의 청소년권리 증진에 대한 재정지원 - 기초학습 역량과 학습권 보장 - 학업에 뒤처지고 도태되는 학생들에 대한 과제 - 청소년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	5
1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의 혁신 - 지원체계의 혁신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 청소년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정책추진체계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담당부처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5
15	청소년 지도사 역량 강화	-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증가를 위한 체계 구축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 국가 전문자격으로서 청소년전문가 운용체계 및 처우 개선 -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연계하는 활동전담 청소년지도사 배치	4
16	지역 간 격차 해소	- 지역 간 격차 없는 청소년정책 인프라 구축 - 지역 격차 없는 기본적 지원을 통한 국가최저선(national minimum)	4

번호	중점과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수(명)
		- 확보 - 지역 간 심화된 인프라 차이 극복 - 읍면동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확대	
17	청소년 안전망 강화	- 위기유형에 따른 맞춤형 청소년 사회안전망 - 청소년 안전망 공공성 강화 - 안전망 담당인력의 안정적 고용 및 제도 개편 필요 -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팀간 협력 강화	4
18	청소년 지도사의 공공성 강화	- 청소년전담공무원 배치 전면 확대 - 지역 청소년정책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역량 제고 - 청소년 사설·기관·인력의 공공성 강화 - 행정부처 및 담당자의 잦은 변경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부서의 필요성 강조	4
19	보편적 복지 강화	- 보편적 청소년 복지로의 확대 - 저소득층 복지가 아닌 모든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삶의 기반위한 과제 - 잔여적 복지개념이 아닌 정책적(제도적) 개념으로 청소년 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 - 청소년웰빙지표 도입	4
20	청소년 인성 계발	- 청소년의 인성, 사회성, 창의성 계발 -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 경험기반의 인성교육 재차 강조 - 봉사활동, 인성교육 등 체계적 인성교육 강화	4
21	청소년의 정치참여 및 권리 확대	- 보조적 참여를 넘어 정치의 중심을 준비하는 청소년 -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준비와 도전 - 정당가입 등 시민으로서의 역할 가능하도록 지원 등	3
22	청소년 활동 정책의 혁신	- 청소년활동 체계 혁신 - 성장지원 체계 혁신 - 청소년수련시설의 혁신	3
23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통합	-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아우르는 정책체계에 대한 고민 필요 - 청소년-청년정책 통합적 연계 추진	2
24	청소년시설 지원 확대	- 청소년시설 운영비 지원 증가 -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시설 구축 토대 마련 등	2
25	불평등한 사회 구조 혁신	- 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표개발 -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청소년 정책 확립	2
26	중장기적 청소년정책 준비	중장기적 관점 및 증거기반 청소년정책 추진	1

3) 2차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1)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회환경변화의 중요도

청소년 분야 학계·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이슈 22개를 추출한 뒤,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이렇게 도출된 22개의 이슈에 대해 각각 중요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중요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부터 ‘매우 중요하다’(=5)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2차 델파이조사 결과, 합의도, 수렴도, CVR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 사이에 합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슈도 일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12번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20번 ‘소수집단 청소년’은 CVR이 .29 이상의 의미 수준 보다 낮았고, 13번 ‘교육정책 변화’, 15번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의 위기 상황’, 16번 ‘청소년 복지 서비스’는 합의도 점수가 .75 이하로 유의도 기준보다 낮았다. 전체적으로 22개 주요 이슈 중에서 5개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V-27.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회환경변화의 중요도

(단위: 점, N=27)

번호	주요 이슈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수렴도 (.50 이하)	합의도 (.75 이상)	CVR (.29 이상)
1	코로나 팬데믹	4.19	1.08	5	0.50	0.80	0.50
2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4.56	0.64	5	0.50	0.80	0.79
3	인구구조의 변화	4.63	0.63	5	0.50	0.80	0.79
4	디지털 시대	4.33	0.73	4	0.50	0.75	0.64
5	4차 산업혁명	3.93	0.87	4	0.50	0.75	0.43
6	사회 변화와 갈등	4.33	0.73	4	0.50	0.75	0.64
7	청소년 시설 개선	4.15	0.95	4	0.50	0.75	0.50
8	청소년 참여	4.22	0.93	4	0.50	0.75	0.57
9	청소년주도성과 미래역량	4.48	0.70	5	0.50	0.80	0.71
10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4.26	0.66	4	0.50	0.75	0.71
11	진로 및 자립	4.30	0.82	4	0.50	0.75	0.64
12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3.70	0.91	4	0.50	0.75	0.07

번호	주요 이슈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수렴도 (.50 이하)	합의도 (.75 이상)	CVR (.29 이상)
13	교육정책 변화	3.89	0.89	4	0.75	0.63	0.36
14	기후 위기	4.22	0.85	4	0.50	0.75	0.57
15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의 위기 상황	4.00	0.83	4	0.75	0.63	0.43
16	청소년 복지 서비스	3.93	0.87	4	1.00	0.50	0.29
17	청소년 권리	3.96	0.94	4	0.50	0.75	0.50
18	지역화	3.93	0.78	4	0.25	0.88	0.43
19	청소년 정신건강	4.19	0.83	4	0.50	0.75	0.57
20	소수집단 청소년	3.78	0.80	4	0.50	0.75	0.21
21	학교 밖 청소년	3.85	0.77	4	0.50	0.75	0.36
22	지속가능발전	3.89	0.75	4	0.50	0.75	0.29

(2) 정책비전의 적절성

전문가 대상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비전 12개를 추출하고, 이렇게 도출된 정책비전에 대한 적절성을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파악해보았다. 적절성은 ‘매우 부적절’(=1)부터 ‘매우 적절’(=5)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2차 델파이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정책비전의 적절성에 대해 합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합의도, 수렴도, CVR 참고) 항목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수렴도 0.5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책비전으로 1번 ‘미래를 이끄는 청소년’, 5번 ‘존중받는 청소년’, 6번 ‘진로 계발을 통한 자립’, 8번 ‘청소년 회복 지원’이 도출되었다. 합의도 유의수준 .75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정책비전에는 1번 ‘미래를 이끄는 청소년’, 5번 ‘존중받는 청소년’, 6번 ‘진로 계발을 통한 자립’, 8번 ‘청소년 회복 지원’, 11번 ‘청소년 보호’가 해당되었다. 내용타당도(CVR) .29 이상의 유의수준을 충족하지 않는 비전으로 11번 ‘청소년 보호’, 12번 ‘청소년의 권리 보장’이 해당되었다. 통계적으로 보면, 12개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 합의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28.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정책비전

(단위: 점, N=27)

번호	주요 정책비전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수렴도 (.50 이하)	합의도 (.75 이상)	CVR (.29 이상)
1	미래를 이끄는 청소년	4.07	1.04	4	0.75	0.63	0.43
2	청소년의 주도성 강화	4.52	0.64	5	0.50	0.80	0.79
3	청소년의 행복 증진	4.63	0.74	5	0.25	0.90	0.79
4	공동체의 주인공인 청소년	4.07	0.73	4	0.25	0.88	0.64
5	존중받는 청소년	3.96	0.94	4	0.75	0.63	0.43
6	진로 계발을 통한 자립	3.96	0.98	4	0.75	0.63	0.43
7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4.19	0.83	4	0.50	0.75	0.71
8	청소년 회복 지원	3.85	0.99	4	1.00	0.50	0.29
9	청소년의 공정한 성장 보장	3.93	0.96	4	0.25	0.88	0.50
10	청소년 역량 강화	4.19	0.74	4	0.50	0.75	0.57
11	청소년 보호	3.37	0.97	3	0.50	0.67	-0.21
12	청소년의 권리 보장	3.59	1.01	4	0.50	0.75	0.21

(3) 정책목표의 중요도 및 시급성

〈표 IV-29〉 및 〈표 IV-30〉에는 정책목표에 대한 델파이 2차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국가청소년정책의 정책목표에 대한 전문가 1차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4개 목표를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2차 조사를 통해 각 항목에 대해 중요도 및 시급성을 조사하였다. 중요도와 시급성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① 정책목표의 중요도

정책목표의 중요도에 대한 분석 결과, 합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합의도, 수렴도, CVR 참고) 정책목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수렴도 0.5 이하의 유의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책목표로 6번 ‘청소년보호 지원체계 구축’, 8번 ‘청소년 시설의 확대 및 변화’가 도출되었고, 합의도 .75 이상의 유의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책목표로는 6번 ‘청소년보호 지원체계 구축’, 8번 ‘청소년 시설의 확대 및 변화’가 해당되었다. 내용타당도(CVR) .29 이상이 유의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책목표에는 6번 ‘청소년보호 지원체계 구축’, 9번 ‘청소년활동의 디지털화’가 해당되었다. 결과적으로 14개 정책목표 중에서 3개가 합의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29. 전문가 델파이 2차조사 결과: 정책목표의 중요도

(단위: 점, N=27)

번호	주요 정책비전 중요성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수렴도 (.50 이하)	합의도 (.75 이상)	CVR (.29 이상)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 확대	4.44	0.75	5	0.50	0.80	0.64
2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의 혁신	4.59	0.75	5	0.50	0.80	0.79
3	청소년 자립	4.33	0.83	5	0.50	0.80	0.64
4	청소년활동의 혁신적 재편	4.56	0.51	5	0.50	0.80	0.93
5	청소년정책의 공적기능 강화	4.59	0.69	5	0.50	0.80	0.71
6	청소년보호 지원체계 구축	3.92	0.98	4	1.00	0.50	0.21
7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는 역량 강화	4.37	0.74	5	0.50	0.80	0.64
8	청소년 시설의 확대 및 변화	4.00	0.96	4	1.00	0.50	0.36
9	청소년활동의 디지털화	3.78	0.85	4	0.50	0.75	0.14
10	시민의식 함양	4.00	0.78	4	0.25	0.88	0.50
11	진로 지원	4.15	0.72	4	0.50	0.75	0.57
12	청소년의 실질적 복지 보장	4.19	0.74	4	0.50	0.75	0.57
13	청소년 건강권 보장	4.26	0.71	4	0.50	0.75	0.64
14	공정한 성장	4.00	0.78	4	0.25	0.88	0.50

② 정책목표의 시급성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확인한 정책목표의 시급성 조사 결과는 <표 IV-30>과 같다. 분석 결과, 합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합의도, 수렴도, CVR 참고) 정책목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수렴도 0.5 이하의 유의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책목표로 1번 '청소년 참여 및 권리 확대', 3번 '청소년 자립', 8번 '청소년 시설의 확대 및 변화', 12번 '청소년의 실질적 복지 보장', 13번 '청소년 건강권 보장'이 해당되었다. 합의도 .75이상의 유의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책목표로는 1번 '청소년 참여 및 권리 확대', 3번 '청소년 자립', 8번 '청소년 시설의 확대 및 변화', 12번 '청소년의 실질적 복지 보장', 13번 '청소년 건강권 보장'이 해당되었다. 내용타당도(CVR) .29 이상의 유의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책목표에는 3번 '청소년 자립', 6번 '청소년보호 지원체계 구축', 8번 '청소년 시설의 확대 및 변화', 9번 '청소년활동의 디지털화'가 해당되었다. 결과적으로 14개 정책목표 중에서 7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 합의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30. 전문가 델파이 2차조사 결과: 정책목표의 시급성

(단위: 점, N=27)

번호	주요 정책비전 시급성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수렴도 (.50 이하)	합의도 (.75 이상)	CVR (.29 이상)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 확대	4.04	0.94	4	0.75	0.63	0.43
2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의 혁신	4.63	0.79	5	0.00	1.00	0.71
3	청소년 자립	3.78	0.97	4	0.75	0.63	0.21
4	청소년활동의 혁신적 재편	4.41	0.75	5	0.50	0.80	0.64
5	청소년정책의 공적기능 강화	4.41	0.80	5	0.50	0.80	0.57
6	청소년보호 지원체계 구축	3.58	0.95	4	0.50	0.75	0.07
7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는 역량 강화	4.26	0.86	4	0.50	0.75	0.57
8	청소년 시설의 확대 및 변화	3.78	1.15	4	1.00	0.50	0.21
9	청소년활동의 디지털화	3.74	0.94	4	0.50	0.75	0.21
10	시민의식 함양	3.89	0.85	4	0.25	0.88	0.43
11	진로 지원	4.04	0.71	4	0.25	0.88	0.50
12	청소년의 실질적 복지 보장	3.96	0.81	4	1.00	0.50	0.29
13	청소년 건강권 보장	3.96	0.98	4	1.00	0.50	0.29
14	공정한 성장	3.89	0.80	4	0.50	0.75	0.36

(4) 중점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표 IV-31〉과 〈표 IV-32〉에는 중점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1차 델파이조사에서 향후 국가청소년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중점과제에 대한 의견을 개방형으로 조사하고, 이를 연구진이 검토·분석하여 26개의 과제를 도출한 다음,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이 결과를 제시하고 각 과제별로 중요도와 시급성을 각각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① 중점과제의 중요도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된 중점과제의 중요도 응답 결과는 〈표 IV-31〉과 같다. 수렴도, 합의도, CVR 값을 고려해보면, 전문가 사이에 합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과제들도 일부 확인된다. 먼저 수렴도 0.5 이하의 유의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점과제로 10번

‘온·오프 유해환경 개선’, 12번 ‘도전, 사회적 가치 창출’, 19번 ‘보편적 복지 강화’, 21번 ‘청소년의 정치참여 및 권리 확대’, 23번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통합’, 25번 ‘불평등한 사회 구조 혁신’이 해당되었다. 합의도 .75 이상의 유의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점과제로는 10번 ‘온·오프 유해환경 개선’, 12번 ‘도전, 사회적 가치 창출’, 19번 ‘보편적 복지 강화’, 21번 ‘청소년의 정치참여 및 권리 확대’, 23번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통합’, 25번 ‘불평등한 사회 구조 혁신’이 해당되었다. 내용타당도(CVR) .29 이상의 유의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점과제에는 12번 ‘도전, 사회적 가치 창출’, 20번 ‘청소년 인성계발’이 해당되었다. 결과적으로 26개 중점과제 중에서 7개가 합의되지 않았다.

표 IV-31. 전문가 델파이 2차조사 결과: 중점과제의 중요도

(단위: 점, N=27)

번호	중점과제 중요성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수렴도 (.50 이하)	합의도 (.75 이상)	CVR (.29 이상)
1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	4.48	0.89	5	0.50	0.80	0.79
2	청소년 자립	4.30	0.67	4	0.50	0.75	0.71
3	디지털 청소년 활동 활성화	4.15	0.77	4	0.50	0.75	0.64
4	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4.37	0.79	5	0.50	0.80	0.71
5	지역 중심 청소년정책 추진	4.33	1.00	5	0.50	0.80	0.57
6	청소년 심리, 상담 및 정신건강	4.30	0.95	5	0.50	0.80	0.57
7	청소년 참여 확대	4.30	0.82	4	0.50	0.75	0.64
8	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4.30	0.82	4	0.50	0.75	0.64
9	청소년 관련분야와의 연계	4.30	0.61	4	0.50	0.75	0.79
10	온·오프 유해환경 개선	3.85	0.95	4	0.75	0.63	0.36
11	청소년분야 서비스의 질 향상	4.52	0.51	5	0.50	0.80	0.93
12	도전, 사회적 가치 창출	3.93	0.83	4	1.00	0.50	0.21
13	청소년 인권	4.22	0.70	4	0.50	0.75	0.64
1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4.70	0.67	5	0.00	1.00	0.86
15	청소년지도사 역량 강화	4.33	0.78	5	0.50	0.80	0.57

번호	중점과제 중요성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수렴도 (.50 이하)	합의도 (.75 이상)	CVR (.29 이상)
16	지역 간 격차 해소	4.19	0.57	4	0.38	0.81	0.71
17	청소년 안전망 강화	4.30	0.67	4	0.50	0.75	0.71
18	청소년지도사의 공공성 강화	4.33	0.68	4	0.50	0.75	0.71
19	보편적 복지 강화	4.04	0.76	4	0.75	0.63	0.43
20	청소년 인성계발	3.52	1.05	4	0.50	0.75	0.14
21	청소년의 정치참여 및 권리 확대	4.04	0.94	4	0.75	0.63	0.43
22	청소년 활동 정책의 혁신	4.26	0.98	5	0.50	0.80	0.57
23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통합	3.85	1.17	4	1.00	0.50	0.29
24	청소년시설 지원 확대	4.04	0.90	4	0.50	0.75	0.57
25	불평등한 사회 구조 혁신	3.89	1.09	4	1.00	0.50	0.36
26	중장기적 청소년정책 준비	4.15	0.91	4	0.50	0.75	0.57

② 중점과제의 시급성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된 중점과제의 시급성 응답 결과는 <표 IV-32>와 같다. 분석 결과, 전문가 간에 합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합의도, 수렴도, CVR 참고) 중점과제 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수렴도 0.5 이하의 유의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점과제로 3번 ‘디지털 청소년 활동 활성화’, 9번 ‘청소년 관련분야와의 연계’, 21번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및 권리 확대’, 23번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통합’이 해당되었다. 합의도 .75 이상의 유의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점과제로는 3번 ‘디지털 청소년 활동 활성화’, 9번 ‘청소년 관련분야와의 연계’, 12번 ‘도전, 사회적 가치 창출’, 20번 ‘청소년 인성계발’, 21번 ‘청소년의 정치참여 및 권리 확대’, 23번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통합’, 25번 ‘불평등한 사회 구조 혁신’이 해당되었다. 내용타당도(CVR) .29 이상의 유의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점과제에는 10번 ‘온·오프 유해환경 개선’, 12번 ‘도전, 사회적 가치 창출’, 13번 ‘청소년 인권’, 19번 ‘보편적 복지 강화’, 20번 ‘청소년 인성계발’, 21번 ‘청소년의 정치참여 및 권리 확대’, 23번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통합’, 25번 ‘불평등한 사회 구조 혁신’이 해당되었다. 결과적으로 26개 중점과제 중에서 9개가 합의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32. 전문가 델파이 2차조사 결과: 중점과제의 시급성

(단위: 점, N=27)

번호	중점과제 시급성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수렴도 (.50 이하)	합의도 (.75 이상)	CVR (.29 이상)
1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	4.19	1.00	4	0.50	0.75	0.50
2	청소년 자립	4.07	0.73	4	0.50	0.75	0.50
3	디지털 청소년 활동 활성화	4.07	0.87	4	0.75	0.63	0.43
4	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4.26	0.81	4	0.50	0.75	0.64
5	지역 중심 청소년정책 추진	4.15	0.99	4	0.50	0.75	0.50
6	청소년 심리, 상담 및 정신건강	4.26	1.06	5	0.50	0.80	0.57
7	청소년 참여 확대	4.07	1.00	4	0.50	0.75	0.57
8	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4.19	0.74	4	0.50	0.75	0.57
9	청소년 관련분야와의 연계	4.04	0.81	4	1.00	0.50	0.36
10	온·오프 유해환경 개선	3.67	0.96	4	0.50	0.75	0.07
11	청소년분야 서비스의 질 향상	4.37	0.74	5	0.50	0.80	0.64
12	도전, 사회적 가치 창출	3.63	0.84	3	0.50	0.67	-0.07
13	청소년 인권	3.73	0.83	4	0.50	0.75	0.07
1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4.65	0.69	5	0.38	0.85	0.79
15	청소년지도사 역량 강화	4.19	0.88	4	0.50	0.75	0.50
16	지역 간 격차 해소	4.04	0.66	4	0.00	1.00	0.50
17	청소년 안전망 강화	3.93	0.78	4	0.25	0.88	0.43
18	청소년지도사의 공공성 강화	4.07	0.96	4	0.50	0.75	0.50
19	보편적 복지 강화	3.70	0.91	4	0.50	0.75	0.14
20	청소년 인성계발	3.15	1.13	3	0.50	0.67	-0.29
21	청소년의 정치참여 및 권리 확대	3.85	0.99	4	1.00	0.50	0.14
22	청소년 활동 정책의 혁신	4.30	0.99	5	0.50	0.80	0.57
23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통합	3.70	1.17	4	1.00	0.50	0.07
24	청소년시설 지원 확대	4.00	0.92	4	0.50	0.75	0.50
25	불평등한 사회 구조 혁신	3.52	0.98	3	0.50	0.67	-0.07
26	중장기적 청소년정책 준비	3.96	0.76	4	0.00	1.00	0.50

3. 전문가 대상 FGI 결과

이 절에서는 중장기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는 크게 기존 정책의 성과 및 한계, 향후 청소년정책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조사 결과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정책의 위상 및 포지셔닝 전략,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및 인프라 개선 전략,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개선 전략 등의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청소년정책의 위상 및 포지셔닝 전략

먼저,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제고하고 청소년과 그 부모 등 정책대상자에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과는 차별화되는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청소년정책의 외연 확대,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유관분야 정책과의 관계 정립, 수요자 중심 정책수립·추진, 그리고 정책 홍보 강화 등이 여기에 속한다.

(1) 청소년정책의 외연 확대 및 선제적 대응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제고하고 수요자에게 소구력을 갖는 정책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의 외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청소년정책은 대상과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정책대상 측면에서는 9~24세를 포괄하는 청소년의 특성 상, 아동(0~18세) 및 청년(19~3세)과 일부 중복된다. 정책영역 측면에서는 대상 중심 정책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 청소년정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활동, 보호, 복지 외에도 교육, 문화, 보건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9~24세 청소년 인구의 대부분이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이라는 점에서, 교육정책과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청소년정책은 청소년활동·보호·복지라는 전통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청소년 분야 외 다양한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영향력도 축소되었다는 문제점이 언급되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통적인 ‘청소년계’에 속하지는 않지만 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인접 분야와 적극적으로 교류함으

로써, 청소년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관점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오히려 청소년계나 이런 청소년 정책계가 아니라, 오히려 평생학습에서 청소년 쪽을 관계하는 사람도 있거나 그러니까 좀 중간에, 중간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청소년 정책이기 때문에 청소년 전문가들, 청소년 현장 전문가들이 70%를 채운다면, 30% 정도는 중간에서 이것을 좀 융합 접근하고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을 넓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서 결국 침몰될 것 같은 관점이 많은 거예요. (중략) 청소년 정책을 너무 청소년화 하는 것들에 대한 단점들로 이제는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정책 접근, 새로운 활동 개발, 새로운 성과의 제시 이런 것들로 7차는 완전히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우리 안의 한계에 묶여 있을 것이다.(A3)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정책의 확장성인데요. 이 대상 정책은, 청소년이라는 대상 정책은 광장히 행으로 나열이 돼야 됩니다. 더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소년 우리가 지금 활동보호·복지를 하지만 범죄도 있고요, 장애도 있고요, 또 수많은 영역들이 있어. 실제로 어떤 모 교수가 범죄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왜 청소년 중에는 범죄 전문가가 없나?” 이런 얘기를 해요. 범죄 전문가들이 와서 하지 청소년 관련된 전문가들이 안 하니까. 이렇게 행적인 영역의 확장성을 저는 이번 계획에서는 활동보호·복지라는 틀을 만약에 깎 거면, 실제로 그러한 여러 영역들을 좀 넘나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A1)

또한, 그간 청소년정책은 이슈를 선점하거나 선도하기보다는, 교육이나 복지 등 유관분야 정책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 급급했던 측면이 있는 바, 향후에는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되었다.

진로라든지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학교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았었는데, 학교가 바뀐 것을 따라가기로 바꿨다. 이제는 선점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중략) 정책적인 이슈, 교육적 변화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선점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A1)

왜 청소년 계는 맨날 항상 뒤따라가고 이렇게 급하지. 항상 교육 정책, 지역으로 보면 오히려 사회복지 계나 평생학습계가 가고 그다음에 청소년계가 가는. (A3)

(2) 유관분야 정책과의 관계 정립: 청소년정책의 선명성 및 차별성 확보

앞서 논의한 청소년정책의 외연 확대 및 선제적 대응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 정책이 인접한 유관분야 정책과 어떠한 방향으로 관계를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FGI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책의 선명성·차별성 및 연계협력 전략이 모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정책의 선명성·차별성 이슈는 특히 교육 부문과 연계되어 있는데, 점점 영역을 확장하는 교육정책에 대응하여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차별성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에 관한 문제로 수렴된다. FGI 참가자들은 청소년 분야가 교육 부문과의 연계협력에 수동적인 자세로 대응하기보다는, 청소년정책 고유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무기로 대등하게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육정책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쉽게 변하기 힘든 특성이 있는 반면, 청소년정책은 좀 더 탄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있는데, 이런 특성을 십분 발휘하여 선제적으로 영역을 개척하고, 이를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활동 이 분야는 이젠 저는 이제 미래교육, 대안교육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의 교육 영역이 19세기 산업화 시대 교육 영역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미래교육, 대안영역이라고 보고 우리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교육부하고 대등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교육부에게 '우리 좀 키워주세요'를 하고 있다고. 이 스타일 갖고는 안 된다. 라고 보는 거죠. (A4)

나아가 사회변화에 따라 교육 현장에도 변화의 요구가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예컨대 학교 현장에 융복합 교육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청소년 분야가 가진 지역사회 네트워크나 강점들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학교'에서 먼저 협력을 필요로 하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았다.

학교가 체제를 바꾸고 있어요. 과원 교사들이 워낙 많아 학교가. 지금 OO중학교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아마 제일 작은 학급인데 한 학급에 8명이야. 8명, 9명. 교사가 넘치고 남는 거야 지금. 이 넘치고 남는 교사들이 뭘 할 거냐면 융복합 교육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학점 이수제로 넘기면서 올해부터가 문과/이과 구분 없죠. 올해 입시부터 문·이과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과 구분 없는

것들을 이미 예고를 해서 융합 교육을 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익숙치가 않으니까 이게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 커뮤니티가 움직이면서 지역사회 개발의 관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아이들을 끌어낼 수 있었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A4)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나가지 않으면, 현장에서 청소년정책이 설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공유되었다. 특히 청소년활동의 경우, 활동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상당 부분은 교육정책에서도 다루고 있다. ‘진로교육’, ‘생태교육’, 최근에는 ‘그린스마트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정책에서 이슈를 선점한 측면도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경기도에서 추진해 온 ‘몽실학교’는 학생주도 참여형 모델을 성공적으로 확립하였고, 브랜드로 만드는 데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예산, 시설, 학부모의 선호도 측면에서도 학교가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이 고유성, 선명성을 갖지 못하면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똑같이 하더라도 진로교육이 아니고 생태교육이 아니고 혁신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는 없을까? 그러니까 청소년학 또는 청소년 정책 또는 청소년 주도성 청소년참여를 바탕으로 한, 우리 용어들을 오히려 명칭에 대한 거나 선명성에 대한 부분들로 다시 좀 해야 그래야 그 많은 정책들이 좀 더 실효적인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략)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은 경기도가 다 하고 있어요. 몽실학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학교가 수련시설보다 더 좋죠. 그린스마트학교라고. (A3)

우리가 선명한 게 뭐냐면 보호 영역이나 복지 영역이 선명해요. 청소년보호 영역 같은 경우가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뭘 하고 있죠? 성인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과 관련 없어요. 성인 규제법이잖아. 그런 식의 선명성 있는 정책이 있다고 우리한테. 근데 이제 활동은 애매모호 했던 말이야. 그전부터 학교 안에서의 단체 활동이나 이거하고 연결돼 있는 식의 활동이 애매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성장 지원으로 얘기 또 최근에 많이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포커스로 용어 선택도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고, 그런 식의 선명성을 우리가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A4)

결국 교육 부문, 즉 학교와 청소년분야는 일종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는 경쟁관계에 있는 조직이 일부 사업 또는 기능별 활동부

문에서 경쟁조직과 일시적인 협조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전략적 제휴들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다는 특징을 갖는다(박병석, 2009.10.26.).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은 수요자, 즉 정책대상을 공유한다는 대단히 큰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협력할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향후 청소년정책은 고유의 선명성과 차별성을 기반으로 하되, 구체적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 분야와의 전략적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를 떠나서 아이들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학교 밖 애들도 학교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 학교를 같이 공유점으로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좀 더 행복에 대한 접근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끌어 낼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연결점 그리고 또 그런 사업들의 연결점에 있어서 각각의 어떤 인정들이나 그리고 또 그런 데 있어서의 고려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B4)

유관분야와의 연계협력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중장기 정책을 통해 청소년정책이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청소년정책이 대상 중심 정책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 외에, 교육, 복지, 고용 등 여타 사회정책 부문과 연계할 연결고리들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부문과 연계하고, 타 부처의 사업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교육정책에 너무 목매지 말고 저는 사회정책이나 쉽게 말해서 돈을 지원받기를 필요하시면 여가보다 돈 받는 부처가 엄청 많아요. 청소년사업 안 하는 데가 없고요. 저는 7차 계획에는 오히려 그러한 영역들을 넘나들 수 있는 꼭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A1)

(3)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 및 추진: 진로·자립 정책 강화 필요

그간 청소년정책에서 수요자 중심 접근이 다소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하는 데 소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정책을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하는 데 있어, 수요자 중심의 관점이 더 강조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되었다.

이러한 지적은 청소년활동 분야에서 제기되었는데, 청소년활동이 침체된 자금의 상황이 수요자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청소년 분야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했는지, 또 활동을 하면 청소년들이 원하는 결과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에 관해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에는 성인들이 주도하여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 토대 자체를 바꿔볼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에 참여했을 때 그것이 청소년 개인의 포트폴리오 혹은 이력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전에 비해 오히려 비교과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어, 청소년 입장에서는 청소년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유인이 더 줄어들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동아리나 활동들이 수련시설에 있나 라는 고민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수련 시설이나 정책들을 좀 만들고 꾸려갈 수 있도록, 요즘 행안부에서 리빙랩 방식으로 지역 현안의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고민하고 또 사업비를 내려주는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청소년 사업을 정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내려주기보다는 좀 청소년들이 먼저 좀 고민해가지고 수련 시설이나 혹은 정책 관련해서 좀 지역의 현안들 또 자산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리빙랩 방식으로 좀 풀어서 정책들을 좀 한번 제안하고 그것들을 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만들어보면 좋겠다. (B5)

매번 청소년기본계획 할 때마다 활성화는 늘 들어갔던 꼭지 중에 하나였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 30년 넘게 해오면서 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제도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바깥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을 때, 그 활동에 대한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생활과 얼마만큼 연계가 되어서 인정을 받느냐. 솔직히 청소년단체 활동도 지금 학교에서 인정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하고, 동아리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들이 아이들의 어떤 개개인적인 만족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성과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B4)

정책대상자인 청소년의 수요 충족을 위해 FGI 참가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키워드는 ‘진로’, 그리고 ‘자립’이었다. ‘진로’는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자, 정책적으로도 청소년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서 원만하게 성인기로 진입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정책적 필요와 수요자의 니즈가 조응하는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정책은 진로 문제에 좀 더 진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진로’ 자체가 새로운 이슈가 아니며, 현재 청소년정책, 교육정책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에서도 진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수준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연계·협력이 요구되고, 지역수준에서는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과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는 진로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찾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체험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우리 교육에서 진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에 관련된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서도 특성화라는 이름으로 진로 체험들을 다 해요. 이런 것들도 지자체에서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걸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물론 그런 건 교육부나 지금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여가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B4)

‘진로’ 문제는 ‘자립’ 지원과도 직결된다. 그 동안 청소년정책에서 ‘자립’은 복지정책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었고, 특히 위기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집중되어 왔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청소년 자립, 즉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원만히 이행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광의의 관점이 필요하며, 그것이 청소년정책에서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 문제를 단순히 진로체험활동이나 진로상담으로 축소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용적 의미의 광의의 진로로 확장하고, 청소년이 원만하게 청년기(성인기)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전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청년 되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을 너무 준비 없이 봐줘. 우리나라 애들은 청년을.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는 게 청년은 아닌데 20살을 넘어가는 과정이, 하다못해 동사무소 가서 자기 증명서 못 하는 애도 많아요. 20살이 넘는 데도. 그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로 실용적인 진로를 접근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그래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외국 같은 데는 청소년 센터나 이런 데 가면 1층에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어요.

정말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제가 대학에 궁금한 것부터 창업을 하고 싶고 또는 내가 동사무소 가서 이걸 끊어야 되는데 그럼 어디 어디 어떻게 하는 이런 정보를 그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로진학체험센터처럼 진로정보센터라는 게 너무 구닥다리 그냥 이름 하나 만들어서 정말로 진로에 필요하거나 성인 준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을 그거를 정말 빅데이터를 같이 모아서 그걸 공유하는 형태의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 그거는 충분히 지금도 할 수 있거든요. (A1)

(4) 청소년정책 홍보 강화

청소년정책을 새롭게 포지셔닝 하는 데 있어, 청소년정책에 대한 홍보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그 동안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대국민 홍보가 다소 부족했다는 것이다. 대국민 홍보와 관련하여, FGI 참가자들은 개별적인 세부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청소년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보았다. 주무부처에서는 작은 사업 하나하나에 몰입하기보다 청소년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향후 중장기 청소년정책에는 부처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국민 홍보가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는 000선생님 말씀 나 동의해요. 정말 이게 강화돼야 돼요. 우리 정책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대안 세력인지도 몰라요. (A4)

저는 기업 광고를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어요. 현대가 현대 기업을 광고하지 현대모터스나 현대모비스를 광고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청소년활동이 의미가 있다, 청소년사업 의미가 있고 청소년정책을 믿어달라는 광고를 하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할텐데 지금 여가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여성에 관련된 것들은 광고도 하고 성범죄는 광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니까 이미지와 사회적 신뢰를 쌓게 해주는 게 여가부의 역할이지, 이런 1천만 원, 2천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여기를 살리느니 이런 것들에 너무 몰입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정책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여가부의 역할이다, 이런 것들을 좀 7차 기본 계획에는 좀 담아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A2)

2)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및 인프라 개선 전략

전문가 FGI에서 도출된 주요 개선방향으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인프라 개선’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내용으로는 재원 확충 및 다각화, 전달체계

효율화, 관계부처 간 연계 및 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및 청소년지도자 등 인력에 관한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

(1) 청소년정책 재원 확충 및 다각화

국가수준의 청소년정책 추진 전략을 새롭게 짜는 데 있어, 재원 확충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FGI 참가자들 역시 현장전문가 및 공무원을 막론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예산과 인력이 핵심인데, 청소년정책은 예산 규모가 작고 부족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FGI 참가자들은 청소년정책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최근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교부금 규모는 확대되고, 그로 인해 시도교육청이 적립해두는 기금 규모가 커지는 것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동아일보, 2022.9.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에 대한 관심도 제고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교부금 활용보다는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한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경비보조의 사용처에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도 포함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도 보면 우리가 덧붙이면 사람하고 시스템하고 예산하고 그거 다 아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만 있으면 다 하지만 그런데 예산도 우리가 보면 우리 지자체 교육경비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교육청에만 주는데 청소년기관이나 시설에도 쓸 수 있도록. 전번에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교육경비들을 우리 청소년기관이나 시설에도 학교하고 교육청만 사용하도록 하지 말고 그것도 우리 청소년 분야에도 교육경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를 제도를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자체 청소년 업무에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B2)

청소년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주관한다는 점에서, 그간 교육 부문에 집행되었던 예산의 일부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실제로 상당한 명분과 설득력을 갖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지원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가 학생의 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예산인데, 여하한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를 통한 교육지원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에게 예산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있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야. 이게 교육재정이 1인당 내가 오면서 찾아봤더니 1500만원이더라고요. 지금, 학생 1인당 1500만원 돈이 교육재정이예요. 그래서 학교 밖 지원 문제는 교육재정으로 이미 분배, 배분된 건데 이 배분된 내용에서 회수해야 된다 이 부분은. 그래서 학교 밖 지원하는 청소년 정책 쪽으로 영역을 옮겨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좀 하는 방법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당장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A4)

아울러, 청소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부터 유입되는 과세 또는 과금액을 청소년정책에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부터 거두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청소년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수입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여타 사례들⁴⁹⁾이 있으므로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사행성 사업은 청소년보호에 악영향을 미쳐요. 담배소비세가 교육세로 들어가거든. 담배가 악영향을 미쳐. 주세는 지금, 주세가 들어가던가. 이런 식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비용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심지어 청소년보호 위반으로 해 가지고 벌과금으로 올린 거 일반경비로 씁니다. 구청에서. 청소년보호 영역에서 벌과금 올린 걸 왜 일반경비로 써요. 청소년보호 영역으로 넘겨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빼올 수 있는 예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못 바뀌 오는 거지. 우리 영역에서. (A4)

(2)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효율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및 인프라 효율화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청소년시설이나 기관을 하나의 센터로 집적하여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찬반 의견도 제시되었

49) 과태료 수입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로는 (국가기금)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및 범칙금을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기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으로 규정한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이 있다(전문가 자문의견, 2022.9.21.).

다. 이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정책대상자인 청소년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있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유관기관들이 가까이에 모여있어서 연계·협력이나 소통하기에도 편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진로센터, 학교 밖 센터, 상담복지센터, 아카데미, 청소년 정책과 사업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우리 청소년 목소리가 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업무는 진로 뭐 궁극적으로는 진로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런데 아까 OO에서 말씀하셨듯이 한 군데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게 효율적입니다. 저희들도 정책하고 사업하고 그리고 각 기관 각 기능들이 전부 다 이렇게 통합해가고 저희들이 한 곳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중략) 우리가 원스톱 시스템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OO과 같이 독립된 공간이지만 한 존에서 움직이는 그거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면 거기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내거 네거 떠나가지고 상담도 활동 같이 해야 되고, 활동도 상담 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전부 다 연계가 돼야 청소년 업무는 다 연계가 되거든요. (B2)

청소년의 입장에서 한 시설에서 왔을 때는 본인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라든지 정책이 모두 한 곳에서 해결될 수 있어서 많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되거나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B3)

다만, 무작정 집적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통합을 통해 청소년 정책이 잘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전달체계를 통합하더라도 각자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각 영역이 갖는 고유의 전문성과 특성을 존중하며 통합이 이루어져야지, 우위를 따지거나 자신들의 영역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서로 자연스럽게 섞이게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가 가지는 생각들이나 행동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긍정성을 더욱더 발랄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시설에 같이 여러 정책의 관련 시설들을 함께 집약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단지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상담이나 활동이나 각각의 전문성은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각각 각 영역에서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차원에서의 공간 배치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네트워크의 연결점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이 가지는 영역에서의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 활동이 가지는 영역에서의 필요한 부분들이 서로에게 어떤 존중과 인정으로
서 같이 가야되는 거지 ‘꼭 이것만 있어야 돼’, ‘이것만 있어야 돼’ 라고 보면 그것들에 대한 어떤
발전 가능성은 더욱더 희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B4)

아울러, 지방처럼 청소년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 또는 인프라가 불균형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청소년시설이나 기관이 통합 운영될 경우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였다. 여러 청소년기관이 한 곳으로 집적할 경우, 그 센터가 위치한
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겠으나, 그로 인해 소외되는
지역이 더 광범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외지역에 대안시설을 마련해주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예컨대 꼭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청소년이용
시설 형태로만 설립·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복합시설 형태로라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희는 전달 체계에서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는 게 통합 시스템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다만 한 곳에서 통합으로 했을 때의 그 소외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써 저희는 다목적 기능,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용시설만 고집할 게 아니라,
1층은 청소년문화의집, 2층은 도서관, 1층은 복지회관, 2층은 청소년 이용 시설 이렇게 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청소년시설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3)

전문가 FGI 참가자 중에는 전달체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부정적인 입장도 있었다.
각각 운영되는 청소년기관이나 시설을 굳이 통합하기보다는, 특정 테마나 사업 중심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 건물에 무조건 다 통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는 지금 OO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하나의 특정 테마라든가. ...(중략)... 하나에 모으는 것보다 각자의 테마적
인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찾아가서 거기서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B1)

(3) 관계부처 간 연계 및 조정 기능 강화

청소년정책을 둘러싼 관계부처 간 연계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부처 간 연계 및 조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첫째,

타 부처 정책에 의해 청소년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사례로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청소년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거나, 설득과 조율, 협력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겠냐는 현장의 시각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간의 연계가 조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부의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변경 관련해가지고도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 정책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여가부 같은 경우는 너무 뒤쫓아가고만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미리 선두에 서서 같이 협업하고 연계돼서 그제 먼저 정책이 나오기 전에 그런 내용들이 먼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좀 정부 부처 간의 연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걸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B1)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를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장에서 협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의 확고한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현장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청이나 학교와 협력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지역 차원에서 이러한 연계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또는 교육청과 탄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주면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하였다.

계속 현장에서도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력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지금 사실 교육청하고 협력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그래서 해봤자 교육 관련 협의회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실무협의회에 교육청 분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위원회로 활동한다든지 정도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하고의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그걸 토대로 현 지역에 있는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력 체계를 만들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B5)

(4) 전담공무원 확보 및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과 역량 강화

청소년정책 담당 인력에 관한 문제도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이전부터 반복적·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 및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과 역량 강화 문제가 여전히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가 과제로 포함되었으나, 실제로 역점을 두어 추진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전담공무원이 부재하다보니 지자체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전문성이나 지속성이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다른 한 부분은 전담공무원. 저번에도 전담공무원을 기본계획에 명시를 한다고 했는데 하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청소년정책은 있어도 청소년 업무의 주인이 없거든요, 주인이. 그리고 주인이 없으니까 이게 상당히 어떤 현장에 어떤 실행을 하는데 책임 의식이나 전문적인 부분,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중략) 제일 중요한 게 전담공무원이 아니까요. (B2)

전담공무원 문제와 함께, 현장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에 대한 이슈도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하며, 처우 개선과 더불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사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좀 덧붙이자면 지도자들에 대한 상담사나 지도사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도 필요할 거라고 봐요. (B4)

특히 새롭게 요구되는 정책 또는 사업 추진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존의 보수 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거는 현장전문가의 요청이고 요구인데 결국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어떤 식으로든 좀 계속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결국은 이런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을 정책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건 좀 새로운 모델 그리고 조금 더 긴 그림들의 논의들을 좀 담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자들의 교육 그 다음에 역량 그리고 혁신가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담겨져야. 이런 표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역지로 등을 떠밀어서라도 다음 또 8차 때 또 교육 정책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책을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A3)

우리 현장 인력에 대한 교육들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예요. (중략) 기존의 보수교육 외에 혹시 더 추가적으로 교육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B5)

(5) 성과 관리 시스템 운영

청소년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과를 산출점검환류할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간 청소년정책은 이러한 성과 관리 측면에서 다소 취약했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이 5개년 동안 추진되고 나면 대표적인 성과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미비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각 기본계획마다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소위 '대표선수' 같은 브랜드 정책을 전략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7차 계획이 끝날 때 우리가 평가할 때, 우리가 뭘 했어 뭐 달성했어 이럴 때 최소한 정책적인 달성 하나 현장에서 요거 하나가 있을 때 4년 뒤에 또 선거가 있을 때 또는 5년 뒤에 대통령 선거할 때 7차 청소년 정책이 결국은 바탕이 되거든요. (A3)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과 성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대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만듦으로서 좀 더 책무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 정책에는 이러한 제도가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 기능은 현재 청소년특별회의와 같이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천 의지나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이 너무 안 된다. 그러니까 특히 모니터링 부분인데 이걸 완전히 안 해도 아무도 책임을 안 저요. 그니까 자기네들 평가에 약간 내부적으로 하지 이걸 대사회적으로 그 어떤 누구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7차 때는 이런 모니터링 기능은 나는 특별회의가 됐든 아니면 제3의 청소년들이 됐든 저는 진짜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되는 정책이 꼭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너무 실행력이 떨어지는 계획을 재탕 삼탕 하면서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떤 곳에서도 정확하게 그걸 짚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름 바뀌어서 넣어도 새로운 정책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A1)

아울러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평가체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예컨대 청소년복지 분야에서 청소년안전망이 비교적 빠르게 자리를 잡은 이유 중 하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지표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보았을 때, 청소년활동 분야에서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영향력 있는 평가에 지표로 반영하는 것이 정책을 추동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담 쪽에서는 청소년안전망이 있습니다. 청소년안전망이 잘 되는 이유는 물론 지역사회에 많이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네트워크 협력이 잘 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 네트워크 협력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건 지자체 평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쪽에는 지자체 평가가 따로 없어요.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말고는. 그러면 달리 생각해 보면 청소년활동 쪽에서도 지자체 평가가 있다고 하면, 이 청소년활동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그런 네트워크나 그런 다양한 어떤 협력 체계들을 안전망처럼 견고히, 그리고 안전망 안에서의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등등 이런 구성들이 조금 더 철저히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제도화된다고 하면 그런 제도화적인 측면에서라도 어느 형식적으로라도 조금씩 네트워크들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 간의 어떤 협업이나 협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B4)

(6) 국가수준 정책으로서 세부사업과 차별화되는 정체성 확립

국가수준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때는 중장기 '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부적인 사업의 나열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전문가 FGI를 통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세부 사업과 정책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중장기 정책은 큰 틀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세부 사업들은 그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지원해주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간 정부 정책은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가수준의 중장기 계획은 세부적인 사업을 제시하는 데 연연하기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결국은 정책과 사업이 융합돼서 그래요. 이거를 섞어놔서 그래요. 최근에 세미나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저는 정책은 심플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에 지금 교육과정 나올 때 딱 10가지 과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제가 막 이렇게까지 책으로 나오는 과제는 없어요. 정책은 말 그대로 '5년 동안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바꾸겠다' 라는 정책과, 동아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다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들 이렇게 딱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부가 정책과 사업을 융합해서 하다 보니까 큰 정책을 못 만들고 그다음에 디테일한 사업을 못 건드리는 이런

아주 모호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A1)

청소년정책기본계획부터 좀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책으로 할 거면 정책에 좀 더 집중하고, 사업으로 할 거면 사업에 집중하되, 그 사업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되느냐를 봐야지 결국 이게 막 혼재돼 있으니까. (A3)

중앙에서는 세부사업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현장에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과제 또는 아이디어를 정부에 제공하거나 정부가 이를 잘 수행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가수준 정책에서 ‘정책’과 ‘사업’의 성격이 불분명하게 혼재되어 있었으며, 그로 인해 기본계획이 현장에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보다는 현장을 지배하는 도구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제에 새롭게 청소년정책을 정비하고 재구조화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답습을 탈피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 현장의 역할은 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가부가 할 일을 끊임없이 제안해 주고 그 할 일을 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게 이제 현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안이 그렇게 역할분담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현장을 지배하는 도구가 기본 계획이 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지금까지 그렇게 쓰여 왔다. 1차부터 6차까지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는 탈피할 때가 됐다. 이거는 정말로 재구조화돼야 되는 것이고. (A1)

3) 청소년정책 패러다임 개선 전략

마지막으로, 전문가 FGI에서는 앞으로 추진될 청소년정책이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롭게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논의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지역 중심 정책 추진,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이 포함된다.

(1)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서 ‘지역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정책의 이니셔티브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책의 ‘지역화’에 대한 논의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며, 이미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지향했던 방향이기도 하다.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정책목표에서 ‘4-2.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물론 인력·예산 부족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의 정책 추진 환경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향성 자체는 타당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같은 정책기조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지역사회 기반’이라는 용어가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개념이라 참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념이나 용어의 변화는 필요할 것 같다고 하였다.

6차 기본 계획 중에서 활동이나 진로 분야에 7차에 유지했으면 하는 게 뭐냐 라는 것에 저는 이제 페이지 5쪽인 것 같아요.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활동 연계 기능 강화는 가야 된다고 봐요. (중략)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활동 연계 기능 방안은 개괄적인 보편적인 접근은 좀 필요하지만 이제 용어나 개념들의 전환은 좀 필요하다. (A3)

지역에서 청소년정책이 활성화하려면 지자체의 관심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당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안사업이나 청년정책 등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에 추가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중장기 청소년 정책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제나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자체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사업을 하고 밑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그게 결국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많으면 그런 데 대한 지원과 지지가 많아지게 되고 그것들이 지역민들에 대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B4)

새로운 경제 정책이나 혹은 저출산 그쪽으로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의 국가 정책 외에 우리 지방 사업들을 신규 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동력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본계획에서는 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 사업들이 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꼭지들을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B5)

이와 관련하여, FGI에 참가한 현장전문가는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과거 지자체들이 UN 아동친화도시 인증, 평생교육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했던 것처럼, 지자체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지역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과에 따라 예산 교부를 차별화하거나, 청소년시설을 구축 지원금을 차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예산 교부에서 차별을 주고 청소년시설 구축 지원금을 차별을 주는 형태로 끌고 가면서 지방 정부를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봐요. 정책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거를 연동시켜서 계획을 좀 만들면 그럴듯하겠단 싶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그런 방법을 썼던 게 평생교육 도시 인증이예요. (A4)

(2) 기후환경위기에 대해 차별화 된 적극적 관심 필요

기후환경위기는 제6차 기본계획까지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으나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다. 특히 기후환경위기는 다른 여타 사회집단보다 청소년에게 각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후환경위기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해당하는 사안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환경위기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이 가장 중요한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을 기후세대로 부르기도 하며,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연유로 FGI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에서 기후환경위기에 대해서는 차별화 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기후환경위기 문제를 청소년정책의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후 변화에 대한 주제가 저희 섹션이었어요. 오셔서 패널로 같이 참여해서 토론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는 7차 계획을 전체를 통괄하는 주제 중에도 청소년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아닌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래 살아야 되니까. 환경이 나빠지면 나쁘다고 해서 오래 살아야 되는 건 청소년들 자신이니깐, 이거는 성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문제예요. 또 청소년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지만 성인의 문제이기도 한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전면에 내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사회 이슈와 만나야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가는 것이고요. (A1)

다만, 청소년분야에서 기후환경위기 문제를 어떠한 수준에서 어떠한 컨셉으로 정책화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생태 시민성 문제를 수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다루어 온 현장 전문가는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계의 대응과 반응이 다소 뒤늦다는 지적을 하였다. 오히려 교육분야에서는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생태교육을 이전부터 주요 아젠다로 삼고 관련 정책도 발굴하며 대응하고 있는데, 청소년분야에서는 시기적으로도 뒤늦은 감이 있고, 명확한 방향이나 대응 전략 등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저는 7차 기본계획에도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왜 우리는 생태전환 시대에 생태 시민성 교육이나 이런 얘기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지? (중략) 그래서 저는 오히려 7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개선 과제 정책의 목표로는 생태전환 시대에 생태전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기본 모토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중략)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어쨌든 ‘생태전환 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2022 생태전환 교육 기본계획’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히려 교육정책은 진보 교육감들은 이걸 작년 재작년부터 만들어서 계속 꾸리고 있는데, 청소년 계는 이제와서 환경 동아리, 환경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우리는 좀 늦 뜨거운 거죠. (A3)

기후환경위기 문제는 앞으로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정책에서 기후환경위기에 관한 아젠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비중을 두어 다룰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조사, 현장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 결과를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청소년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회환경변화에 대한 델파이 1차2차 조사결과,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변화는 ‘인구 구조의 변화’였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청소년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그로 인해 정책대상자의 규모와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청소년 주도성과 미래역량’, ‘사회변화와 갈등’, ‘디지털 시대’, ‘진로 및 자립’,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기후 위기’, ‘청소년 참여’, ‘청소년 정신건강’, ‘코로나 팬데믹’, ‘청소년 시설 개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언급된 키워드 중에는 사회환경변화라기보다는 해결해야 할 과제에 해당하는 요인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결과를 해석하면, 청소년인구 감소로 인한 정책대상자의 절대적 규모 축소에 대한 위기감,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필요성, 사회변화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빈부세대·성별·지역 간 갈등에 대한 고려, 코로나 팬데믹과 그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기후위기 등이 향후 청소년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회환경변화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의 주도성과 미래역량강화, 진로 및 자립지원 등이 요구되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증진, 청소년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림 IV-3. 국가청소년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회환경변화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단위: 점)

다음으로, 정책목표의 중요도 및 시급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사이에 합의수준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도출된 항목을 확인해보면,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의 혁신', '청소년정책의 공적기능 강화', '청소년활동의 혁신적 재편',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는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 및 권리 확대'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목표로 도출되었다. '청소년 건강권 보장', '청소년 자립'은 중요하지만 시급성이 다소 낮은 항목이었고, '청소년의 실질적 복지 보장', '진로 지원', '시민의식 함양', '공정한 성장'은 중요도와 시급성 모두 제시된 항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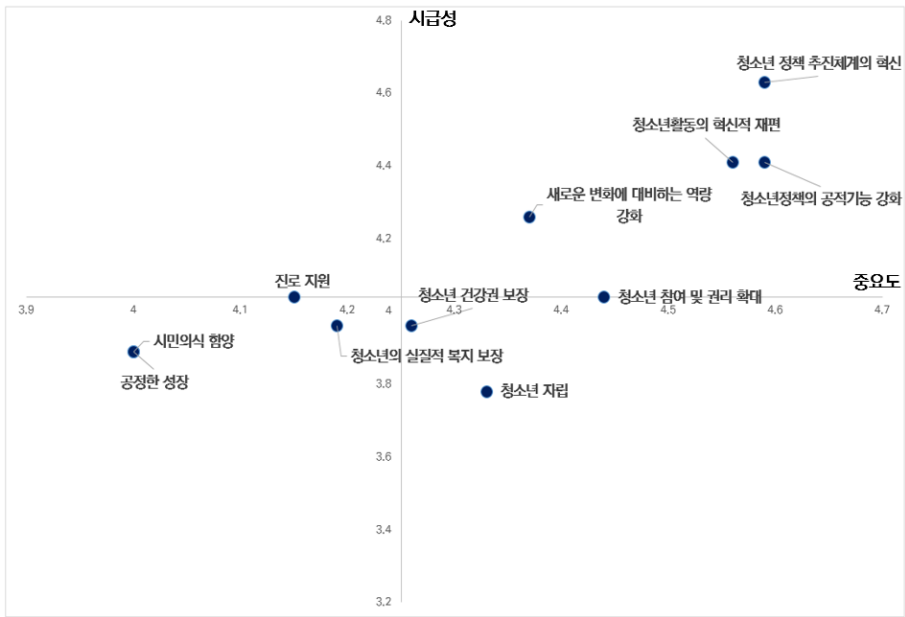


그림 IV-4. 정책목표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요약

[그림 IV-5]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중점과제 후보군에 대해 중요도 및 시급성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중요도 및 시급성에서 전문가 사이에 합의수준이 낮은 과제를 제외하고, 각각 중간값(median)을 기준으로 세로축과 가로축을 교차하여 사분면에 표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그 외에 '청소년분야 서비스의 질 향상', '청소년주도 활동 활성화', '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청소년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청소년지도사 역량 강화', '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중심 청소년정책 추진'도 비교적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분류되었다.

‘청소년 자립’, ‘청소년참여 확대’, ‘청소년지도사 역량 강화’, ‘청소년안전망 강화’는 중요하지만 시급성은 중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해소’, ‘중장기적 청소년 정책 준비’, ‘청소년시설 지원 확대’ 등은 중요도와 시급성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이었다.

종합해보면, 학계·현장 전문가들은 향후 국가청소년정책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청소년분야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청소년정책 전반의 쇄신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소년활동 정책의 혁신과 활동 활성화, 진로역량 강화, 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정신건강 강화 등이 핵심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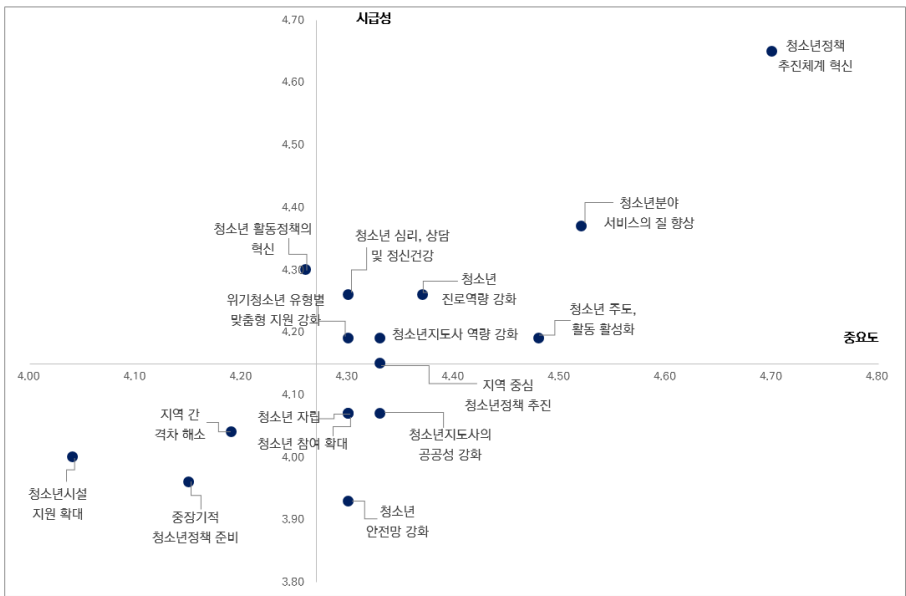


그림 IV-5. 중점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요약

델파이조사와 FGI 결과를 종합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전반적 쇠신

첫째, 청소년정책 전반의 쇠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에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정책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한 중요도 및 시급성 조사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의 공적기능 강화’, ‘청소년분야 서비스의 질 향상’도 각각 정책목표와 중점과제에서 중요도와 시급성이 우선 충족되는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향후 국가청소년정책을 새롭게 마련하는 데 있어, 정책 추진체계에 대대적인 혁신과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에 요구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F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재정 확충 및 재원 다각화, 중앙정부 수준에서 관계부처 간 실질적인 정책 연계조정 기능 수행, 중앙-지자체 간 유기적인 전달체계 구축, 정책성과관리 시스템 개선, 대국민 홍보 대폭 강화 등이 포함된다.

2) 수요자 중심 정책수립 및 추진

둘째,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환경변화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꼽았다. 청소년정책 관점에서 보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청소년인구 감소는 정책대상자의 절대적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시설 이용자 수 감소, 청소년활동의 규모 축소 등 청소년정책 전반의 쇠퇴와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바,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청소년정책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를 기대하는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될 청소년정책은 수요자 만족도를 높여서 ‘수요자들이 먼저 찾는 정책, 정책대상자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탈바꿈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델파이조사를 통해 주요 추진과제로 ‘청소년분야 서비스의 질 향상’이 도출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건지에서 볼 때, 청소년정책 전반에서 ‘진로’ 문제를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부각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 정책추진을 위한 중요한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진로역량 강화’는 향후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에 대한 델파이조사에서 중요도

와 시급성 모두 중간값 이상에 해당하는 우선순위 과제로 도출된 바 있다. 또한 FGI에서 현장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모두 청소년의 주요 관심사가 진로 문제이므로, 향후 진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진로 지원을 강화하되, 질적으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기존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전문가들은 진로 지원 정책은 중점과제로서 향후에도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하지만,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로 지원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전달체계, 지원내용 모두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활동 정책의 혁신 및 활동 활성화

셋째, 청소년활동 활성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활동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읽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그간 추진된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활동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향후 국가청소년정책이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로 ‘청소년활동의 혁신적 재편’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반영되어야 할 중점과제에서도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 ‘청소년 활동정책의 혁신’이 중요도 및 시급성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할 범위에 포함되었다.

요약하면, 청소년인구 감소, 교육정책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축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청소년활동이 위축되었는데, 그간 추진된 정책이 이러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추진될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넷째, 청소년 보호·복지 영역에서는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주요 아젠다로 인식되고 있었다. 정책목표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청소년 건강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었고, 중점과제에 대한 조사에서는 ‘청소년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가 중요도 및 시급성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과제에 속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청소년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가 비교적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조성 및 확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 복지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취약계층 청소년 중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사회양극화 심화로 인해 정책적 수요는 계속 증가하므로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 건강권 보장에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청소년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문제가 주요 중점과제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자해의 광범한 확산 등 고위기 청소년 문제를 비롯해,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5)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주요 중점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청소년지도사의 공공성 강화’가 중요도에서 중간값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들은 청소년지도자 이슈가 향후 청소년정책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청소년지도자들은 최일선 현장에서 청소년정책, 사업 또는 서비스를 수요자인 청소년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수요자의 정책체감도와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유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과제가 포함되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에 향후 추진될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에 좀 더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고, 체계적인 재교육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정책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고 정책 또는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전문가 의견수렴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이 [그림 IV-6]에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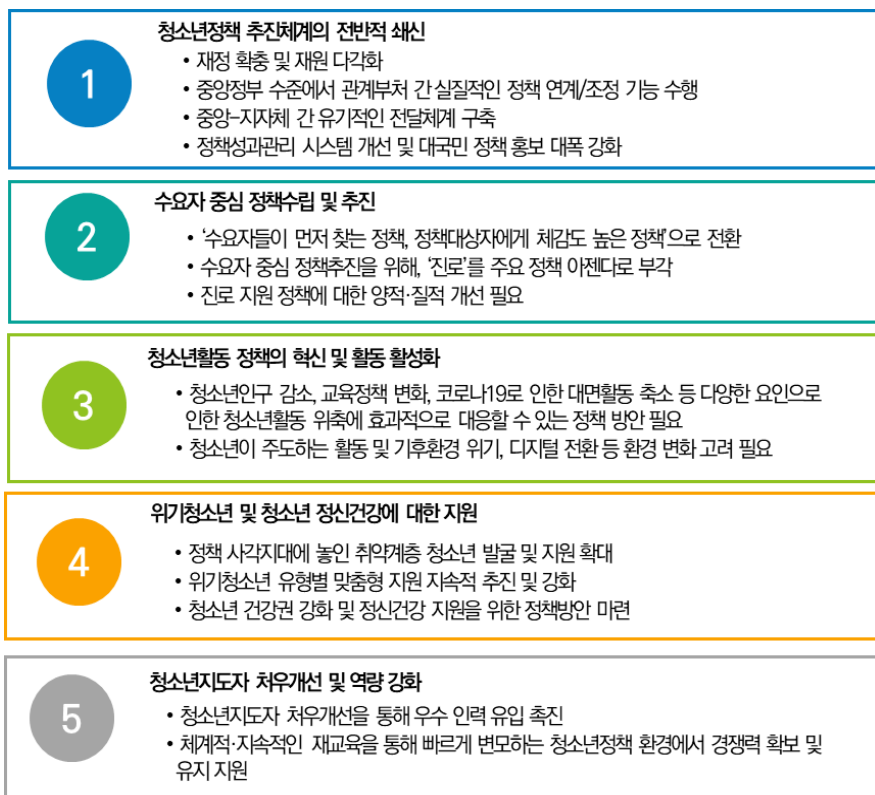


그림 IV-6.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주요 시사점 요약

○ — 제5장 청소년 대상 의견조사 결과 분석

- 1. 청소년 대상 의견조사 개요
- 2.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 3. 청소년 대상 FGI 결과
- 4. 소결 및 시사점

1. 청소년 대상 의견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국가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목표, 전략, 주요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책대상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청소년 대상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대상 의견조사는 설문조사와 FGI 조사의 2가지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1) 설문조사 개요

국가청소년정책 전략을 개발함에 있어서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필요성을 조사하여,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전국의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층화다단계집락표집으로 3,000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2021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중·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하여 지역구분(5개 권역)×학교급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하고,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표 V-1>과 같이 학생 수와 학교 수를 결정하였다. 각 학교급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15개 층(지역구분×학교급) 내에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표 V-1. 지역구분×학교급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할당

(단위: 명, 개교)

구분	단순비례배분						변형비례배분					
	학생 수			학교 수			학교 수			예상 조사 학생 수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서울	120	170	183	4.8	6.3	7.3	4	6	6	100	162	150
경기/인천	274	372	355	10.9	13.8	14.2	12	15	15	300	405	375
강원/충청	116	159	158	4.6	5.9	6.3	4	6	6	100	162	150
경상	195	268	270	7.8	9.9	10.8	8	9	12	200	243	300
전라/제주	95	131	135	3.8	4.8	5.4	4	6	6	100	162	150
합계	800	1,100	1,100	32.0	40.7	44.0	32	42	45	800	1,134	1,125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체계를 기본틀로 삼았다. 정부가 지난 5년 동안(2018~2022년) 추진했던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을 묻고, 향후 희망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표 V-2>와 같다. 설문지는 연구원 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202205-HR-고유-006).

표 V-2.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내용의 구성

대영역	소영역	내용(문항)	문항 번호	출처
현재 상태		• 삶에 대한 만족도	• 문13	• 김기현 외(2019)
		• 청소년정책의 효용성	• 문14	• 김기현 외(2019)
		• 현재 가장 고민하는 문제	• 문15	• 김기현 외(2019)를 참조하되, 선택지 일부 수정·보완
기존 청소년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 성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 청소년 참여 확대 관련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 청소년 참여 확대 관련 기존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 • 청소년 권리 증진 기반 조성 관련 정책의	• 문16 • 문16-1 • 문17	• 관계부처합동(2018.3).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2018~2022)」을 기본틀로 활용

대영역	소영역	내용(문항)	문항 번호	출처
		- 효과성 및 필요성 • 청소년 권리 증진 기반 조성 관련 기존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	• 문17-1	
		•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관련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	• 문18 • 문18-1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관련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	• 문19 • 문19-1	
		•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관련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	• 문20 • 문20-1	
		•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관련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	• 문21 • 문21-1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	• 문22 • 문22-1	
		• 대상별 맞춤형 지원 관련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 대상별 맞춤형 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	• 문23 • 문23-1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관련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	• 문24 • 문24-1	
정책적 수요		• 국가에서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정책이나 서비스(개방형)	• 문25	• 연구진 작성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① 자료수집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22년 5월 30일~7월 26일에 실시하였다. 표본설계에 따라 선정된 학교에 협조공문 및 조사 안내문을 발송한 후, 조사전문기관에서 해당학교에 연락해 조사협조를 요청하고 이후 조사를 수락한 학교에 대해 조사원이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교방문조사를 우선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학교에서 방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에 앞서 조사전문기관에서 조사원을 선발하고 조사개요, 문항별 지침, 조사 진행 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5월 16일(서울, 집체교육)과 5월 18일(대전·대구·부산·광주, 원격교육)에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② 분석방법

조사 결과는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표본 평균 또는 비율로 제시하였다. 가중치에는 표본추출률, 응답률 및 사후보정률을 반영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항목별 응답 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경변인별 집단 간 응답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χ^2 분석)이나 평균비교(t-test, 일원변량분석 등)를 실시하였다.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어떠한 집단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차이검증에 사용된 배경변인으로는 성별, 학교급, 권역, 지역규모 등이 투입되었다.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본 수 3,000명을 목표로 최종 3,024명의 청소년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이 중 남자 청소년은 48.3%, 여자 청소년은 51.7%였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5~6학년) 25.2%, 중학생 38.2%, 고등학생은 36.6%였고, 권역별로는 서울 15.8%, 경기/인천 33.3%, 강원/충청 14.4%, 경상 24.4%, 전라/제주 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거주 청소년이 39.4%,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이 47.5%,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이 13.1%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3,024	100.0
성별	남자	1,459	48.3
	여자	1,565	51.7
학교급	초등학교(5~6학년)	762	25.2
	중학교	1,156	38.2
	고등학교	1,106	36.6
권역	서울	478	15.8
	경기/인천	1,008	33.3
	강원/충청	436	14.4
	경상	739	24.4
	전라/제주	363	12.0
지역규모	대도시	1,190	39.4
	중소도시	1,437	47.5
	읍면지역	396	13.1

2) 청소년 집단 면접조사(FGI) 개요

설문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청소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따른 문제점이나 정책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집단별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특히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과 후기청소년들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면접조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의견을 듣기 어려운 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령, 거주지, 학교 재학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비수도권, 학교 밖, 후기청소년 등 4개로 면접집단을 구분하였다. 또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청소년정책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고 그간 정책제안 활동을 해온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면접은 각 집단별로 1회씩 총 4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모든 면접 내용은 면접참여자의 동의를 구해 녹음한 뒤, 전사하였다.

표 V-4. 청소년 대상 FGI 참여자

1차 FGI	참가자	특성	2차 FGI	참가자	특성
비수도권 거주 청소년 (22.7.18.)	A1	- 전북 거주 -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학교 밖 청소년 (22.7.18.)	B1	- 경남 양산시 거주 -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A2	- 세종 거주 -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활동		B2	- 서울 강동구 거주 -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A3	- 울산 거주 -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정책위원회 활동		B3	- 인천 거주 -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B4	- 강원 원주시 거주 -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3차 FGI	참가자	특성	4차 FGI	참가자	특성
수도권 거주 청소년 (22.7.27.)	C1	- 인천 거주 -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후기 청소년 (22.7.29.)	D1	청소년정책위원회 활동
	C2	- 서울 거주 -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D2	청소년정책위원회 활동
	C3	- 서울 거주 -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D3	청소년정책위원회 활동
	C4	- 경기 성남시 거주 -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D4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C5*	- 경북 영주시 거주 - 청소년정책위원회 활동			

*C5 참가자는 비수도권 거주자로서 1차 FGI 참가자로 섭외되었으나 개인정보로 참석이 연기되어 3차 FGI에 참여하였음.

면접내용은 크게 그간 추진된 청소년정책에서 아쉬웠던 점 및 향후 청소년정책에 바라는 점으로 대별된다. 향후 청소년정책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참여, 활동, 보호, 복지영역 등으로 나누어 질문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2.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현재 상태

(1) 삶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러한 연유로 지난 5년간 추진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역시 청소년이 체감하는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최상위 성과지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기에 앞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질문은 전혀 만족하지 못함(0점)~매우 만족함(10점)의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표 V-5〉에는 응답값을 해석의 편의상 0~3점, 4~6점, 7~10점의 세 단계로 구분한 응답률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을 제시하였다. 전체 청소년의 58.8%는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13.1%의 청소년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각 응답값을 점수화하여 평균을 산출한 결과, 삶의 만족도는 6.62점으로 100점 만점에 66.2점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9.4점으로 여자 청소년의 63.2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70.1점)이 중학생(65.1점)과 고등학생(64.6점)에 비해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만족하지 못함 (①~③)	보통 (④~⑥)	만족함 (⑦~⑩)	100점 만점 환산값	t/F 검증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전체	3,002	13.1	28.0	58.8	66.2	6.62	2.534	
성별	남자	1,443	10.2	25.6	64.2	69.4	6.94	2.502
	여자	1,559	15.8	30.1	54.0	63.2	6.32	2.527
학교급	초등학교 ^a	757	13.8	21.1	65.0	70.1	7.01	2.737
	중학교 ^b	1,142	14.6	28.6	56.9	65.1	6.51	2.562
	고등학교 ^c	1,103	11.2	32.1	56.8	64.6	6.46	2.324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함 ← ⑤ 보통 → ⑩ 매우 만족함

3)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2) 청소년정책의 효용성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청소년정책들이 청소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삶의 만족도 문항과 마찬가지로 11점 척도로 응답한 값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평균값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표 V-6>에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 청소년의 22.2%는 청소년정책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29.0%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절반에 가까운 48.7%가 보통 범위의 값에 응답하여, 청소년들은 행복한 삶에 대한 청소년정책의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다. 특히 고등학생은 12.9%만이 청소년정책이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학교급별 결과와 권역별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급별로는 어릴수록(초등학교 57.3점, 중학교 46.4점, 고등학교 40.6점) 청소년정책의 효용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경기/인천의 점수(48.1점)가 가장 높고, 서울의 점수(43.7점)가 가장 낮았다. 다만 사후검증 분석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V-6. 청소년정책의 효용성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도움이 되지 않음 (①~③)	보통 (④~⑥)	도움이 됨 (⑦~⑩)	100점 만점 환산값	t/F 검증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전체	3,004	29.0	48.7	22.2	47.0	4.70	2.426	
학교급	초등학교	758	15.8	45.6	38.5	57.3	5.73	2.439
	중학교	1,144	28.3	51.2	20.5	46.4	4.64	2.305
	고등학교	1,103	38.9	48.1	12.9	40.6	4.06	2.306
권역	서울	476	33.9	47.8	18.4	43.7	4.37	2.380
	경기/인천	1,000	27.5	49.5	22.9	48.1	4.81	2.407
	강원/충청	433	27.1	52.4	20.5	47.0	4.70	2.401
	경상	737	28.3	47.7	23.8	47.7	4.77	2.487
	전라/제주	359	31.1	45.1	24.0	46.9	4.69	2.420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⑤ 보통 → ⑩ 매우 도움이 됨

3)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3) 현재 가장 고민하는 문제

청소년들에게 현재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과반수인 50.5%의 청소년이 성적과 대학입시 등의 학업 관련 고민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전공, 직업, 취업 등의 진로 관련 고민에 대한 응답률이 21.5%로 높아, 전체 조사 대상 청소년의 10명 중 7명 이상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응답률은 88.4%(학업 65.5%, 진로 22.9%)로 10명 중 9명 정도의 고등학생이 학업과 진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은 학업과 진로 고민 외에 건강(14.8%)과 친구와의 관계(12.6%)에서 1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남녀 모두 학업 관련 고민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 관련 고민에 대한 응답률이 조금 더 높았고,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보다 진로 관련 고민에 대한 응답률이 다소 높았다.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학업 관련 고민을 가장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중소도시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고민 응답률이 대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낮고, 진로에 대한 고민 응답률은 읍면지역 청소년들이 조금 더 높은 특징이 있다. 정책 개발 시 지역별로 고른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표 V-7. 현재 가장 고민하는 문제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χ^2
전체	2,932	50.5	21.5	5.2	6.2	2.1	7.2	2.0	0.3	2.5	2.5	
성별	남자	1,398	49.0	22.7	3.2	8.1	2.1	5.8	2.5	0.5	2.8	58.718***
	여자	1,534	51.8	20.4	7.0	4.5	2.1	8.4	1.5	0.2	2.2	
학교급	초등학교	747	30.8	16.6	7.7	14.8	4.3	12.6	1.9	0.7	4.3	443.062***
	중학교	1,113	49.2	23.5	5.9	4.4	1.8	8.2	3.2	0.2	2.2	
	고등학교	1,072	65.5	22.9	2.8	2.1	0.9	2.5	0.8	0.2	1.5	
지역 규모	대도시	1,164	53.4	20.8	4.2	4.7	1.9	6.8	2.0	0.3	2.6	39.929**
	중소도시	1,393	47.5	21.6	5.5	7.8	2.3	8.3	2.0	0.4	2.3	
	읍면지역	375	52.5	23.4	7.3	4.9	2.0	4.3	1.8	0.5	2.6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학업 관련 고민(성적, 대학입시 등), ② 진로 관련 고민(전공, 직업, 취업 등), ③ 외모, ④ 건강(신체적·정신적 건강 모두 포함), ⑤ 부모(보호자)와의 관계, ⑥ 친구와의 관계, ⑦ 이성과의 관계, ⑧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⑨ 경제 사정(돈 걱정), ⑩ 기타

3)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2)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첫 번째 정책목표인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지원 등 3개의 관련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중점과제별로 그동안 추진된 정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1)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참여 확대」 중점과제는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학교에서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참여 방식 다변화의 3개 하위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추진과제들이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표 V-8. 「청소년 참여 확대」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단위: %)

구분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학교에서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참여 방식 다변화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전체	66.3	77.6	78.4	85.0	74.8	80.6
성별	남자	61.8	72.2	75.3	69.8	75.5
	여자	70.5	82.6	81.3	79.5	85.2
학교급	초등학교	73.6	81.2	81.2	77.7	80.4
	중학교	64.5	75.3	78.3	74.1	77.1
	고등학교	63.3	77.6	76.6	73.6	84.2
권역	서울	58.8	75.6	77.7	86.7	72.4
	경기/인천	65.6	77.1	79.8	86.1	77.4
	강원/충청	68.2	77.9	78.7	83.3	77.1
	경상	69.1	78.8	77.0	82.8	71.7
	전라/제주	70.7	79.1	78.0	85.8	74.5
지역 규모	대도시	64.2	75.8	76.0	83.7	75.1
	중소도시	67.0	78.6	79.5	85.8	74.6
	읍면지역	70.8	79.9	81.7	85.6	74.4

주: 1) 4점 척도의 긍정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임.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인지를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조사하고, <표 V-8>에 긍정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정책 효과성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학교에서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78.4%, ‘청소년 참여 방식 다변화’ 74.8%,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66.3%의 순으로, 세 과제 가운데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리 증진’이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학교에서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85.0%, ‘청소년 참여 방식 다변화’ 80.6%,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77.6%로 효과성과 같은 순위였다.

「청소년 참여 확대」에 관한 이상의 3개 정책 중에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도 ‘학교에서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이 47.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청소년 참여 방식 다변화’ 27.5%,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25.2% 순이었다(<표 V-9>). 배경변인별 분석에서는 성별과 학교급별 비교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모든 하위 집단에서 「청소년 참여 확대」 관련 정책 중에는 ‘학교에서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2순위와 3순위에서 여자 청소년과 초등학생이 조금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여자 청소년과 초등학생은 ‘청소년 참여 방식 다변화’보다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에 조금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청소년 참여 방식 다변화’에 대한 수요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표 V-9. 「청소년 참여 확대」 정책 수요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학교에서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참여 방식 다변화	χ^2	
전체	2,580	25.2	47.3	27.5		
성별	남자	1,208	22.2	49.6	28.2	11.112**
	여자	1,373	27.9	45.2	26.9	
학교급	초등학교	648	29.8	45.2	25.0	14.344**
	중학교	961	24.5	49.4	26.2	
	고등학교	971	22.9	46.6	30.5	

주: 1) * $p<.05$, ** $p<.01$, *** $p<.001$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에는 하위 추진과제로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청소년 근로권의 침해 예방 및 보호,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의 5개 과제가 설정되어 있다. 이 추진과제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효과성 평가는 86.5%~90.6%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또 10명 중 9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관련 5개 추진과제들이 향후에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성과 필요성 평가가 가장 높았던 정책은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정책으로, 정책 효과성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90.6%로 가장 높아,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과 같은 신체 건강권 보장 정책이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93.1%의 청소년들이 신체 건강권 보장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10.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단위: %)

구분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청소년 근로권의 침해 예방 및 보호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청소년의 정신 건강권 보호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성별	전체	86.5	90.1	88.9	91.3	89.5	91.6	86.0	91.0	90.6	93.1
	남자	82.9	85.5	85.9	88.2	86.8	89.0	82.6	87.8	87.1	89.7
	여자	89.9	94.4	91.8	94.2	92.1	94.1	89.2	93.9	93.8	96.2
학교급	초등학교	89.0	88.9	87.1	88.1	92.1	90.8	89.8	91.6	91.7	90.6
	중학교	85.4	88.1	87.0	89.2	89.9	90.3	85.6	89.2	90.6	92.3
	고등학교	85.9	93.1	92.2	95.6	87.4	93.6	83.8	92.3	89.8	95.6
권역	서울	84.6	89.2	90.3	90.8	89.0	91.9	82.8	91.0	89.0	94.4
	경기/인천	86.8	91.1	88.8	91.1	89.5	91.2	87.4	92.0	91.8	93.2
	강원/충청	85.6	87.8	88.5	91.8	87.5	92.3	86.3	90.5	88.0	92.8
	경상	86.9	91.0	88.2	91.4	90.4	92.3	85.9	89.8	90.8	92.3
	전라/제주	88.4	89.8	89.5	91.7	91.0	90.5	85.9	90.8	92.1	92.7
지역 규모	대도시	86.5	90.1	88.9	91.5	89.8	91.3	85.5	90.8	90.6	93.8
	중소도시	87.1	89.9	87.9	90.4	89.9	91.8	86.2	90.6	90.2	92.3
	읍면지역	84.4	90.9	92.7	94.0	87.5	92.3	86.7	92.7	92.0	93.6

주: 1) 4점 척도의 긍정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임.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한편 5가지 정책 중에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이 25.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정신 건강권 보호(25.4%), 신체 건강권 보장(20.6%),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15.2%), 근로권의 침해 예방 및 보호(12.8%)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여자 청소년은 정신 건강권 보호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여가권 신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각각 29.6%, 29.0%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은 정신 건강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5.3%로 가장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등 도시지역은 여가권 신장 정책에 대한 수요가 각각 27.4%, 26.2%로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은 여가권 신장 정책 수요 응답률은 20.8%였던 데 비해, 정신 건강권 보호에 대한 수요는 29.7%로, 다른 정책에 대한 수요보다 높아 읍면지역 청소년들의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은 인식 개선이나 권리 의식 제고 등의 정책보다는 직접적인 기본권 관련 정책이 더 필요하고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권의 관련 정책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이 조사의 대상이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적었던 데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V-11.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정책 수요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청소년 근로권의 침해 예방 및 보호	아동· 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청소년의 정신 건강권 보호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χ^2
전체		2,926	15.2	12.8	25.9	25.4	20.6	
성별	남자	1,391	16.8	13.2	29.4	23.2	17.4	35.328 ***
	여자	1,536	13.8	12.5	22.8	27.5	23.5	
학교급	초등학교	734	14.6	11.0	29.6	25.3	19.5	36.879 ***
	중학교	1,105	14.5	11.1	29.0	25.6	19.8	
	고등학교	1,087	16.4	15.9	20.3	25.3	22.1	
지역 규모	대도시	1,160	15.2	11.2	27.4	24.5	21.7	15.744 *
	중소도시	1,382	15.2	13.3	26.2	25.0	20.3	
	읍면지역	384	15.2	16.1	20.8	29.7	18.3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 시민 의식 함양, △양성평등 의식 제고,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들이 청소년의 행복한 삶에 기여했는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81.5%의 청소년이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고, 조사 대상 청소년의 86.7%가 향후에도 이 정책이 청소년을 위해서 계속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양성평등 의식 제고’ 정책의 효과성(80.0%)과 필요성(84.1%)을 높게 평가하였고,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의 효과성과 필요성은 각각 73.6%와 79.7%로 뒤를 이었다.

표 V-12.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단위: %)

구분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양성평등 의식 제고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전체		73.6	79.7	80.0	84.1	81.5	86.7
성별	남자	71.6	75.6	71.9	75.5	77.3	82.2
	여자	75.6	83.5	87.7	92.0	85.4	90.8
학교급	초등학교	77.4	77.6	86.3	85.8	86.2	88.8
	중학교	71.6	77.2	81.4	84.8	80.9	84.5
	고등학교	73.2	83.7	74.4	82.2	79.0	87.6
권역	서울	71.1	79.3	78.4	77.7	79.1	87.4
	경기/인천	74.0	80.4	80.1	84.6	82.4	86.2
	강원/충청	75.0	77.3	81.1	85.3	82.5	86.5
	경상	73.2	79.3	80.5	86.7	82.1	87.3
	전라/제주	75.4	81.9	79.6	84.2	80.0	86.0
지역 규모	대도시	73.7	79.8	78.3	81.1	80.9	87.2
	중소도시	73.9	80.4	80.8	85.9	80.8	86.2
	읍면지역	72.4	76.6	82.5	86.4	85.9	86.7

주: 1) 4점 척도의 긍정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임.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이상의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에 관한 3가지 정책 중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에 대한 응답은 ‘양성평등 의식 제고’가 3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순이었다. 그러나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관련 정책들은 성별, 교급별, 권역별로 정책 수요 양상이 많이 다른 편이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은 44.8%로 남자 청소년의 32.8%에 비해 12%p나 높았다. 이에 비해 남자 청소년들은 ‘양성평등 의식 제고’ 정책보다는 언어문화 향상 등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정책이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중학생은 ‘양성평등 의식 제고’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고등학생은 3가지 정책에 대한 응답률이 비교적 고른 편이었다. 그리고 서울지역 청소년은 ‘양성평등 의식 제고’ 정책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정책 수요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양성평등 의식 제고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χ^2	
전체	2,906	25.1	39.1	35.7		
성별	남자	1,376	27.7	32.8	39.6	43.867***
	여자	1,531	22.9	44.8	32.3	
학교급	초등학교	740	18.5	38.1	43.4	58.427***
	중학교	1,102	24.2	44.3	31.5	
	고등학교	1,065	30.8	34.5	34.8	
권역	서울	464	21.2	36.2	42.7	17.074*
	경기/인천	966	24.9	40.5	34.6	
	강원/충청	406	23.8	42.7	33.5	
	경상	712	27.5	38.6	33.9	
	전라/제주	358	27.7	36.3	36.0	

주: 1) * $p<.05$, ** $p<.01$, *** $p<.001$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4)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영역 중점과제별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영역 3개 중점과제의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각 영역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표 V-14>에 제시하였다.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중점과제의 효과성과 필요성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아, 청소년들은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관련 정책들이 청소년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 점수가 2.96점과 3.08점으로 뒤를 이었고, ‘청소년 참여 확대’ 정책은 효과성 2.84점, 필요성은 2.99점이었다. 4점 척도로 조사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므로 3점은 긍정, 4점은 강한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은 모든 성별, 학교급별, 권역별, 지역규모별 점수에서 3점을 초과하여 청소년들이 해당 과제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4.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영역 중점과제별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단위: 점)

구분		1-1. 청소년 참여 확대		1-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전체	2.84	2.99	3.25	3.36	2.96	3.08
성별	남자	2.76	2.90	3.16	3.27	2.86	2.97
	여자	2.90	3.06	3.33	3.45	3.06	3.19
학교급	초등학교	2.93	3.04	3.31	3.35	3.08	3.13
	중학교	2.80	2.92	3.21	3.31	2.93	3.02
	고등학교	2.80	3.01	3.24	3.43	2.91	3.12
권역	서울	2.81	2.99	3.25	3.40	2.93	3.06
	경기/인천	2.85	3.01	3.27	3.38	2.97	3.11
	강원/충청	2.83	2.93	3.16	3.28	2.95	3.04
	경상	2.83	2.98	3.26	3.37	2.97	3.09
	전라/제주	2.83	2.99	3.28	3.36	2.95	3.06
지역 규모	대도시	2.83	2.98	3.26	3.38	2.96	3.08
	중소도시	2.83	2.98	3.24	3.35	2.96	3.09
	읍면지역	2.87	3.00	3.25	3.38	2.98	3.08

주: 1) 해당 영역 문항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음.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3)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영역은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계 강화의 3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이 생각하는 각 중점과제 관련 정책들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1)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관련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과학기술·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등 4개 세부정책들이 청소년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정책 효과성은 83.4%~85.6%, 정책 필요성은 86.2%~87.8%의 범위로 세부정책 간 큰 차이는 없었다. 90% 이상의 긍정 응답값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역량 기반

표 V-15. 「청소년활동 성장지원 체계 혁신」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단위: %)

구분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과학기술·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성별	전체	85.6	87.8	83.4	86.6	83.7	87.1	85.4	86.2
	남자	82.7	84.9	80.5	82.9	82.4	84.9	80.8	82.0
	여자	88.4	90.5	86.2	90.0	84.9	89.2	89.7	90.1
학교급	초등학교	86.0	85.1	86.1	86.7	83.7	84.6	86.6	85.2
	중학교	85.3	86.0	82.4	84.5	82.4	84.4	86.6	86.0
	고등학교	85.8	91.6	82.7	88.7	85.1	91.5	83.3	87.1
권역	서울	85.3	87.7	84.7	87.6	83.5	89.0	86.4	87.6
	경기/인천	86.3	88.2	83.8	87.7	83.4	86.5	84.5	83.8
	강원/충청	86.3	87.2	81.9	86.3	82.3	85.0	83.9	87.9
	경상	84.1	88.6	84.0	86.7	84.7	88.1	85.9	86.6
	전라/제주	86.7	86.1	81.4	82.4	84.4	86.7	87.4	88.1
지역 규모	대도시	85.8	87.8	83.4	87.3	85.6	88.8	86.3	88.0
	중소도시	85.6	87.8	83.2	85.8	82.0	85.9	84.6	84.9
	읍면지역	85.2	88.0	84.3	87.4	84.3	86.4	85.6	85.6

주: 1) 4점 척도의 긍정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임.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정책 필요성에 긍정 응답을 하였다. 고등학생은 '역량 기반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 구축'과 '과학기술·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의 정책 필요성에 90% 이상이 긍정 응답을 하여, 10명 중 9명 이상이 역량 증진 관련 정책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청소년들은 4개 정책 중에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33.0%), '과학기술·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29.3%),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20.7%),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17.0%)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배경변인별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나타냈는데, 전반적으로는 각 집단에서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정책의 수요가 가장 높았으나, 남자 청소년, 고등학생, 서울 지역 청소년은 '과학기술·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정책 수요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더 높았다.

표 V-16.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정책 수요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과학기술·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수요자 중심 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χ^2
전체		2,931	20.7	33.0	29.3	17.0	
성별	남자	1,393	19.9	28.7	37.9	13.6	100.935***
	여자	1,538	21.4	36.8	21.5	20.2	
학교급	초등학교	735	12.1	36.7	33.4	17.8	73.604***
	중학교	1,114	19.6	35.0	27.2	18.2	
	고등학교	1,082	27.8	28.3	28.7	15.3	
권역	서울	468	23.7	25.4	31.9	19.0	38.220***
	경기/인천	962	18.4	34.0	29.9	17.7	
	강원/충청	415	20.6	32.1	29.3	18.0	
	경상	725	20.1	38.3	28.9	12.7	
	전라/제주	360	24.5	30.2	25.1	20.2	
지역 규모	대도시	1,163	21.6	30.9	30.3	17.3	20.667**
	중소도시	1,380	19.9	33.5	27.8	18.8	
	읍면지역	387	21.0	37.4	31.6	10.0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2)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등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스포츠 활동 활성화와 문화예술활동 지원,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정책이 청소년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3.0%였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응답도 92.8%로 상당히 높았다. 이에 비해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와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는 최근 수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교류 등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V-17.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단위: %)

구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전체	92.1	90.9	93.0	92.8	83.3	85.2	69.1	74.0	90.5	91.7
성별	남자	87.8	86.8	91.9	91.3	77.8	79.3	62.5	67.8	87.0	88.4
	여자	96.1	94.7	94.0	94.3	88.5	90.6	75.1	79.8	93.8	94.8
학교급	초등학교	90.3	88.4	93.9	92.7	84.0	82.1	79.9	81.4	91.6	92.4
	중학교	93.4	90.1	94.1	92.7	82.8	84.4	70.0	74.0	91.7	91.2
	고등학교	92.0	93.3	91.3	93.0	83.4	87.9	60.6	69.0	88.6	91.8
권역	서울	95.1	90.7	94.3	92.7	83.5	86.0	59.5	68.1	89.9	90.9
	경기/인천	90.7	89.2	93.0	92.4	83.7	85.2	71.0	74.9	90.0	91.8
	강원/충청	92.6	91.3	91.5	92.9	82.1	83.4	71.5	75.2	89.4	91.6
	경상	91.8	92.4	91.8	93.0	83.8	87.0	72.1	75.8	92.0	93.0
	전라/제주	92.4	92.1	95.7	93.8	82.5	82.3	67.1	74.3	90.8	90.1
지역 규모	대도시	93.2	90.8	93.7	93.2	83.5	86.0	65.4	71.1	90.9	91.3
	중소도시	91.7	90.8	92.1	92.2	82.6	84.0	71.0	76.5	89.6	91.3
	읍면지역	90.5	91.5	94.1	94.2	85.4	87.0	73.2	73.8	92.3	94.6

주: 1) 4점 척도의 긍정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임.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청소년들은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정책 중에서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정책이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다(31.5%)고 응답하였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44.3%가 스포츠 활동 활성화가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하여, 남자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와 정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와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 정책에는 10% 정도의 청소년이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정책 수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응답이 30.2%로 높았는데, 문화예술활동 지원 정책은 스포츠 활동 활성화 정책과는 반대로 여자 청소년들의 수요가 남자 청소년보다 16.9%p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정책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수요가 더 많았고,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정책은 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수요가 더 많았으며, ‘국제교류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는 고등학생의 수요가,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과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정책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은 어릴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정책은 문화예술, 스포츠, 국제교류, 남·북한 청소년 교류 등의 활동 영역별로 남녀간, 교급간 수요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V-18.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정책 수요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χ^2	
전체	2,953	30.2	31.5	11.1	10.2	17.0		
성별	남자	1,407	21.3	44.3	8.5	10.7	15.1	233.447 ***
	여자	1,545	38.2	19.9	13.5	9.6	18.8	
학교급	초등학교	747	18.0	33.2	5.9	19.8	23.2	249.294 ***
	중학교	1,128	30.2	33.4	9.5	9.0	17.8	
	고등학교	1,078	38.5	28.4	16.4	4.6	12.0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3)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청년) 취업 지원 기반 강화,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 등의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은 5가지 정책 중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청소년(청년) 취업 기반 강화' 정책의 효과성(89.5%~90.0%)과 필요성(91.1%~92.1%)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조사 대상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높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 뿐 아니라 더 넓은 시각으로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V-19.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단위: %)

구분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청년) 취업 기반 강화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전체		90.0	92.1	89.9	91.8	84.6	86.2	89.5	91.1	87.3	88.6
성별	남자	85.5	88.1	86.2	88.4	80.7	82.5	86.6	88.5	84.3	85.6
	여자	94.2	95.7	93.3	95.0	88.1	89.5	92.3	93.4	90.0	91.4
학 교 급	초등학교	91.0	93.0	91.4	91.5	84.3	84.4	87.6	86.7	85.2	85.0
	중학교	90.6	90.5	89.4	90.1	85.0	85.4	89.5	90.4	85.6	86.0
	고등학교	88.7	93.0	89.3	93.8	84.3	88.1	90.9	94.7	90.4	93.9
권역	서울	88.4	91.5	89.4	91.2	84.0	87.6	90.3	91.9	88.8	90.3
	경기/인천	89.2	91.5	90.3	91.6	83.5	84.8	89.4	89.8	86.8	88.3
	강원/충청	90.0	92.0	88.8	91.0	83.1	84.2	88.2	91.6	85.2	87.3
	경상	90.9	92.0	89.7	91.8	85.9	87.5	89.0	91.5	86.7	87.3
	전라/제주	92.6	94.4	90.8	94.1	87.0	87.7	91.7	92.0	90.4	91.7
지역 규모	대도시	90.5	92.7	90.4	91.9	87.0	87.4	91.0	91.8	90.1	90.5
	중소도시	89.3	91.3	88.6	91.3	82.8	85.0	88.2	90.2	85.6	87.3
	읍면지역	91.0	92.7	92.8	93.4	83.6	86.6	90.0	92.3	84.8	88.3

주: 1) 4점 척도의 긍정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임.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관련 5가지 정책의 수요를 질문한 결과, ‘청소년(청년) 취업 기반 강화’(27.5%),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26.8%),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24.5%) 정책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11.9%)과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9.4%)는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을 확대하는 협력체계 구축이나, 청소년시설 내 청소년협동조합 활동을 장려하고 창업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은 위의 3개 정책보다는 청소년이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정책은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로 응답에 차이를 보였다. 남자 청소년은 ‘청소년(청년) 취업 기반 강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여자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정책이, 중학생은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정책이, 고등학생은 ‘청소년(청년) 취업 기반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청소년은 ‘청소년(청년) 취업 기반 강화’, 중소도시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읍면지역 청소년은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정책을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V-20.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정책 수요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청년) 취업 기반 강화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	χ^2	
전체	2,955	24.5	26.8	11.9	27.5	9.4		
성별	남자	1,412	22.0	24.2	14.2	28.3	11.3	36.978 ***
	여자	1,543	26.8	29.2	9.8	26.7	7.6	
학교급	초등학교	742	27.0	32.9	11.9	21.4	6.8	75.072 ***
	중학교	1,128	26.8	26.4	13.1	25.7	8.1	
	고등학교	1,084	20.3	23.0	10.7	33.5	12.4	
지역 규모	대도시	1,166	21.8	25.3	12.1	30.2	10.5	16.568*
	중소도시	1,398	25.7	28.0	11.9	25.8	8.7	
	읍면지역	391	28.3	26.8	11.3	25.3	8.4	

주: 1) *p<.05, **p<.01, ***p<.001
주: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4)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영역 중점과제별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표 V-21〉에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관련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을 해당 영역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이 영역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값과 모든 배경변인별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평균값이 3점(=그렇다, 4점 척도)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로부터 청소년들은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점과제별로는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순이었으며, 초등학생이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보다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다소 높게 평가한 것 이외에는 배경변인별 결과는 비슷한 양상이었다.

표 V-21.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영역 중점과제별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단위: 점)

구분		2-1.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2-2.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2-3. 청소년 진로 교육 지원 체제 강화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전체		3.10	3.18	3.20	3.25	3.24	3.32
성별	남자	3.03	3.11	3.09	3.14	3.14	3.22
	여자	3.16	3.24	3.30	3.36	3.34	3.41
학교급	초등학교	3.15	3.17	3.29	3.31	3.26	3.28
	중학교	3.06	3.12	3.19	3.23	3.21	3.27
	고등학교	3.09	3.25	3.14	3.24	3.26	3.39
권역	서울	3.12	3.24	3.18	3.22	3.25	3.34
	경기/인천	3.10	3.18	3.21	3.27	3.25	3.32
	강원/충청	3.03	3.11	3.15	3.21	3.19	3.26
	경상	3.10	3.19	3.21	3.27	3.25	3.32
	전라/제주	3.12	3.18	3.21	3.25	3.28	3.37
지역 규모	대도시	3.12	3.21	3.20	3.24	3.28	3.34
	중소도시	3.08	3.15	3.20	3.26	3.22	3.30
	읍면지역	3.10	3.18	3.20	3.26	3.24	3.33

주: 1) 해당 영역 문항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음.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4)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영역의 중점과제를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대상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로 설정하였다. 중점과제별 청소년이 생각하는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지난 5년간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추진한 정책은 △촘촘한 청소년 복지지원 체계 운영,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이었다.

표 V-22.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단위: %)

구분		촘촘한 청소년 복지지원 체계 운영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성별	전체	89.0	92.0	90.2	93.9	90.3	94.4	85.4	88.9	89.9	93.4
	남자	86.0	89.1	86.4	91.1	87.2	91.6	82.2	86.0	85.3	89.6
	여자	91.8	94.8	93.7	96.5	93.2	97.0	88.4	91.7	94.1	97.0
학교급	초등학교	90.6	90.4	92.3	93.3	92.7	94.1	88.9	89.6	92.3	94.2
	중학교	86.6	89.0	89.8	92.3	89.7	92.8	83.3	85.9	88.7	91.3
	고등학교	90.4	96.2	89.1	96.0	89.3	96.3	85.1	91.6	89.5	95.1
권역	서울	90.5	92.9	90.4	94.8	90.0	94.6	84.4	88.9	87.8	91.2
	경기/인천	88.8	91.4	90.1	94.2	91.5	94.4	84.9	88.3	90.1	93.9
	강원/충청	87.0	90.5	87.8	91.4	89.9	95.9	84.6	88.1	89.8	94.6
	경상	89.2	93.3	90.0	94.7	89.6	94.4	86.7	90.4	90.6	94.0
	전라/제주	89.6	91.8	93.6	93.2	89.6	92.7	86.3	88.6	90.6	92.5
지역 규모	대도시	89.7	92.5	89.2	93.7	88.0	93.2	85.1	88.6	88.3	92.4
	중소도시	88.1	91.4	90.4	93.6	91.7	95.2	85.2	88.9	90.7	94.0
	읍면지역	90.2	93.1	92.5	95.8	92.0	95.2	87.0	90.3	91.9	94.6

주: 1) 4점 척도의 긍정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임.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청소년들은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의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다음으로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촉촉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운영’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31.2%가 5가지 정책 중에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24.5%),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19.0%) 순이었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은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았고, 여자 청소년들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교급별로는 초·중학생은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고등학생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 청소년들은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읍면지역 청소년들은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응답률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읍면지역의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수요가 28.0%로 상당히 높아 해당 지역의 안전 관련 인프라를 비롯한 환경에 대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V-23.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 수요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촉촉한 청소년 복지지원 체계 운영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χ^2
전체	2,968	16.4	19.0	31.2	8.9	24.5	
성별	남자	1,414	18.3	20.0	34.8	9.5	17.4
	여자	1,554	14.7	18.0	27.9	8.4	31.0
학교급	초등학교	746	9.3	16.8	38.1	9.6	26.2
	중학교	1,133	16.5	20.8	32.5	9.1	21.2
	고등학교	1,088	21.3	18.6	25.0	8.2	26.9
지역 규모	대도시	1,175	17.3	18.9	30.2	11.1	22.5
	중소도시	1,407	15.5	19.5	32.5	7.3	25.3
	읍면지역	386	17.3	17.2	29.6	8.0	28.0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2) 대상별 맞춤형 지원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대상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저소득층 청소년, △나홀로 청소년 등 7가지 대상을 설정하고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0명 중 9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92.0%),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9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90.1%) 정책이 청소년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고,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94.2%),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9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92.0%),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 강화’(91.7%),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91.1%) 정책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24. 「대상별 맞춤형 지원」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단위: %)

구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가출 청소년 지원 강화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 강화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성별	전체	90.1	92.0	83.0	85.3	76.2	81.4	88.9	91.1	91.1	93.3	92.0	94.2	89.9	91.7
	남자	87.3	88.0	78.2	79.7	71.0	76.9	86.0	88.5	88.3	90.8	89.6	91.3	85.6	88.3
	여자	92.7	95.6	87.4	90.5	81.0	85.6	91.7	93.5	93.8	95.5	94.2	96.9	94.0	94.8
학교급	초등학교	90.8	91.4	88.2	86.7	85.5	85.9	89.8	90.1	92.8	92.4	91.5	92.5	90.7	90.5
	중학교	90.4	90.4	82.3	83.7	76.3	79.9	88.1	89.7	90.8	91.8	91.2	92.6	88.7	90.1
	고등학교	89.3	94.0	80.1	86.0	69.6	79.9	89.1	93.3	90.4	95.3	93.1	97.0	90.7	94.1
권역	서울	90.6	92.5	82.6	86.5	75.1	81.4	88.0	91.7	90.9	93.4	92.8	94.3	88.6	91.5
	경기/인천	90.0	91.0	82.3	83.6	76.3	81.0	89.4	90.1	91.0	93.2	91.3	93.6	90.1	91.7
	강원/충청	89.1	92.0	84.5	88.1	76.7	84.4	86.3	91.4	90.5	93.5	92.0	93.1	87.0	90.5
	경상	89.8	92.8	84.2	86.1	77.3	81.4	89.8	91.3	90.9	93.7	91.7	94.9	91.2	92.0
	전라/제주	91.5	92.1	81.1	83.7	74.3	78.9	90.2	92.6	93.1	92.2	93.5	95.8	92.5	92.6
지역 규모	대도시	90.1	91.8	82.2	84.6	73.6	80.9	87.7	91.1	90.5	93.6	91.9	94.1	89.0	91.2
	중소도시	90.1	92.1	83.8	86.5	79.4	83.2	88.7	90.7	91.1	92.3	91.2	93.9	90.1	91.0
	읍면지역	90.3	91.9	82.5	83.2	72.1	76.6	93.2	93.0	93.2	95.8	95.2	95.5	92.1	95.6

주: 1) 4점 척도의 긍정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임.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도 27.2%의 청소년들이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 영역의 세부정책이 7개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17.9%),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14.0%)가 뒤를 이었다. 성별, 교급별, 권역별, 지역규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급별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다. 중·고등학생은 전체 응답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정책 수요를 높게 응답하였으나, 초등학생은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정책 수요는 초등학생 14.1%, 중학생 26.1%, 고등학생 37.4%로 교급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청소년들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결과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표 V-25. 「대상별 맞춤형 지원」 정책 수요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가출 청소년 지원 강화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 기반 마련	나홀로 청소년 활동· 돌봄 지원 강화	χ^2
전체		2,955	17.9	11.9	14.0	6.6	11.5	27.2	10.9	
성별	남자	1,410	19.3	10.2	16.0	7.3	11.6	25.6	10.0	24.129 ***
	여자	1,545	16.6	13.4	12.1	6.0	11.5	28.8	11.6	
학교급	초등학교	740	15.6	16.7	18.9	11.0	10.5	14.1	13.1	188.907 ***
	중학교	1,128	18.8	12.8	15.2	5.2	11.7	26.1	10.3	
	고등학교	1,087	18.4	7.6	9.5	5.1	12.1	37.4	9.9	
권역	서울	469	15.5	12.4	14.8	3.6	13.3	29.3	11.3	46.578 **
	경기/인천	975	17.0	12.4	13.8	6.6	12.3	25.7	12.1	
	강원/충청	424	18.5	12.2	13.0	5.5	12.5	26.5	11.8	
	경상	724	20.0	11.9	15.5	7.6	10.0	24.6	10.3	
	전라/제주	362	18.1	9.5	11.7	9.8	9.0	34.8	7.1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에 관한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등 3가지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청소년 주변의 유해한 환경이나 술, 담배 등 유해 약물로부터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청소년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표 V-26.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단위: %)

구분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전체		87.9	91.7	75.0	82.0	78.7	83.9
성별	남자	85.2	88.8	67.2	73.2	73.5	77.6
	여자	90.4	94.5	82.4	90.1	83.5	89.8
학교급	초등학교	92.7	92.8	84.6	87.5	87.6	86.6
	중학교	88.0	91.7	75.9	82.5	78.1	83.4
	고등학교	84.5	91.1	67.5	77.7	73.1	82.7
권역	서울	90.3	92.9	74.9	79.9	78.3	83.0
	경기/인천	88.1	91.9	76.4	84.0	78.4	84.7
	강원/충청	86.8	92.0	72.4	82.0	79.7	83.7
	경상	86.6	91.6	74.9	81.2	78.5	83.5
	전라/제주	88.0	89.8	75.2	80.8	79.1	84.3
지역 규모	대도시	87.9	91.8	74.0	79.8	77.9	83.8
	중소도시	88.1	92.0	74.9	82.6	78.4	83.0
	읍면지역	86.9	90.9	78.8	86.2	81.9	87.7

주: 1) 4점 척도의 긍정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임.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이상의 3가지 정책 중 앞으로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응답이 60.1%로 압도적으로 높아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성별, 교급별, 권역별, 지역규모별 차이 없이 모든 청소년 집단에서 같았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중독되지 않도록 진단·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에 대한 응답률은 21.0%,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의 정책 수요에 대한 응답률은 18.9%이었다.

표 V-27.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정책 수요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χ^2	
전체	2,958	60.1	18.9	21.0		
성별	남자	1,411	60.5	17.7	21.7	2.699
	여자	1,548	59.6	19.9	20.4	
학교급	초등학교	738	57.3	20.2	22.5	5.041
	중학교	1,130	61.7	18.9	19.4	
	고등학교	1,091	60.2	18.0	21.8	
권역	서울	473	60.7	17.3	22.0	13.739
	경기/인천	981	58.8	20.0	21.1	
	강원/충청	419	56.7	23.2	20.1	
	경상	726	63.1	17.6	19.3	
	전라/제주	359	60.4	15.3	24.3	
지역 규모	대도시	1,169	60.3	17.5	22.2	7.061
	중소도시	1,402	59.1	20.7	20.1	
	읍면지역	388	62.6	16.5	20.9	

주: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4)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영역 중점과제별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영역의 정책들을 3개 중점과제별로 점수화하여 <표 V-28>에 제시하였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다음으로 ‘대상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순이었다. 배경변인별로는 교급별로 조금 다른 결과를 나타냈는데, 전체 결과와는 다르게, 초등학생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3.40점) 정책의 필요성을 ‘대상별 맞춤형 지원’(3.37점)보다 0.03점 더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중학생(3.24점)과 고등학생(3.21점)의 응답보다는 각각 0.16점, 0.19점 더 높아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보호지원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8.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영역 중점과제별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단위: 점)

구분		3-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3-2. 대상별 맞춤형 지원		3-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전체		3.31	3.43	3.25	3.35	3.11	3.27
성별	남자	3.20	3.33	3.15	3.24	2.97	3.10
	여자	3.41	3.53	3.35	3.45	3.24	3.42
학교급	초등학교	3.40	3.45	3.35	3.37	3.35	3.40
	중학교	3.25	3.37	3.21	3.29	3.08	3.24
	고등학교	3.30	3.50	3.23	3.38	2.97	3.21
권역	서울	3.31	3.46	3.27	3.38	3.13	3.26
	경기/인천	3.33	3.46	3.26	3.35	3.14	3.32
	강원/충청	3.25	3.37	3.20	3.31	3.05	3.23
	경상	3.32	3.44	3.27	3.35	3.10	3.26
	전라/제주	3.30	3.41	3.24	3.33	3.07	3.19
지역 규모	대도시	3.30	3.44	3.25	3.36	3.09	3.25
	중소도시	3.30	3.43	3.25	3.34	3.12	3.28
	읍면지역	3.33	3.44	3.25	3.33	3.12	3.31

주: 1) 해당 영역 문항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음.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5) 희망하는 정책·서비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청소년의 응답 내용을 요약·분류한 결과를 <표 V-29>에 제시하였다. 초·중·고등학생 공통적으로 진로지원 및 진로활동 관련 정책,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스포츠활동과 문화예술활동 지원 확대, 안전한 환경 조성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청소년범죄 처벌 강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처벌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도 모든 교급에서 많은 편이었다. 교급이 높아질수록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청소년쉼터에서 가정폭력을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에게 보호자 동의를 받는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초등학생의 응답과 고등학생의 응답에 있었다. 또한 중학교 청소년들은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가 부족하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하였다.

청소년들은 학업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였으며 학업부담 경감 정책을 희망하였다. 중·고등학생의 응답에는 학업으로 인해 수면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많았다. 여가권 보장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은 놀이, 학교 쉬는 시간 확대, 놀이터의 놀이기구 안전 등에 대해 언급하였고, 중학생은 어린이 놀이터가 아닌 청소년 놀이터가 지역마다 설치되기를 희망하였으며, 고등학생은 여가시간의 보장과 여가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에 대한 응답도 초·중·고 모두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초등학생은 선거 연령 하향과 교육감 선거권에 대해서, 중학생은 청소년의 선거권에 대해서, 고등학생은 청소년 피선거권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또한 고등학생 응답 중에는 청소년에 관한 정책 입안 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청소년 관련 이슈나 체험서비스에 대한 포털 사이트 개설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초·중·고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 인권 보장, 인성교육, 한부모 가정 지원, 환경 보호와 환경교육, 상담서비스 확대, 술·담배에 대한 규제와 간접흡연 방지 대책, 급식 질 향상, 대중교통비 지원, 문구류 및 교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중·고등학생은 건강증진활동과 실효성 있는 성교육, 경제·금융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여자 청소년들은 초·중·고 모두 생리용품 지원을 희망하였다. 중학생의 응답 중에는 성소수자 수용성 증대에 관한 내용도 발견되었다. 또한 고등학생의 응답 중에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실시 되는 상담이 아닌 전문상담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청소년들은 양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고등학생들은 세대갈등과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남자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역할별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였다. 초·중·고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유해매체로부터의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섯다운제와 같은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야간 자율학습, 휴대폰 사용 제한, 교복 제도 등이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이 외 초등학생은 남북교류, 건강검진 서비스, 역사교육 참여 확대, 인터넷 예절 교육 및 범죄 예방, 낡은 학교시설 개선, 가족관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중학생은 청소년 할인제도 확대,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비행청소년 재범 예방, e스포츠활동 지원, 잔디운동장 보급, 자녀가 있는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 언어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고등학생은 교육제도 개편, 자유학기제 내실화와 집중이수제 폐지 등 교육정책에 관한 언급을 많이 하였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진로탐색을 위한 휴학제도, 학교 체육시간 확대, 군인 월급 인상, 시민의식 함양 교육, 직업계고 사고 방지, 장애인이해교육, 석식 급식 지원, e스포츠활동 지원, 청소년 근로권 보호, 온라인 성범죄 예방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개방형 응답에 대한 해석으로 청소년들의 소수 의견도 포함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V-29. 교급별 희망 정책·서비스

학교급	희망하는 정책·서비스
공통	• 진로지원 및 진로탐색활동 확대 • 학업부담 경감 • 운동·체육·스포츠 활동 지원 • 문화예술활동 지원 • 학교폭력, 성범죄, 등하교길, 도로(신호등) 관련 안전한 환경 조성 • 청소년범죄 처벌 강화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 청소년 인권·권리 • 양성평등, 남녀차별 및 역차별 금지 • 저소득층·다문화·학교 밖·가출·청소년한부모·나홀로 청소년 지원 • 한부모가정 지원 • 기후변화 등 환경보호 및 환경교육 •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처벌 기준 강화

학교급	희망하는 정책·서비스
	• 우울증·자살 등 상담서비스 지원 확대 • 인성교육 •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유해매체로부터의 보호 • 술·담배 단속 철저 및 간접흡연 방지 대책 • 급식 질 향상 •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지원 • 대중교통비 지원 • 학용품 제공 및 문구류 가격 인하, 교재비 지원, 전자책 무료 열람
초등학교	• 놀이·여가권·놀이터·쉬는 시간 확대 • 선거 연령 하향 및 교육감 선거권 부여 • 남북교류 • 건강검진 서비스 • 역사교육 참여 확대 • 인터넷 예절 교육 및 범죄 예방 • 낡은 학교시설 개선 • 가족관계 정책
중학교	• 청소년 놀이터 및 지역 놀이터 확대 • 건강교육, 정신건강교육, 실효성 있는 성교육 • 청소년 할인제도 확대 • 섯다운제 등 규제정책 반대 • 청소년에게 선거권 부여 • 학교폭력, 성범죄, 사이버폭력 등 처벌 강화 • 비행청소년 재범 예방 • e스포츠허브 지원 • 잔디운동장 보급 • 성소수자 수용성 증대 •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자율화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포함한 경제교육 등 실생활 도움 교육 확대 • 자녀 있는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 • 언어문화 개선 • 수면권 보장
고등학교	• 교육제도 개편 • 자유학기제 내실화, 집중이수제 폐지 • 야간자율학습 폐지 및 주말 학원 금지 • 여가시간 보장 및 청소년 여가시설 확대 • 진로탐색을 위한 휴학제도 • 학교 체육시간 확대

학교급	희망하는 정책·서비스
	• 군인 월급 인상 • 시민의식함양 교육 • 직업계고 사고 방지 • 세대통합, 젠더갈등 해소 • 대학진학 외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 • 금융교육 • 장애인이해교육 •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활동 지원 및 실질적인 성교육 • 수면권 보장 • 석식 급식 지원 • 교복 개선 또는 폐지 • e스포츠활동 지원 • 청소년 일자리(아르바이트) 제공, 청소년 근로권 보호 • 온라인 성범죄 예방 • 기출 청소년 보호 및 지원 • 전문상담 서비스 • 청소년 피선거권 확대 • 정책 입안 시 청소년 참여 보장 •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슈나 체험서비스에 대한 포털사이트 개설

주: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3. 청소년 대상 FGI 결과

이 절에서는 설문조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밀한 의견 파악을 위해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1) 청소년 주도성 강화 및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소년참여 필요

그간 추진된 청소년정책에 대해 아쉬웠던 점과 향후 바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물었을 때, FGI에 참여한 다수의 참가자들이 정책 전반에 청소년 주도성이 강화되고, 청소년참여 환경이 이전보다 대폭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주도성 강화는 청소년정책 전반에서 청소년을 주체로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간의 정책이 청소년을 객체로 간주하고 청소년에게 지원을 제공해준다는 시혜적 입장이었다면, 앞으로의 정책은

청소년을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조력한다는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책의 관점을 전환하면, 예컨대 보호정책에서도 청소년을 단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율적 보호능력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자로 보기보다는 정책의 주체자로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로 장려 정책이라거나 뭔가 좀 보호 정책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도 정책의 대상자로서 청소년을 보게 되면 ‘청소년에게 이것을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청소년이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한다’ 이런 개념이 좀 알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D4)

청소년의 주도성 강화는 청소년참여 활성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FGI 참가자들은 대부분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기존 청소년 참여기구의 한계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기존 참여기구가 인지도가 낮고,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가 많지 않으며, 정책제안을 주된 기능으로 갖고 있지만 대표성이 부족하고, 제안을 해도 적극적으로 수용되거나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통 10명 중에 8명은 이런 (참여)활동을 전혀 몰라요. (C3)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이렇게 투표로 선출되는 그런 기관도 아닐뿐더러, 그 정책 제안서의 대표성까지 강조되지 못하면 사실 그 정책 제안서가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많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6년 동안 활동하면서 얻은 깨달음은 정책제안서에 너무 저런 대표성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D3)

사실 정치적 효능감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참여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이 1년 동안 되게 고생을 해서 만들어졌으면 뭔가 하나라도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6년 동안 활동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수용 여부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중략) 사실은 저희가 제안을 했으면 행정기관은 적극적으로 그걸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점이 문제다’라는 것도 지적을 안 한 채 피드백 없이 아예 ‘그냥 안 된다’, 혹은 ‘우리는 이미 수용했으니 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는 식의 그런 태도들은 사실 이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효능감을 발휘하게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점점 이탈률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 활동에 효용성이 없으니. (D3)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청소년 참여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하고, 청소년 중 다수가 학생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학교에서의 참여를 내실화하며, 참여기구에 의결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따로 참여를 위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 안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참여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인 보완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안에 학생위원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어떤 과정이고, 법적으로 프로세스상으로도.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학생회와 같은 그런 기구들의 법적 근거가 제대로 세워져야지만 청소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D3)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청소년특별회의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결정을 못 해요. 의결이 없고 제안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특별회의에서 많은 정책들이 정책에 반영됐다고 되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과연 청소년들의 생각과 그 정책에 반영된 것이 같을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A3)

한편, 참여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는 비슷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특히 이는 기존 참여기구의 대표성 부족에 대한 보완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저도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도참위(시도 참여위원회)나 정책위원회나 특별, 청소년특별회의나 이런 큰 회의, 큰 청소년 기구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돼가지고 뭔가 그런 기구끼리의 소통도 조금 교류 활동이 있거나 그럼 이제 좀 더 작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소년 기구끼리의 교류, 교류도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C2)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약간 지역 청소년들이랑 수도권 청소년들 간 사이의 교류, 그리고 작은 청소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큰 특별회의나 이런 커다란 청소년 기구와의 소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C5)

아울러, FGI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제언에 대해 ‘유의미한’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금은 다소 피상적으로 수용/불수용 여부를 판단

하여 통보하거나 혹은 그마저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수용이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혹은 어떤 부분은 수용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수용 불가능한지 등에 대해 의미있는 환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참여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효능감이 담보될 수 있고, 그것이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행정기관 내 수용과 불수용 그리고 그것을 재활용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제안을 냈을 때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그리고 그 제안을 내기 직전에 행정기관의 직원들과 만나서 더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고, 또 타운홀 미팅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어떤 니즈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 참여를 통해서 분명히 행정기관이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행정기관 스스로도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 니즈를 바탕으로 사회 참여를 통해서 정책 제안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책 제안의 흐름과 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D3)

2) 진로·자립 지원 강화

(1) 진로 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정책

‘진로 지원’은 청소년 대상 FGI에서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의견이 개진된 이슈였다. 이는 그 만큼 진로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음을 방증한다. 먼저, 제대로 된 진로 정책이 부재하다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진학’ 지원은 있지만, ‘진로’ 지원은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생인 현실에서, 진로 교육은 사실상 진학 교육으로 치환되고 있고,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숙고하고 의사결정을 할 기회를 부여받기보다는, 눈앞의 취업에 급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는 사실 ‘진로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진로 진학팀이 있지만 사실 진로를 이야기하지 않고, 진학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진학 교육만 하고, 대학교 때는 취업 교육만 하니까 저는 어디에도 진로 교육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D3)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를 통해 진로교육, 진로지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진로체험, 자유학기제와 같은 정책이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진로교육, 진로체험, 자유학기제 등 진로지원 정책이 질적으로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진로지원 정책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접해보기를 원하는데,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 또는 활동은 여전히 강의식 교육에 머물거나,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제한된 직업세계만을 다루고 있어서 아쉽다는 것이다.

제가 경험하고 저희 밑에 후배분들에게 들은 바로는 (자유학기제가) 그냥 1학기 때 ‘공부, 시험 안 보고 그냥 노는 그런 학기로만 끝났다’라고 많이 들었어요. 그러가지고 이러한 진로에 관한 수업들에 대한 퀄리티가 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1)

진로 교육이라는 건 학교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거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는데, 진로 교육을 하다 보면 정말 특정 직업들이 있잖아요, 많이 교육을 하는. 바리스타라든지 아니면 베이킹이라든지 그런, 메이크업이라든지 그런 특정 직업들에 대해서만 많이 알려주고 있고,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런 직업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C1)

원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강만 진행을 해서 그 직업이 무슨 일을 하고 그런지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듣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설명을 듣는 게 능동적으로 행동해서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듣기만 하기 때문에 흡수력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C4)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원 질 제고

진로지원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고,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FGI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즉 ‘꿈드림’에서 제공하는 진로프로그램들이 질적으로 아쉽다고 하였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진로선택 기회’를 접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일반 학생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진로프로그램이 피상적이라는 점을 주로 문제점으로 지적한 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보다는 다양한 진로선택의 기회를 소개받고 싶고, 진로체험 외에 양질의 진학정보도 접하고 진학지도를 받고 싶다는 욕구를 피력하였다.

조금 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로 선택의 기회가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진로를 접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B1)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꿈드림을 다니고 있지만, 꿈드림에서 하고 있는 체험들이 몇 개는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중략) 주변에 계시는 분들 보면 바리스타 자격증 그리고 일러스트 자격증 이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실질적으로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뭔가 좀 기술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 (B3)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꿈드림에서 이제 약간 예체능 계열 쪽, 예체능 계열 쪽에서만 좀 치우치게 (되어 있고), 대입의 경영학과라든지 아무튼 이런 공부 쪽 학과를 준비할 때에는 별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활동들도 많이 없고. 그리고 또 쌤들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계속 교육청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정보들을 매년 대입마다 이렇게 들으시는데. 물론 꿈드림 쌤들도 그거를 매년 이렇게 들으시겠지만, 확실히 학교생들에 비하면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청가부(청소년생활기록부)도 꿈드림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건데, 확실히 이게 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B2)

(3) 진로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청소년들이 바라는 진로 정책의 방향은 ‘청소년 스스로 하고 싶은 분야를 숙고하고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다양한 분야를 깊이 있게 체험’해보는 것이었다.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어떤 직업세계들이 있는지 정보도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이나 진로체험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 단기적인 체험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턴십, 취업체험,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체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진로자립도와 자율성, 창의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청소년이 뭔가 도움을 받아서, 외부 프로그램을 보조를 받아서, 본인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진로 설계를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아까 지적해 주셨던 그런 단기적인 체험 활동 위주가 아니라 뭔가 좀 장기적으로 인턴십을 제공할 수 있다면 기업체 연계를 통해서 희망하는 직종에서 개월 단위의 그런 취업 체험 또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체결을 해가지고 실제로 창업을 경험해 본 사람들과의 멘토-멘티 관계를 통해서 ‘창업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필요하겠구나’라는 인식을 가지는 과정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모의 투자 대회처럼 모의취업대회나 모의창업대회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서, 청소년들에게 좀 내가 스스로 도전을 해보고 그 도전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진로를 설계하는 그런 과정을 제공하는

게 조금 더 진로 자립도를 높이고 그리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D4)

또한, ‘청소년 기업가 정신’, ‘청소년 창업’ 등에 대해서도, 창업을 가르치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부터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창업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극히 제한된 직업정보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장래희망도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정하곤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가 정신을 기르거나 창업을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상당히 설득력 있고, 최근 강조되는 청년 창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청년의 창업, 창직 지원을 위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적성과 소질에 기반해 하고 싶은 분야를 찾는 과정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진로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물어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말로만 그게 하나의 직업으로 ‘이렇게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동사형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사실 하고 싶은 게 있어야 창업을 하죠. 지금 다 직업으로만 ‘저는 이 직업을 하고 싶어요’ 얘기하는데 누가 창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교육이 기반이 돼야 창업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D3)

양질의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요구도 공통적으로 많이 제기되었다. 전통적인 방식의 전달형 교육보다는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이 제공되기를 바라며, 체험도 제한된 직종에 한해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로직업체험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가 00시 청소년들이랑 이런 간담회 같은 걸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공동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2)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로 교육을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고 진로 교육 시간은 정말 많은데 이제 그냥 TV에다가 영상 틀어주고, 그런데 애들은 정말 그런 거 열심히 보지 않거든요.

그냥 형식상의 진로 교육만 할 뿐이지 진짜 도움은 거의 안 되는 그런 교육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체험 같은 거, 고등학교는 시간이 없을 수 있겠지만 중학교 같은 곳에서는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진로 교육 같은 걸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C2)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진로의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전문인을 이렇게 매칭을 해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C4)

지금 모든 분들 말씀해주신 거의 공통점이 진짜 교육이 아니라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로는 정말 그 직업에 대해서는 교육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직접 저희가 보고 느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C5)

3)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청소년 FGI에서 도출된 의견 중에는 그간 청소년정책에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으나, 앞으로 좀 더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는 이슈들도 언급되었다. 온라인도박, 마약 문제 등 청소년범죄 예방, 근로보호 강화 등이 그것이다.

온라인도박의 경우,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쉽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를 요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실시한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가운데 2.4%가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집계됐는데, 이를 전체 중고등학교 재학생들로 환산하면 약 6만여명 이상에 해당한다(내일신문, 2022.4.7.). FGI에 참여한 청소년 역시, 청소년들 사이에 온라인도박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실 온라인 도박 문제가 되게 팽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보통 청소년들이 알바하는 비율을 보면 여학생들이 훨씬 월등하게 많다고 해요. 저는 그 문제 중의 하나가 도박 문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남학생들이 알바를 해야한다가 아니라 남학생들은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알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훌쩍 버튼 하나면 만 원을 투자해서 만 원을 더 벌 수 있는데 그거를 일을 하면 1시간을 해서 벌어야 하는 돈이니까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돈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인식이 모호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 교육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이나 사이트를 단속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A2)

다음으로 마약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는 것은 청소년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은 해당 법률의 제정 목적에 대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청소년보호법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10.7. 인출). 이는 청소년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포괄한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 사이에 마약범죄나 재산범죄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이나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사실적이고 실감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관련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체 범죄 청소년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그중에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랑 그리고 ‘재산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중략) 예를 들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거나 아니면 마약류 중독, 요즘 이제 핫해지고 있는 이슈가 판타닐 같은 그런 중독성 강한 마약류들인데, 이런 마약류에 대해서 단순히 마약은 나쁘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약류나 아니면 중독성이 강한 물질을 사용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유발이 되는가’, 그리고 ‘이 피해를 사회에서 복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원이 사용이 되어야 되고 한 사람에게 투입되는 그런 자원이나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식으로 좀 사실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적나라한 그런 현실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D4)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FGI를 실시한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근로보호 강화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가 생계유지의 수단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근로보호가 더욱 더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으며, 자립과도 연계된다. 그간 청소년 근로보호는 청소년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진짜 본인의 생계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알바를 하지 못해서 살 수 없는 친구들도 있던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친구들에 대한 보호가 더 필요한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주고 있지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당하는 청소년들을 신고를,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 쫓겨나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알바를 해서 자기가 독립할 수 있고 월세를 내야 되고 생활비를 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책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 (A3)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노동인권교육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들의 근로보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간 노동인권교육은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실시된 경향이 있고, 중학교 또는 일반계고에서는 많이 실시되지 못했는데 이를 광범하게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알바 권익, 근로 권익에 대해서 좀, 지금 계속해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특강 같은 거를 넣어서 저희한테 알려주고는 있는데 조금 더 그거를 학생들이 완전히 인식하게끔 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4)

그니까 전체 국가 단위의 종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계치를 좀 먼저 필요로 하겠고 그 통계치를 바탕으로 해서 근로 청소년에게 예를 들면 노무 상담을 제공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근로 장려 정책을 통해서 올바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뭔가 좀 부당한 그런 처벌을 받았을 때 그거를 스스로 구제하기 위해서 뭔가 요청을 하는 그런 과정을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D4)

청소년 근로권익 강화와 관련하여, 최근 확산되는 노동형태를 반영한 근로권익 방안 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빠르게 확산된 배달 플랫폼 노동 외에도 최근 들어 유튜브 영상, SNS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형태로 깃 워크(Gig work)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깃 워크 플랫폼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배달 라이더처럼 특수형태 직종으로 분류되어 근로보호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 노동은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회변화를 고려해, 플랫폼 노동에서 근로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근로환경도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요즘 좀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들이 배달 플랫폼이나 IT쪽, 예를 들면 이제 SNS에서 뭔가 카드뉴스나 게시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버는 형태라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노동법이 적용되기가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쉽게 말해서 약간 어떤 처우에 있어서 그런 적극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어떤 관계부처의 개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우개선과 노동법 준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는 현황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D4)

여기에서 언급된 온라인도박, 마약문제, 근로권익보호 등은 각각 세부적으로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주요 이슈들이지만,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그 심각성이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청소년 FGI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점은 청소년정책이 사회환경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줄기를 바라는 정책대상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4) 생애주기 관점의 ‘자립’ 지원 필요: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한편, 후기청소년 FGI 참가자들은 청소년정책에서 후기청소년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적으로 청소년 연령이 9~24세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후기청소년도 청소년정책의 대상이지만, 대부분 정책의 초점이 전기·중기청소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후기청소년은 배제되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후기청소년은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성인기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아쉽다는 것이다.

사실 제가 후기청소년이 된 지 3년차이기는 한데, 사실 청소년정책으로써 제가 지원을 받았다 혹은 도움을 받았다 하는 측면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 대상들이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다 잘려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데 모든 대상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서 끊기고 20살 이상부터는 어딘가로 다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저는 청소년도 청년도 아닌 좀 약간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요. (D1)

상술한 바와 같이, 후기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정책에서도 주요 대상이 아니지만, 청년정책에서도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서 어디에서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느낌이 있다고 하였다. 연령대가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에 모두 해당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다보니 어디에서도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정책의 경우 대부분 주거, 일자리, 창업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지는데, 이제 갓 10대를 벗어나는 시기에 있는 후기청소년에게 친숙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요컨대, 청년정책의 주요 아젠다들이 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기에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후기청소년을 두고서 되게 청소년계랑 청년계가 서로 떠밀고 있는 느낌? 너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이가 이게 후기청소년이랑 초기 청년대가 이렇게 걸쳐 있다 보니까 과도기에 있다라는 000님의 말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저도 한 1~2년 정도 청년 참여를 해봤지만, 후기청소년들이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주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자리 창업이라든가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주거 안전이라든가... 사실 후기청소년들이 그런 걸 경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건 사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사회에 첫 발을 디딘 대학생이 그런 일들을 겪기가 되게 어려운 점을 봤을 때 사실은 청년계가 후기청소년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괄하거나 아우르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D3)

후기청소년들이 주로 바라는 정책은 10대 청소년을 벗어나 본격적인 청년기로 진입하면서 직면하는 과업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든 대학에 진학을 하든, 금융거래나 부동산 계약처럼 그 이전까지와는 달리 새롭게 직면하거나 해결해야 하는 삶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졸업하고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에 내가 청년으로 가기 전에 조금 준비해야 되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정책적인 도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는데, 나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나홀로 뭔가 은행일을 봐야 하고 부동산 업무를 봐야 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다들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도움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요. (D1)

후기청소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청년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입하는 시기다 보니까 사회 진입 과정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한데, 부동산이나 금융 관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사실 좀 거주 문제나 학자금 대출의 문제도 이 과정에서 해결을 같이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전기청소년 정책이 약간 좀 성장과 그런 환경의 어떤 좋은 성장 환경을 제공 이런 방식으로 흘러갔다면, 후기청소년 제도는 사회로의 진입을 도와주는 그런 흐름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D4)

후기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원만하게 이행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는데, 기존 정책들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향후 청소년정책은 전기청소년-중기청소년-후기청소년-청년을 잇는 생애 전(前)반기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원만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학교’ 역할의 중요성

청소년정책이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부문과의 연계, 즉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9~24세 청소년의 대부분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낸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하는 바가 교육현장에도 잘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은 학교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참여 정책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 연계를 활성화하는 문제, 나아가 학교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주었을 때의 장점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학교’와 관련하여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언급한 이슈는 청소년참여 정책과 관련이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1-1. 청소년 참여확대’ 중점과제의 하위과제로 ‘1-1-2.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을 제시하고, 여기에 ‘학생 자치활동 및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학생회·학급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자치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교육부)’,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및 의견제안 등 학교 공동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교육부)’, ‘청소년 참여기

구 등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청소년 의견수렴 강화(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포함된다(관계부처 합동, 2018.3). 그런데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청소년참여의 취지가 십분 보장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3주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학부모, 선생님, 학생 이 3주체의 의견을 듣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막상 학교에서는 3주체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학생들이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생활 규정 이제 개정 같은 경우에 학생이 원하는 것을 말했는데 학부모 회의에서 자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학교에서 청소년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 참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A2)

이러한 이유로 FGI 참가자들은 학생참여, 나아가 청소년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간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일관된 메시지의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참여예산제처럼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바뀌시면서 학생참여예산제라는 걸 시행하게 됐는데. (중략) 이거는 진짜 교장 선생님의 제약이나 뭐 방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러한 예산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또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확대된다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3)

한편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면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FGI 참가자들은 학교 현장에 개선할 점들이 있다고 하였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미흡 등 학교에서 인권 침해를 경험한 사례를 빈번히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청소년은 학교 규칙에 여전히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조항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교칙보다 상위 수준의 규정인 교육조례 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교육조례는 교육청 단위로 제정되는데, 학생 인권 조례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학교에

서도 그 만큼 신경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 풍토 개선을 위해 조례와 학칙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제가 지금 청소년특별회의에서도 위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책,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얘기를 한 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진짜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하기도 했었고, 뭐 내 친구가 당한 일을 얘기하기도 했었고, 많은 얘기를 들었을 때 학교에서 제일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소하지만 뭐 학교폭력 피해자, 피해를 입은 친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도 있고 지금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인권 보장을 확실하게 해줘야 될 방법을 꼭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3)

많은 고등학교가 아직 학생 인권 침해 조항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걸 바꾸려는 움직임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없어서이지 않을까.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은, 상위법에서 이미 학생 인권 침해 조항을 없애자는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위법인 규칙에서도, 규정에서도 이런 것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A2)

다음으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청소년시설 간 연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학교에는 교육과정 상, 동아리 시간이나 진로활동시간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의 물리적·공간적 여건으로 인해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 내 청소년시설 간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시설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고등학교에 동아리 시간이나 진로활동 시간이 의무적으로 배정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답답했던 건 학생들이 밴드부 연습이나 댄스 연습을 하고 싶은데 학교에 댄스 연습실이 없는 학교도 있고. 그런 학교들이 있으면 청소년문화의집이란 연계를 해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해라라고 해서 일주일에 2시간 의무적으로 동아리 활동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의무 시수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교육부랑 여성가족부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교육부에서 이런 활동을 할 때 교외 체험 학습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경험도 하고 이러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A3)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율이 낮은 상황에서,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고, 학교를 통해 정책 홍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도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제가 스스로 알게 된 건 아니었고 선생님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된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청소년들이 알려면 학교에 홍보, 학교에 그러니까 게시판 같은 곳에 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영상, 그런 홍보 영상 같은 것도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C1)

6) 청소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환경 및 인프라 개선

마지막으로, 청소년 FGI에서 도출된 의견 가운데 정책추진 환경 및 인프라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정책추진 기반 조성, 형평성 확보, 청소년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 청소년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

① 사회적 풍토 개선

FGI 참가자들은 개별 정책의 세세한 내용을 논의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적으로 청소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예컨대, 입시위주의 경쟁지향적 교육풍토에 하루 종일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봉사활동, 사회참여와 같은 시민의식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공동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낮추고, 그것이 청소년참여나 활동이 활성화 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시민적 의식에 있어서 사실은 점점 떨어진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에 점점 관심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청소년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에 참여해야 할 이유 자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D3)

이러한 연유로 FGI 참가자들은 청소년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입시 중심의 경쟁적 교육풍토부터 해소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정부부처 간 정책이 주는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교육부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비교과활동 기재를 축소하는 방향으

로 정책을 개편함에 따라, 학생들은 봉사활동이나 청소년단체활동, 참여활동을 할 유인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청소년정책을 관장하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봉사활동 활성화를 주장하는데,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정책 간에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장기 관점의 청소년정책에서는 이러한 정책 간 부조화가 조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비교과 활동을 줄이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을 하지, 타인의 봉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줄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봉사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시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 따른 인성이나 자기 주도성이나 그런 것들을 저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것들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에서는 자기 아이니까 감싸주고 케어해주지만,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유대 관계도 형성되고 다양한 장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중략) 저희 때까지 자기소개서가 있고 내년부터 자기소개서가 아예 폐지된단 말이죠. 그러면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건 오로지 성적이 다인 세상인 거죠.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있지만, 세특이라는 학생부 점점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 교과 전형이라 하죠? 즉 내신 성적만 보는 전형이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종합대책에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A3)

② 독립된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권리 보장

다음으로, 청소년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청소년을 미래사회의 ‘예비적 시민’이 아닌, 현재 그 자체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FGI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여전히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예컨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지만, 유권자로서 성인들과 동등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선거권이 지금 만 18세로 낮아졌는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지방 선거할 때도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같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른들에게는 이제 명함이나 이런 걸 주시고 선거 유세를 하시는데 저희에게는 그냥, 물론 교복을 입고 있어서 저희가 몇 학년인지 몰라서 그럴수도 있지만, 같은 한 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른들이랑 다른 권리를, 다른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그게 약간 속상하고. 좀 더 청소년들의 선거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알고 좀 동등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5)

청소년을 독립된 시민으로 인정하고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때, 학교에서의 학생인권보장을 비롯해, 청소년참여 증진 등 많은 청소년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정책 전반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정책에서의 ‘격차’ 해소

청소년정책이 한 단계 진일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 내에 존재하는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지역 간 격차, 학생-학교 밖 청소년 간 격차, 그리고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타 부처 정책 간 격차 등이 해당된다.

먼저, ‘지역 간 격차’는 다수의 FGI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문제로, 수도권과 지방 간에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경우에는 질적 측면에서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환경의 차이로 인해 지방 청소년들은 다양한 기회에서 배제되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였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싶어도 행사의 모든 중심은 서울에서 열리고, 또 간담회나 회의나 모든 것들이 다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지방 분권, 지방자치, 뭐 지역 균형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중략) 넓은 세상을 수도권 친구들만 경험을 하니까 지방 친구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게 제일 크고 그게 격차를 점점 심화시키는 요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A3)

제가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유학기제가 왜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주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한번 모니터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제가 모니터링한 바로는 ‘지역마다 격차가 심해서 지방같은 경우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줄 수 없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뭐지? 선생님들도 이제 좋은 교육, 활동을 해주고 싶지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A2)

청소년정책에서 목도되는 격차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안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격차 문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학교 안 청소년, 즉 일반 학생들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이 큰 진로·진학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대학진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생활기록부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 입시에서 겪는 차별을 개선하고 교육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것으로,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습 및 활동한 내용을 대학진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제도를 일컫는다(대한민국 정부 정책홍보 웹사이트, 2022.10.8. 인출).

그런데 2022년 기준 6개 대학(강릉원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림대학교)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개 대학(인천대학교, 동서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안동대학교)이 추가되어 총 11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대한민국 정부 정책홍보 웹사이트, 2022.10.8. 인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청소년생활기록부의 대입 적용을 꾸준히 확대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으나 아직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관련한 부분이 좀 굉장히 미흡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청소년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적용 대학이 올해 기준으로 11개 대학 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336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11개 대학만 시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는 서울대인데 서울대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가지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쓰기 어려운 그런 대안이라고 보여지고. (D4)

반면, 이처럼 ‘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때, 학교 안 청소년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이 배제되었던 건강검진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확대 적용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정책 변화로 평가하고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던 게, 일반 학교에 있으면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결핵검사든지 무슨 종합검진 같은 걸 다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채혈검사라든지. 이제 그런 기회를 학교 밖 청소년들은 놓치게 되는 거니까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년을 주기로 2년에 한 번씩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돌아가면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게 되게 좋은 제도 같습니다. (B1)

청소년정책 간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할 이슈는 ‘부처 간 격차’ 문제이다. 내용상으로 유사한 정책인데 소관부처가 어디냐에 따라 정책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전통적인 청소년시설 외에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들도 있다. 그런데 학생생활기록부에 비교과활동 기재가 금지됨에 따라, 기존 청소년시설에서 하는 활동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데 비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활동은 기재가 되는 사례도 있다고 하였다.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관리감독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부여되는 인센티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참여활동도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교육부 또는 교육청 소관사업인 학생자치단 활동이 비슷한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차이가 커서 그 차이가 청소년들이 체감할 정도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옆에 자몽이라는 곳이 생겼어요. 거기도 이제 청소년, 청소년단체들을 활동할 수 있게 해놓은 그런 기관인데 거기는 이제 생기부 같은 게 등재가 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차 이런 것들도 좀 좋게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1)

가장 큰 청소년참여위원회랑 학생자치단, 청바지기획단이라는 단체랑 매우 비슷합니다, 활동하는 내용들이. 하지만 예산이 (학생자치단이) 한 10배 정도 많았어요. (A3)

형평성 문제에서 중요한 이슈로 보호종료아동 문제도 언급되었다. 보건복지부의 보호시설로 분류된 곳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하는 청소년과, 여성가족부 소속 쉼터 등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하는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수당과 지원에 큰 차이가 존재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전형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라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랑 보건복지부가 또 섞여 있잖아요. 가정, 아동, 아동학대 청소년도. 아동학대 청소년들의 지원도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당한, 똑같이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아동학대를 당해서 온 청소년들이 왜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의 격차가 생겨야 되는지. (A3)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곳에 있는 위기청소년과 여가부가 운영하는 곳에 있는 위기청소년의 그런 지원원이 지원 금액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부터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자체가 지금 위기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가부와 교육부 관계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와 여가부 관계에 있어서도 좀 일관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D3)

청소년 FGI에서 지적된 지역 간 격차, 학교 안팎 청소년 간 격차, 그리고 부처 간 격차는 모두 합리적 차별이나 격차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앞으로의 국가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전략 제시를 위한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그간 추진된 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며, 향후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정책을 대상으로 효과성과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정책영역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영역 순으로 관련 정책이 향후에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모든 성별, 교육급, 권역별, 지역규모별 결과에서도 동일하였다.

표 V-30. 영역별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종합

(단위: 점)

구분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전체		3.06	3.18	3.19	3.25	3.24	3.36
성별	남자	2.97	3.09	3.09	3.16	3.13	3.24
	여자	3.14	3.27	3.27	3.34	3.35	3.47
학교급	초등학교	3.14	3.20	3.24	3.25	3.36	3.40
	중학교	3.02	3.12	3.16	3.21	3.19	3.30
	고등학교	3.04	3.23	3.17	3.30	3.20	3.39
권역	서울	3.04	3.20	3.19	3.27	3.25	3.38
	경기/인천	3.07	3.20	3.19	3.26	3.25	3.38
	강원/충청	3.02	3.11	3.13	3.19	3.19	3.30
	경상	3.07	3.19	3.19	3.26	3.25	3.36
	전라/제주	3.07	3.18	3.21	3.27	3.23	3.33
지역 규모	대도시	3.06	3.19	3.20	3.27	3.23	3.36
	중소도시	3.05	3.18	3.17	3.24	3.24	3.35
	읍면지역	3.07	3.19	3.19	3.26	3.25	3.36

주: 1) 해당 영역 문항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음.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결과를 중점과제별 정책의 필요성 순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성별, 교급별, 권역별, 지역규모의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로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영역의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⁵⁰⁾ 정책을 선택하였다. 다음 2순위로는 대체로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영역의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⁵¹⁾을 들었으나, 초등학교들은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영역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순위 응답이 많은 중점과제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영역의 ‘대상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었다.

표 V-31. 중점과제별 정책의 필요성 순위

구분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1-1. 청소년 참여 확대	1-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2-1. 청소년 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2-2.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2-3.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3-1. 청소년 사회 안전망 확충	3-2. 대상별 맞춤형 지원	3-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전체		2순위					1순위	3순위	
성별	남자	2순위					1순위	3순위	
	여자	2순위					1순위	2순위	
학교급	초등학교						1순위	3순위	2순위
	중학교	2순위					1순위	3순위	
	고등학교	2순위				3순위	1순위		
권역	서울	2순위					1순위	3순위	
	경기/인천	2순위					1순위	3순위	
	강원/충청	3순위					1순위	2순위	
	경상	2순위					1순위	3순위	
	전라/제주	3순위				2순위	1순위		
지역 규모	대도시	2순위					1순위	3순위	
	중소도시	2순위					1순위	3순위	
	읍면지역	2순위				3순위	1순위	3순위	

주: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50)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중점과제는 촘촘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운영,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세부과제로 추진 중이다(관계부처합동, 2018.3).

51)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중점과제는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청소년의 정신 건강권 보호, 청소년의 신체 건강권 보장 등의 세부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청소년들은 안전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발달단계에 따라 정책 수요가 다름도 파악할 수 있었다. 중·고등학생은 안전과 권리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고, 초등학생은 안전과 보호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았다. 국가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시, 전기·중기·후기 청소년별 발달단계에 따른 정책 개발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편, 설문조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집단별(수도권, 비수도권, 학교 밖, 후기청소년)로 FGI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FGI 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요자 요구를 충족하는 정책 추진: 진로 지원 강화

첫째, 수요자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진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공통적으로 청소년들은 진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가장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조사에서 ‘학업 관련 고민(성적, 대학입시 등)’과 ‘진로 관련 고민(전공, 직업, 취업 등)’이 수위를 차지하였고, FGI에서도 집단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진로에 대한 니즈를 표출하였다.

이렇게 수요자들의 요구가 큰 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동안 제대로 된 진로 지원 정책은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진로 지원이 사실상 ‘진학’ 지원에 집중되었고, 그간 이루어진 진로체험은 양적·질적으로 모두 부족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정책은 수요자인 청소년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 지원 정책을 내실화해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진로체험, 자유학기제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양질의 진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로활동, 진로체험도 제한된 일부 직종에 한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개선하여, 각자 관심 있는 다양한 직종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2) 체감도 높은 정책에 대한 요구

둘째,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도출된 바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컸고, 온라인도박, 마약문제 등 청소년범죄, 근로권익보호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그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 또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에 대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스포츠활동이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니즈도 파악되었는데,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대상자인 청소년들은 피부에 와닿고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정책은 전략적으로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과 성과 산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청소년권리 보장 및 청소년참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셋째, 청소년권리 보장 및 청소년참여 분야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 되는 관점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청소년참여 및 권리가 좀 더 보장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FGI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청소년정책 전반에서 청소년 주도성이 강화되고, 청소년참여 환경이 이전보다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청소년참여는 참여기구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참여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참여의 실효성이 낮아서 참여활동을 지속할 유인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였다. 특히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정책입안자들이 청소년참여를 일종의 요식행위처럼 인식한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소년권리 보장 및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 및 청소년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부터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청소년을 미래의 ‘예비적 시민’이 아닌, 지금 현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참여 역시 장차 시민으로 성장할 청소년이 현재 참여를 ‘체험’해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향유하는 것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이 전제되어야 청소년, 청소년권리, 청소년참여에 대한 접근방법이 바뀔 수 있고, 그것이 관련 분야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소년참여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기존의 참여기구 중심의 참여에서 ‘일상

생활에서의 참여', '지역사회에서의 참여'로 참여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청소년정책 전반에서 청소년 주도성을 강화하기를 바라는 요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이 주도하는 참여'가 청소년정책 전반의 운영 원리로 자리잡도록 정책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생애주기와 발달단계를 고려한 청소년정책 추진

넷째, 향후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생애주기와 발달단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생은 안전과 보호에 대한 정책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고등학생은 안전과 권리에 대한 수요가 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발달단계에 따라 정책 수요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FGI를 통해 후기청소년들이 정책의 '단절'을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기청소년들은 청소년정책에서 자신들이 배제된다고 느꼈는데, "(정책지원이) 고등학교 3학년에서 끊기고 20살 이상부터는 어딘가로 사라져"있어서 "낙동강 오리알"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목소리는 청소년정책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보다는 다소 단절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정책은 아동-청소년(전기-중기-후기)-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각 발달단계별로 정책대상자들에게 더 필요한 정책에 무게중심을 두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초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안전과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게 도출된 바, 가정학대, 안전한 온오프라인 환경 구축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중기청소년의 경우 안전과 권리에 대한 수요가 높게 도출된 바, 참여권 보장, 참여활동 증대, 근로권익 등 인권보호, 진로, 안전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연령대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진로·취업·자립에 대한 요구가 큰 바, 관련 정책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5) 청소년정책에서의 격차 해소에 대한 요구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 영역에서의 격차 해소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깊은 공감을 나타냈고, 응답결과를 통해 지역별로 고른 진로체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드러낸 바 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좀 더 밀착해서 확인하고자 실시한 FGI에서도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지적은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FGI 참가자들은 청소년활동, 참여, 진로체험 등 청소년정책에서 추구하는 많은 내용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더 활성화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일수록 접근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학교 안 청소년이 받는 혜택이나 정책적 지원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이 받는 혜택은 적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정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부처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지는 부처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청소년들이 '형평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정책은 정책 영역 안에서 목도되는 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V-1]에는 청소년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한 정책추진 전략의 주요 시사점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1	수요자 요구를 충족하는 정책추진: 진로지원 강화 • 수요자인 청소년의 니즈를 충족하는 데 집중 필요 → 진로지원 정책 내실화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진로체험, 자유학기제의 질적 개선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원 양적·질적 확충 • 청소년 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로활동, 진로체험 다양화 및 내실화
2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 •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 확대 강화 •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높은 요구: 온라인도박, 마약문제 등 청소년범죄, 근로권익보호 증진 • 스포츠활동 및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3	청소년 권리 보장 및 청소년참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청소년을 미래의 '예비적 시민'이 아닌, 지금 현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 • 기존의 참여기구 중심의 참여에서 탈피하여, '일상에서의 참여', '지역사회 중심의 참여'로 전환 • 청소년정책 전반에서 청소년 주도성 강화 → '청소년이 주도하는 참여'가 청소년정책 전반의 운영 원리로 자리잡도록 정책 추진 전략 수립
4	생애주기와 발달단계를 고려한 청소년정책 추진 • 아동-청소년(전기-중기-후기)-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추진 • 각 발달단계별로 특히 요구되는 정책을 강조하는 전략적 접근 필요
5	청소년정책에서의 상대적 격차 해소 • 청소년정책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수도권-비수도권 간 진로체험, 참여활동 등 접근성 격차) • 학교 안/학교 밖 청소년이 받는 혜택 및 정책적 지원에서의 격차 완화 • 본질적으로 동일한 정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 소관부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격차 해소

그림 V-1. 청소년 의견수렴 시사점 요약



제6장 국가청소년정책 추진전략 및 과제

- 1. 정책 추진전략 도출의 개요
- 2. 전략목표별 추진전략

1. 정책 추진전략 도출의 개요

1) 정책 추진전략 도출의 과정

이 장에서는 앞서 제2장~제5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향후 국가청소년정책에서 추구해야 할 정책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그림 VI-1]에는 추진전략의 도출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 실시한 사회환경변화와 청소년이 처한 실태분석 결과, 제3장에서 실시한 국내외 청소년정책 분석 결과, 제4장에서 도출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그리고 제5장에서 실시한 청소년 의견수렴 결과와 그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진 반복 협의와 각 단계별로 실시된 전문가 자문의견을 토대로, 국가청소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비전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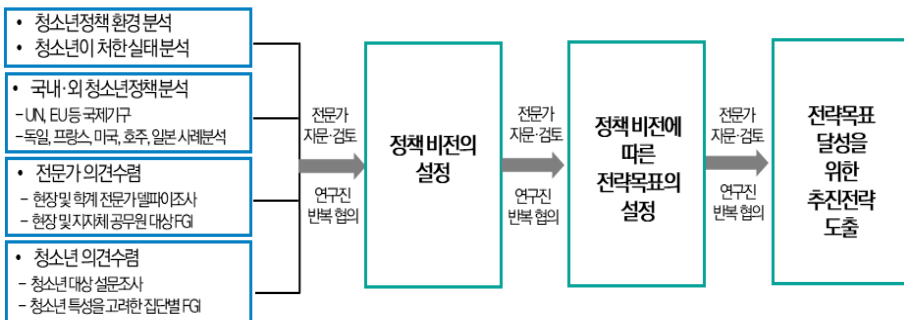


그림 VI-1. 정책비전,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도출 과정

다음으로, 사회환경변화 및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기존 정책의 보완점과 미래 청소년정책이 추구할 방향을 고려해, 정책비전을 뒷받침할 5가지 전략목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5가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들을 도출하였다.

2) 정책 추진전략 도출의 근거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로부터 도출된 정책 추진전략 도출의 근거가 아래 <표 VI-1>에 제시되어 있다.

표 VI-1.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도출의 근거

	주요 결과		정책적 시사점
청소년 정책 환경 / 청소년이 처한 실태 분석	• 2000년대 이후 초저출산 국가 진입으로 인해 청소년인구 급감 및 지방 인구소멸 가속화 • 청소년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데 비해, 다문화 청소년의 규모와 비중은 증가	→	• 청소년인구 감소로 인한 정책대상자 절대 규모 축소로 인해 야기되는 청소년시설 및 활동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 필요 •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정책 비중 증가 필요
	• 계층 간 사회양극화 심화 및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소득의 불평등과 자산 격차 증대 • 청년실업이 지속되면서, 청(소)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현실 지속	→	• 성인기 이행 지연, 청년 빈곤, 청소년·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필요
	•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의 상용화 및 일상화 확대 •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는 창업이 창업생태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향후 우리나라 생산성 향상과 디지털 성과 확산에 중요한 비중 차지	→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은 고성장인 아닌 저성장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불평등, 고용 및 노동시장에서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정책 필요 • 디지털 전환이라는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정책에서도 디지털 전환 대비 필요
	• 코로나19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침. -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적을수록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 •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사회성 약화 등 사회구성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	→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 및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건강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건강권 관련 정책 확대 필요

	주요 결과	정책적 시사점
	• 사회구성원의 개인 역량 확대 및 전통적 거버넌스 약화로 인해 분권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 요구 증대 • 선거연령 하향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비롯, 사회참여 욕구 전반적 증대 • 청소년들의 참여 욕구는 높은 편이나, 기존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 및 참여율은 매우 낮은 편	• 청소년을 미래의 예비적 시민이 아닌, 현재의 시민으로 인정하는 관점의 전환 필요 •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시민의식 함양 및 참여권 확대 관련 정책 확대 필요 • 참여기구 중심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참여의 자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참여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국제비교 결과, 여타 국가들에 비해 낮은 청소년 행복도 및 주관적 만족감 •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진로(학업 및 직업) 문제	• 청소년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제감도 높은 정책 추진 필요 • 정책대상자인 청소년의 관심이 집중되는 '진로' 문제를 주요 정책이전도로 부각 필요
	•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점진적 증가 및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폭력과 성폭력	• 디지털환경에서의 청소년보호 관련 정책 대폭 강화 및 선제적 대응 필요
국내외 청소년 정책 분석	• 국내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은 주도성과 권리, 참여를 강조해온 공통점이 있음 • 해외사례의 경우, 참여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한 강화가 강조되는 추세	• 청소년 권리, 특히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및 청소년 주도성 보장 필요
	• 독일 및 후주의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정책을 비롯, 다양한 소외집단에 대한 지원 추진	•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확대 필요
	•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존재(미국의 청소년 프로그램 기관 간 실무그룹 (IWGYP), 일본의 내각부 아동·청소년육성 지원추진본부 등)	• 다분야다부처에 걸쳐 있는 청소년 정책의 특성을 고려해,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해 책임있는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 국제기구의 청소년전략과 각국의 청소년정책은 대상 연령을 규정하면서도,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 • 연령 범위는 정책 또는 사업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	• 정책설계 시, 청소년기를 아동기와 청년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생애주기적 접근 필요
	• 각국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위해 교육, 고용, 안전, 건강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청소년의 생활세계를 포괄적으로 지원	•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생활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설계 필요
	• 미국 청소년프로그램 기관 간 실무그룹 (IWGYP)의 성과 논리모형, 유엔의 성과관리 도구인 스코어카드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려는 노력	• 명확성, 측정가능성, 원인성, 신뢰성, 적시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를 적극 활용한 객관적인 성과관리 필요

	주요 결과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 의견 수렴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추진 성과에 대한 낮은 평가 • 향후 적용할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수준의 혁신과 개선 필요
	• 청소년인구 감소, 교육정책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축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청소년활동이 위축	• 청소년활동 활성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활동 정책의 혁신 필요
	• 정책목표 의견수렴 결과, ‘청소년 건강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도출 • 중점과제에 대한 조사에서 ‘청소년 심라상담 및 정신건강’, ‘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가 우선 고려 과제로 도출	• 위기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 정신건강은 향후에도 중요 아젠다로 지속적으로 부각 필요
	• 중점과제 의견수렴 결과, ‘청소년지도사 역량 강화’, ‘청소년지도사의 공공성 강화’가 비교적 중요도 높은 과제로 도출	•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주요 과제로 추진 필요
청소년 의견 수렴	• 청소년들은 진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나, 그간 추진된 진로 지원 정책은 양적 질적으로 미흡	•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정책실행이 필요하며, 진로 지원 정책 대폭 강화 및 확대 필요
	•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적 니즈 • 온라인도박, 마약문제 등 청소년범죄, 근로 권익보호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 개입 희망	• 정책대상자인 청소년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강화
	• 학교에서의 청소년참여 확대 요구 • 청소년정책 전반에서 청소년 주도성이 강화되고, 청소년참여 환경이 이전보다 대폭 개선되기를 희망 • 참여기구의 낮은 인지도 및 저조한 실효성 개선 요구	• 청소년권리 보장 및 청소년참여 분야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 되는 관점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 제시 필요 • ‘청소년이 주도하는 참여’가 청소년정책 전반의 운영 원리로 자리잡도록 정책추진 전략 수립 필요
	• 발달단계에 따라 정책수요에 차이 존재 - 초등학교생은 안전과 보호에 대한 정책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고등학생은 안전과 권리에 대한 수요가 높게 도출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 간 격차 해소, 학교 안팎 청소년 간 격차 완화 등에 대한 요구	• 청소년의 생애주기와 발달단계를 고려한 전략적 정책설계 필요 • 청소년정책 영역에서의 격차 해소 및 형평성 증진 필요

2) 정책비전 및 전략목표의 설정

주요 연구결과와 그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하여, 향후 추진될 국가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전략목표를 도출하였다. 비전과 목표 설정의 틀은 김지경, 정연순(2015)의 연구에 제시된 기본 틀을 참조하였다.

(1) 정책비전의 설정

정책비전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청소년, 미래를 이끄는 청소년
------	---

연구결과와 전문가 자문 및 검토, 연구진 협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중장기 국가청소년정책이 지향할 정책비전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청소년, 미래를 이끄는 청소년”을 도출하였다.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에는 청소년참여 확대, 권리 보장 등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은 미래의 예비적 시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참여에 대한 청소년의 높은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수동적 시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상(像)을 담고 있다.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청소년”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다양한 활동을 통한 경험과 성장, 청소년 건강권 보장, 온오프라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복지 등의 가치를 포괄한다. 그리하여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청소년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지향한다.

“미래를 이끄는 청소년”에는 청소년 주도성, 미래, 꿈, 진로 등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스스로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동시에,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주역으로서의 청소년 상을 내포한다. 요약하면, 제시된 비전은 횡적으로는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등 청소년정책의 전(全) 영역을 포괄하고, 종적(시간적)으로는 청소년의 현재-미래를 포괄하도록 설정되었다.

(2) 전략목표의 설정

청소년정책을 둘러싼 주요 환경변화와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된 주요 정책 수요를 토대로, 정책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목표로 다음의 5가지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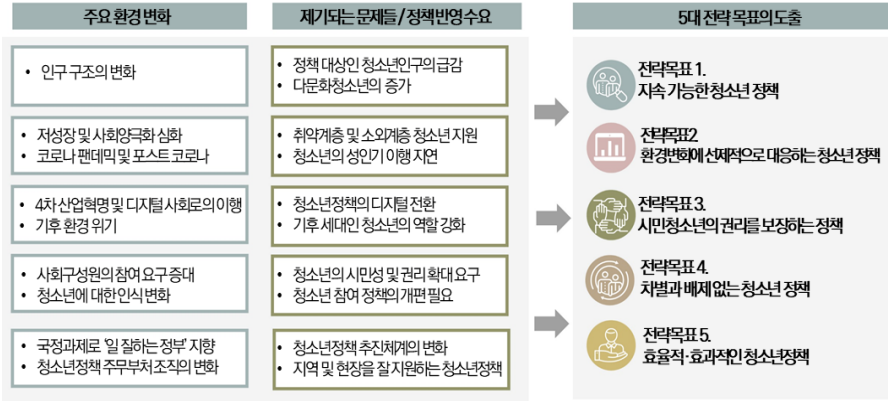


그림 VI-2. 정책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목표의 도출

① 전략목표 1: 지속 가능한 청소년 정책

첫째, 향후 청소년정책은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청소년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정책 대상자인 청소년인구가 감소하고, 교육정책 등 인접 영역에서 유사한 정책사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즉, 수요자인 청소년(및 부모)의 니즈를 충족하는 데 보다 집중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수요자의 니즈가 높은 분야인 ‘진로’ 영역을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부각하여 내실화하고,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분야를 적극 발굴하는 전략도 유효해 보인다.

② 전략목표 2: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청소년 정책

둘째, 급변하는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사회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미리 준비하고, 청소년인구 감소 및 지방인구소멸, 저성장 및 사회양극화, 코로나 팬데믹 등 직면한 사회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의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고,

영역별로 분절되어 산재하는 정보를 통합하는 정보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환경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기후세대인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청소년정책 영역에서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대비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집단 간 사회갈등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청소년의 공동체 역량 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③ 전략목표 3: 시민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셋째, 시민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국제기구 및 해외 각국의 청소년정책 검토 결과, 청소년 권리 강화 및 참여권 보장은 가장 강조되는 공통적인 흐름으로 파악되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청소년을 미래의 예비적 시민이 아닌, 현재 시민으로 인정하는 관점의 전환이 강조되었고, 청소년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청소년 권리강화 및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시민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향후 청소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주요 전략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학교에서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근로권익과 같이 청소년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지만 실제 보장이 미흡한 영역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④ 전략목표 4: 차별과 배제 없는 청소년정책

네 번째 주요 전략목표로는 ‘차별과 배제 없는 청소년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목표는 청소년정책에서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집단 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고루 혜택이 제공되는 청소년정책을 지향한다. 이러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각지대 없는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확대, 누락되는 시기 없이 아동~청소년~청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정책, 청소년의 생활영역을 광범하게 아우르는 정책, 그리고 기존 청소년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후기청소년 정책 강화 등이 요구된다.

⑤ 전략목표 5: 효율적·효과적인 청소년정책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정책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정부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10.6.). 주무부처 이관 등 중요한 거버넌스 변화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차제에 기존에 노정했던 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를 보완하여 한 단계 진전된 정책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확충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특성 상,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되는 바, 향후 청소년정책은 중앙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화'를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는 데는 지자체 공약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매니페스토 접근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상 중심 청소년정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복지 등 유관분야와의 협업이 중요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이전보다 성과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3]에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의 구조가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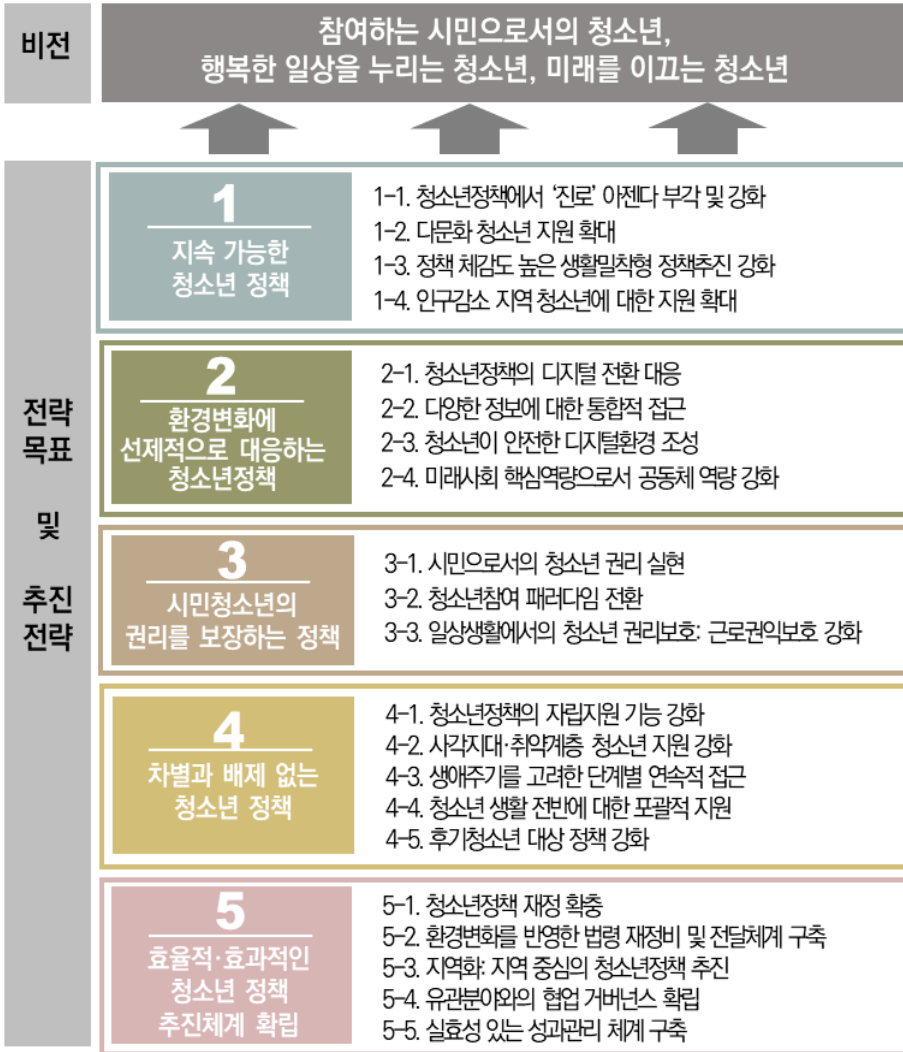


그림 VI-3. 청소년정책 비전,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구조도(안)

2. 전략목표별 추진전략

상술한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이 아래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충실히 부합하고자, 세세한 정책과제 혹은 단위 ‘사업’ 수준의 정책을 나열하기보다는, 각각의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추진전략들을 도출함으로써, 앞으로 추진될 국가청소년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전략목표 1: 지속 가능한 청소년정책

추진전략 1-1	청소년정책에서 ‘진로’ 아젠다 부각 및 강화
----------	--------------------------

① 청소년정책에서 ‘진로’ 개념의 확장 및 정책영역 전반에 반영

향후 청소년정책은 수요자 니즈를 충족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리포지셔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청소년정책 전반에서 ‘진로’ 아젠다를 부각하고, 진로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진로’ 아젠다는 2차 자료 분석과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해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의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은 주제로 도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선택을 준비하는 것이 청소년기 주요 발달과업이라는 점에서도 청소년정책의 핵심 키워드 및 가치로 설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수요자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과 차별화 된 접근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진로’ 개념을 확장하고, 정책영역 전반에 반영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진로’를 진로상담이나 진로체험, 진로활동 등 이전에 사용되던 협의의 개념이 아닌, 자신에게 어떠한 진로 가능성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하는 활동 전반으로 폭넓게 이해하고, 청소년정책 영역 전반에 진로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도 궁극적으로 진로와 연계되도록 설계하고, 취약계층 및 위기청소년 정책에서도 진로 지원을 확대하며, 후기청소년의 경우에도 진로취창업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정책 전반에 걸쳐 진로성장을 돕도록 재구조화 한다.

② 대상별 맞춤형 진로 지원: 학교 교육과의 유기적 연계

청소년정책에서 진로 지원을 대폭 개선·강화하려면 특히 청소년활동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정책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진로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청소년활동 분야에서는 청소년 발달단계를 고려한 공통의 체계화 된 기본 틀이 미비했는데, 이를 보완하여 아동-청소년-청년의 성장단계를 반영한 기본적인 커리큘럼(curriculum)을 설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진로활동’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광호, 2022)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각 학교급의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청소년 진로활동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구성·운영하는 것이 청소년의 니즈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초등학교급에서는 진로인식, 중학교급에서는 진로탐색, 고등학교급에서는 진로설계, 나아가 후기청소년기에는 진로선택 및 노동시장 진입과 연계되도록 진로활동을 설계하여 제공한다(이광호, 2022). 또한 체험·학습참여를 넘나드는 융합형 청소년 진로활동을 설계한다. 각 성장단계별로 청소년 진로활동의 핵심주제를 선정하고, 각각의 중점활동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며 학교의 수요와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표 VI-2. 성장단계별 청소년활동 주제별 중점 브랜드(예시)

성장단계 구분	중점 브랜드 활동(안)	비고
① 9~12세 (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 자기주도력 - 기본생활 습관 형성	- 성장단계별 부분공통(예시) - 읽고 말하기(9~15세) - 생활기술(16~18세) - 자치참여, 기업가 정신(16~24세) 등 - 전(全)단계 공통활동 - 기초학(습)력, 민주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디지털시 소양교육, 진로개발, 레크리에이션 등
② 13~15세 (중초기 청소년, 중학생)	- 진로개발 - 생활기술(금융교육)	
③ 16~18세 (중후기 청소년, 고등학생)	- 교과학습 내용 연계 활동(특성화고연계) - 생활기술(일반고) - 기업가 정신	
④ 19세 이후 (후기 청소년, 대학생 청년)	- 기업가 정신(창업) * 국립청소년수련원 부트캠프 (Boot Camp)	

*출처: 이광호(2022). 새정부 청소년활동 정책제언: ‘청소년육성’으로서 청소년활동에서 ‘청소년성장’으로서 청소년활동으로의 전환. 청소년활동 현장소통포럼 자료집, 17쪽.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③ 진로체험활동의 질적 개선: 신산업트렌드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진로 지원

청소년정책에서 진로 아젠다를 부각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 진로체험활동을 질적으로 대폭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소년 의견조사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기존의 진로체험활동이 업종과 분야도 제한되어 있고, 일회성 체험 위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청소년정책은 양질의 진로체험활동 제공을 청소년분야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삼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실시했던 몇몇 특정 직업 중심으로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이 이루어졌던 관행에서 벗어나, 산업별 협의체와 연계해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해 각 산업의 역사, 의미, 추세, 전망, 요구하는 역량을 알아봄으로써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꿈을 키우고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자기주도 진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전문가 서면자문, 2022.6.).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 단위에서는 산업별 협의체를 발굴하고 MOU 체결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각 지역 단위에서는 해당 협의체에 속한 기업체와 청소년시설이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추진전략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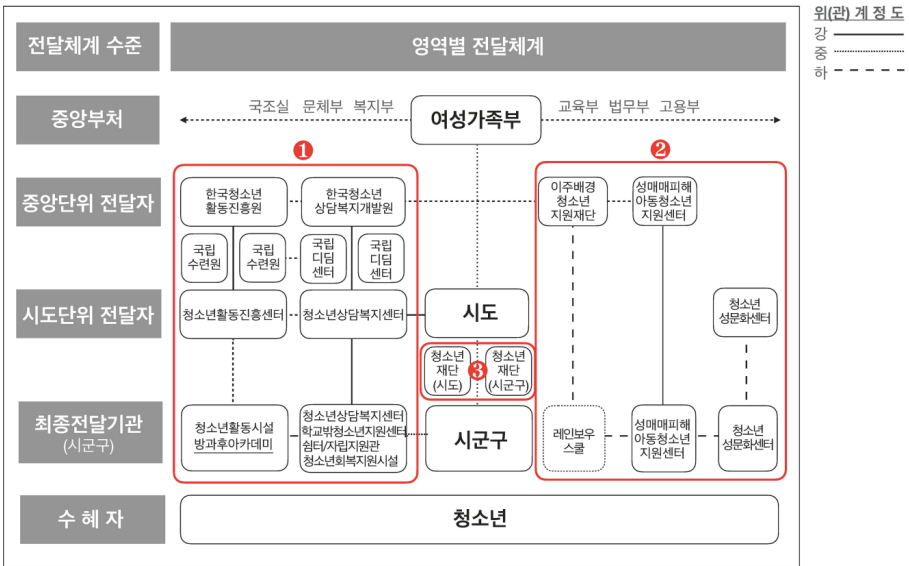
다문화 청소년 지원 확대

향후 청소년정책이 수요자들에게 소구력을 갖는, 지속 가능성이 큰 정책으로 리포지셔닝 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자로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인구는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문화 청소년은 절대적 수와 상대적 비중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다문화 청소년이 청소년정책의 수요자로 차지하는 중요도도 증가할 것임을 방증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기부터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성장하며 스스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지역중심으로 다문화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

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과 전통적인 청소년분야의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협력 체계도 보다 공고해질 필요가 있다. [그림 VI-4]는 중앙과 지자체에서의 청소년정책 영역별 전달체계를 도식화하고 각각의 관계 또는 위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②에 위치한 다문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①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정책 및 수행의 전문기관들과 협력이 긴밀하지 못하고 관계정도가 약한 편이다(김현철, 2022).



* 출처: 김현철(2022).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자료집. 7쪽.

그림 VI-4. 청소년정책 영역별 전달체계 관계도

지금까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보다는 이주배경 가정을 지원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역의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이 더 공고한 편이었다(김윤영, 2022). 앞으로 다문화 청소년 지원 기관들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역의 청소년 전문기관 및 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이 전용기관 뿐 아니라 더 많은 기관 및 지원 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①에 위치한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과 시설의 관계자들이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청소년의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정책추진 강화 전략을 통해 수요자의 정책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청소년 대상 의견 수렴 결과 청소년들은 등하굣길 안전을 비롯하여 비행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까지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 개입을 원하였고, 일자리(아르바이트) 관련 근로권의 보호에 대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급식지원 및 급식의 질 향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 교통비 지원 등에 대한 정책 수요도 높았다.

화성시 무상공통이란?

화성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친환경 대중교통정책으로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는 혁신적 교통정책입니다.



* 출처: 화성시 무상공통. <https://savebus.hscity.go.kr/userMain.do> 에서 2022년 10월 14일 인출.

그림 VI-5. 아동·청소년·청년 교통비 지원(화성시) 사례

특히 교통비 지원은 화성시 무상공통⁵²⁾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현재 화성시는 교통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대중교통정책을 추진 중이고, 만 6~23세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월별 대상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비용을 정산·검증 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 정책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의 관련 시설과 정보에 닿는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화성시 사례를 참고하여 점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생활밀착형 정책은 선택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상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외에 청소년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하여 법령이나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이 청소년의 삶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여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 아동·청소년·청년(만6~23세) 및 어르신(만65세 이상)의 관내 시내·마을버스 요금 지원(화성시 무상공통, <https://savebus.hscity.go.kr/userMain.do> 에서 2022년 10월 14일 인출).

①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개발·추진

청소년정책의 지속 가능성 및 영향력 제고와 관련하여,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역 청소년이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과, 청소년 인구의 유출을 줄이고 인구 유지에 기여하는 목적을 동시에 갖는다. 이를 위해 다부처 협력사업 또는 지자체 특화사업 형태로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구소멸 위기 정도에 따라 지역수준을 분류하고, 해당 지역의 요구를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유관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전문가 자문의견, 20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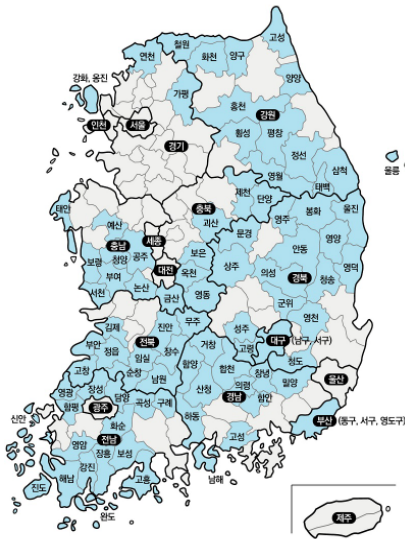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도 청소년·청년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 고성군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경남 고성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 중 하나인데, 인구소멸을 막고 젊은 인구를 유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10대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바우처 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경남도민신문, 2022.7.24.).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에게 현금성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인지에 대한 논란은 논외로 두고, 여기에서 눈여겨 볼 지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청소년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했다는 점이다.

표 VI-3. 경남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내용	-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에게 매월 5~7만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급 - 문화, 진로, 건강 등과 관련된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추진현황	2019.5.: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2020.10.: 조례 제정 2021.1.: 사업 시행
주요 성과	- 신청자 수: 2,503명(해당인구 2,588명)/ 2021.12.자료 - 가맹점 수: 860개소 - 인구증감: 13~18세 인구 95명 증가 - 2020.1~9.: 62명 감소 - 2020.10.(조례 제정)~2021.11.: 95명 증가

*출처: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21). 2021 지자체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워크숍 자료집, 23~24쪽 내용을 표로 재구성.

2022년 10월 현재, 전국 229개 지역(기초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2개) 중 89개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인구감소지역 지정, 2022.10.16.인출). 전체 지역의 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 지역에서 정책대상자인 청소년 수가 크게 감소하고 그로 인해 청소년정책이 설 자리를 잃는다면, 전체적으로 정책의 영향력과 파급력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정책은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대응 방안에 배전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영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영암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에서 2022년 10월 16일 인출.

그림 VI-6. 인구감소 지역 지정 현황

②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상술한 바와 같이 인구감소 지역에서 다부처 협력 또는 지자체 특화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인 청소년 지원정책을 추진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에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

현행 인구감소지역법은 제17조에서 ‘청년·중장년에 대한 정착 지원’은 언급하고 있으나 청소년에 대한 언급은 누락되어 있다. 인구소멸지역의 청소년인구 감소는 해당 지역 청년층, 나아가 중장년 인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지원 범위에 청소년인구의 유출 방지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17조의 지원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

개별 조항을 개정하는 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구감소지역법 전반에 걸쳐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편이라는 점이다. 동법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에서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제25조(문화기반의 확충)에서는 작은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기타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에 비해, 동법 어디에도 청소년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규정에 의해,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이용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설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법에 청소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은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법 전반에 걸쳐 청소년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청소년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조문 신설이 요구된다.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야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지방인구소멸이 가시화 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인구감소 둔화 및 인구유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청소년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표 VI-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7조(청소년· 청년·중장년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소년의 유출 방지 및 성장 지원과

현행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4. 〈생략〉 5.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활동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5. 〈개정〉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소년·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제25조(문화기반의 확충)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생략〉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생략〉 〈신설〉 제22조의1(청소년지원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청소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활동·보호·복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청소년시설 환경 개선 및 청소년 활동·보호·복지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생략〉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생략〉 제25조(문화기반의 확충) 〈생략〉

*출처: 현행 법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18877,20220610\)](https://www.law.go.kr/법령/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18877,20220610))에서 2022년 10월 16일 인출.

2) 전략목표 2: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청소년정책

추진전략 2-1	청소년정책의 디지털 전환 대응
----------	------------------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청소년정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디지털환경에 대한 고려와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주요 메가트렌드 중 하나다. 향후 국가청소년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도 ‘디지털 시대’는 가장 중요도 높은 상위 5개 항목 중 하나로 도출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활동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환경의 중요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대되었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소년에게 온라인은 오프라인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향후 청소년의 삶에서 디지털/온라인 환경의 영향력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청소년정책도 ‘디지털로의 이행’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략목표2.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청소년정책’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 ‘청소년정책의 디지털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소년정책의 디지털 전환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도 긴밀히 연계된다. 윤석열 정부는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5.25.). 이를 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관련 주체들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를 실현하며,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해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5.25.). 청소년정책의 디지털 전환 과업도 이 같은 국정운영 방침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보다 수월하게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소년정책의 디지털 전환 준비는 매우 복잡하고,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과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가칭) 청소년 분야 디지털 전환 종합연구’를 통해, 청소년 분야에서 검토 또는 고려해야 할 디지털 전환의 기본 틀을 설계하는 방안이다. 여기에서는 활동, 보호, 복지 및 정책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디지털 청소년 사업의 경향과 사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과제의 현황과 연계 방안 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전문가 자문의견, 2022.8.31.).

또한 차제에 청소년 현장의 디지털 업무 시스템 도입 방안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업무시스템이 미비해, 기관 간 연계·협력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소년기관이나 단체 간 업무소통을 위해 공문서 하나를 보낼 때도 이메일을 이용하고 있으며, 문서발송 및 수신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이익선, 2022). 향후 청소년분야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나아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지원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할 때, 사소한 보완점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정책 분야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통합 디지털 플랫폼은 이전 단계에서 실시한 현행 청소년 관련 데이터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재구조화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 분야 빅데이터를 연계·활용하고, 각 분야별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기관(단체 및 시설) 간 교류·협업할 수 있는 틀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전문가 자문의견, 2022.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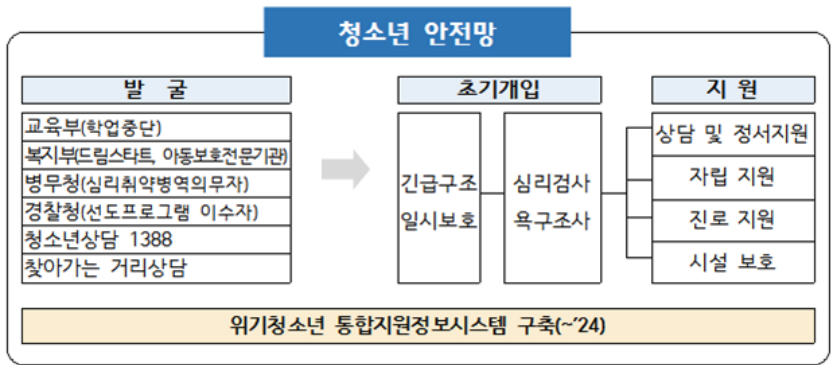
셋째, 디지털환경에서의 청소년공간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메타버스 청소년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메타버스 청소년센터를 통해 상담, 멘토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개별 청소년기관들이 서로 연계되지 않은 채 각자 분리된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는,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김현철, 2022).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같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김현철, 2022; 전문가 자문의견, 2022.8.31.).

추진전략 2-2	다양한 정보에 대한 통합적 접근
----------	-------------------

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청소년안전망) 구축

부처별로 관리하는 각종 사업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합적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부터 보호 종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통합적 접근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전화, 모바일, 사이버 등 각 채널별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 1388 정보도 통합 관리하고 서비스의 질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전문가 자문의견, 2022.8.31.).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7.25.),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실시.

그림 VI-7.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청소년안전망) 구축

②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1b)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는 41.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사전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대상을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등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 단계로 확대하여 신속한 연계와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학교에서 학업중단 학생의 학적처리 후 교육청에서 해당 자료를 취합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전송하는 현행 방식을 [그림 VI-8]과 같이 나이스시스템과 연계하여 교육청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동시에 자동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내에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5.17.).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5.17.).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그림 VI-8.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③ 실태조사 데이터 연계 활용

여성가족부가 생산하고 있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013호),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67001호),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국가승인통계, 제154022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법정 실태조사) 등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청소년정책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추진전략 2-3 |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환경 조성

디지털환경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청소년정책, 특히 청소년 보호정책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환경 조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디지털 유해환경에서의 폭력·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온라인 도박 예방, △디지털 시민성 교육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① 디지털 유해환경에서의 폭력·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날로 진화하는 온라인에서의 폭력·성

폭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디지털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전문가들은 근래의 학교폭력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결합하여 더 은밀하고 정교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전문가 자문의견, 2022.9.1.).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여, 디지털공간에서 확대되는 학교폭력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에서의 학교폭력에 상시 대응할 수 지원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폭력 예방의 일환으로 디지털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환경에서의 피해에 사후에 대처하던 접근을 벗어나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환경의 유해상황을 유형화정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문가 자문의견, 2022.9.1.). 이를 통해 널리 알려진 SNS메신저, 랜덤채팅앱 등을 통한 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가상증강현실,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등에서 야기될 수 있는 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② 온라인도박 확산 예방 정책 필요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향후 청소년 보호정책은 온라인도박 문제에도 이전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실시한 ‘2020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생의 2.4%가 도박문제 ‘위험집단’에 해당하며 그 숫자는 약 6만 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연합뉴스, 2021.3.11.). 특히 청소년 도박은 온라인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매개로 하는 불법도박은 물론, 청소년들이 하는 많은 합법적인 게임에도 사행성 요소가 유입되어(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2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에서 재인용) 청소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행성 게임(도박)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이러한 연유로 전문가들은 “온라인도박이 청소년 놀이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청소년기 도박 문제는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도박 문제는 필연적으로 경제문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불법 추심행위, 성매매, 불법 아르바이트 등 2차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이수경, 2020.10.29.). 특히 도박을 하는 청소년은 음주, 흡연, 폭력, 절도 등 다양한 비행행동을 동시에 보이는 등(김예나, 권선중, 2020), 성장기 도박 문제는 청소년기 발달에 전반적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에서 재인용).

따라서 청소년 도박문제, 특히 빠르게 확산되는 온라인도박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도박문제는 조기발견이 중요하므로 조기발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여성가족부·교육부 합동으로 학령전환기(초4,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터넷·스마트폰 매체 이용 실태조사’에 온라인도박 관련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일종의 스크리닝 기제로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 가능하다. 또한 도박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문제수준에 따라 빠르게 개입해야 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이때, 가정-학교-지역사회자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의 필요하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③ 디지털 시민성 교육 확대 및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디지털 시민성’이란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디지털환경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과 개인의 가치-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윤리와 철학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며(장명선, 2022.10.2.), 디지털 시민성 교육은 이러한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뜻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려면 환경 그 자체에 대한 개입도 필요하지만, 청소년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 시민성 교육은 이러한 역량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위해,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학교 안팎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도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디지털 시민성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학교-가정-사회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해야 한다(전문가 자문의견, 2022.8.31.).

아울러,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비대면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영상·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에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등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권리 행사에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관계부처 합동, 2022.7.). 또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피해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에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던 기존의 관점을 탈피하여,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2.7.). 이러한 방향 설정과 정책추진은 무척 적실하고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제시된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부처별로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키우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VI-5.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기본 원칙

원칙	주요 내용
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 자신에 관한 정보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주체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해 존중
②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 고려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모든 활동에서 어떤 것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에 최선인지를 고려(UN 아동권리협약 제3조)
③ 권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 지원	•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권리 행사 지원
④ 연령대별 특성 고려	• 연령대별 아동·청소년의 역량과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 설계
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서비스·기기 등의 기획·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 적용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2.7.),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

앞으로 추진될 청소년정책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에게 국가에서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정책이나 서비스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는데, 고등학생들은 세대갈등과 젠더갈등을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갈등 해소를 위해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기후위기 대응과 갈등 해소를 위해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청소년정책이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역량 중 하나로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고(교육부, 2015),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자 하였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기후 변화 대응 능력 및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교육부, 2021.11.24.). 향후 청소년정책도 학교 안팎에서 갈등 및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한 실천방법을 공유하는 등 공동체 역량 강화를 전략으로 삼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전략목표 3: 시민청소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본 연구에서는 향후 청소년정책은 ‘시민청소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세 번째 전략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권리 실현’을 제안한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청소년을 미래 시민으로서의 예비적 존재가 아니라, 현재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 행사의 주체로 인정하고, 시민으로서의 평등권(equal right)을 실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전문가 자문 의견, 2022.7.20.). 앞으로의 청소년정책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할 것과 학생

징계 또는 학교규칙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운영의 심의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는 못했고, 일부 사립학교 또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허용하는 수준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운위에 학생대표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학생 대표의 학운위 참여에 대한 요구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대상 FGI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던 이슈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에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가 청소년 참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전기(轉機)이자 상징적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학생이 학교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학생(청소년)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가를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청소년의 권리 보장 강화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VI-6.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현행 ¹⁾	개정안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좌동>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학생 대표 ,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시민청소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추진될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참여의 패러다임을 이전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① ‘정책사업으로써의 참여’를 ‘청소년정책 운영원리로서의 참여’로 전환

첫째, 청소년참여가 특정 영역에 국한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아닌, 청소년정책 전반에 적용되는 운영원리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델파이조사, FGI 및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은 그간의 청소년참여가 청소년활동 영역의 하위 프로그램 또는 사업처럼 간주되어 온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청소년참여는 특정 영역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나 가치가 아니며, 무엇보다 사업이나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질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간의 참여정책은 일종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처럼 간주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참여가 개별 사업이나 프로그램으로 축소·환원되었던 데는 그간 청소년정책이 ‘참여기구’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현실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소년참여=참여기구’로 간주되다 보니 ‘참여기구’ 사업이 곧 청소년참여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청소년참여의 탈(脫)참여기구화를 지향한 바 있다.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대영역의 중점과제로 ‘1-1. 청소년 참여 확대’를 설정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참여, 일상에서의 참여를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성화’ 사업을 신규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참여의 패러다임을 바꿔보기 위해 새로운 사업이 기획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관점을 적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새롭게 도입된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사업도 청소년 주도성이나 지역 특색을 크게 살리지 못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또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표 VI-7.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사업명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목적	• 지역과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모델 적극 발굴 • 청소년이 정책토론결정실천을 통하여 직접 지역과 일상의 정책을 수립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 제고
사업비	• 총 사업비 5억원(2021년 기준)
사업방식	• 기초지자체 선정 및 운영 지원
운영방향	• 제시된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성·자율성 부여
참여활동 프로세스	<pre> graph LR A[참여자 모집 • 일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수 청소년 모집] --> B[교육 • 참여활동 의의, 정책결정과정, 해외 선진사례 등 사전 교육] B --> C[의제 발굴, 토론 • 지역 생활환경 기반 정책과제 발굴] C --> D[찬반 투표 • 다수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찬반투표] D --> E[실천 활동 • 직접적 입법 요청, 예산 반영 활동 등으로 실행력 확보] </pre> [참여활동 프로세스]

*출처: 여성가족부(2021.2.),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화 운영 주관기관 공모 안내문.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07596 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내용을 참조하여 표로 재구성.

청소년참여 활성화는 청소년정책의 재도약을 위해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고 새롭게 개편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청소년정책 전반에 적용되는 운영원리로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참여가 청소년활동 영역이나 청소년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권리보장 관점에서 청소년정책 전반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운영원리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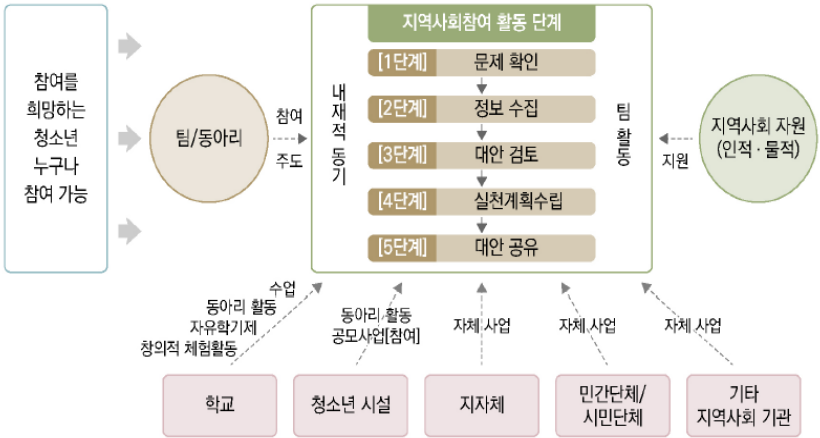
② '참여기구 중심의 참여'를 '일상적 참여'로 전환

둘째, 앞으로 추진될 청소년정책은 참여기구 중심의 참여정책을 탈피하여, 다수의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2차 자료 검토 결과,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참여기구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 FGI 참가자들은 대부분 참여기구 출신이었는데, 이들조차 주변에서 참여기구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며, 대부분의 친구들이

참여기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였다.

물론 참여기구가 지닌 기능과 장점도 분명 존재한다. 참여기구를 통해 그간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여할 기회를 얻었던 것도 사실이다(황여정, 2017). 하지만 참여기회가 소수의 청소년에게만 허락된다는 점에서, 참여의 저변을 확대하기보다는 ‘그들만의 참여’에 머물게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가 시민으로서 청소년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본다면, 참여의 기회가 소수에게만 허락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 경험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황여정, 2017). 따라서 앞으로의 청소년정책은 ‘일상적 참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 참여’는 지역사회 중심 활동과 연계된다. 비단 거창하게 정부가 추진할 정책을 제안하는 것만 참여가 아니라, 청소년이 발 딛고 살아가는 생활공간인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내가 사는 동네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참여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여정(2017)의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사회 참여 모형을 참고해봄직하다. 이러한 방식을 청소년시설은 물론, 학교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활동 등 다양한 장면에 확장 적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참여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출처: 황여정(2017).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279쪽, [그림 VI-3].

그림 VI-9.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프로젝트 기반 참여활동

③ ‘형식적 참여’를 ‘실질적 참여’로 전환

셋째,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참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FGI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참여정책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참여활동에 대해 유의미한 피드백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였다. 열심히 참여기구 활동을 하고 정책제안을 해도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피드백 절차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반복될 경우, 참여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갖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참여정책은 ‘보여주기식’ 참여가 아니라,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현실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 참여’가 되어야 한다(황여정, 2017). ‘참여해도 소용이 없다’는 광범한 인식이 ‘참여를 하니까 달라진다’는 확신으로 바뀌어야, 청소년참여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참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논의가 [그림 VI-10]에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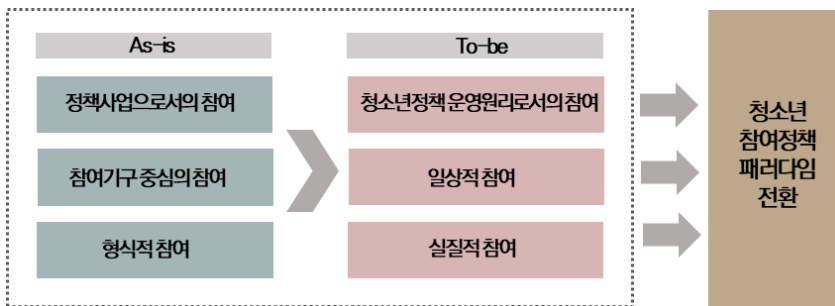


그림 VI-10. 청소년 참여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안)

추진전략 3-3

일상생활에서의 청소년 권리보호: 근로권익보호 강화

일상생활에서의 청소년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것도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청소년 권리보호는 앞서 1절에서 논의한 ‘정책제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추진 강화’와도 일맥상통하는데, 정책적 개입을 통해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보장을 실현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영향력과 제감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주제로 근로권익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52조의3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에 대해 각별히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FGI에 참여한 4개 집단 모두 면담과정에서 근로권익 보호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10대 청소년의 경우 근로권익 침해 사례를 주변에서 빈번히 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향후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권익보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부 추진전략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새로운 유형의 근로형태 종사 청소년을 포괄하는 보호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먼저,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의무사항을 관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청소년보호법」에도 근로보호에 관한 세부 내용을 추가하여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약물, 유해매체,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은 상세히 포함하고 있으나, 근로보호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 제52조의3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권익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까지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에서 언급한 근로권익보장의 기본 원칙을 「청소년보호법」에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근로권익교육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꾸준히 근로권익교육이 확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업계고 위주로 제공되거나, 대규모 강의식 수업에 주로 의존하는 등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로권익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대상 확대와 교육내용 및 방법의 질적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② 새로운 유형의 근로형태 종사 청소년을 포괄하는 보호 방안 마련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해 향후 추진될 청소년정책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

는 ‘긱 워커(Gig worker)’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가속화되는 근로형태에 종사하는 청소년에 대한 권리보호다. 긱 워커는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일하는 초단기 노동자를 의미하며, 각종 배달원, 프리랜서, 개발자, 번역가, 컨설턴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청소년의 경우, 배달 라이더, 유튜버, 긱 워크 플랫폼을 통한 단기 아르바이트 등이 긱 워크와 관련이 깊다.

긱 워커에 대한 논의는 그간 ‘플랫폼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플랫폼 노동은 대부분 배달근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배달근로가 주로 산업재해와 같은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불거진 반면, 향후 전개될 청소년 근로 이슈는 ‘안전’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하고 광범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에는 프리랜서 마켓을 통해 유튜브 영상 편집, 썸네일 제작, PPT 디자인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아르바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 일회성 또는 초단기성으로 과업을 지시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를 근로로 볼 것인지, 연령제한은 없는지, 현행 법령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근로를 제한하고 있는데 일종의 프리랜서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양상을 띠는 이러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아가 연소자로서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권리보장은 잘 이루어지는지 등에 관해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로서는 배달근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광범한 긱 워크 노동시장에 청소년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실태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긱 워크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 권익보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전략목표 4: 차별과 배제 없는 청소년정책

추진전략 4-1	청소년정책의 자립지원 기능 강화
----------	-------------------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발달과업은 자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립’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을 의미한다(네이버 국어사전, 2022.10.19.). 즉 청소년기 과업을 무리 없이 수행하여 성인으로 원만하게 이행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립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자립’은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청소년기의 목표이자 발달

과업이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은 모든 청소년이 차별과 배제되는 일 없이 자립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에서 ‘자립’은 주로 자립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 및 위기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의 청소년정책은 보호자로부터의 자립이 아닌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으로 개념을 확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 누구나 성공적으로 성인기로의 이행을 경험하고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취약계층 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청소년의 궁극적인 자립을 목표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모든 청소년이 ‘차별과 배제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추진전략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앞서 [추진전략 1-1. 청소년정책에서 ‘진로’ 아젠다 부각 및 강화]에서 논의한 진로 지원, 그리고 뒤에서 논의할 [4-4. 청소년 생활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모두 관련이 있다. 자립을 위해서는 진로탐색과 진로준비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생활 전반의 균형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4-2. 사각지대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강화] 역시 전통적인 의미의 자립 지원 정책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각의 전략들이 모두 여기에서 논의하는 자립 지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위기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자립지원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며,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 진출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전문가 자문의견, 2022.8.).

한편, 모든 청소년에게 통용되는 넓은 의미의 자립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금융교육 확대, 청소년 취창업 지원 등의 정책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후기청소년 그룹을 대상으로 한 FGI에서 참가자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스스로 부동산이나 금융계약 등을 처리할 일이 발생하는데, 어디에서도 이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적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현장전문가 FGI에서도 전기청소년기를 벗어나 후기청소년, 즉 성인기로 진입하는 이들을 위해 생활에서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정책채감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바, 관련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추진전략 4-2	사각지대·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강화
----------	---------------------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공공 정책은 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청소년들도 설문조사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고, 개방형 문항에서도 취약계층 대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청소년정책은 아동정책, 청년정책과 연령상 중복되는 대상이 존재하고,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청년정책은 주무부처가 상이하여 정책 및 서비스에 있어서 중복이나 누락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아동보호체계 내 청소년과 청소년보호체계 내 청소년 간에 지원격차가 존재하지 않도록 정보를 연계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활동 경험에 대한 기회와 접근성에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동안 맞춤형 복지지원의 대상이었던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비행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저소득층 청소년, 나홀로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점검·평가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화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영 케어러), 수용자 자녀 청소년 등 신규 정책대상을 발굴하고 이들 취약 청소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에서 살펴본 호주 사례에 따르면, 호주의 청소년정책 프레임워크에서는 소외 청소년 지원을 강조하면서 소외 청소년의 범주로 원주민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농어촌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가족돌봄 청소년, 시설이용 청소년, 소년원 수감 청소년, 노숙청소년, 장애청소년, 만성질환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위기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니트(NEET) 청소년 등 굉장히 다양한 범주를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 추진될 우리의 청소년정책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청소년의 범주를 면밀히 확인하고, 최대한 소외되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나가야 한다.

추진전략 4-3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연속적 접근
----------	----------------------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기를 아동기와 청년기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한편,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청소년 의견 수렴 결과, 초등학생은 안전과 보호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았고, 중·고등학생은 안전과 권리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청소년정책에서도 생애주기적 측면을 고려하여 청소년기를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고 정책적 투자의 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 따라 수요자들에게 더 필요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아동기부터 전기·중기·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아우르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단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발달단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각 시기의 특화 정책을 개발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11]에서와 같이 전기 청소년기에는 가정학대 예방, 안전한 온·오프라인 환경 구축 등 안전한 성장환경 및 보호 정책에 관심을 두고, 중기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참여권 보장, 참여활동 증대, 근로권익 등 인권보호, 진로,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안전한 성장환경 및 권리 보장 정책에 중점을 둘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연령대에 해당하는 후기 청소년의 경우는 진로·취업·자립에 대한 요구가 큰 바, 관련 정책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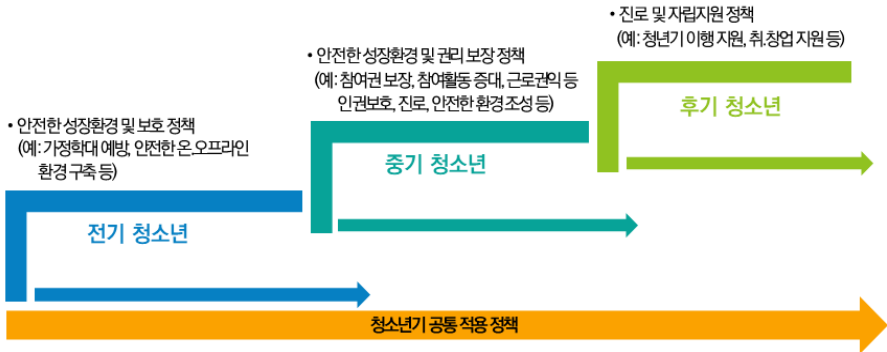


그림 VI-11. 생애주기 및 발달단계를 고려한 정책접근 전략(예시)

추진전략 4-4	청소년 생활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원
----------	---------------------

앞으로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교육, 안전, 건강, 고용, 여가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추진되어야 한다. 해외사례 검토 결과, 프랑스에서는 교육과 구직, 주거, 보건지원에서 여가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의 균형 있는 생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바로 시민사회의

의무라고 강조한다. 교육, 고용, 주거, 건강 뿐 아니라 자립에 필요한 경제(금융) 교육, 스포츠 및 문화활동 지원 등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자립 과정에서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형평성 보장을 위한 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권, 근로권, 주거권, 건강권의 보장 뿐 아니라 문화와 스포츠 활동의 접근권을 청소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울·불안의 예방, 자살·자해 문제への 대응, 건강검진 질과 접근성 향상, 포괄적 성교육, 문화 및 스포츠 활동, 경제(금융) 교육 등은 경제 위기가 심각할수록 청소년 시기에 국가 책임으로 보장할 권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생활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추진전략 4-5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 강화
----------	----------------

2021년 기준 19~24세 후기청소년 인구는 약 380만 명으로, 9~24세 청소년 인구 중 45.3%를 차지한다(여성가족부, 2021a: 6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청소년정책은 전기·중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은 많지 않았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성인기 이행 지연으로 전세계적으로 청소년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청소년 의견 수렴 결과, 실제로 후기청소년들은 정책 대상자로서 청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것 같은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다. 더욱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19의 영향까지 더해져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빈곤 및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우선 현재 만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던 사업의 지원 대상 연령을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후기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중기 청소년과는 차별화되는 후기청소년의 일자리(아르바이트) 등 근로권의 보호 정책, 보호종료 후 연계·지원 등 후기청소년 수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후기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청소년정책의 외연을 확대하여야 한다.

한편 해외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권한강화가 계속 강조되는 추세이다. 유럽연합이 밝히고 있듯이 청소년 세대가 현재의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세대이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후기청소년들이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전략목표 5: 효율적·효과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추진전략 5-1	청소년정책 재정 확충
----------	-------------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새롭게 도약하려면, 재정 확충은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정책 재정 확충’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실 재정 확충은 언제나 중요한 과제였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4-1-3. 청소년정책 위상 강화’ 과제의 일환으로 ‘청소년정책 관련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제시되었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정책 안정적 추진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재원 다각화 검토’, ‘청소년정책 위상 강화를 통하여 지자체와 교육경비 보조 지원 협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8.3). 그러나 실제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간 청소년육성기금 재원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예산 규모도 눈에 띄게 확대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유로 FGI와 자문회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예산 확충을 주요 과제로 거론하였다.

표 VI-8.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년)	조성액(A)						사용액(B)				순 조성액 (A-B)	조성액 누계
	정부 출연 금	민간 출연 금	경료, 경정사 업 수익 법정 출 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이자 등 기타	계	청소년 사업지원	기타 경비	복권 기금 반납금	계		
2015	-	-	9,655	76,412	1,744	87,722	85,568	38	1,118	86,724	998	46,675
2016	-	-	16,441	85,230	3,236	104,907	95,499	41	1,179	96,719	8,188	54,863
2017	-	-	17,285	91,235	3,897	112,417	101,548	320	3,527	105,395	7,022	61,885
2018	-	-	15,853	97,605	3,206	116,664	108,758	37	3,219	112,014	4,650	66,535
2019	-	-	8,511	107,598	3,631	119,740	119,390	40	1,211	120,641	-901	62,228
2020	-	-	6,900	119,418	5,511	131,829	131,751	36	2,308	134,095	-2,266	59,962
2021 (결산)	-	-	-	127,857	8,919	136,776	163,718	42	3,699	167,459	-30,683	29,279

*출처: 여성가족부(2021a). 2021 청소년백서, 595쪽.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원 확충을 향후 추진될 국가청소년정책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상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접근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① 청소년육성기금 재원 확충

첫째, 청소년육성기금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2021년 기준 청소년정책 예산 총액은 약 2,344억원이며, 일반회계에서 1,109억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338억원의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a).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청소년정책 예산의 57%를 육성기금이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 따라서 육성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규모를 확충하는 것은 전체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데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먼저, 재원 다각화 방안이다.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은 복권기금 전입금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수입을 청소년육성기금 재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실제로 과태료 수입을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기금과 지방기금에서 모두 이미 적용되는 방법이므로(행정안전부, 2021.7. 332쪽 참조), 청소년육성기금에 적용해도 법률적으로 무리가 없다(전문가 자문 의견, 2022.9.21.).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및 범칙금을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으로 규정한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표 VI-9. 과태료 및 범칙금을 관련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

구분		내용
응급의료 기금	내용	• 국가기금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을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
	관련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¹⁾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구분		내용
가평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내용	4.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6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2.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관련 규정	• 지방기금 • 옥외광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지방기금으로 활용한 사례 •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²⁾ • 제2조(기금의 재원)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에서 2022년 10월 19일 인출.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66968> 에서 2022년 10월 19일 인출.

②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 연계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예산과 청소년사업의 연계 및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전문가 FGI와 자문회의에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논의는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 현장 전문가뿐만 아니라 FGI에 참석한 지자체 공무원도 지자체 재원이 상대적으로 예산이 여유로운 교육부문에는 지원되면서, 여건이 열악한 청소년분야에는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한 바 있다(전문가 2차 FGI, 2022.9.31.).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를 받는 지원처에 청소년 대상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사업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은 초·중등교육에 경비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의 각호 규정에 따라 사실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에 관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규정에서는 청소년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폭넓게 해석하면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청소년 교육을 온전히 전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술한 방향으로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교육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같은 청소년시설이 그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관련 규정 개정은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차제에 이를 공론화하고 논의를 거쳐,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의 범위에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사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표 VI-10. 지자체 교육경비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구분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u>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u>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출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에서 2022년 10월 17일 인출.

추진전략 5-2

환경변화를 반영한 법령 재정비 및 전달체계 구축

① 정책환경변화를 반영한 전달체계 정비

다음으로, 청소년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반영한 법령 재정비 및 전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환경변화에는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대(국정과제 반영), 청소년

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미래의 예비적 시민→현재 시민으로서의 청소년)과 같은 사회 환경변화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의 이관과 같은 정책환경의 변화도 포괄한다.

2000년대 이후 청소년정책은 2005년 단일 청소년전담조직으로 청소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전담하게 되었고, 2006년 국가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8년까지 유지되었다. 이후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정책실로 이관되었고, 2010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로 소속을 옮겨 지금까지 지속되었다(여성가족부, 2021a). 그런데 최근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 기존에 여가부가 수행하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10.6.). 구체적으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여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신설되는 조직의 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 및 예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10.6.).

주무부처 이관은 청소년계에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 조직의 명칭에 대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제기되면서 청소년계에서는 '청소년' 명칭이 명시된 전담부처 설치를 희망하였으나, 단기적으로는 실현되기 난망해 보인다.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명칭이 반영된 전담부처 설치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청소년정책 발전을 위한 장기 과제로 '청소년'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관장하는 부처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향후 추진될 부처이관 과정에서, 신설되는 조직의 최상위 명칭(예: 논의 중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 '청소년'이 포함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조직 명칭은 지자체의 부서 설치 및 명칭, 사업배치, 담당인력 배치 등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간 지자체에서 청소년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더디게 진행되고 부서 명칭에 '청소년'이 이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았던 데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부처 명칭에 '청소년'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청소년정책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조직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환경변화를 반영한 청소년 관계법령 재정비

다음으로, 사회환경변화를 고려해 청소년 관계법령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고려해,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에서는 법령 전반에 걸쳐 청소년정책의 주요 목적이 청소년 ‘육성’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서는 청소년의 권리를 ‘청소년육성’의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분야에서 전개되는 논의는 ‘육성’을 넘어 ‘성장’을 지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e.g. 이광호, 2022; 전문가 자문의견, 2022.7.20.).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법률 전반에 반영되어 있는 제한적·소극적 의미로 비춰지는 ‘육성’을, 적극적·발전적 의미의 ‘성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권리를 ‘청소년 육성’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청소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존중해야 한다는 기조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전문가 자문의견, 2022.7.20.).

다음으로, 청소년보호 영역에서는 정책적 니즈가 많은 ‘근로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에 근로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약물, 유해매체,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앞절에서 논의한 디지털매개 유해환경 및 온라인도박 관련 사항도 사회변화를 반영해, 법률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청소년 등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법률 구성 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법 제5장(위기청소년 지원)에서는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각각 하위조항으로 가정 밖 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에 비해 청소년부모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제5장의2)로 편성하고 여기에 4개의 조항(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아니라, 청소년복지정책에서 정책대상자의 규모가 갖는 비중과 의미를 고려했을 때, 각 집단별로 서로 상이한 체계로 법률이 구성된 것이 어색하다는 것이다.

김지경 외(2018)에 따르면 1년 간 가출 경험이 있는 초·중등학생은 약 11만명으로 추산된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정책대상자의 규모가 비교적 클 뿐만 아니라, 복합위기를 경험하며, 2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중요성과 법률 체계를 고려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보인다. 아울러 현장에서 정책지원의 수요가 많은 경계선지능장애청소년 및 건강장애청소년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령은 모든 정책집행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직결되며,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법령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적합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11. 청소년 관계법령 정비 방안(안) 요약

구분	개정 방안(안)
청소년기본법	• 법률 전반에 걸쳐 반영·강조되는 청소년 ‘육성’ 개념을, 청소년 ‘성장’으로 변경 • 제5조의(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개정 - (변경 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변경 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 근로권익 보호에 관한 조항 신설 • 디지털매개 환경 및 온라인도박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관련 조항 신설
청소년복지지원법	• 전반적인 법률 체계 정비(위기청소년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 조항 간 균형 등)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강화 방향으로 법률 개정(지원 사항에 관한 조문 상세화 등) • 장애청소년(경계선지능장애청소년 및 건강장애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추가

추진전략 5-3	지역화: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
----------	----------------------

다음으로, 향후 청소년정책이 추구할 주요 전략으로 ‘지역화’, 즉 지역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청소년정책은 그 특성 상 지역사회와 대단히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실제 정책이 집행·실행되는 현장은 대부분 지역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도 지역사회이고, 청소년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청소년안전망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참여 분야에서도 제6차

기본계획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참여’를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청소년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유로 지역의 청소년정책 추진 역량을 증진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핵심적인 주체로 역할을 하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유성렬, 2022). 따라서 앞으로 추진될 청소년정책은 이 같은 기존의 관행과 인식을 탈피하여, 지자체가 청소년정책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 중심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려면 ‘조직’과 ‘인력’ 확보, 즉 지역에서 청소년정책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부서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의무적 배치가 요구된다(유성렬, 2022).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유도를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에 청소년정책 전담부서 및 육성전담공무원 의무적 배치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또는 아동친화도시 지정에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례를 참조하여, 가칭 ‘청소년친화도시’ 또는 ‘청소년행복도시’ 등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는 방안도 청소년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청소년친화도시’ 또는 ‘청소년행복도시’ 선정은 현재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를 대폭 개편하여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매니페스토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자체의 가시적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선거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청소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하고, 추후 정책 추진 시 공약이행 성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다. 지자체 선거 공약에 반영될 경우, 추후 예산 확보 등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는 바, 지역의 청소년정책 역량을 제고하는 데는 이 같은 전략적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진전략 5-4

유관분야와의 협업 거버넌스 확립

① 중앙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정책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관분야와의 협업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협업 거버넌스 구축 전략은 중앙정부 차원, 지자체 차원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등 유관부처 간 연계협력이 필수적인 바, 주무부처의 정책 조정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부처 간 중복되거나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부처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정책은 무엇인지, 부처 간 일관성-통합성을 결여하고 추진되는 정책은 없는지,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자살자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그간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별로 위기대응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로 인해 현장에서는 혼선을 경험하고 협업의 한계를 감당하고 있다(이미원, 2022). 사회적으로 많은 이목을 끌었던 보호종료 아동과 쉼터 퇴소 청소년 간 지원 혜택의 격차 문제도 부처 간 분절적인 정책 추진과 무관하지 않다.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의 정책 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주무부처에 정책조율 등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을 담당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이를 지원하는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다부처 간 중복분절된 정책이 추진되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상호 교차검토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지자체 차원의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정책이 정책대상자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책이 작동되는 현장, 즉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유관분야 연계·협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 내에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는 데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모형’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4-1-2.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 지정 운영’ 과제를 포함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2019년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내용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청소년성장

지원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행정,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각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이다(최인재 외, 2020). 운영은 지자체 직영, 청소년 관련 재단, 청소년 유관기관(시설), 민간 등에서 할 수 있는데, 각 주체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최인재 외, 2020). 이 협의체는 사업의 기획, 결정, 수행 및 성과 공유에 이르는 각 과정에서 상호 정보와 자원을 교환하고 협력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향한다(최인재 외, 2020).

FGI 및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으며,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었던 모형을 확대 보급하고, 각 지역에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출처: 최인재, 강경균, 송민경, 조윤정(202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481쪽, 그림 VII-1.

그림 VI-12.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개념도

추진전략 5-5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

①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향후 청소년정책이 추구해야 할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FGI와 자문회의를 통해 청소년정책에서 성과관리 시스템이 미흡함

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예컨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경우에도 추진 여부, 성과 등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성과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매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하며, 여기에는 전년도 추진실적과 차년도 추진계획을 포함한다. 이렇게 제출된 시행계획 자료를 청소년정책 분석·평가를 위해 지정된 전문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취합·검토·분석하고, 이를 다시 여성가족부에서 여타 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하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외형상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으나, 각 단계를 좀 더 밀착해서 살펴보면 보완할 지점들이 있다. 우선,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도 별다른 패널티가 없다. 또한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판단 근거인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하는데, 정책성과를 적절히 포착하기 어려운 성과지표들도 많다. 이러한 연유로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자칫 문서상의 관리, 명목상의 관리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책추진 성과의 판단근거가 되는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중장기 국가정책인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최상위 지표를 비롯하여, 각 영역별 핵심지표, 그리고 과제별 성과지표가 정책의 성과를 적실하게 반영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추진 실적에 대한 영향력 있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대내외적으로 피드백 될 필요가 있다.

추진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은 앞서 언급한 전문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이와 병행하여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에서는 “법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법령상으로는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 절차 역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별회의 내에 정책추진을 모니터링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니터링 절차를 활성화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볼 수 있다.

② 청소년정책 분야 평가체계 개편

청소년정책에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체계의 전반적인 정비

도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분야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안전점검’, ‘청소년쉼터평가’, 그리고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지자체 청소년정책분석·평가’ 등 다양한 평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차제에 평가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우선 각종 시설평가 및 사업평가를 구체적인 성과중심의 평가로 전환해서, 평가를 통해 정책추진 성과가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전문가 자문의견, 2022.8.31.). 이러한 성과 중심 평가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적절한 성과지표 산출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자체 청소년정책분석·평가’의 경우, 현재의 평가 방식이 지자체의 정책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정책의 수립-추진 전반에 대한 과정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실제 성과보다 문서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평가의 효력이 미약하고, 평가결과의 활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바, 평가결과의 피드백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청소년친화도시, 청소년행복도시 등의 형태로 평가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평가의 영향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VI-12〉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략목표별 추진전략과 관련 부처가 제시되어 있다.

표 VI-12.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총괄표

전략목표	추진전략	관련 부처
1. 지속 가능한 청소년 정책	1-1. 청소년정책에서 ‘진로’ 아젠다 부각 및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1-2. 다문화 청소년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1-3. 정책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추진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전략목표	추진전략	관련 부처
	1-4.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2.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청소년정책	2-1. 청소년정책의 디지털 전환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2-2. 다양한 정보에 대한 통합적 접근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2-3.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2-4. 미래사회 핵심역량으로서 공동체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3. 시민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3-1.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권리 실현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3-2. 청소년참여 패러다임 전환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3-3. 일상생활에서의 청소년 권리보호: 근로권익보호 강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지자체
4. 차별과 배제 없는 청소년정책	4-1. 청소년정책의 자립지원 기능 강화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4-2. 사각지대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4-3.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연속적 접근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전략목표	추진전략	관련 부처
	4-4. 청소년 생활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원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4-5.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 강화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5. 효율적·효과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5-1. 청소년정책 재정 확충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교육청), 지자체
	5-2. 환경변화를 반영한 법령 재정비	여성가족부
	5-3. 지역화: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	여성가족부, 지자체
	5-4. 유관분야와의 협업 거버넌스 확립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교육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5-5.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참고문헌

참고문헌

- 경남도민신문(2022.7.24.). 고성군 지방소멸 막기 위한 인구정책 행정력 집중.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979#0BNb> 에서 2022년 10월 16일 인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 과학기술적 대응역량 진단.
- 관계부처 합동(2018.3.).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 관계부처 합동(2020.8.).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20~’24).
- 관계부처 합동(2020.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21~’25).
- 관계부처 합동(2022.7.).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교육부(2021.11.2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 국가통계포털. 거주지역의 안전수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7_1&conn_path=I3 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사회문제 관련 참여 활동 경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18_1&conn_path=I3 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14&conn_path=I3 에서 2022.5.30. 인출.
- 국가통계포털.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및 참여 여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12&conn_path=I3 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및 부당처우 경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48&conn_path=I2 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42_1&conn_path=I3 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청소년·청년의 주관적 만족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20R&conn_path=I3 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0.12.23.).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토연구원(2018). 제4차 국토종합계획 성과 평가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설정 연구.

김기현, 장근영, 김지경, 하형석, 유성렬, 배진우(2016).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김기현, 최정원, 변금선, 이종원, 이민정, 정지희(2019).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성아(2021.9.27.). 불평등, 지표로 보는 10년.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09호.

김예나, 권선중(2020). 청소년 도박문제 발달 및 자발적 회복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1), 125-151.

김윤영(2022). 효율적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을 위한 전달 및 추진체계의 과제.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 정연순(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 연보라, 정은진, 유설희, 정윤미, 이민정(2018).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김지연, 김승경, 백혜정, 황여정(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김택환, 정수영(2022). 메가트렌드 전환에 따른 인재양성·청년일자리 정책. 일자리기획단.

김현철(2022). 디지털 대전환(DX) 시대의 청소년정책 전달체계(DS).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발표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일신문(2022.4.7.). “도박중독이 학폭으로' 경찰, 청소년 도박 근절 나선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19373 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네이버 국어사전, 자립,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9E%90%EB%A6%BD>에서 2022년 10월 19일 인출.

대한민국 정부 정책홍보 웹사이트.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14&difSer=8727368d-67ed-4c10-99c7-f292b5fef2ed&temp=2022&temp2=HALF002> 에서 2022년 10월 8일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5.25.).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국정운영 대전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943> 에서 2022년 10월 19일 인출.

동아일보(2022.9.29.). 대학 재정난 심각한데, 초중고用 남는 기금 20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929/115709442/1> 에서 2022년 10월 8일 인출.

라영석(2021.7.15.). 청소년 기후변화 교육, 선택인가 필수인가?.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2277> 에서 2022년 2월 16일 인출.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중, 유민상, 이봉주(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병석(2009.10.26.). 전라적 제휴의 이해와 MSO.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58212> 에서 2022년 10월 8일 인출.

산업통상자원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202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방향과 핵심의제 발굴.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3.6.).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수립·발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5.11.). 여성가족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발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별첨자료(2020.6.16.). 2019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요약.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76 에서 2022년 5월 29일 인출.

여성가족부(2021a). 202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21b).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21). 2021 지자체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워크숍 자료집.

여성가족부(2021.2).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성화 운영 주관기관 공모 안내문.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07596 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3.22.). 여가부,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 강화한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4.27.).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학대 경험”: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대상 첫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5.17.).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7.25.).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실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5.25.). 2022년 청소년통계.

연합뉴스(2021.3.11.). "중·고교 재학생 2.4%, '도박문제 위협집단'에 해당".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1117100005> 에서 2022년 10월 19일 인출.

염유식, 성기호(202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오연재(2021.8.26.). 기후위기 짊어져야 할 청소년은 왜 배제되는가.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9161.html>에서 2022년 2월 16일 인출.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0). UN Youth 2030 전략과 한국 청년. 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yY5NuMFaQX4SE14oANog0owuvAvOPb_1609810184_2.pdf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유성렬(2022). 효과적인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제언.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광호(2022). 새정부 청소년활동 정책제언: ‘청소년육성’으로서 청소년활동에서 ‘청소년성장’으로서 청소년활동으로의 전환. 청소년활동 현장소통포럼 자료집.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이미원(2022). 통합적 정책수립과 전문화된 정책실행의 전달체계.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수경(2020.10.29). [여성칼럼] 코로나19의 그림자, 청소년 사이버도박. 경남일보. <http://www.gyeongnamilbo.com>

- 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718 에서 2022년 10월 19일 인출.
- 이익선(2022). 효과적인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제언.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재영, 안재정, 오창길, 장미정, 정수정, 정철, 조성화, 최수경, 용주현, 서진하, 이철기, 박명현, 조아라(2019).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 환경부국가환경교육센터.
- 이창호(2022). 18세 청소년, 첫 투표권을 행사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 「청소년, 참여의 새 시대를 열다」, 17-36. 도서출판 살림터.
- 임성근, 박준, 이광희, 이종한, 은재호(2022).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장명선(2022.10.2.). 젠더 관점 고려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필요하다.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476> 에서 2022년 10월 19일 인출.
- 조상식(2017).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 적응이냐 종속이냐. 교육비평, 39, 348-385.
- 조상식, 이수정, 박환보, 고다현, 박재성, 김도휘, 이현우(2021). 2030 서울혁신미래교육 개념 및 비전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조영삼, 김주영, 박정수, 김인철, 이준, 이용호, 조철 외 산업비전연구팀(2019). 2030 산업 동향 분석 및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산업 혁신 전략 수립. 세종: 산업연구원.
- 조은별, 이선영, 신종호, 홍운정(2015). 융합교육 핵심요인과 기대효과에 대한 델파이 분석. 영재교육연구, 25(1), 37-58.
- 최인재, 강경균, 송민경, 조윤정(202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의 창, 2020 겨울호. 통계광장: 기후변화, 지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http://stat.go.kr/window/2020b/main/2020_win_06.html에서 2022년 7월 2일 인출.
- 통계청 보도자료(2020.12.8.).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6517.
- 통계청 보도자료(2021.12.16.).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통계청, 여성가족부(2021.5.25.). 2021년 청소년통계.
- 통계청. 2021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 한국리서치 정기조사(2020.12.9.). 선호하는 국가 통치 형태. <https://hrcopinon.co.kr/archives/17057>에서 2022년 7월 2일 인출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2021).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https://kcgp.egento uch.com/egentouch.web/detailview.do?action=viewMedia&MASTER_ID=3749446&MEDIA_TYPE=IMG.
-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1). 온라인 도박, 청소년 놀이문화가 되다. 청소년상담 이 슈페이퍼, 2021년 1호.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원(2015). 국가환경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10.6.).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5423 에서 2022년 10월 17일 인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에서 2022년 10월 16일 인출.
- 화성시 무상교통. <https://savebus.hscity.go.kr/userMain.do> 에서 2022년 10월 14일 인출.
- 황여정(2017).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e-나라지표. 가족의 형태별 분포.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6에서 2022년 5월 28일 인출.
- e-나라지표.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에서 2022년 9월 30일 인출.
- 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2020.7.). Youth Taskforce interim report. <https://www.health.gov.au/resources/publications/youth-taskforce-interim-report> 에서 2022년 5월 10일 인출.
- Australian Government(2010.4.). 2010 National Strategy for Young Australians. <https://apo.org.au/sites/default/files/resource-files/2010-04/apo-nid3032>

3.pdf 에서 2022년 5월 10일 인출.

Australian Government(2021.8.). Australia's Youth Policy Framework. <https://www.dese.gov.au/australias-youth-policy-framework/resources/australias-youth-policy-framework>에서 2022년 5월 10일 인출.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9.12.2.). In gemeinsamer Verantwortung: Politik für, mit und von Jugend.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a). 16. Kinder- und Jugendbericht.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b). Förderung demokratischer Bildung im Kindes- und Jugendalter.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c). Kinder- und Jugendhilfe.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d). Mitreden! Conditions pour percevoir la prime d'activité. <https://www.mes-allocs.fr/guides/prime-d-activite/prime-d-activite-conditions/> 에서 2022년 4월 20일 인출.

Deutsches Jugendinstitut. 11. Kinder- und Jugendbericht. <https://www.dji.de/ueber-uns/projekte/projekte/11-kinder-und-jugendbericht/38429.html> 에서 2022년 4월 20일 인출.

Deutsches Jugendinstitut. 12. Kinder- und Jugendbericht. <https://www.dji.de/ueber-uns/projekte/projekte/12-kinder-und-jugendbericht/39215.html> 에서 2022년 4월 20일 인출.

Deutsches Jugendinstitut. 13. Kinder- und Jugendbericht. <https://www.dji.de/ueber-uns/projekte/projekte/13-kinder-und-jugendbericht.html> 에서 2022년 4월 21일 인출.

Deutsches Jugendinstitut. 14. Kinder- und Jugendbericht. <https://www.dji.de/ueber-uns/projekte/projekte/14-kinder-und-jugendbericht.html> 에서 2022년 4월 21일 인출.

Deutsches Jugendinstitut. 15. Kinder- und Jugendbericht. <https://www.dji.de/ueber-uns/projekte/projekte/15-kinder-und-jugendbericht.html> 에서 2022

년 4월 23일 인출.

Erasmus+. European Youth Together. <https://erasmus-plus.ec.europa.eu/programme-guide/part-b/key-action-3/youth-together>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Eurodesk. The European Youth Work Agenda: on the path to recognition. <http://eurodesk.eu/2021/01/04/european-youth-work-agenda/>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Europa. ABOUT ERASMUS+ VIRTUAL EXCHANGE. https://europa.eu/youth/node/54451_en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Europa. About the European Youth Portal. https://europa.eu/youth/about-us_en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Europa. European Solidarity Corps – Our Mission and Principles. https://europa.eu/youth/solidarity/mission_en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Europa. European Youth Goals. https://europa.eu/youth/strategy/european-youth-goals_en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Europa. Eurostat Youth-Overview. <https://ec.europa.eu/eurostat/web/youth>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Europa. What is the EU Youth Dialogue?. https://europa.eu/youth/get-involved/eu-youth-dialogue/what-eu-youth-dialogue_en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European Union(2018). The European Union Youth Strategy 2019–202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18DC0269>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IISD(2018.9.27.). UN Launches 2030 Strategy and Global Partnership Initiative for Youth. <http://sdg.iisd.org/news/un-launches-2030-strategy-and-global-partnership-initiative-for-youth/>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Informations aides Logement. <http://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logement> 에서 2022년 4월 20일 인출.

IWGYF(2016). Pathways for youth: Strategic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 https://youth.gov/sites/default/files/IWGYF-Pathways_for_Youth.pdf 에서 2022년 5월 24일 인출.

L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2021.5.28.). Internats d'excellence: vivre sa scolarité autrement. <https://eduscol.education.fr/document/7208/download> 에서 2022년 9월 14일 인출.

L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2022). Document de Politique Transversale. Projet de Loi de Finance pour Politique en faveur de la Jeuness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Le Conseil d'orientation des politiques de jeunesse. <https://www.jeunes.gouv.fr/COJ> 에서 2022년 9월 19일 인출.

Ministère du Travail, du Plein emploi et de l'Insertion. Accompagner les jeunes - Plan 1 jeune, 1 solution. <https://travail-emploi.gouv.fr/le-ministere-en-action/relance-activite/plan-1jeune-1solution/> 에서 2022년 9월 13일 인출.

Ministère du Travail, du Plein emploi et de l'Insertion. Le Compte Engagement Citoyen(CEC). <https://www.moncompteformation.gouv.fr/espace-public/le-compte-engagement-citoyen-cec-0> 에서 2022년 4월 20일 인출.

Minster's media center(2021.8.12.). Backing and supporting young Australians through our Youth Policy Framework. <https://ministers.dese.gov.au/tudge/backing-and-supporting-young-australians-through-our-youth-policy-framework> 에서 2022년 5월 10일 인출.

OECD(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République Française. 1jeune1solution. <https://www.1jeune1solution.gouv.fr/> 에서 2022년 4월 20일 인출.

Revenu de solidarité active(RSA).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19775> 에서 2022년 4월 20일 인출.

Schwab, K.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lony/Geneva: World Economic Forum. 송경진(역)(2016).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현재(메가스터디)

The Mayor(2021.6.1.). European Commission appoints first EU Youth Coordinator. <https://www.themayor.eu/en/a/view/european-commission-appoints-first-eu-youth-coordinator-8070>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United Nations(2013). DEFINITION OF YOUTH. <https://www.un.org/esa/socd>

ev/documents/youth/fact-sheets/youth-definition.pdf에서 2022년 5월 5일 인출.

United Nations(2018a).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https://www.un.org/development/desa/youth/world-programme-of-action-for-youth.html>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United Nations(2018b). Youth 2030: UN Youth Strategy. https://www.unyouth2030.com/_files/ugd/b1d674_9f63445fc59a41b6bb50cbd4f800922b.pdf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United Nations(2020.9.). Reflecting on two years of Youth2030 — the first-ever UN Youth Strategy. <https://www.un.org/youthenvoy/2020/09/reflecting-on-two-years-of-youth2030-the-first-ever-un-youth-strategy/>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United Nations(2020.11.). YOUTH 2030 SCORECARD FOR UNITED NATIONS COUNTRY TEAMS. <https://www.un.org/youthenvoy/wp-content/uploads/2020/11/Youth-2030-UNCT-Scorecard-Nov-20-PDF.pdf>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United Nations(2021). Foreword to Youth 2030: Progress Report 2021. <https://youthgroup.ctbto.org/system/files/2021-04/Youth2030%20Global%20Progress%20Report.pdf>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United Nations(2021.4.12.). UN Youth 2030 Strategy and Progress Report 2021. <https://knowledge.unccd.int/publications/un-youth-2030-strategy-and-progress-report-2021> 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Youth Engaged 4 Change 홈페이지. <https://engage.youth.gov/> 에서 2022년 5월 16일 인출.

Youth.gov. Federal Collaboration. <https://youth.gov/feature-article/federal-collaboration> 에서 2022년 5월 24일 인출.

Youth.gov. Youth Topics. <https://youth.gov/youth-topics> 에서 2022년 7월 3일 인출.

内閣府(2019). 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のための有識者会議の開催について. <https://www8.cao.go.jp/youth/suisin/yuushikisya/index.html> 에서 2022년 4월 16일 인출.

内閣府(2021.4.). 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案)に対す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 http://www8.cao.go.jp/youth/suisin/pdf/r03-iken_kekka.pdf 에서 2022년 4월 16일 인출.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について.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s_gaiyo.pdf 에서 2022년 4월 15일 인출.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2010.7.). 子ども・若者ビジョン.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vision.pdf> 에서 2022년 4월 15일 인출.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2016.4.). 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概要).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taikou_gaiyou.pdf 에서 2022년 4월 15일 인출.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2021.4.). 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 全ての子供・若者が自らの居場所を得て、成長・活躍できる社会を目指して.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r03-taikou.pdf> 에서 2022년 4월 16일 인출.

子供・若者意思調査. <https://www8.cao.go.jp/youth/kenkyu/ishiki/r01/pdf/s1.pdf> 에서 2022년 4월 20일 인출.

青少年育成推進本部(2003.12.). 青少年育成施策大綱. <https://www8.cao.go.jp/youth/suisin/yhonbu/taikou.pdf> 에서 2022년 4월 15일 인출.

青少年育成推進本部(2008.7.). 新しい「青少年育成施策大綱」の枠組み(概要). <https://www.cas.go.jp/jp/seisaku/kids/dai03/sankou2.pdf> 에서 2022년 4월 15일 인출.

[법령 자료]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66968> 에서 2022년 10월 19일 인출.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 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에서 2022년 10월 19일 인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18877,20220610\)](https://www.law.go.kr/법령/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18877,20220610)) 에서 2022년 10월 16일 인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에서 2022년 10월 17일 인출.

청소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청소년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 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청소년활동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 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초·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에서 2022년 10월 15일 인출.

행정안전부(2021.7).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5873 에서 2022년 10월 19일 인출.

[참고 자료]

프랑스 「청소년 활동 관련 정부 정책 전개법」. 2012년 5월 24일 782법령 Le décret n°2012-782 du 24 mai 2012.

프랑스 「청소년 미래직업 창출 관련 정부 정책 전개법」. 2012년 10월 26일 1189법령 La loi n° 2012-1189 du 26 octobre 2012 portant création des emplois d'avenir.

프랑스 「노동·사회적 대화·직업보호법」. 2016년 8월 8일 1088법령 La loi n° 2016-1088 du 8 août 2016. Relative au travail, à la modernisation du dialogue social et à la sé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nels.

프랑스 「정부의 호의적인 청소년정책 구현법령」. 2017년 5월 24일 1080법령 Decree No. 2017-1080 of May 24, 2017 instructs the Minister of National Education, Youth and Sports “to develop and implement the Government's policy in favor of young people”.

프랑스 「2018~2022 국가보건전략법」. 2017년 12월 29일 1866법령 Le décret n°2017-1866 du 29 décembre 2017.

프랑스 「대학생 학업성공과 진로설정법」. 2018년 3월 8일 166법령 La loi n° 2018-166 du 8 mars 2018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réussite des étudiants.

프랑스 「주거·개조·디지털 개발법, 이하 ELAN법」. 2018년 11월 28일 1021법령 La loi ELAN (loi n° 2018-1021 du 23 novembre 2018 portant Evolution du Logement, de l'Aménagement et du Numérique, 이하 ELAN법)

○ — 부 록

부록

1. 청소년 대상 설문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면접원이 작성합니다) <table border="1"> <tr>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4/6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5년간(2023~2027년) 적용되는 청소년정책을 개발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학교나 선생님이 알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KIPD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 황여정 선임연구위원 044-415-2108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담당자 : 박종경 차장
※ 문의전화 : 090-430-1000

조사 동의

-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유 목적 : 〈청소년의 기후변화 및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학교, 학교급, 주거지역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별

본인의 성별을 응답해주세요.

☐

남자

☐

여자



설문지 작성 요령

-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런 편이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①'에 표시했습니다.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아래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X	②	③	④	⑤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문A 학생은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결석한 적이 있다 → 문B로 가세요
② 결석한 적이 없다 → 문C로 가세요

※ 나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04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문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합니다. 결석을 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 ① 몸이 아파서 ② 학교가기 싫어서 ③ 게임을 하느라 ④ 늦잠을 자서

※ 결석한 이유를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몸이 아파서, 늦잠을 자서 각각 1번씩, 총 2번 결석을 하였으므로 ①번과 ④번을 모두 표시하여 응답합니다.



III.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

※ 다음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 여러분의 응답은 향후 5년(2023년~2027년) 동안 적용될 청소년정책을 만드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문항을 잘 읽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세요.

13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

전혀 만족하지 못함		← 보통 →						매우 만족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4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청소년정책들이 청소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도움이 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5 여러분이 현재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 ① 학업 관련 고민(성적, 대학입시 등)
- ② 진로 관련 고민(전공, 직업, 취업 등)
- ③ 외모
- ④ 건강(신체적·정신적 건강 모두 포함)
- ⑤ 부모(보호자)와의 관계
- ⑥ 친구와의 관계
- ⑦ 이성과의 관계
- ⑧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 ⑨ 경제 사정(돈 걱정)
-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다음은 지난 5년 동안(2018년~2022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청소년정책들입니다.
※ 각각의 정책들이 청소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또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주세요.

응답하는 방법

아래와 같은 질문에는 청소년정책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정책효과성),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정책필요성), **왼쪽과 오른쪽 모두 응답**을 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각각** 동그라미(O)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정책효과성 (이 정책이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책필요성 (이 정책이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 청소년 동아리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 다음은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해 그동안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정책효과성 (이 정책이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책필요성 (이 정책이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청소년 참여 확대								
1)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 청소년 동아리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학교에서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 학생회·학급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 하는 등 학교에서의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청소년 참여 방식 다변화 -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소년 의견을 듣는 통로를 마련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는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1 위의 청소년 참여 확대와 관련된 3가지 정책 중에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 ①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② 학교에서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③ 청소년 참여 방식 다변화

17

다음은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을 위해 그동안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정책효과성 (이 정책이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책필요성 (이 정책이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1)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 연예인 운동선수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의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 아동·청소년이 놀고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놀이·여가 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 여가권 신장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청소년의 정신 건강권 보호 - 학생정신건강 검사 강화, 상담을 통한 정신보건서비스,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을 통한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1

위의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과 관련된 5가지 정책 중에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 ①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 ②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 ③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 ④ 청소년의 정신 건강권 보호
- ⑤ 청소년의 신체 건강권 보장

18

다음은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을 위해 그동안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정책효과성 (이 정책이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책필요성 (이 정책이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1)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 민주시민교육 기회 확대 및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이해 확대 등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양성평등 의식 제고 -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등 성 평등 의식 제고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 청소년 인성함양 프로그램 개발, 언어문화 향상 노력 등을 통해 인성 함양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8-1

위의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과 관련된 3가지 정책 중에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 ①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 ② 양성평등 의식 제고
- ③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19

다음은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을 위해 그동안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정책효과성 (이 정책이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책필요성 (이 정책이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1)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활동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마련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청소년주도의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과학기술 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 과학기술 분야에서 창의적인 역량을 가진 핵심 인재 양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 기존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청소년을 중심으로 바꾸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9-1

위의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과 관련된 4가지 정책 중에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 ①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 ②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 ③ 과학기술 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
- ④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20 다음은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정책효과성 (이 정책이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책필요성 (이 정책이 앞으로 청소년을 위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1)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이 문화시설이나 여가시설을 이용할 때 각종 우대 활성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 청소년이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 확대 등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 글로벌 무대에서 청소년들이 국제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 - 통일을 대비해서 청소년들이 남·북한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0-1 위의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5가지 정책 중에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 ①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 ②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 ③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 ④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
- ⑤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21

다음은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정책효과성 (이 정책이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책필요성 (이 정책이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3.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1)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 초·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농산어촌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 전문 직업훈련 지원, 직업체험 지원, 취업 및 창업 진로탐색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 확대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청소년(청년) 취업 지원 기반 강화 - 취업 정보제공 강화, 공공기관 고졸채용 유도 등 청소년(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 - 청소년시설 내 청소년협동조합 활동을 장려하고 창업교육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청년)의 창업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1-1

위의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와 관련된 5가지 정책 중에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 ①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 ②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 ③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④ 청소년(청년) 취업 지원 기반 강화
- ⑤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

22 다음은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그동안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정책효과성 (이 정책이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책필요성 (이 정책이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1) 총출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운영 - 취약한 상황에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총출한 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 위기청소년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 전에 빨리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과 지원 제공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 청소년 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가족상담 지원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이 온·오프라인에서 성범죄를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2-1 위의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된 5가지 정책 중에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 ① 총출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운영
- ②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 ③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 ④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 ⑤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23

다음은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그동안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정책효과성 (이 정책이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책필요성 (이 정책이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2. 대상별 맞춤형 지원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학업·취업·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가출 청소년 지원 강화 - 가출 청소년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등 가출 청소년 대상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 비행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 청소년 한부모가 건강하게 자녀를 기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교육비·생활비·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립기반 지원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 강화 - 방과 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돌봄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3-1

위의 대상별 맞춤형 지원과 관련된 7가지 정책 중에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 | | |
|------------------------|--------------------|
|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② 가출 청소년 지원 강화 |
| ③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 ④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
| ⑤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 ⑥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
| ⑦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 강화 | |

24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정책효과성 (이 정책이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책필요성 (이 정책이 앞으로 청소년을 위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1)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청소년 주변의 유해한 환경 또는 술·담배 등 유해 악물로부터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 강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 청소년들이 인터넷·스마트폰·게임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증독되지 않도록 진단·상담 및 치료 서비스 지원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4-1

위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와 관련된 3가지 정책 중에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 ①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②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 ③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25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정책이나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지(1차)

국가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1차)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국가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수준의 중장기 청소년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3차례의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 조사지는 1차 조사지입니다. 1차 조사는 5월 27일까지 실시되며, 이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2차 조사 및 3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해명하시어, 모쪼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조사에 참여해주신 데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로 사례를 지급하기 위해 개인정보(성명, 핸드폰 번호)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확인 확인이나 소정의 사례 지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연구진 일동

〈연구내용 관련 문의〉

황여정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44-415-2108	hyj@nypi.re.kr
임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44-415-2112	hylim@nypi.re.kr
오승근 교수(명지전문대학)	02-300-1257	osg87@mjc.ac.kr

〈조사 관련 문의(화신처)〉

에스티아이 박재균 책임연구원	02-785-9124	survey@goodsti.com
-----------------	-------------	--------------------

■ 조사참여자 인식사항

작성자 성명	소속		
소정의 사례 지급을 위한 정보	은행/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 응답요령

- 주관식 문항 : 칸이 부족하시면 칸 크기를 늘려서 작성해 주십시오.
- 객관식 문항 : □, ● 등의 기호로 체크 표시해 주시거나, 색깔 등으로 선택하신 보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에 주십시오.

I.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먼저, 그간 추진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래 제시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 정책목표, 중점과제 등 주요 내용을 고려하시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I.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1.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제시해드린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 정책목표, 중점과제 등을 토대로,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책의 달성 수준을 평가하고,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2-1. 정책 비전

비전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달성 수준 평가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판단 근거										

2-2. 정책목표

정책목표	달성수준 평가					판단 근거
청소년참여 및 권리증진	매우 미흡	↔	보통	↔	매우 우수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매우 미흡	↔	보통	↔	매우 우수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매우 미흡	↔	보통	↔	매우 우수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매우 미흡	↔	보통	↔	매우 우수	
	①	②	③	④	⑤	

I.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3.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운 점 또는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6차 기본계획의 아쉬운 점 또는 한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4. 다음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추진된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들입니다. 이 과제들이 향후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추진 여부를 평가해 주십시오.

정책목표	중점과제	향후 과제 추진 여부		
		종료	유지	수정·보완
청소년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참여 확대	☐	☐	☐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	☐	☐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	☐	☐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	☐	☐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	☐	☐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	☐	☐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	☐	☐
	대상별 맞춤형 지원	☐	☐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	☐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	☐	☐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	☐	☐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	☐	☐

- 4-1. 향후 중점과제 추진 여부에서 수정·보완이라고 응답하신 과제의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수정·보완하면 좋을지 귀하의 견해를 제시해 주십시오.

○

○

○

II.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년)

다음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 비전에서는 무엇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II.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년)

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제안하고 싶은 주요 정책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목표

4대 목표 -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제안하고 싶은 중점과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 6차 청소년기본계획의 12개 중점과제

정책목표	중점과제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조성, 청소년민주시민 성장지원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계 강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대상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지(2차)

국가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2차)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국가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수준의 중장기 청소년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조사에서 다각도로 상세한 의견을 주신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결과에 따라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그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2차 조사 기한은 **7월 8일(금)**까지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연구의 중요성을 헤아려하시어 모쪼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조사에 참여해주신 데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사례가 지급될 예정입니다(지급 정보는 1차 조사에 기재해주신 정보를 활용)

본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진 일동

〈연구내용 관련 문의〉

황여정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44-415-2108	hyj@nypi.re.kr
임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44-415-2112	hjlim@nypi.re.kr
오승근 교수(명지전문대학)	02-300-1257	osg87@mjc.ac.kr

〈조사 관련 문의(화선처)〉

에스티아이 박재균 책임연구원	02-785-9124	survey@goodsti.com
-----------------	-------------	--------------------

■ 응답요령

- 주관식 문항 : 칸이 부족하시면 칸 크기를 늘려서 작성해 주십시오.
- 객관식 문항 : ☐, ● 등의 기호로 체크 표시해 주시거나, 색깔 등으로 선택하신 보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십시오.

1.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1차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어지는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 1차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사회 환경 변화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번호	주요 이슈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수
1	코로나 팬데믹	- 코로나 팬데믹 - 코로나 팬데믹(청소년의 사회적 활동 및 사회성 감소) - 포스트 코로나 - 포스트 코로나 대책 - 포스트 코로나 대비 - 포스트 코로나 청소년 일상생활 변화 - 포스트 코로나 온·오프 통합적 청소년 활동정책 - 코로나 이후 청소년 세대 회복과 사회적 연결 - 포스트 코로나 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 - 사회적 재난	12
2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개편 - 통합적 청소년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 생애주기별 접근 - 생애주기별(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 연계 및 지원 강화 - 아동, 청소년, 청년 생애전기 지원 정책 수립 - 교육, 아동, 청년 정책과의 연계 - 청소년정책의 공공성 확보 - 청소년중심 정책(특성과 요구 파악)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 성과 중심 평가체계 혁신 - 수요자중심 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 - 국가 청소년정책 전달 부처 신설	12
3	인구 구조의 변화	- 인구 변화 - 인구 감소 - 인구 구조의 변화 - 청소년 인구감소 - 청소년 인구급감 - 학령인구 감소 -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인구)	10

사회 환경 변화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번호	주요 이슈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수
4	디지털 시대	- 디지털 시대 대비 인재양성 -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 디지털 청소년활동 - 디지털 청소년 성장지원 - 디지털 청소년 사업활성화(빅데이터 활용) -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 디지털 기반 맞춤형 플랫폼 구축 - 디지털 시민성 -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디지털) - 다양한 문해력 격차 해소	10
5	4차 산업혁명	- 과학기술변화 - 과학 및 정보기술 -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시대 필요역량 -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 - 4차 산업혁명 대비 - 4차 산업혁명(신기술)과 청소년정책	8
6	사회 변화와 갈등	- 사회 갈등 - 소득불균형, 양극화, 일자리 부족 - 성장 여건의 변화(양극화, 지역 편차) - 복잡성,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 다양한 사회변화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 - 급격한 사회변화와 청소년에 대한 인식변화 - 글로벌 시대 대응	7
7	청소년 시설 개선	- 청소년 관련 시설의 발전 - 청소년시설 운영 혁신 - 청소년시설 공공성 - 청소년기관 다양성 - 청소년활동 공간에 대한 접근과 활용 - 청소년시설 평가 체계 개선 - 청소년활동 공간 재구조화	7
8	청소년 참여	- 청소년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 청소년 참여 활성화 - 청소년 정책 참여 권한 명문화 - 민주시민 참여 역량 - 민주시민교육	5

사회 환경 변화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번호	주요 이슈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수
9	청소년주도성과 미래역량	- 청소년 주도성 - 청소년의 자기주도성 - 청년의 자기주도적 참여기반 조성 - 미래역량(주도성) - 위기대응 역량	5
10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 전문 인력 역량강화 - 청소년인력의 공공성 - 청소년시설 유형별 인력배치와 운영 - 청소년관련학과 증설	5
11	진로 및 자립	- 주도적 삶에 대한 진로설계 - 진로교육 변화 - 후기청소년 대상 창업교육 - 자립 -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지원	5
12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 청소년 보호기능 -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 유해환경보호를 뛰어넘는 회복적 접근 - 포괄적 예방 정책	4
13	교육정책 변화	-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위축 - 2022 교육과정 개정과 역량 - 학교 교육과정 연계활동(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 학교 교육과정 변화와 청소년활동 연계	4
14	기후 위기	- 기후환경변화 - 기후변화와 환경 - 환경, 기후, 생태 -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기후위기)	4
15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의 위기 상황	- 위기청소년 다양화 고려 - 위기 전략적 접근과 지원체계 - 청소년 문제 대책 - 사이버 폭력 등 대응시스템	4
16	청소년 복지 서비스	- 보편적 청소년복지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 청소년상담 및 복지 기능 강화 - 지역 청소년안전망과 정보통합	4
17	청소년 권리	- 청소년 권리와 기회 -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청소년 정치 참여 - 청소년 활동권 보장	3

사회 환경 변화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번호	주요 이슈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수
18	지역화	- 청소년정책 지방분권화 - 생활지역중심의 지역화 실효성 - 지역사회중심 해결시스템	3
19	청소년 정신건강	- 청소년 정신건강 - 안전한 심리-정서 지원 및 보호환경 - 청소년 심리-정서적 안전망 강화 시스템	3
20	소수집단 청소년	- 소수집단 청소년 대상 청소년 활동 제공 - 소외, 중독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2
21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2
22	지속가능발전	- 지속가능발전 - 지속가능한 사회	2

1. 다음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 환경 변화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전문가 응답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내용에 대해 귀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각각 표시하여 주십시오.

사회 환경 변화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번호	주요 이슈	1	2	3	4	5
1	코로나 팬데믹	☐	☐	☐	☐	☐
2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	☐	☐	☐	☐
3	인구구조의 변화	☐	☐	☐	☐	☐
4	디지털 시대	☐	☐	☐	☐	☐
5	4차 산업혁명	☐	☐	☐	☐	☐
6	사회 변화와 갈등	☐	☐	☐	☐	☐
7	청소년 시설 개선	☐	☐	☐	☐	☐
8	청소년 참여	☐	☐	☐	☐	☐
9	청소년주도성과 미래역량	☐	☐	☐	☐	☐
10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	☐	☐	☐	☐
11	진로 및 자립	☐	☐	☐	☐	☐
12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	☐	☐	☐	☐
13	교육정책 변화	☐	☐	☐	☐	☐
14	기후 위기	☐	☐	☐	☐	☐
15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의 위기 상황	☐	☐	☐	☐	☐
16	청소년 복지 서비스	☐	☐	☐	☐	☐
17	청소년 권리	☐	☐	☐	☐	☐
18	지역화	☐	☐	☐	☐	☐
19	청소년 정신건강	☐	☐	☐	☐	☐
20	소수집단 청소년	☐	☐	☐	☐	☐
21	학교 밖 청소년	☐	☐	☐	☐	☐
22	지속가능발전	☐	☐	☐	☐	☐

- 1-1. 위에 제시된 주요 이슈 중에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 환경 변화**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해당번호 또는 이슈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II.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강조되어야 할 정책 비전” 질문에 대한 1차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어지는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 1차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강조되어야 할 정책 비전			
번호	주요 정책 비전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수
1	미래를 이끄는 청소년	- 미래를 만들어가는 청소년 - 미래를 살아가는 청소년 - 미래사회 문제 해결하는 주역 -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 미래의 가치를 주도하는 청소년 - 현재와 미래를 잇는 존재 - 함께하는 미래 - 청소년이 시작이다 - 준비된 청소년 - 청소년의 시대상 정립 - 변화에 대응	11
2	청소년의 주도성 강화	- 청소년의 자기주도성 강화 - 청소년 자기주도성의 실질적 보장 - 청소년 주도성을 통한 성장 경험 - 일상을 주도하는 청소년 - 주체로서의 청소년 - 변화의 주체로서의 청소년 - 삶의 주체성과 주도성 - 공존을 위한 변화의 주체 - 청소년중심 세상 추구	9
3	청소년의 행복 증진	- 청소년의 행복 추구 - 행복한 청소년 - 행복한 성장 - 행복을 누리는 청소년 - 행복한 일상을 꿈꾸는 청소년 -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 - 삶을 즐기는 청소년 -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 - 건강한 청소년을 더 건강하게 - 건강한 청소년	10
4	공동체의 주인공인 청소년	- 공동체 의식 -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기 -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 - 청년을 아우르는 존재 - 청소년들의 다양한 사회적 직접 경험 - 청소년의 변화된 역할과 사회적 역할 개선 - 사회적인 협력 수준 제고 - 사회와 연결되는 청소년	8

강조되어야 할 정책 비전			
번호	주요 정책 비전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수
5	존중받는 청소년	- 존중받는 청소년 - 청소년에 대한 존중 - 청소년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 - 인간으로서 청소년 기본권 존중 - 청소년이 현재의 시민으로 존중받는 사회 - 청소년 성에 대한 존중	8
6	진로 개발을 통한 자립	- 진로 - 청소년의 미래와 진로 - 꿈을 이루는 청소년 - 재능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 - 청소년의 잠재력 발현 - 자립	6
7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 참여 -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회 - 활발하게 참여하는 청소년 - 시민 청소년 - 주도적 시민, 동료 시민	5
8	청소년 회복 지원	- 청소년의 회복 - 관계와 경험의 회복 - 위기 극복 -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청소년	4
9	청소년의 공정한 성장 보장	- 공정한 성장이 가능한 사회 - 청소년이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 - 따뜻한 공정	3
10	청소년 역량 강화	- 역량 - 역량을 갖춘 청소년으로서의 성장 지원	2
11	청소년 보호	-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 사회 - 보호받는 청소년	2
12	청소년의 권리 보장	-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 심과 여유, 놀 권리 필요	2

2. 다음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강조되어야 할 정책 비전”에 대한 전문가 응답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내용에 대해 귀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각각 표시하여 주십시오.

강조되어야 할 정책 비전		적절성				
		매우 부적절	←—————>			매우 적절
번호	주요 정책 비전	1	2	3	4	5
1	미래를 이끄는 청소년	☐	☐	☐	☐	☐
2	청소년의 주도성 강화	☐	☐	☐	☐	☐
3	청소년의 행복 증진	☐	☐	☐	☐	☐
4	공동체의 주인공인 청소년	☐	☐	☐	☐	☐
5	존중받는 청소년	☐	☐	☐	☐	☐
6	진로 계발을 통한 자립	☐	☐	☐	☐	☐
7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	☐	☐	☐	☐
8	청소년 회복 지원	☐	☐	☐	☐	☐
9	청소년의 공정한 성장 보장	☐	☐	☐	☐	☐
10	청소년 역량 강화	☐	☐	☐	☐	☐
11	청소년 보호	☐	☐	☐	☐	☐
12	청소년의 권리 보장	☐	☐	☐	☐	☐

2-1. 위에 제시된 내용 중에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 비전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해당 번호 또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Ⅲ.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질문에 대한 1차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어지는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 1차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번호	주요 정책 목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수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 확대	- 정치 참여 - 제6차 기본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 참여 및 권리 강화' - 보조적 참여를 넘어서는 참여 -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예산확대 - 일상적 참여권 확대	16
2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의 혁신	- 추진체계의 혁신 - 제6차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혁신' 내용 유지 필요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추진체계 혁신 - 청소년정책 전반의 주도성 강화 - 협력과 지역정책 중심으로의 추진체계 혁신 - 지속가능한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13
3	청소년 자립	- 자립과 진로 - 자립에 대한 개념 정의필요 - 맞춤형 자립 - 청소년 자립	11
4	청소년활동의 혁신적 재편	-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청소년활동 활성화 - 활동의 혁신적 재편 - 환경변화를 대비한 활동 - 도전적 활동	8
5	청소년정책의 공격기능 강화	- 청소년정책 공공성 강화 - 정책의 공공성 강화 - 보편적 공공서비스 구축 - 주무부처의 정책 추진력 강화 - 공적 보호 - 정책인프라 지역격차 해소 - 공정사회를 위한 청소년참여 활성화	7
6	청소년보호 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보호지원 안정화 - 선제적 청소년 보호 - 촘촘하고 유기적인 보호지원 시스템 - 맞춤형보호 - 맞춤형 강조 -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 - 대상별 맞춤형 지원	7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번호	주요 정책 목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수
7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는 역량 강화	-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역량강화 - 4차 산업과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역량강화 - 청소년주도와 더불어 주도하지 않은 영역도 강화 - 청소년 회복탄력성 강화 - 역량의 표준화된 지표 설정	6
8	청소년 시설의 확대 및 변화	- 청소년시설 확대 및 지원 - 공급기관의 다양화 - 공적 시설확대 및 지원 - 청소년 중심의 시설 조성 - 일상적(생활) 청소년시설 - 청소년시설 확대를 통한 종합지원	6
9	청소년활동의 디지털화	- 디지털 활동 활성화 - 디지털 역량 기반활동 - 디지털 기반 참여 및 활동 - 빅데이터 구축(상담 및 활동지원을 위한) - 빅데이터 수집 및 구축	5
10	시민의식 함양	- 청소년참여와 권리 중심의 민주시민 성장지원 - 시민권리 강화 - 시민의식 함양 - 인성교육 강화 -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지원	5
11	진로 지원	- 생애주기별 진로활동 지원 - 아동-청소년-청년을 연결하는 진로활동(생애) - 후기청소년-청소년정책으로의 독립적 목표설정 - 자립을 위한 진로 - 청소년부모, 청소년노동자 등 대상별 접근	5
12	청소년의 실질적 복지 보장	- 청소년 복지 강화 - 공적 복지 강화 - 위기사각지대 제로화 - 사회안전망 고도화	4
13	청소년 건강권 보장	- 정신건강 및 위기대처 - 정신건강 증진 - 청소년 웰빙예산 도입	3
14	공정한 성장	- 공정한 성장기회 보장 - 차별 없는 성장 기회 보장	2

3. 다음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정책 목표”에 대한 전문가 응답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내용에 대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책 목표로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의 정도를 각각 표시하여 주십시오.

정책 목표		중요성					시급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전혀 시급하지 않음 <-----> 매우 시급함				
번호	주요 내용	1	2	3	4	5	1	2	3	4	5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 확대	☐	☐	☐	☐	☐	☐	☐	☐	☐	☐
2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의 혁신	☐	☐	☐	☐	☐	☐	☐	☐	☐	☐
3	청소년 자립	☐	☐	☐	☐	☐	☐	☐	☐	☐	☐
4	청소년활동의 혁신적 재편	☐	☐	☐	☐	☐	☐	☐	☐	☐	☐
5	청소년정책의 공적기능 강화	☐	☐	☐	☐	☐	☐	☐	☐	☐	☐
6	청소년보호 지원체계 구축	☐	☐	☐	☐	☐	☐	☐	☐	☐	☐
7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는 역량 강화	☐	☐	☐	☐	☐	☐	☐	☐	☐	☐
8	청소년 시설의 확대 및 변화	☐	☐	☐	☐	☐	☐	☐	☐	☐	☐
9	청소년활동의 디지털화	☐	☐	☐	☐	☐	☐	☐	☐	☐	☐
10	시민의식 함양	☐	☐	☐	☐	☐	☐	☐	☐	☐	☐
11	진로 지원	☐	☐	☐	☐	☐	☐	☐	☐	☐	☐
12	청소년의 실질적 복지 보장	☐	☐	☐	☐	☐	☐	☐	☐	☐	☐
13	청소년 건강권 보장	☐	☐	☐	☐	☐	☐	☐	☐	☐	☐
14	공정한 성장	☐	☐	☐	☐	☐	☐	☐	☐	☐	☐

3-1. 위에 제시된 정책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 목표는 무엇입니까? 각각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해당 번호 또는 정책 목표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가장 시급한 정책 목표
1		
2		
3		

Ⅳ.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제안하고자 하는 중점 과제” 질문에 대한 1차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어지는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 1차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제안하고자 하는 중점 과제			
번호	중점 과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수
1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	-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사회변화와 이슈 연계 청소년주도 활동 활성화 - 청소년활동 방식의 다변화 -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및 새로운 시대의 과감한 청소년 활동 - 단순 활동과 체험중심 청소년활동에서 벗어남 - 청소년 역량 중심 활동 활성화 - 청소년체험활동의 전문성 강화 - 변화에 대응하는 청소년활동권 보장 -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관장제 - 학교교육과 연계한 청소년활동 지원체제 필요 - 활동 활성화를 표현하는 다른 워딩 필요 - 활동 활성화가 새롭게 포함되고, 강조될 필요 - 환경-인간-기술이 상호작용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식 개발 활동 - 뉴 노멀시대, 새로운 개념의 청소년 시설 설치 확대	14
2	청소년 자립	- 청소년 누구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진로 방향 설정 -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 단순 보호에서 자립과 독립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제 구축 - 청소년 주도의 성장과 자립 지원 강화 - 청소년 자립 및 진로지원 내실화 - 수요 맞춤형 전문적인 자립활동 확대 - 생애주기 기반 지속적 자립지원 기반 강화 -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 시스템 확보 - 다양한 일 경험과 창업을 위한 아카데미 - 작은 자본으로 창업을 시도 해보는 커뮤니티 센터	10
3	디지털 청소년 활동 활성화	- 디지털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등 - 디지털 청소년활동 기반 구축 - 디지털 세상을 주도하는 청소년성장 지원 - 스마트 청소년센터 지원 또는 디지털 청소년 활동센터 - 비대면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및 청소년들의 정보공유를 위한 플랫폼 개발 - 온라인 종합 플랫폼 조성 및 활성화 - 시간간의 한계를 넘어 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e-멘토링 시스템 구축 및 실행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청소년디지털 역량 강화 필요 - 온라인 비대면 중심의 생활 및 교육 환경 변화와 세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점의 지원 필요	10

제안하고자 하는 중점 과제			
번호	중점 과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수
4	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 청소년 진로 역량 강화 - 진로교육 자원체제 강화 - 다양한 청소년진로 개발 활동 지원 -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강점 찾기 -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기반으로 세상에 도전 - 청소년의 미래역량 개발 - 지역 내 진로직업체험기관 사업 재조정 -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 - 학교교육의 진로교육과 차별화되는 진로교육 - 청소년 진로교육 자원의 범위를 확대	10
5	지역 중심 청소년정책 추진	- 중앙과 지역 간 역할분담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평가 - 지자체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의 위상 및 역할 강화 - 청소년정책의 편중과 부재 극복 - 지역거점 청소년기관 설립 - 지역 청소년활동의 질 관리 및 지원 업무 수행 - 스마트청소년센터 중앙 및 시군구로 연계 설치 -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한 마을 통합	9
6	청소년 심리 상담 및 정신건강	- 청소년정신건강 증진 및 보호체계 강화 - 사회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처·대응·적응하기 위한 정신건강 유지 - 기본 건강검진에 정신건강도 포함 - 청소년 상담·심리·정서의 예방적 개입 및 강화 - 청소년상담 지원 체계 활성화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 전반 개선 - 심리적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일상생활 경험 -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심리적 유연성 - 청소년 회복탄력성 강화 및 증진	8
7	청소년 참여 확대	-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일상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청소년참여와 권리증진의 기반조성 및 확대 -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등 - 정책 대상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 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 새롭게 구축 - 생활밀착형 참여 강화 - 청소년민주시민 성장 강화 및 지원 - 청소년 권한의 실제화와 청소년 참여확대	8
8	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 대상별 맞춤형 지원 - 청소년 지원 사업을 보다 세분화하여 지원 -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제도권 안과 밖 청소년을 좀 더 세분화하여 지원 - 위기청소년의 맞춤형 공간 확보 - 청소년 비행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 다양한 청소년의 삶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체계의 발굴	7

제안하고자 하는 중점 과제			
번호	중점 과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수
9	청소년 관련 분야와의 연계	- 활동, 복지, 보호의 유기적 연계강화 - 추진체계 통합 필요 -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연계 필요 - 통합적 서비스 추진 및 정책추진의 연계성 강화 - 청소년 상담, 활동, 교육, 보호 등의 영역을 통합적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 지자체-학교-교육청-청소년정책의 협력 강화	6
10	온·오프 유해환경 개선	- 온·오프라인 에서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 민간 단체 등에서 온·오프라인 유해환경 감시단 확대 - 청소년 유해환경 자율개선 지원 - 청소년 디지털 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개선 -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온라인 사이버폭력 등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6
11	청소년분야 서비스의 질 향상	- 청소년 기관들 간 선의의 경쟁과 서비스의 질적 상승 - 시설의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 실적에서 성과 중심으로 평가체계 혁신 - 공공 청소년기관의 평가체계 혁신 - 청소년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마련 - 청소년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	6
12	도전, 사회적 가치 창출	-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여활동 촉진 - 청소년이 단체 및 법인 설립 - 연대 활동 강화를 통한 진로 개척 역량 향상 - 청소년이 제안하고 발굴한 주도적 참여의 사회변화형 활동 - 지역사회 중심의 후기청소년통합지원센터	5
13	청소년 인권	- 청소년 인권 증진 - 청소년관련 청소년권리 증진에 대한 재정지원 - 기초학습 역량과 학습권 보장 - 학업에 뒤처지고 도태되는 학생들에 대한 과제 - 청소년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	5
1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의 혁신 - 지원체계의 혁신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 청소년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정책추진체계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에 청소년학계, 현장 등 당연직으로 배치청소년 정책 담당부처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5
15	청소년지도사 역량 강화	-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증가를 위한 체계 구축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 국가 전문자격으로서 청소년전문가 운용체계 및 처우 개선 -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연계하는 활동전담 청소년지도사 배치	4

제안하고자 하는 중점 과제			
번호	중점 과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수
16	지역 간 격차 해소	- 지역 간 격차 없는 청소년정책 인프라 구축 - 지역 격차 없는 기본적 자원을 통한 국가최저선(national minimum) 확보 - 지역 간 심화된 인프라 차이 극복 - 읍면동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확대	4
17	청소년 안전망 강화	- 위기유형에 따른 맞춤형 청소년 사회안전망 - 청소년 안전망 공공성 강화 - 안전망 담당인력의 안정적 고용 및 제도 개편 필요 -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팀간 협력 강화	4
18	청소년지도사의 공공성 강화	- 청소년전담공무원 배치 전면 확대 - 지역 청소년정책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역량 제고 - 청소년 시설·기관·인력의 공공성 강화 - 행정부처 및 담당자의 잦은 변경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부서의 필요성 강조	4
19	보편적 복지 강화	- 보편적 청소년 복지로의 확대 - 저소득층 복지가 아닌 모든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삶의 기반위한 과제 - 잔여적 복지개념이 아닌 정책적(제도적) 개념으로 청소년 복지를 바라봄 - 청소년웰빙지표 도입	4
20	청소년 인성개발	- 청소년의 인성, 사회성, 창의성 개발 -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 경험기반의 인성교육 재차 강조 - 봉사활동, 인성교육 등 체계적 인성교육 강화	4
21	청소년의 정치참여 및 권리 확대	- 보조적 참여를 넘어 정치의 중심을 준비하는 청소년 -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준비와 도전 - 정당가입 등 시민으로서의 역할 가능하도록 지원 등	3
22	청소년 활동 정책의 혁신	- 청소년활동 체계 혁신 - 성장지원 체계 혁신 - 청소년수련시설의 혁신	3
23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통합	-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아우르는 정책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청소년-청년정책 통합적 연계 추진	2
24	청소년시설 지원 확대	- 청소년시설 운영비 지원 증가 -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시설 구축 토대 마련 등	2
25	불평등한 사회 구조 혁신	- 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표개발 -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청소년 정책 확립	2
26	중장기적 청소년정책 준비	- 중장기적 관점 및 증거기반 청소년정책 추진	1

4. 다음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중점 과제**”에 대한 전문가 응답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내용에 대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중점 과제**로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의 정도를 각각 표시하여 주십시오.

중점 과제		중요성					시급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전혀 시급하지 않음	←————→			매우 시급함
번호	주요 중점 과제	1	2	3	4	5	1	2	3	4	5
1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										
2	청소년 자립										
3	디지털 청소년 활동 활성화										
4	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5	지역 중심 청소년정책 추진										
6	청소년 심리, 상담 및 정신건강										
7	청소년 참여 확대										
8	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9	청소년 관련분야와의 연계										
10	온·오프 유해환경 개선										
11	청소년분야 서비스의 질 향상										
12	도전, 사회적 가치 창출										
13	청소년 인권										
1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15	청소년지도사 역량 강화										
16	지역 간 격차 해소										
17	청소년 안전망 강화										
18	청소년지도사의 공공성 강화										
19	보편적 복지 강화										
20	청소년 인성개발										
21	청소년의 정치참여 및 권리 확대										
22	청소년 활동 정책의 혁신										
23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통합										
24	청소년시설 지원 확대										
25	불평등한 사회 구조 혁신										
26	중장기적 청소년정책 준비										

4-1. 위에 제시된 중점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중점 과제는 무엇입니까? 각각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해당 번호 또는 중점 과제 내용 기재).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중점 과제	가장 시급한 중점 과제
1		
2		
3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모하고 정치적·정책적 변화를 경험하는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2023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의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는 데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내외 환경 분석, 청소년 관련 실태 점검, 정책대상자인 청소년 및 다양한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 사회변화를 고려한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거시적 관점과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청소년정책 동향 파악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국내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과 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해외 청소년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전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여 국내 청소년정책과의 접점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정책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장에서 정책 추진과 전달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 공무원 그리고 학계의 의견도 광범하게 수렴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및 청소년이 처한 실태 분석을 통해, 향후 청소년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항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저성장사회양극화로 인한 청소년 복지정책 확대, 디지털 환경의 부각과 그에 대한 대비, 청소년참여에 대한 요구 증대 및 참여정책 개선, 청소년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국내외 청소년정책 분석을 통해서도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 강조, 청소년

자립 기반 마련,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 생애 주기적 접근, 생활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지원, 중장기 정책계획의 유연성 필요, 체계적인 성과 관리의 필요성이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및 FGI를 통해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전반적 쇄신, 수요자 중심 정책수립 및 추진, 청소년활동 정책의 혁신 및 활동 활성화,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의견조사를 통해서도 진로 지원 강화 등 수요자 요구를 충족하는 정책 추진, 체감도 높은 정책에 대한 요구, 청소년권리 보장 및 청소년참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생애주기와 발달단계를 고려한 청소년정책 추진, 청소년정책에서의 상대적 격차 해소에 대한 요구가 높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청소년정책이 추구할 정책비전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청소년, 미래를 이끄는 청소년”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정책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목표로 ①지속 가능한 청소년정책, ②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청소년정책, ③시민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청소년정책, ④차별과 배제 없는 청소년정책, ⑤효율적·효과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제시하였다. 정책비전과 5대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21개 세부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ABSTRACT

A Study of Strategic Approaches for National Youth Policy During a Transition Perio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rections and strategies of youth policy in the mid/long-term during a transition period where the environments of adolescents are undergoing rapid transfiguration and political-policy changes.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the newly beginning 「The 7th Youth Policy Basic Plan(2023-2027)」 in 2023 through this study and the fundamental goal is to suggest the intended long-term direction for youth policy.

To this end, this study executed a systematic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s, inspected the current status of adolescents, and gathered feedback from adolescents, who are the subjects of the policy, and different interested parties to derive the direction of the youth policy considering the social changes.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d on identifying domestic-foreign youth policy trends to propose policy direction from a macroscopic viewpoint and mid/long-term perspectives. The transition process and trends of domestic youth policy were analyzed, and international trends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he youth policy trends overseas to find a contact point with domestic youth policy. Moreover, this

study aimed to consider the voices of the youth, who are the respective parties of the policy, and extensively collect feedback from field specialists in charge of promoting and delivering the policy in the field,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academic world.

The key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n analysis was conducted about the environments of adolescents and the conditions that they confront. As a result, it derived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the following conditions for establishing future youth policies such as taking active measures about the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expanding youth welfare policy due to low growth-social polarization, emphasizing the digital environment and preparing for it, expanding the demands for youth participation and improving participatory policy, and promoting policies that satisfy youth demands.

The analysis of domestic-foreign youth policies derived implications like emphasizing the rights and participation of adolescents, arranging a foundation for the independent living of adolescents, excavating and supporting adolescents in blind spots, establishing policy centered on the demanders, approaching the lifespan perspective, comprehensive support for life in general, the need of flexibility in mid/long term policy plans, and systematic performance management.

The Delphi method and FGI for specialists verified the necessity of overall reformation of the promotion system about youth policy,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policy centered on the demanders, innovation of youth activity policy and activation of activities, support for adolescents at risk and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and th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for youth counselors and empowerment. The opinion investigation conducted on adolescents

derived high demands about pushing ahead with a policy that satisfies the requests of the demanders such as reinforcing career support, requirements for a policy that is highly perceivable, guaranteeing youth rights and paradigm changes about youth participation, promotion of youth policy considering their life cycle and developmental stages, and resolving a relative gap in youth polic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established a policy vision that should be pursued for mid/long-term youth policy such as “youth as participating citizens, youth that enjoys blissful daily life, and youth to lead the future.” Additionally, 5 strategic objectives to realize the policy vision were proposed as the following, ① sustainable youth policy, ② youth policy that proactively corresponds to environmental changes, ③ youth policy that guarantees the rights of adolescent citizens, ④ youth policy without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⑤ establishment of efficient-effective youth policy promotion system. Furthermore, 21 detailed promotion strategies were deduced to fulfill the policy vision and 5 strategic objectives.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2-기본01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황여정·임희진·오승근
연구보고22-기본02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연구보고22-기본03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최정원·이지연·김현수·박지숙
연구보고22-기본04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 최용환·작동훈·박윤수
연구보고22-기본05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영한·이유진
연구보고22-기본06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황세영·강경균·김남수
연구보고22-기본07	북한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연구보고22-기본08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 임지연·김정주·한지형
연구보고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지경·김윤희·송현주
연구보고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연구보고22-일반01-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신영
연구보고22-일반01-0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최홍일
연구보고22-일반0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전현정·이용해
연구보고22-일반02-01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전현정·김나영·이용해
연구보고22-일반0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윤선·전경숙
연구보고22-일반03-01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양계민·이정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보고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이창호·이경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1)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강진숙·권오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6)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 김형주·장근영·박미선·정세정·변금선·배정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7)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 유민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	청년종합연구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지연·백혜정·김미향·김성아·정소연·이우태·이상정· 박광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1)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김지연·백혜정·김미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2)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우태·조정아·이규창·이지순·최규빈·김정원·장인숙· 박환보·최종학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4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3)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상정·류정희·변수정·하태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4)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박광옥·이기연·이복실·안예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Ⅰ / 성윤숙·문호영·천정웅·이희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01)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 홍성호·장수명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유민상·신동훈
연구보고22-수시02	COVID-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경준·권일남
연구보고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김윤희·서정아
연구보고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과 방향 연구 / 김윤희·남화성
연구보고22-수시0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문호영
연구보고22-수시06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 이유진·박찬걸

수 탁 과 제

< 일 반 >

연구보고22-수탁01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메타버스 설계구축 및 운영 / 임지연
연구보고22-수탁0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서정아·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3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체계 개발 연구 / 이윤주
연구보고22-수탁04	20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 최용환·송헌재·장혜윤
연구보고22-수탁05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양계민
연구보고22-수탁0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좌동훈·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7	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 장근영·김윤희
연구보고22-수탁08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 / 임지연·최려나·문세진
연구보고22-수탁09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2-수탁10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 김지연·김미향·조윤경·박광욱·오욱찬·조양진
연구보고22-수탁11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하형석·박지수·이인영
연구보고22-수탁1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정윤미·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2-수탁1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여정·임희진·좌동훈·오승근
연구보고22-수탁14	2022년 인성교육 확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5	2022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6	인성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 성윤숙·문호영·김현수
연구보고22-수탁17	2022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8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9	출발!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0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에 날개 달기(중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1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전현정·김미향·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2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임희진·서고운·유성렬
연구보고22-수탁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연구보고22-수탁24-0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2-학폭01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2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5	2021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6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이경상·김현수
연구보고22-학폭07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8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결과 분석 연구 / 성윤숙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2-대안01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이호준·윤홍주·김훈호·송원일
- 연구보고22-대안02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교육요구조사 및 지원 방안 /
김영지·유민선·박하나·김현수
- 연구보고22-대안03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 황세영·오해섭·김세훈·이지혜
- 연구보고22-대안04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운영 선도모델 개발연구 / 조창호·김세광·한숙희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2-01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22.1.27.)
- 세미나22-02 2022 미디어 교육 주간자료집 (22.1.19.)
- 세미나22-03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22.12.21.)
- 세미나22-0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2.12.23.)

〈 워 크 쉑 〉

- 워크숍22-0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22.2.8.)
- 워크숍22-02 2022 상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자료집 (22.4.22.)
- 워크숍22-03 2022년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1.25.)
- 워크숍22-04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집 (22.1.26.)
- 워크숍22-0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22.4.29.)
- 워크숍22-06 2022년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워크숍 (22.7.12.~13.)
- 워크숍22-0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22.12.15.)
- 워크숍22-08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워크숍 참고 자료 (22.7.22.)
- 워크숍22-09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대면 워크숍(22.8.4., 22.8.12.)
- 워크숍22-1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워크숍 (22.8.17.)

〈 포 럼 〉

- 포럼22-01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기후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22.4.26.)
- 포럼22-02 2022년 제1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22.4.20.)

- 포럼22-03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22.5.11.)
- 포럼22-04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 (22.5.17.)
- 포럼22-05 2022년 제3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 (22.6.24.)
- 포럼22-06 2022년 제4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22.7.12.)
- 포럼22-07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8.11.)
- 포럼22-08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22.8.12.)
- 포럼22-09 제46회 청소년정책포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22.9.2.)
- 포럼22-10 제4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22.9.21.)
- 포럼22-11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현장 사례를 말하다」 포럼 (22.10.14.)
- 포럼22-12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2.10.13.)
- 포럼22-13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정책소외계층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22.11.15.)
- 포럼22-14 202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22.12.2.)

〈 콜로키움 〉

- 콜로키움22-01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1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Vietnam (22.6.8.)
- 콜로키움22-02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2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Ethiopia (22.6.14.)
- 콜로키움22-03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22.9.6.)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2-01 2021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2-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3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 자료22-0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5 2021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집
- 자료22-06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 자료22-07-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관리자)
- 자료22-07-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관리자)

자료22-08-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원)
자료22-08-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원)
자료22-09-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행)
자료22-09-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행)
자료22-10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자료집
자료22-11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2-12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2-13	2022년 대안교육기관 교원 연수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05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0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07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37호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 138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139호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 140호 「메타버스 선거랜드」 구축과 선거교육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분석
- 141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14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3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144호 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NYPI Bluenote 통계 〉

- 64호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65호 장애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여건
- 66호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 67호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
- 6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 69호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 70호 디지털 성범죄
- 71호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분석
- 72호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 73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보고 22-기본01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인 쇄 2022년 12월 23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50-3 93330

연구보고 22-기본01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50-3